2008 - 정책개발 - 020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07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공 선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손 승 영 (동덕여대 교양학부 대학원 여성학 교수)
	안 선 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contents

Ⅰ. 서론 ● 01

1. 연구배경과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7

2. 연구내용과 범위 ····· 8
   1) 연구내용 ····· 8
   2) 연구범위 ····· 8

3.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전문가 자문 ····· 9
   3)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 9

Ⅱ. 출산율 변화와 정책대응 ● 19

1.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 21
   1)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 ····· 21
   2) 출생아동 규모의 변화 ····· 22
   3)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의 변화 ····· 24

2.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 ····· 24
1)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 25
2) 소자녀 선호와 양육에 대한 질적 관심의 증대 ····· 26
3) 젠더관계의 변화와 저출산 ····· 26

3.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 28
1) 경기침체 및 소득불안정 ····· 28
2) 자녀양육비 부담 증대 ····· 28

4. 저출산의 정책적 요인 ····· 29
1) 인구증가억제정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 29
2) 저출산대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 30
3)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 30

III. 서울시 2544남녀의 가족의식과 출산행위 ● 39

1. 가족가치관 ····· 41
1)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 41
2)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49
3) 가족에 대한 태도 ····· 54

2. 결혼가치관 ····· 76
1) 결혼에 대한 태도 ····· 76
2) 이상적 결혼연령 ····· 84
3)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조건 ····· 87
4) 배우자 조건 ····· 88

5)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90
6) 만혼이나 비혼의 요인 ····· 92
7) 실제 결혼연령 ····· 93

3. 자녀가치관 ····· 97
1)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 97
2)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 99
3) 희망자녀수 ····· 100
4) 첫아이 출산 조건 ····· 114
5) 향후 (추가) 출산 계획 ····· 117
6)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126

4. 소결 및 정책함의 ····· 127

IV. 서울시 2544남녀의 일·가족양립 현실 ● 131

1.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현실인식 ····· 133
1) 일과 출산·양육 병행의 어려움 ····· 133
2) 자녀출산 및 양육과 근무형태의 변화 ····· 141

2. 가족책임과 경제활동참여 ····· 150
1) 일과 가정의 균형 ····· 150
2) 선호하는 부부경제활동 유형과 자녀수 ····· 161
3) 맞벌이와 홑벌이 분포 ····· 170

3.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 ····· 172

1) 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지지 ····· 172
2) 탈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지지 ····· 176
3) 미혼남녀의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178
4) 상황에 따른 가사분담 의식 ····· 182

4.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실태 ····· 186
1) 가사분담 실태 ····· 186
2) 자녀돌봄 분담 실태 ····· 186

5.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 193
1)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용 ····· 193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경험 ····· 199
3)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 204

6. 소결 및 정책함의 ····· 208

V. 서울시민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수요 ● 211

1. 서울시민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 213
1)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 214
2) 저출산의 발생요인 인식 ····· 217
3) 희망자녀수 및 현재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인식 ····· 221

2.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 225
1)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 225
2)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분석 ····· 228

3)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수혜율 ····· 244
4) 출산·양육 지원사업의 도움정도 ····· 250

3. 서울시민의 출산·양육 지원정책 수요 ····· 258
1)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 258
2) 영역별 정책수요 ····· 258
3) 추가출산의향에 따른 정책수요 ····· 268
4) 가사 및 양육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 270

4.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수요 ····· 272
1) 탄력적 근무제도 ····· 273
2) 출산지원제도 ····· 273
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 274
4) 부양가족 지원제도 ····· 275

5. 소결 및 정책함의 ····· 276

VI. 결론 및 정책제언 ● 279

1. 저출산 대응의 국제적 추세 ····· 281

2. 서울시 저출산 대응방안 ····· 287

참고문헌 ● 293

〈부 록 I〉 ● 298

〈부 록 II〉 ● 343

● 표 목차

| 표 1-01 |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05년) ····· 3
| 표 1-02 | 조사 설계 ····· 10
| 표 1-03 | 조사 내용 ····· 11
| 표 1-04 | 자치구별 원 샘플 및 Boosting 샘플 ····· 13
| 표 1-05 | 최종 실사지점 ····· 15
| 표 1-06 |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 17
| 표 2-01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22
| 표 2-02 | 평균초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 ····· 25
| 표 2-03 | 인구증가억제기의 양육관련 정책 ····· 29
| 표 2-04 |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7.12.31 기준) ····· 31
| 표 2-05 |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율 ····· 32
| 표 2-06 |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7.12.31 기준) ····· 33
| 표 2-07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현황 : 2007년 ····· 34
| 표 2-08 | 산전후휴가제도의 특성 ····· 35
| 표 2-09 | 산전후휴가 급여실적 ····· 35
| 표 2-10 | 육아휴직제도의 특성 ····· 36
| 표 2-11 |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실적 ····· 36
| 표 2-12 |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적 ····· 37
| 표 3-01 | 응답자 특성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42
| 표 3-02 |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중요성 ····· 46
| 표 3-03 | 응답자 특성별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50
| 표 3-04 | 응답자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견 ····· 75
| 표 3-05 | 응답자 특성별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76
| 표 3-06 | 결혼에 대한 태도 비교 ····· 80
| 표 3-07 | 이상적 결혼연령 인지 : 성별, 취업상태별 ····· 84
| 표 3-08 | 이상적 결혼연령 인지 : 성별, 취업상태별 ····· 85
| 표 3-09 | 응답자 특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 88

| 표 3-10 | 미혼자의 성별, 취업상태별 배우자 선택 조건 ····· 89
| 표 3-11 | 미혼자의 성별 배우자 조건 ····· 89
| 표 3-12 | 기혼 여성의 실제 결혼연령 분포 ····· 94
| 표 3-13 | 기혼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자녀수 ····· 94
| 표 3-14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97
| 표 3-15 | 응답자 특성별 자녀에 대한 가치관 ····· 99
| 표 3-16 | 응답자 특성별 희망자녀수 ····· 100
| 표 3-17 | 응답자 특성별 현재 자녀 수 ····· 105
| 표 4-01 |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 134
| 표 4-02 | 희망자녀수에 따른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 ····· 135
| 표 4-03 | 현재자녀수별 부부경제활동유형 분포 ····· 137
| 표 4-04 | 응답자 특성별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 147
| 표 4-05 | 성별 및 취업상태별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 ····· 147
| 표 4-06 | 기혼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0
| 표 4-07 | 배우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0
| 표 4-08 | 응답자 특성별 생활시간 분배 유형 ····· 154
| 표 4-9a | 응답자 특성별 평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 156
| 표 4-9b | 응답자 특성별 토요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 157
| 표 4-10 | 응답자 특성별 일요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 159
| 표 4-11 |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자녀수+부부경제활동 유형 ····· 167
| 표 4-12 | 응답자 특성별 기혼여성의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 168
| 표 4-13 | 응답자 특성별 기혼남성의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 169
| 표 4-14 | 부부역할 –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172
| 표 4-15 | 부부역할 –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 173
| 표 4-16 | 부부역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 174
| 표 4-17 | 부부역할–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 176

| 표 4-18 |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가사 및 육아분담에 대한 생각 ····· 177
| 표 4-19 | 부부역할 –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 177
| 표 4-20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남편만 취업한 경우 ····· 182
| 표 4-21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183
| 표 4-22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부인만 취업한 경우 ····· 185
| 표 4-23 | 응답자 특성별 현재 자녀수 ····· 188
| 표 4-24 | 성별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 ··· 191
| 표 4-25 | 응답자 특성별 출산휴가 사용가능 직장 여부 ····· 194
| 표 4-26 | 응답자 특성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 ····· 196
| 표 4-27 | 응답자 특성별 직장 내 수유 가능 여부 ····· 197
| 표 4-28 | 출산휴가 종료 후 직장내 위치 변경 여부 ····· 201
| 표 4-29 | 기혼 유자녀집단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 201
| 표 4-30 |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 204
| 표 4-31 |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 205
| 표 4-32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 206
| 표 4-33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 206
| 표 4-34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 207
| 표 4-35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 207
| 표 5-01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 ····· 215
| 표 5-02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 218
| 표 5-03 | 희망자녀수별 저출산 심각성 인식 ····· 221
| 표 5-04 | 현재자녀수별 저출산 발생요인 인식 ····· 223
| 표 5-05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 225
| 표 5-06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별 요인분석 ····· 228
| 표 5-07 | 출산지원정책의 범주화 ····· 229
| 표 5-08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의 인지도 ····· 231
| 표 5-09 |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 ····· 233
| 표 5-10 |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 ····· 235
| 표 5-11 | 자치구 출산지원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 236

| 표 5-12 | 직업별 정책 인지도 ····· 240
| 표 5-13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별 인지도 *고용상태별 ····· 241
| 표 5-14 | 기혼남성의 고용상태별 현재자녀수 ····· 242
| 표 5-15 | 희망자녀수별 정책인지도 ····· 244
| 표 5-16 |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 수혜율 ····· 245
| 표 5-17 | 보육지원제도의 수혜율 ····· 247
| 표 5-18 | 다자녀 가구 등 지원제도 수혜율 ····· 248
| 표 5-19 | 자치구 출산지원 등에 대한 수혜율 ····· 249
| 표 5-20 | 자치구 출산장려금 도움정도 ····· 251
| 표 5-21 | 다둥이카드의 도움정도 ····· 253
| 표 5-22 | 자치구 출산장려금 도움정도 ····· 254
| 표 5-23 |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을 위한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 256
| 표 5-24 | 다자녀가구 양육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257
| 표 5-25 | 임신 관련 지원제도의 필요도 ····· 260
| 표 5-26 | 출산지원제도의 필요도 ····· 262
| 표 5-27 | 양육비용 경감 관련 지원제도의 필요도 ····· 263
| 표 5-28 |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의 필요도 ····· 264
| 표 5-29 | 양육친화적 환경의 필요도 ····· 266
| 표 5-30 | 양육친화환경의 필요도 ····· 268
| 표 5-31 | 추가출산의향별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 269
| 표 5-32 | 학력별 가사 및 양육전담자의 정책수요 ····· 271
| 표 5-33 | 가사양육 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기혼여성*학력) ····· 272
| 표 5-34 | 탄력적 근무제도의 필요도 ····· 273
| 표 5-35 | 출산지원제도의 필요도 ····· 274
| 표 5-36 |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 275
| 표 5-37 | 부양가족 지원제도의 필요도 ····· 275

● 그림 목차

〈그림 1-01〉 서울시 및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 4
〈그림 1-02〉 인구구조의 변화 : 2005~2050년 ····· 5
〈그림 1-03〉 「새로마지플랜2010」 중 저출산 관련분야 기본계획 ····· 6
〈그림 2-0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23
〈그림 2-02〉 시도별 연령별 출산율 ····· 23
〈그림 3-0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혼인상태별 ····· 44
〈그림 3-0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성별 차이 ····· 44
〈그림 3-03〉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 ····· 45
〈그림 3-04〉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 · 혼인상태별 ····· 47
〈그림 3-05〉 미혼자의 성별 가족의 중요성 인식 ····· 48
〈그림 3-06〉 기혼자의 성&취업상태별 가족의 중요성 인식 정도 ····· 48
〈그림 3-07〉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49
〈그림 3-08〉 미혼자의 성별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51
〈그림 3-09〉 기혼자의 성&취업상태별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51
〈그림 3-10〉 성별 · 혼인상태별 현재의 가족생활 만족도 ····· 52
〈그림 3-11〉 미혼자의 연령별 가족생활 만족도 ····· 52
〈그림 3-12〉 미혼자의 학력별 가족생활 만족도 ····· 53
〈그림 3-13〉 미혼·계층의식별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54
〈그림 3-14〉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 54
〈그림 3-15〉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혼인상태별 ····· 55
〈그림 3-16〉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월소득별 ····· 55
〈그림 3-17〉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고용상태별 ····· 56

〈그림 3-18〉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56
〈그림 3-19〉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성별 ····· 57
〈그림 3-20〉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혼인상태별 ····· 57
〈그림 3-21〉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자녀유무 ····· 58
〈그림 3-22〉 가족/결혼관_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 59
〈그림 3-23〉 가족/결혼관_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성별 ···· 59
〈그림 3-24〉 가족/결혼관_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혼인상태별 ·· 60
〈그림 3-25〉 가족/결혼관_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자녀유무 ·· 60
〈그림 3-26〉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 61
〈그림 3-27〉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별 ····· 62
〈그림 3-28〉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연령별 ····· 62
〈그림 3-29〉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혼인상태별 ····· 63
〈그림 3-30〉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별 *업상태별 ····· 63
〈그림 3-31〉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월소득별 ····· 64
〈그림 3-32〉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직업별 ····· 64
〈그림 3-33〉 가족/결혼관_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재자녀유무 ····· 65
〈그림 3-34〉 가족/결혼관_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성별*취업상태별 ····· 66
〈그림 3-35〉 가족/결혼관_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현재자녀유무 ····· 67
〈그림 3-36〉 가족/결혼관_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 67
〈그림 3-37〉 가족/결혼관_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연령별 ····· 68
〈그림 3-38〉 가족/결혼관_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현재자녀유무 ···· 68
〈그림 3-39〉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 69

〈그림 3-40〉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성별 ·· 70
〈그림 3-41〉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혼인상태별 ····· 70
〈그림 3-42〉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성별 *혼인상태별 ····· 71
〈그림 3-43〉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학력별 ··· 71
〈그림 3-44〉 가족/결혼관_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 72
〈그림 3-45〉 가족/결혼관_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 ····· 72
〈그림 3-46〉 가족/결혼관_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 *혼인상태별 ····· 73
〈그림 3-47〉 가족/결혼관_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 73
〈그림 3-48〉 가족/결혼관_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성별 *혼인상태별 ····· 74
〈그림 3-49〉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 ····· 77
〈그림 3-50〉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 *혼인상태별 ····· 77
〈그림 3-51〉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취업상태별 ····· 78
〈그림 3-52〉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혼인상태별 *취업상태별 ····· 78
〈그림 3-53〉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월소득별 ····· 79
〈그림 3-54〉 미혼자의 성별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80
〈그림 3-55〉 미혼자의 학력별 결혼에 대한 태도 ····· 81
〈그림 3-56〉 미혼자의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 82
〈그림 3-57〉 미혼자의 성 *취업상태별 결혼에 대한 태도 ····· 83
〈그림 3-58〉 미혼자의 직업별 결혼에 대한 태도 ····· 83
〈그림 3-59〉 미혼자의 계층의식별 결혼에 대한 태도 ····· 84
〈그림 3-60〉 미혼자의 성별 이상적 결혼 연령 ····· 85
〈그림 3-61〉 미혼자의 성&취업상태별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 86
〈그림 3-62〉 미혼자의 성&취업상태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 86
〈그림 3-63〉 미혼남녀의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1순위) ····· 90

〈그림 3-64〉 성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 91
〈그림 3-65〉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성별 ···· 92
〈그림 3-66〉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연령별 ··· 93
〈그림 3-67〉 기혼응답자의 현재 자녀 수 ····· 94
〈그림 3-68〉 기혼여성의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 ····· 95
〈그림 3-69〉 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자녀수 추이 ····· 95
〈그림 3-70〉 결혼연령별 실제 출생아수 : 각 세별 빈도와 평균 ····· 96
〈그림 3-71〉 기혼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 30세 전후 비교 ····· 96
〈그림 3-72〉 자녀에 대한 가치관 ····· 99
〈그림 3-73〉 희망자녀 수 ····· 100
〈그림 3-74〉 서울시 기혼남녀의 희망하는 자녀 수 ····· 103
〈그림 3-75〉 서울시 기혼남녀의 연령별 희망하는 자녀 수 ····· 103
〈그림 3-76〉 서울시 기혼남녀의 취업상태별 희망하는 자녀 수 ····· 104
〈그림 3-77〉 서울시 기혼남녀의 월소득별 희망하는 자녀 수 ····· 104
〈그림 3-78〉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 107
〈그림 3-79〉 소득집단별 희망자녀 수 ····· 108
〈그림 3-80〉 무자녀 희망의 이유 ····· 109
〈그림 3-81〉 미혼남녀의 무자녀 희망 이유 ····· 109
〈그림 3-82〉 1자녀 희망의 이유 ····· 110
〈그림 3-83〉 성별 한자녀 희망이유 ····· 111
〈그림 3-84〉 연령별 한자녀 희망 이유 ····· 112
〈그림 3-85〉 혼인상태별 한자녀 희망 이유 ····· 112
〈그림 3-86〉 미혼남녀의 한자녀 희망 이유 ····· 113
〈그림 3-87〉 미혼들의 첫아이 출산 조건 ····· 114
〈그림 3-88〉 미혼들의 성별 첫아이 출산의 조건 ····· 115
〈그림 3-89〉 미혼들의 연령별 첫아이 출산의 조건 ····· 115
〈그림 3-90〉 미혼들의 성별 취업여부에 따른 첫아이 출산의 조건 ····· 116
〈그림 3-91〉 미혼들의 계층의식별 첫아이 출산조건 ····· 116
〈그림 3-92〉 (추가)자녀출산계획 ····· 117

〈그림 3-93〉 기혼의 연령별 (추가) 출산계획 ····· 118
〈그림 3-94〉 현재자녀수별 (추가)출산계획 ····· 118
〈그림 3-95〉 학력별 (추가)출산계획 ····· 119
〈그림 3-96〉 월소득수준별 (추가)출산계획 ····· 119
〈그림 3-97〉 고용상태별 (추가)출산계획 ····· 120
〈그림 3-98〉 연령별 (추가)출산 희망자녀수 ····· 121
〈그림 3-99〉 향후 (추가)출산의 이유 ····· 121
〈그림 3-100〉 (추가)출산의 조건 ····· 122
〈그림 3-101〉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 출산의향 ····· 123
〈그림 3-102〉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의향 ····· 123
〈그림 3-103〉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출산의향 *연령별 ·· 124
〈그림 3-104〉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 의향 *연령별 ····· 124
〈그림 3-105〉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출산의향 *학력별 ·· 125
〈그림 3-106〉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의향 *학력별 ····· 125
〈그림 3-107〉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 126
〈그림 3-108〉 성별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 126
〈그림 4-01〉 일가족 양립에 대한 평가 ····· 134
〈그림 4-02〉 자녀수에 따른 성별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 ····· 136
〈그림 4-03〉 현재 자녀수별 부부경제활동 유형 ····· 138
〈그림 4-04〉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부부경제활동유형 비교 ····· 138
〈그림 4-05〉 일가족양립 시 어려운 점 ····· 139
〈그림 4-06〉 기혼자의 성별 일가족양립시 어려운 점 ····· 140
〈그림 4-07〉 기혼남녀의 고용상태별 일가족양립의 어려운 점 ····· 141
〈그림 4-08〉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 142
〈그림 4-09〉 미혼자의 성별 출산/양육시 근무시간 조정여부 ····· 142
〈그림 4-10〉 취업상태별 성별 임신/출산/양육시 근무시간 조정여부 ····· 143

〈그림 4-11〉 미혼의 학력별 임신/출산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 143
〈그림 4-12〉 미혼의 고용상태별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 144
〈그림 4-13〉 미혼의 직장종사자수별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 145
〈그림 4-14〉 미혼의 계층의식별 임신/출산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 145
〈그림 4-15〉 임신/출산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 146
〈그림 4-16〉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 148
〈그림 4-17〉 고용상태별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 149
〈그림 4-18〉 계층의식별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 149
〈그림 4-19〉 미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1
〈그림 4-20〉 미혼남녀의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2
〈그림 4-21〉 미혼남녀의 학력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52
〈그림 4-22〉 미혼남녀의 월 소득별 주당 근로시간 ····· 153
〈그림 4-23〉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 155
〈그림 4-24〉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토요일) ····· 157
〈그림 4-25〉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일요일) ····· 159
〈그림 4-26〉 배우자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및 만족도 ····· 160
〈그림 4-27〉 이상적 자녀수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 ····· 161
〈그림 4-28〉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2
〈그림 4-29〉 연령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3
〈그림 4-30〉 학력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3
〈그림 4-31〉 월소득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4
〈그림 4-32〉 고용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4
〈그림 4-33〉 성 & 취업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5
〈그림 4-34〉 혼인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5
〈그림 4-35〉 성&혼인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66
〈그림 4-36〉 기혼부부의 경제활동유형 ····· 171
〈그림 4-37〉 기혼부부의 연령별 경제활동유형 ····· 171
〈그림 4-38〉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178
〈그림 4-39〉 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 179

〈그림 4-40〉 돌봄노동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 180
〈그림 4-41〉 돌봄노동에 대한 미혼자의 성별, 취업상태별 태도 ····· 180
〈그림 4-42〉 기혼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 181
〈그림 4-43〉 기혼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미혼남녀의 취업상태별 태도 ····· 181
〈그림 4-44〉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185
〈그림 4-45〉 가사분담 정도 – 집안일 ····· 186
〈그림 4-46〉 가사분담 정도 – 자녀돌봄 ····· 187
〈그림 4-47〉 기혼 응답자의 현재 자녀수 ····· 188
〈그림 4-48〉 자녀 출생순위별 성비 ····· 189
〈그림 4-49〉 자녀의 연령별 분포 ····· 189
〈그림 4-50〉 자녀의 연령별 양육방법 ····· 190
〈그림 4-51〉 자녀보육시설 유형 ····· 192
〈그림 4-42〉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 192
〈그림 4-53〉 직장에서 출산휴가 사용가능 여부 ····· 193
〈그림 4-54〉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 195
〈그림 4-55〉 직장 내 수유 가능 여부 ····· 197
〈그림 4-56〉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 199
〈그림 4-57〉 학력별 본인/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 200
〈그림 4-58〉 고용상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 200
〈그림 4-59〉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 ····· 201
〈그림 4-60〉 기혼 유자녀들의 학력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 202
〈그림 4-61〉 월소득별 본인 및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 202
〈그림 4-6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못한) 이유 ····· 203
〈그림 4-53〉 고용형태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 204
〈그림 5-01〉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평가 ····· 214
〈그림 5-02〉 저출산 현상의 발생요인 ····· 217
〈그림 5-03〉 희망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의 인식 ····· 221
〈그림 5-04〉 혼인상태별 희망자녀수와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 ····· 222
〈그림 5-05〉 현재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발생요인 인식 ····· 224

〈그림 5-06〉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제도 인지도 ····· 229
〈그림 5-07〉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정책 인지도 ····· 237
〈그림 5-08〉 성별 출산 양육지원정책 인지도 ····· 238
〈그림 5-09〉 월평균소득별 정책 인지도 ····· 239
〈그림 5-10〉 성&취업상태별 출시/양육 지원 정책별 인지도 ····· 239
〈그림 5-11〉 직업별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 240
〈그림 5-12〉 성별 고용상태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정책 인지도 ····· 241
〈그림 5-13〉 현재 자녀수별 정책 인지도 ····· 243
〈그림 5-14〉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수혜율 ····· 245
〈그림 5-15〉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도움정도 ····· 250
〈그림 5-16〉 성별 다둥이카드의 도움정도 ····· 252
〈그림 5-17〉 성별 취업상태에 따른 다둥이카드 도움정도 ····· 252
〈그림 5-18〉 세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 255
〈그림 5-19〉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 259
〈그림 5-20〉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 의 필요도 ····· 261
〈그림 5-21〉 현재자녀수별 「영유아플라자 등 제가아동보육시설」 필요도 ····· 265
〈그림 5-22〉 추가출산의향에 따른 정책 필요도 ····· 269
〈그림 5-23〉 가사 및 양육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 271
〈그림 5-24〉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도 ····· 276

● 부 록

I. 질문지 ····· 298

II.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343

▣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임.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특징을 분석하여 저출산의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함

2. 연구내용

○ 서울시민의 가족과 결혼, 자녀에 대한 의식변화와 가사 및 양육부담 등 가족생활을 둘러싼 가치와 의식, 일가족양립 실태 파악
○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의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과 문제점 파악
○ 서울시 저출산 관련 정책사업의 인지도와 도움정도, 정책수요를 파악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조 사 설 계	
조 사 대 상(모집단)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성인남녀
조 사 지 역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 본 수	총 2,500명
조 사 방 법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 사 도 구	구조화된 질문지
오 차 한 계	95% 신뢰수준 하에서 ±1.96%
표 본 추 출	자치구, 성, 연령 및 결혼상태, 경제활동여부별 인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및 다단계층화 추출 방식
조 사 기 간	2008년 7월 26일 ~ 8월 21일

| 표본 할당 |

- 1단계 : 25개 자치구별 만 25~44세 인구비율에 따라 2,500명의 샘플을 비례할당
- 2단계 : 구별 표본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최소 샘플수가 100명이 되도록 Boosting함
- 3단계 : 25개 자치구별 할당된 샘플수를 성•연령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세부할당
- 4단계 : 성•연령별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여부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표 작성

| 응답자 특성 |

		사례수	비율
		N	%
전체		(2500)	100.0
성별	여성	(1656)	66.2
	남성	(844)	33.8
연령별	25~29세	(671)	26.8
	30~34세	(635)	25.4
	35~39세	(645)	25.8
	40~44세	(549)	22.0
혼인상태별	이혼	(949)	37.9
	기혼	(1551)	62.1
취업상태	취업	(1523)	60.9
	비취업/미취업	(977)	39.1
학력별	고졸 이하	(954)	38.2
	전문대	(458)	18.3
	대학교	(1023)	40.9
	대학원 이상	(65)	2.6

		사례수	비율
		N	%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30)	25.2
	200만~ 300만원 미만	(588)	23.5
	300만~ 400만원 미만	(568)	22.7
	400만원 이상	(689)	27.6
	모름/ 무응답	(25)	1.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42)	5.7
	화이트칼라	(656)	26.2
	블루칼라	(725)	29.0
	전업 주부	(610)	24.4
	학생/실업/비취업	(367)	14.7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65)	24.0
	상용근로자	(1005)	66.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53)	10.0

II 출산율 변화와 정책대응

1.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1)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

○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1960년 6.0명으로 높았으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함.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2005년 1.08명으로 최저수준이 됨.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다시 감소되는 추세임

2) 출생아동 규모의 변화

○ 합계출산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지표는 출생아수의 변화임. 1970년 약 100만7천명이던 출생아는 2003년에 49만3천5백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듦. 더구나 2003년부터는 가임여성 집단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반전되지 않는 한 출생아수의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3)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의 변화

○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는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으나 1990년대에는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현상을 보임. 이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개인 및 가족환경의 변화가 이상자녀수와 출산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음

2.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

1)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 결혼연령이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을 보면, 25~29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1970년 10%에서 2000년 40%로 증가했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 1%에서 2000년 11%로 10배 이상 증가함.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이 43%에서 7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은 6%에서 28%로 4배 이상 증가함. 이러한 미혼율의 증가와 결혼연령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소자녀 선호와 양육에 대한 질적 관심의 증대

○ 한국사회에서도 소자녀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자녀양육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는 사교육비 증대, 조기유학 증가 등으로 나타나 양육·교육비 부담으로 귀결됨

3) 젠더관계의 변화와 저출산

○ 전통적인 근대가족의 모델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의 성별분업이 출산과 육아에 가장 안정적인 가족형태라고 가정되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분업이 완화된 가구의 가사 및 육아분담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Che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이론화함

3.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1) 경기침체 및 소득불안정

○ 결혼과 주거마련에 요구되는 고비용의 경제력은 결혼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의 증대와 과도한 주거비용 등은 결혼연기 및 독신자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됨

2) 자녀양육비 부담 증대

○ 자녀양육의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은 보육이나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임.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42.2%이지만 2명일 경우에는 60.7%, 3명일 경우에는 69.7%, 자녀수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72.6%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임

4. 저출산의 정책적 요인

1) 인구증가억제정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 1961년 출산억제정책을 시작으로 1996년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전까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책역사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을 장려하

고 인구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성된 소자녀관이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음

2) 저출산대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2004년 이후부터 더욱 가시화됨. 2006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이 수립되어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함

3)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 보육지원정책의 핵심적인 두가지 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일가정양립과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임. 한국의 보육정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으로 구분됨

○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취업모의 양육권을 지원하고 동시에 일-가족 양립을 보장해줌으로써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III 서울시 2544남녀의 가족의식과 출산행위

○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 25~44세 남녀 2,500명이 가족을 중시하는 전반적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의식과 가치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가족 및 출산 관련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함

1. 가족가치관

1)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 남녀 4명중 1명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26.0%), 그 다음은 '경제적 안정'(19.6%), '사회적 성공'(12.4%), '자녀'(12.1%), '건강'(11.4%)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음. 여성은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 자녀, 건강의 순서. 남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시되고 그 다음이 가정의 행복, 사회적 성공, 건강, 자녀의 순서로 성별 차이 나타남
- 25~34세 임신·출산·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태도가 보임
- 미혼의 경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의 가치추구가 강하게 나타남. 특히, 경제적 안정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에서 미혼남녀의 차이가 없음(응답자 미혼의 학력수준이 평균보다 높음. 전문대졸 이상 75.6%, 기혼은 전문대졸 이상이 57.2%). 또한 기혼의 경우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8.4%이지만, 미혼은 2.8%에 불과해서 자녀가치를 중시하는 비율이 기혼이 미혼에 비해 6배 이상 높음
- 가족의 중요성은 93.6%가 인정함(매우중요+중요). 그러나 저소득층, 미혼(중에서도 남성), 저연령층, 상용근로자층이 상대적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덜 인정하는 그룹이고, 기혼남녀는 가족의 중요성 인식이 유사하고 높음

2) 가족생활 만족도

- 현재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74.1%로 가족의 중요성 인식보다 낮은 점수이지만,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임(3.86점). 가족생활만족도는 기혼, 기혼취업자(특히, 남성), 고소득층, 전업주부 등이 높고, 미혼남성, 임시/일용/무급종사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가족생활만족도가 낮음
- 기혼남성(4.0점)은 가족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미혼남성(3.7점)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미혼여성(3.8점)임. 성보다 혼인상태가 가족생활만족도를 좌우함
- 미혼의 25~29세 연령층은 70.3%, 35~39세 연령층은 46.3%의 만족도가 나타나 연령과 만족도가 반비례함. 또한 미혼은 학력수준에 비례해서 가족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증가함. 미혼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연령과 학력이고, 소득과 취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3) 가족에 대한 태도

- 가족의 보편적 가치(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시 가족과 어울릴지 반드시 고려한다, 사회보다 가족의 안녕이 우선이다)에 대해서 4점 이상으로 동의 점수가 높음
- 가족의 다양성 인정(이혼, 한부모, 입양, 동거, 비혼, 혼외 출산 등)은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음. 특히, 가장 허용정도가 낮은 것은 비혼 출산이고, 그다음이 입양, 혼전 동거, 이혼 등의 순서임
-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것에 연령이 젊을수록, 미혼집단, 특히 미혼여성의 동의도가 높게 나타나 젊은층의 일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2. 결혼가치관

1)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급적+반드시 해야)가 74.4%이고,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가 23.5%로 나타남. 통계청 사회조사(2008)나 다른 조사결과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기혼남성 〉 미혼남성(73.8%) 〉 기혼여성 〉 미혼여성(66.6%)의 순서로 높음.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는 취업여성이 가장 강함(29.1%). 즉,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과 생활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방편이 있을 경우, 결혼에 대한 의무사항은 약화되고 개별적인 현실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임. 그러나 미혼여성 안에서는 직장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더 적극적임
- 결혼에 대한 태도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비례함. 고소득층과 고학력층이 긍정적이고,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은 부정적임. 대학원 이상 고학력층은 예외로 부정적임. 교육과 소득과 노동시장 내 지위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는 가치관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보임

2) 이상적 결혼연령

○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28.0세로,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30.8세로 생각하고 있음. 미혼집단은 이보다 약간 더 많은 나이를 이상적 결혼연령으로 생각함(여성 28.5세, 남성 31.4세)

3) 결혼의향

○ 결혼의향은 미혼남녀의 70.6%가 있음(여성 68.0%, 남성 72.4%). 4명중 1명은 '아직 모르겠다' 고 응답. 결혼의향이 없다는 5.3%. 여성의 결혼의향이 남성보다 더 낮음

○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 (26.6%), 결혼할 시기가 아니어서(14%). 이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를 제외하면 결혼비용(10.5%), 고용상태 불안정(9.8%), 소득 적음(4.9%) 등 경제적 요인이 주요인임.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 (18.6%),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병행 어려움(10.0%), 남성은 결혼비용이 준비되지 않아(28.0%), 고용상태 불안정(18.7%)로 성별 차이가 있음

4) 만혼이나 비혼의 이유

○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만 25~44세 남녀는 '결혼보다 커리어개발' (17.6%), 고용불안정 심화(15.1%),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14.2%), 여성의 경제력 향상(12.5%), 주택가격 상승(11.0%),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9.5%) 순임

○ 여성은 '결혼보다 개인의 커리어 개발' ,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 '여성의 경제력 향상'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고용불안정' '결혼보다 커리어 개발이 중요'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 부담' '주택 비용 상승'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함. 여성 스스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추세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력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지 않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의 젊은층은 '결혼보다 커리어개발에 관심 많아' (21.6%)라는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흥미롭게도 미혼여성의 커리어개발에 관한 관심이 미혼남성보다 더 높아서 각기 24.2%, 17.1%이고, 또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룸으로써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기혼여성에게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임. 미혼남성의 경우는 22.9%가 고용불안정을 만혼과 비혼의 주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으로 해석됨

○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의향 등은 실제 결혼연령과 연관이 높은데, 이러한 실제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자녀수는 (조사대상자가 출산을 모두 종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25세 미만에 결혼한 기혼여성들은 조사시점까지 평균 2.11명을, 25~2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1.58명을, 30~34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1.2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1.29명을 출산함. 따라서 결혼연령이 늦어질수록 대체로 평균출생아수도 적어지는 비례관계가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됨

3. 자녀가치관

1)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에 54.6%가 동의함. 자녀가치는 성과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자녀가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해 준다, 자녀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등 자녀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 평가하고, 남아선호나 노후의 경제적 부양기대는 낮아서,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는 낮음

2) 희망자녀수

○ 희망자녀수는 평균 1.96명이고, 2명을 원하는 비율이 65.7%, 1명이 18.1%, 3명이 12.1%임. 즉, 2명 → 1명 → 3명 → 0명 → 4명의 순서로 나타나 평균 이상형인 자녀 2명을 제외하면 1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3명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음. 희망자녀수는 성과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음

○ 그러나 미혼(1.87명)은 기혼(2.01명)보다 희망자녀수가 적어, 젊은층의 소자녀관이 드러남. 미혼은 기혼보다 1자녀 희망비율이 높고, 기혼은 3자녀 희망비율이 높음. 특히, 미혼취업자의 22%가 한자녀를 희망함. 연령별로는 20대의 20.5%가 한자녀 희망함. 전문

대졸과 고졸이하가 대졸자보다 한자녀 희망비율이 높음.

-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1자녀 희망비율이 높고, 2자녀 희망은 월 300~400만원미만에서 가장 높음.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1명 희망(16.7%)과 3명 희망비율(15.4%)로 양극화됨. 즉,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희망자녀수도 낮지만,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희망자녀수가 다시 작아짐
- 기혼응답자의 현재 자녀수는 2명 → 1명 → 0명 → 3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희망자녀수는 2명 → 1명 → 3명 → 0명으로서, 희망자녀수 3명과 0명의 위치가 실제자녀수에서는 뒤바뀜. 현재자녀수는 취업여부, 학력,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월소득별로는 차이가 없음
-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를 보면,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이 2명을 희망하고 있고(55.9%), 1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25.7%임.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52.4%로 절반 정도가 추가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자녀가 없거나 한명이 경우에 희망대로 출산한다면 앞으로 출산가능성이 최소 50%는 된다는 의미임.
- 월소득수준별로는 기혼의 전 소득층에서 65% 내외가 2명을 희망함으로써 2명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한국가족의 현실임을 알 수 있지만, 소득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 비율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중간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비율이 가장 높음. 1자녀 희망은 200~3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가장 낮음

3) 자녀를 갖기 원하지 않는 이유

- 전체 응답자의 1.9%에 해당하는 무자녀 희망자들이 자녀를 갖기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6.3%), '자녀 교육비 부담' (16.2%)임. 그 다음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8.3%), '자녀양육비 부담' (8.1%), '소득이 적어서' (7.8%) 등임.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주택마련 어려움, 고용상태 불안, 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를 차지했고, 사회적 요인(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 지장, 보육시설 등 부족, 양육분담이 안되어서, 직장내 불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으며,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가 걱정되어, 자신만

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이 차지하는 비중이 34.0%에 해당함

4) 1자녀 희망의 이유

○ 희망자녀수를 '1명'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452명; 미혼 214명, 기혼 238명)은 그 이유로 '자녀교육비 부담' (29.7%)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했고, '자녀양육비 부담' (20.4%)이 뒤를 이어서 자녀교육 및 양육부담이 가장 큰 요인임. 그 다음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되어' (9.1%), '소득이 적어(7.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주택마련 어려움, 고용상태 불안, 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적 요인(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 지장, 보육시설 등 부족, 양육분담이 안되어서, 직장내 불이익 등)은 8.7%를 차지했으며,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가 걱정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이를 싫어해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해당함

– 무자녀 희망의 이유가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거의 유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면, 한자녀 희망의 이유는 '경제적 요인'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즉, 한자녀를 갖기 원하는 이유는 '다수의 희망인 2자녀' 를 원하지만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자녀수의 기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적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5) 첫아이 출산 조건

○ 미혼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첫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28.4%)라고 응답함. 그 다음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27.3%)이고, '집을 만한 후에' (6.9%)까지 포함하면 62.6%가 경제적 요인이 충족되면 첫아이를 가지겠다고 응답함. 한편, '배우자와 충분한 생활을 누린 후' (18.6%)에 첫아이를 갖겠다는 응답도 5명중 1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무자녀 맞벌이나 홑벌이가 결혼초기에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6) 향후 자녀출산 계획

- 기혼응답자(1,490명)의 77.8%는 앞으로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자녀계획이 있다는 16.8%에 불과하며, 나머지 5.4%는 미정으로 나타남.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에 약 70%는 1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2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25.8%이며, 3명을 희망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함. 평균적으로 1.34명의 추가출산을 기대할 수 있음
- 추가출산의 이유는 '아이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35.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결혼 후 출산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가 25.6%를 차지했으며, '아이를 좋아해서' 가 21.2%를 차지함
- (추가)출산의 조건으로 나이(32.1%) 같은 생물학적 조건을 제외하면,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2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자녀가 커서 손이 덜 갈 때' (9.8%), '집을 장만한 후에' (9.0%), '배우자가 원할 때' (8.7%),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7.5%) 등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 양육분담이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추가)출산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8.3%는 있다고 응답했지만 81.7%는 없다고 응답함. 양육분담의 조건이 없을 때(16.8%)보다 약간 증가함
-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느냐' 에 대해 24.5%의 응답자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서울시민의 희망자녀 수만큼의 출산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 내의 양육분담도 필요하지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7)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 유자녀 응답자(1,337명)중 가장 많은 66.4%가 자녀출산을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고, 여성은 21.1%가 본인이, 9.7%는 배우자가 결정했다고 응답

IV 서울시 2544남녀의 일·가족양립 현실

1) 일가족양립 인식

-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 에 절반정도(45.5%)가 '보통' 이라고 응답했고, '그렇다' 고 긍정하는 비율은 28.7%를 차지함. '그렇지 않다' 는 25.9%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 여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03점으로 그리 높지는 않음(응답자 : 출산 및 육아기간 중 취업자 및 미혼 취업자(총 1,525명))
-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연령층에서 높고(평균점수 3.18점), 결혼과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가 집중되어 있는 30대 연령층에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평균점수 2.97점)
- 일가족양립 여부는 자녀출산의 계획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에, 일가족양립 여부에 따라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 희망자녀수가 적을수록 일가족양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남. 일가족양립 여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희망자녀수의 관계는 희망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일가족 양립이 대체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자녀수에 따른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면, 기혼남녀간 성별 차이가 나타남. 남성은 자녀수가 2명일 경우(27.5%)보다 1명일 경우(29.4%)에 '일·가족 양립이 조화롭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여성은 자녀가 2명일 때(23.0%) 1명일 때(15.4%)보다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즉, 자녀가 많을 때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남. 취업중인 기혼여성들은 자녀가 1명일 때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 기혼은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가 전체평균 3.03점보다 낮은 2.96점으로 일가족 양립 현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기혼의 일가족양립 현실은 현재자녀수뿐 아니라 부부의 경제활동형태와도 연관됨
  - 기혼응답자중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에 남성생계부양자 형태의 가구(33.3%)와 맞벌이(61.4%) 비율은 3.3 대 6으로 맞벌이가 약 2배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일 경우에 이 비율은 역전되어 남성 홑벌이 대 맞벌이의 비율이

6 : 3.6의 비율로 나타남.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주로 첫째 자녀가 생기는 순간이라는 점이 이 조사 결과에서는 명확히 드러남

2) 일가족양립 시 어려운 점

○ 일가족 병행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기혼 유자녀 취업자 859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39%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부족' (39.0%)을 꼽았고, 그 다음은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29.4%),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14.0%)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함. 성별로는 여성은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 (44.1%)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고, 남성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부족' (44.5%)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함. 일과 가족생활 병행에 문제가 없다는 남성은 14.9%로 여성 4.5%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렇지만 기혼남녀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기혼여성 95.5%, 기혼남성 85.1%)

3) 자녀출산 및 양육과 근무형태의 변화

○ 미혼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시 일가족양립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화 여부에 대해 질문, 미혼여성의 경우 평소대로 일하겠다(53.0%)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32.1%), 직장을 그만두겠다(13.7%)는 순서로 응답함. 임신 출산 시 노동시간 단축 및 경력단절을 고려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45.8%)로 높게 나타남. 반면, 미혼남성은 평소대로 일하겠다(76.9%)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근무시간 단축(13.1%)과 근무시간 연장(6.7%), 퇴사(3.1%) 순으로 나타남. 많은 미혼남성은 대체로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76.9%) 수입을 늘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겠다(6.7%)는 생각이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퇴사는 16.2%이어서 미혼여성과 큰 차이가 나타남

○ 임신/출산/양육기에 '직장을 그만두겠다' 는 미혼자(7.3%)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 (60.8%), 아이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15.7%),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보육비 부족(4.5%),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3.4%), 건강문제(2.0%) 등이 언급됨.

○ 임신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 여부에 대해, 취업자 혹은 취업경험자(2,090명) 가운데 자신이 일한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었다는 비율은 10.9%(228명)로 나타남. 불이익의 내용은 '은근한 압력' (45.6%), 퇴직 권유(29.7%),

원치 않는 부서 이동(18.7%), 휴직권유(12.1%) 등임

○ 미혼취업자(665명)에게 '여직원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9.5%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결혼퇴직제가 잔존함을 알 수 있음

4) 가족책임과 경제활동 참여

○ 취업중인 기혼남녀(979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임(일일 평균 10시간 이상(10.32시간)). 기혼여성이 주당 평균 48.8시간 일하고, 남성은 53.2시간을 일함. 특히, 기혼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이 매우 높은 44.2%에 달함. 미혼남녀(전일제, 653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으로, 기혼자의 근로시간 51.6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남. 서울시 남녀는 기혼이나 미혼이나 상관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울시 25~44세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부부 경제활동유형은 자녀 2명에 남성생계부양-여성전업주부 형태가 2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인은 시간제, 남편은 전일제 형태의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2.7%, 남편과 부인 모두 전일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0.3%를 차지함. 자녀 1명에 부인과 남편 모두 전일제 맞벌이 선호가 8.7%, 자녀 3명 이상에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형태가 5.7%, 자녀 1명에 부인 시간제, 남편 전일제 맞벌이가 4.5% 등의 순서로 선호됨.

  – 자녀수에서는 2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남성의 이상적인 경제활동은 전일제 근로가 지배적인 형태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가사전담(전업주부)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이상적 자녀를 2명으로 했을 때, 최소한 기혼여성의 시간제 이상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43.0%를 차지함. 자녀수와 관계없이 부부의 맞벌이 선호비율은 64.5%, 남성홑벌이 선호비율은 34.7%임

○ 서울시 25~44세 남녀는 이상적 자녀수 및 부부경제활동유형 선호도에서 자녀수와 상관없이 남성홑벌이의 전통적 핵가족모델을 35% 정도 선호하였지만(기혼집단 39.7%), 실제로 기혼응답자 중 남성홑벌이는 56.8%를 차지하고, 맞벌이 가구는 약 40%(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5~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성홑벌이(50.0%)와 맞벌이(46.7%)가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는 30~34세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고(33.7%) 남성홑벌이 비율이 61.0%에 해당함. 30~44세에서는 남성홑벌

이 대 맞벌이가 6 : 4 비율로 나타남

- 결혼 초기에 맞벌이를 했다가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을 계기로 남성 홑벌이로 전환된 뒤 35세 이후에 맞벌이가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이 기혼부부의 경제활동유형에서도 나타남

5) 가사 및 양육분담 실태

- 기혼 유배우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집안일의 가사분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식사준비와 청소,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의 경우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대체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5% 미만으로 매우 낮고 '주로 부인이' (전적으로+대체로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높음. 반면, 집수리나 세차 등 집관리는 '부인' (23.2%)보다 '주로 남편이' (44.4%)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기혼 유자녀 응답자들의 자녀돌봄 분담은 밥 먹이기와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보살피기, 숙제지도, 등하교 동행 모두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대체로 남편이) 담당하기보다 '주로 부인이' (전적으로+대체로 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녀양육은 3세 이하의 경우 '가족이 보살핀다' 는 응답이 80%, 4세 이상 미취학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이 80%를 차지함. 0-3세 영유아의 63.5%는 본인 및 배우자가 돌보고 있고, 그 다음이 보육시설(20.4%),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13.0%) 순으로 나타나서, 영유아 자녀를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함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가족이나 친인척' 을 29.6%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 28.4%로 나타남.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 를 가장 높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이나 친인척' 37%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여성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고 본인' 이 하는 것이 가장 절적하다는 응답이 11%로 남성 2.9%에 높게 나타남
- 자녀 보육방법으로 시설에 맡긴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에 불과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60% 정도를 차지함.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은 약 20%를 차지하고 법인시설의 비율은 9.8%이며, 직장보육이나 공동육아는 1% 미만으로 매우 낮음.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의 만족도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에 비해 높고, 특히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 출산휴가 : 현재 취업자 및 기혼 취업경력자(2,090명) 중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의 종사자는 42.1%이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의 종사자는 42.4%로 나타났고, 15.5%는 사용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함

-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만족 48.5%). 불만족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 (79%)가 가장 큰 이유이고,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12.4%),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서' (5.4%)로 나타남.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만족 34.8%). 불만족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 (95.1%)가 압도적임

○ 육아휴직 : 현재 취업자 및 취업경력자(2,090명) 중 23.2%만이 '육아휴직' 이 가능한 직장 종사자라고 응답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종사자 비율은 57.9%에 이름. 이 제도의 운용사실을 '모른다' 는 응답도 19.0%를 차지함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만족 52.9%)이고, 불만족의 이유는 '기간이 짧아서' (47.5%), '실제 적용이 힘들어' (19.3%),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12%)를 차지함

○ 직장 내 수유 : 현재 취업자 및 취업경력자(2,090명) 중 9.8%만이 '직장내 수유' 가 가능한 직장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장 내 수유가 어렵다는 응답자는 66.6%로 높게 나타남

V 서울시민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수요

1) 저출산에 대한 인식

○ 서울시 25~44세 성인남녀의 81.5%가 현재의 저출산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 고 응답함 (조금 심각 64.7% + 매우심각 16.8%).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은 저소득층, 블루칼라, 임시/일용직, 미혼, 25~29세의 저연령층에서 심각성 인식이 낮음. 젊고, 경제적 지위가 불안

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저출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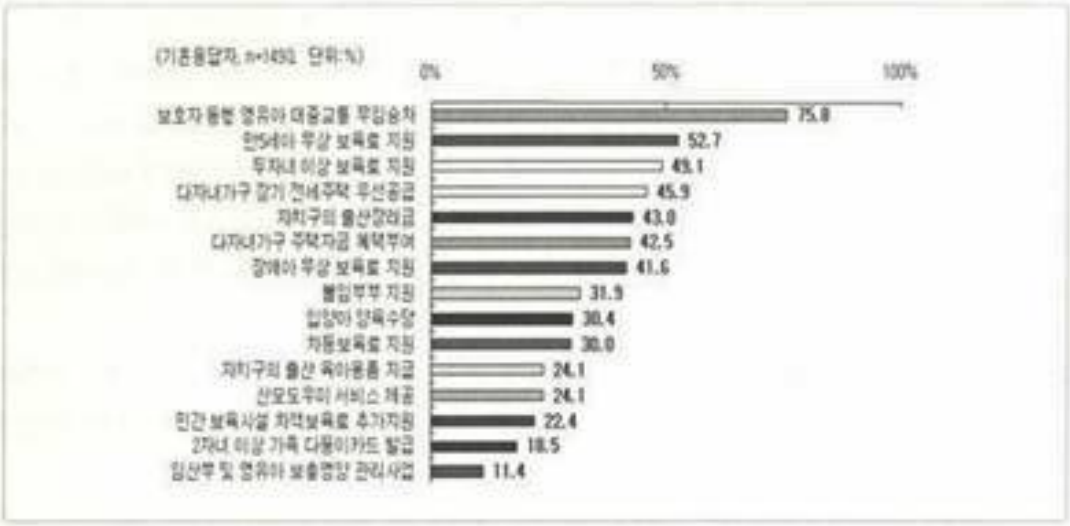
○ 저출산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기 때문' (28.1%)이고,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23.5%), '자녀양육비 부담' (17.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경제적 요인(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68.8%로 가장 높고, 사회적 요인(맞벌이 부부 사회적 지원 부족, 직장생활 불이익, 여성의 일로만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은 15.1%, 가치관의 변화(경력개발이나 취업 중시, 소자녀관 등)는 15.2%를 차지함

- 미혼여성과 취업여성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에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취업과 양육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이 저출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자녀교육비와 양육비를 합해 보면 남녀, 혼인상태, 취업상태의 특징에 따른 차이 없이 4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출산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희망자녀수가 적을수록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고, 현재자녀수가 많아질수록(4명 예외) '자녀교육비 부담' 을 저출산의 발생요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짐. 반면, 무자녀 응답자의 경우에는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을 저출산의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응답함

2) 서울시 정책인지도

○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장 높고(75.8%),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52.7%),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49.1%),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45.9%), 자치구 출산장려금(43.0%),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41.6%) 등임. 40% 이상 인지도가 있는 사업이 15가지 중 7가지에 해당함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별 인지도

○ 정책 인지도의 특징은 첫째, 거의 모든 제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둘째, 학력수준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면에서는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셋째,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 취업여성보다는 전업주부의 인지도가 더 높음. 넷째,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거의 모든 제도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3) 지원사업의 도움정도

○ 서울시의 출산양육 지원사업 가운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 '약간 혹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비율이 77.3%(4.23점)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를 제외하면 4점 이상의 도움정도가 나타난 지원제도는 없고, 3.5점 이상의 평균 수준을 상회한 정책은 5가지, 즉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90점) , '민간 보육시설 차액 보육료 추가지원' (3.71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3.57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급' (3.56점), '차등 보육료 지급' (3.54점)으로서 대체로 보육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도움이 되었다' 는 편에 속함

○ 정책별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 도움정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도가 낮았던 '2자녀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 제도는 도움정도에서도 평균 2.45점으로 가장 낮은 도움정도로 나타남. 즉, 인지도가 낮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인지도와 도움정도가 모두 낮은

제도가 있어서 정책 인지도와 그 정책의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음

○ 도움정도가 평균 3.5점 이상이 되는 지원제도는 대체로 보육지원과 관련된 5가지로 나타남. 즉,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급' 3.90점, '민간보육시설 차액 보육료 추가지원' 3.71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3.57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56점, '차등 보육료 지급' 3.54점이었다. 반면, 평균 3점 이하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정책은 자치구의 출산장려금제도나 불임 및 입양지원에 관련된 것이었다.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2.88점, '자치구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2.84점, '불임부부 지원' 2.99점, '입양아 양육수당' 3점으로 나타남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약간 도움이 된다' 는 19.0%, 별로 도움이 안된다(26.4%), 전혀 도움이 안된다(8.1%)로 나타남.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4.5%)이 도움이 된다(19.0%)는 비율보다 훨씬 높음. 46.5%에 이르는 절반정도는 '보통' 이라고 응답해서 양육수당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4) 지원정책 수요

○ 총 14가지 지원제도 중 12가지에서 평균값 4점에서 4.3의 범위, 즉 중상 이상으로 나타나 정책수요도가 높음. 4점이 되지 않는 '불임치료비 지원' 도 평균값 3.96점, '보육정보제공' 평균값 3.88점으로 4점에 가까운 필요정도를 나타내 모든 정책에 대해 높은 필요도가 나타남. 건강이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지원제도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VI 결론 및 정책제언

이번 조사결과로부터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이 제안될 수 있음

1)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는 가사 및 양육분담이 가정 내에서 공평하게 분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일가족양립 환경 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건강 및 보육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직장의 친가족주의적 제도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정책과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운용에 대한 점검과 홍보, 관리가 더욱 필요함

2) 서울시민 25-44세 남녀 80% 정도는 현재 저출산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지원 부족, 직장생활 불이익, 여성의 이중부담 등 사회적 요인이 15%,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취업중시, 소자녀관 등 문화적 요인이 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미혼들은 첫아이 출산의 조건으로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와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라고 응답함. 따라서 서울시의 복지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3)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주로 첫째아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됨. 자녀가 하나일 때와 둘 일 때, 맞벌이와 남성 홑벌이의 비율은 변하지 않지만, 자녀가 없을 때와 하나 있을 때는 맞벌이와 남성 홑벌이의 비율이 정확히 역전되어 대략 3 : 6의 관계가 나타남. 즉,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유무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임신과 출산, 양육에 상관없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첫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진행되는 30대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유지 방안이 필요함

4) 0~2세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 3세 미만 아동의 공보육 비율은 출산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주로 첫아이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사실로도 입증되듯이, 초기 양육기의 공보육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5) 과도한 일중심적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임. 기혼들의 경우,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로 인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나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특히, 30대 남성은 취업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책홍보와 제도이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남녀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내 수유 등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답하고 있음. 출산휴가는 42.4%, 육아휴직은 57.8%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서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7) 아버지들의 양육휴가제도가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2% 미만에 이르는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남성들의 양육참여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육아휴직제 이용확대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들의 양육과정 참여가 매우 중요함

8)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미혼남녀의 부부간 성역할 인식에서 남녀간 일관되게 10%p 정도의 격차가 나타남. 그러나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경제활동은 남녀 모두 전일제 형태의 맞벌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육아로 고정시켜 온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9) 현재 결혼을 하지 않거나 과거보다 결혼이 늦는 이유는 결혼비용이나 직장불안정 등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짐을 지우고 있음. 결혼식의 형식적 절차를 지양하고 새로운 결혼문화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10) 소자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이유는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자녀교육비 부담은 전계층에게 모두 해당되는 심각한 요인이지만, 특히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양극화는 취약계층 자녀의 잠재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경쟁적 교육환경을 지양하고 다원화된 학습 및 교육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11) 서울시 정책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매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녀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전파함

12) 정상의 규범을 벗어나서 서울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미혼모들이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미혼모들을 돕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함. 위탁모와의 연계를 통해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양육한 후 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미혼모가 키우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음

13)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던 기혼여성들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지원도 출산 양육환경조성의 중요한 부분임

14) 서울시의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학력 고소득층과 저학력 저소득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현물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I

서 론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한국사회는 지난 40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고 사회전반의 급격한 구조변동을 수반했다. 이러한 압축적 산업성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도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은 이러한 사회변동의 중요한 측면이다. 1세기에 걸쳐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선진사회들과 달리, 한국사회의 출산율 감소는 유례없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960년과 1970년에 인구증가율은 각각 2.6%와 1.7%에 달하였고 합계출산율[1]도 3명 내외 수준이었으나 1980~90년대에 이르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평균연령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약 4.5명에서 1980년 2.8명,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 1.6명, 2000년 1.5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급락하여 2000년대에는 1.1이라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5년에는 1970년의 24% 수준인 1.0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

| 표 1-1 |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05년)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핀란드	스페인	폴란드	일본	한국	OECD 평균
TFR	2.05	1.94	1.80	1.34	1.80	1.34	1.24	1.26	1.08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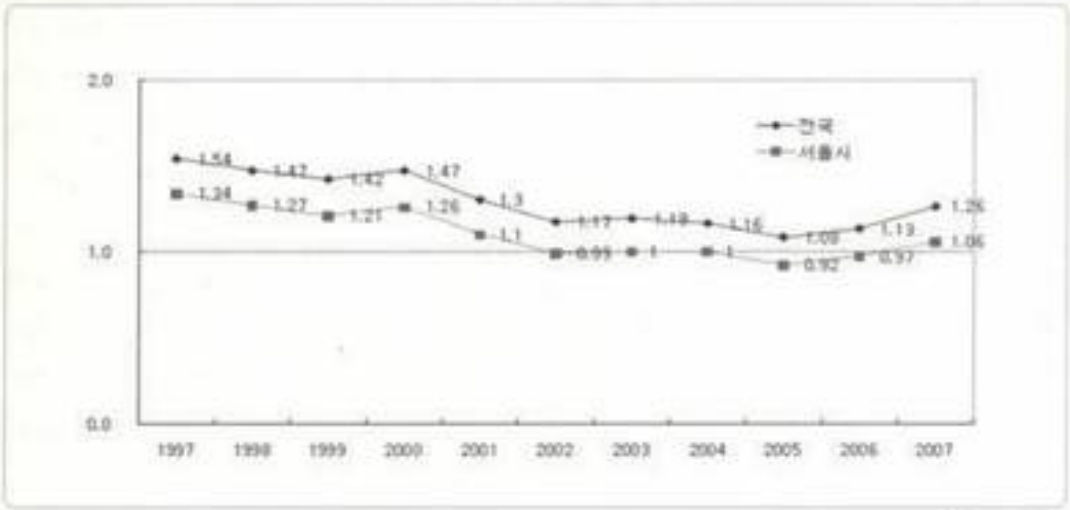
자료 : OECD(2007)

1) 합계출산율(TFR : Total Fertility Rate)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자녀 수를 말한다.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 : age-specific fertility rate)의 총합에 해당한다. 연령별 출산율은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 해당 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출산율은 인구대체출산율(2.1명)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OECD 평균 출산율 1.63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표 1-1〉).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출산율이 각각 1.13명, 1.26명으로 약간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저수준에 해당되며, 주된 출산연령층인 여성인구의 감소에 따라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0.92명으로 부산(0.88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2006년 0.97명, 2007년 1.06명으로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합계출산율은 부산(1.02명) 다음으로 낮다.

〈그림 1-1〉 서울시 및 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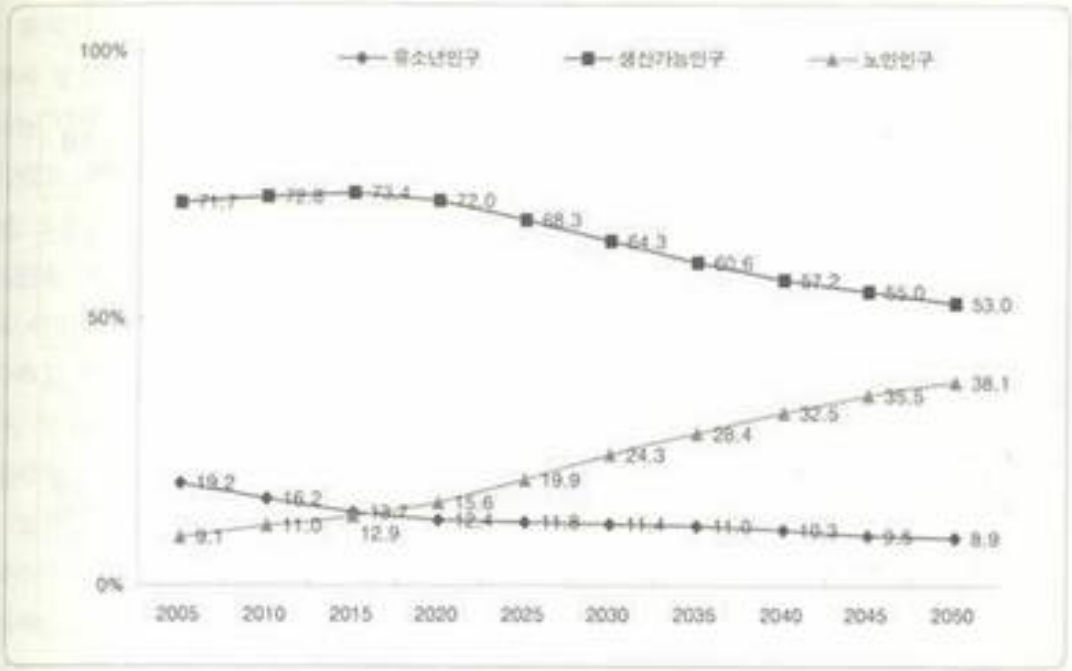


자료 : KOSIS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을 둔화시켜 잠재적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이후에는 유소년인구비율이 점차 하락하여 노인인구 비율보다 적어지고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53%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된다(〈그림 1-2〉).

〈그림 1-2〉 인구구조의 변화 : 2005~2050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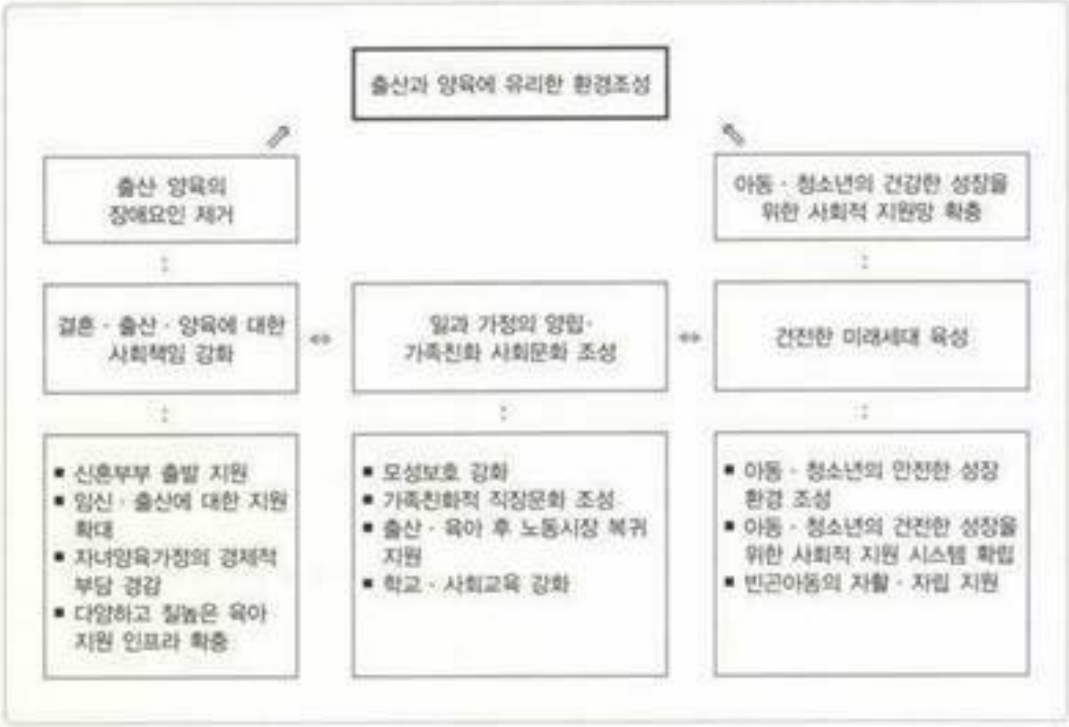


자료 : KOSIS

이와 같이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하였다. 2006년에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새로마지플랜2010)' 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새로마지플랜을 수정 보완하고 아래 〈그림 1-3〉과 같이 저출산 분야의 기본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OECD 평균 출산율(1.6명) 회복을 목표로 ① 결혼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②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③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 등 총 96개 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은 〈그림 1-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위해 가족가치와 양성평등 가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다양화도 추

〈그림 1-3〉 「새로마지플랜2010」 중 저출산 관련분야 기본계획



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효과는 과거 출산억제정책에 비해 단기간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어려움이 있다(김두섭 외, 2007:61). 서구사회의 출산장려 정책에서도 가시적 효과는 미미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력 저하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에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이 크고, 더불어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인구구조변동과 연관지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 뿐 아니라 가족과 결혼, 자녀양육을 둘러싼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미시적인 차원의 현실변화 또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과 자녀양육행태, 일가족양립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해서 출산 및 양육의 보편적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서울시 저출산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에 해당한다. 최근 수년간 저출산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이었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출산율과 관련된 사회적 변수는 여성, 고용, 복지, 가족, 경제, 보건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대응방안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접근과 함께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특징을 분석하여 저출산의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민의 성과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정책수요를 진단하여 서울시 밀착형 저출산 대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존의 정책들이 단기적인 처방 위주의 정책(예컨대, 출산지원금, 현금수당 등)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 제고로 귀결되지 않는 불분명한 예산지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 남성과 여성 간의 전통적인 영역분리와 성별분리가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사회적 책임으로 공유되는 속도가 더디고, 여성에게 부과된 경제사회적 기회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출산 지원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응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서울시민의 가족 및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된 의식과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의식과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e) 실태, 출산지원 정책수요 등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서 서울시 밀착형 저출산 대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기존의 출산 양육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민의 인구특성과 가족생활, 경제활동 등이 정확히 진단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효과성 높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별 상이한 가족생활과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배경 가운데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저출산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과 범위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서울시민의 생활실태, 즉 가족과 결혼, 자녀에 대한 의식변화와 가사 및 양육부담 등 가족생활을 둘러싼 서울시민의 가치와 의식, 일가족 양립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책임이 있는 서울시 남녀 근로자의 기업내 가족친화적 지원제도의 활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출산 및 양육휴가 이용실태와 경험을 조사하고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서울시 저출산 관련 정책사업의 인지도와 도움정도,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정책수요를 진단하고, 국내외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연구범위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복합적 효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요인과 서울시민의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실태 및 가족가치, 성역할 규범과 의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1)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의식 및 가치관
(2)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실태 : 가사 및 양육분담, 주당 근로시간, 일가족양립 인식
(3) 기업의 일가족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4) 서울시민의 출산지원정책 수요 : 성, 소득, 직업, 고용상태별 차이
(5) 국내외 정책 동향과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방안 발굴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결혼, 출산, 가족 및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는 결혼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 출산간의 관계를 설명한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산율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가족 내 가사분담 및 자녀양육 현황, 여성의 취업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서구사회 및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사회들의 출산력 변동과 가족관련 대응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에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함과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2) 전문가 자문

사회통계, 인구학, 복지정책, 여성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 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자문은 연구방향의 적절성과 연구방법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차 자문은 설문조사지 구성과 연구설계와 관련해서 설문내용을 검토받기 위한 서면자문을 진행하였고, 3차 자문은 설문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 해석 및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자문회의와 전문가 방문자문을 각각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3)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중앙정부차원의 기존연구와 달리, 서울시 차원의 저출산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 실증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결혼, 가족, 자녀양육 등 가족관련 의식과 가족생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과 연령,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역별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서울시

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조사인 것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을 한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는 2008년 7월 26일~8월 21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본 조사의 설계는 〈표 1-2〉와 같다. 조사규모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5~44세의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의 기초 자료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활용하였다. 표집방법은 성, 연령, 지역, 결혼상태, 경제활동여부별 인구수를 고려한 비율에 따라 세부 할당한 다단계층화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고려된 연구 설계와 조사를 통해 25개 자치구 남녀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의 보편적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1-2 |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모집단)	▪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성인남녀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표본수	▪ 총 2,500명
조사방법	▪ 가구방문을 통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 하에서 ±1.96%
표본추출	▪ 자치구, 성, 연령 및 결혼상태, 경제활동여부별 인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및 다단계층화 추출 방식
조사기간	▪ 2008년 7월 26일 ~ 8월 21일

또한 기존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의 조사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일차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태도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기혼남성이 저출산 관련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출산의 또 다른 주체인 남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역할과 권리를 반영하고자 남녀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출산 및 육아에 가장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 25~44세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 (주)리서치플러스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내부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직접 가구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7월 19일부터 24일에 걸쳐 총 50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드러난 설문지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본 조사는 2007년 7월 26일 - 8월 21일까지 27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조사 시 설문지는 '기혼용' 과 '미혼용' 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였다(부록 설문지 첨부).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 표 1-3 | 조사 내용

주 제	항 목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향후 결혼의향 •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 서울시의 결혼지원 정책 시행의 필요성	•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 • 가족/결혼에 대한 인식 •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유 • 중요하게 고려하는 배우자의 조건 • 이상적인 결혼연령 / 실제 결혼연령
성역할 의식 및 자녀관	• 부부역할에 대한 인식 • 이상적인 경제활동유형 • 자녀돌봄 가사분담 정도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이상적인 자녀 수 • 집안일 가사분담 정도 • 배우자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및 만족도 •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유리함 평가
출산 및 양육	• 희망하는 자녀 수 • 자녀 양육 방법 • 향후 추가 자녀 계획 • 결혼 후 자녀 성별 •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	• 자녀를 갖기 원하지 않는 이유 / 하나만 원하는 이유 •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 결혼 후 첫 아이를 갖고 싶은 때/조건 • 임신/출산 시 자녀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의향 • 자녀관 인식
일-가족 양립 실태	•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 결혼 후 여직원의 직장생활 유지 가능여부 •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불이익 경험 •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 활용가능 여부 • 출산휴가 경험 • 육아휴직 경험 • 육아휴직 후 자녀를 돌보기에 적절한 사람 •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할 때 힘든 점 •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에 대한 평가 • "임신한 근로자의 산전후 90일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도에 대한 만족도 •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만족도 •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주 제	항 목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평가 •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 • 4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 서울시에서 시행검토 중인 출산/양육지원 정책 필요정도 • 가사/양육 전담 가족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 • 현재 내 삶에서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 거주 자치구의 만족도

본 조사의 모집단은 25~44세에 속한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할당절차를 다음의 4단계에 걸쳐 진행하였고 최종 표본수는 〈표 1-4〉와 같다.

〈표본 할당 절차〉

- 1단계 : 25개 자치구별 만 25~44세 인구 비율에 따라 2,500명의 샘플을 비례할당
- 2단계 : 25개 자치구별 유의미한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할당된 표본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최소 샘플수가 100명이 되도록 Boosting함
- 3단계 : 25개 자치구별 할당된 샘플수를 성•연령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세부 할당
- 4단계 : 3단계까지 할당된 샘플수를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서울시의 성·연령별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여부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표 작성

| 표 1-4 | 자치구별 원 샘플 및 Boosting 샘플

자치구	원샘플 할당	보완표본	최종 표본수
전체	2,500	287	2,787
종로구	38	62	100
중구	31	69	100
용산구	60	40	100
성동구	85	15	100
광진구	98	2	100
동대문구	90	10	100
중랑구	102	-	102
성북구	114	-	114
강북구	81	19	100
도봉구	85	15	100
노원구	144	-	144
은평구	110	-	110
서대문구	85	15	100
마포구	105	-	105
양천구	117	-	117
강서구	136	-	136
구로구	105	-	105
금천구	60	40	100
영등포구	103	-	103
동작구	103	-	103
관악구	145	-	145
서초구	101	-	101
강남구	142	-	142
송파구	152	-	152
강동구	108	-	108

1단계에서는 25개 자치구별 만 25~44세 인구 비율에 따라 2,500명의 샘플을 비례 할당하였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약 2:1이 되도록 성별 비율을 조정하였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아직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단계에서는 25개 자치구별로 유의미한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구별로 할당된 표본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최소 샘플수가 100명이 되도록 Boosting하였다. 즉, 원 샘플 2,500개를 각 자치구별 모집단 인구비례에 맞추어 할당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종로구나 중구 등에는 50개미만의 샘플이 할당된다. 따라서 본 조사 연구의 주요한 분석 목적이 각 자치구별 비교분석을 위한 것이므로 안정적인 분석 사례수 확보를 위해 100개미만이 할당된 자치구에 최소 100샘플이 되도록 추가할당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저출산 관련 인식과 태도는 성•연령•자치구별 특성 뿐 아니라 결혼상태 및 경제활동여부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할당된 샘플수를 성•연령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 세부 할당하였다. 그리고 가구방문 조사의 경우 결혼 상태 및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표본구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취업주부에 비해 미취업 주부가 더 많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4단계에서는 3단계까지 할당된 샘플수를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서울시의 성•연령별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여부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할당표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된 할당표를 토대로 한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집 절차〉

- 1단계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본수를 기준으로 최종 실사지점 수를 결정함. 한 개 실사지점에서 약 10명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목표로 실사지점 수를 결정
- 2단계 : 각 자치구별로 행정동별 인구수, 가구수, 주택형태, 사업체 수 등을 투입변수로 하여 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동을 몇 개의 군집으로 묶음
- 3단계 : 각 군집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군집별로 필요한 실사지점(행정동)을 무작위 추출
- 4단계 : 해당 실사지점에서 가구방문을 통해 기 작성된 할당표에 맞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면접조사 실시

최종적으로 선정된 실사지점은 〈표 1-5〉와 같다.

본 조사의 표본 구성은 2,500명을 자치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한 후 100표본 미만인 자치구의 경우 100표본이 되도록 보완표집을 실시하여 실제 조사 표본수는 2,787명이다. 이

표본구성은 자치구별 인구구성 비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분석 및 거주지역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따른 분석은 자치구별 인구구성에 맞도록 가중치(2,500명 할당시 기준)를 부여하여 실시하였다. 거주지역(자치구)별 분석은 모든 자치구가 100명 이상 표집 되도록 한 실제 조사 표본(2,787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즉, 보고서 본문 및 부록 통계표 내용 중 전체 응답 내용과 거주지역을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이다.[2]

| 표 1-5 | 최종 실사지점

(※ 괄호 안은 표본수)

구	군집	실사지점
종 로 구	1 3	사직동(10) 창신3동(7) 숭인1동(9) 명륜3가동(12) 창운동(14) 혜화동(6) 이화동(10) 부암동(10) 창신2동(11) 효자동(11)
중 구	1 2 3	정충동(10) 신당1동(10) 회현동(11) 광희동(10) 신당5동(10) 신당2동(10) 신당3동(10) 신당4동(9) 신당6동(10)
용 산 구	1 2 3	이촌1동(10) 원효로2동(9) 한남1동(8) 보광동(11) 후암동(9) 청파1동(12) 이촌2동(10) 서빙고동(10) 한강로2동(12) 이태원1동(9)
성 동 구	1 2 3	마장동(8) 성수1가1동(10) 행당1동(11) 용답동(11) 성수2가1동(10) 성수1가2동(11) 왕십리2동(11) 송정동(8) 왕십리1동(10) 금호4가동(10)
광 진 구	1 2 3	자양2동(11) 자양3동(10) 광장동(9) 구의3동(9) 군자동(12) 화양동(9) 중곡3동(10) 자양1동(10) 능동(10) 중곡1동(10)
동대문구	1 2 3	답십리5동(9) 청량리2동(9) 회기동(10) 전농1동(10) 장안4동(9) 장안3동(10) 장안1동(11) 전농4동(11) 이문2동(11) 이문3동(10)
중 랑 구	1 2 3	망우1동(11) 묵2동(12) 중화2동(11) 면목3동(6) 상봉1동(9) 신내1동(7) 면목7동(11) 면목2동(13) 망우2동(13) 면목8동(9)
성 북 구	1 2 3	보문동(9) 길음2동(8) 월곡2동(12) 정릉2동(10)안암동(13) 돈암1동(11) 성북동(12) 삼선동(11) 월곡1동(11) 정릉1동(10) 길음1동(7)

2) 전체 및 인구통계학적 속성(거주지역 제외)에 따른 분석 시 사용된 가중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치(w)} = \frac{\text{지역/성/연령 비례에 따른 각 cell의 할당 표본수(2,500명 할당 시)}}{\text{지역/성/연령에 따른 각 cell의 실제 조사 표본수}}$$

구	군집	실사지점
강북구	1	미아6,7동(8)
	2	미아4동(12) 미아8동(11) 미아2동(11) 미아5동(8)
	3	수유2동(13) 수유1동(7) 미아3동(12) 수유4동(10) 번1동(8)
도봉구	1	방학1동(10) 창2동(7) 창5동(8) 창4동(13) 도봉2동(10)
	2	도봉1동(10) 쌍문2동(11) 방학2동(9)
	3	쌍문3동(10) 창3동(12)
노 원 구	1	상계6동(10) 공릉1동(13) 상계4동(10) 월계4동(8) 월계1동(10) 공릉2동(9)
	2	상계5동(10) 중계4동(11) 중계3동(9) 월계3동(9) 하계1동(11) 월계2동(14)
	3	상계9동(10) 상계8동(10)
은 평 구	1	대조동(10) 녹번동(10) 불광1동(11) 응암1동(8) 구산동(9)
	2	갈현2동(12) 역촌1동(9) 신사2동(10) 신사1동(10)
	3	불광2동(11) 응암3동(10)
서 대 문 구	1	북아현2동(10) 북아현1동(12) 홍은1동(10)
	2	천연동(13) 북가좌1동(8) 연희3동(15) 연희1동(8) 북아현3동(12)
	3	북가좌2동(6) 홍은3동(6)
마 포 구	1	망원1동(11) 서교동(10) 망원2동(10) 성산1동(10) 신수동(4) 연남동(11)
	2	성산2동(11)
	3	신공덕동(10) 공덕1동(9) 아현1동(9) 공덕2동(10)
양 천 구	1	목4동(10) 신정7동(9) 신정1동(7) 목1동(12) 신월1동(12)
	2	신정3동(10)
	3	신정5동(8) 목3동(12) 목5동(4) 목6동(10) 신정4동(13) 신월3동(10)
강 서 구	1	화곡본동(11) 화곡7동(9) 방화1동(13) 화곡8동(11)
	2	화곡3동(7) 발산1동(8) 화곡1동(12) 발산2동(8) 화곡4동(10) 화곡5동(11) 화곡2동(7) 등촌2동(10)
	3	방화3동(10) 염창동(9)
구 로 구	1	고척2동(9) 오류2동(10) 신도림동(10) 개봉2동(8)
	2	구로1동(10) 온수동(수궁동)(9) 구로3동(11) 구로2동(10) 개봉3동(10)
	3	가리봉1동(9) 가리봉2동(9)
금 천 구	1	독산3동(10) 시흥1동(9) 독산본동(21)
	2	시흥2동(9) 독산1동(14)
	3	독산4동(7) 가산동(9) 시흥4동(12) 시흥5동(9)
영 등 포 구	1	당산2동(8) 신길6동(10) 대림3동(9)
	2	신길4동(10) 도림1동(10)
	3	신길1동(9) 문래1동(10) 대림2동(10) 대림1동(14) 당산1동(13)
동 작 구	1	동작동(8) 상도1동(10) 상도3동(6) 신대방2동(10) 사당1동(12) 사당3동(15) 상도4동(11)
	2	사당2동(14) 사당5동(8) 사당4동(9)
관 악 구	1	봉천3동(7) 봉천8동(5) 남현동(7) 봉천본동(7) 신림10동(10) 신림11동(12)
	2	신림1동(15) 신림8동(10) 봉천4동(8)
	3	봉천11동(12) 신림4동(10) 신림9동(11) 봉천1동(11) 봉천6동(10) 신림7동(10)

구	군집	실사지점
서 초 구	1	반포2동(15) 방배본동(8)
	2	잠원동(7)
	3	반포3동(6) 서초1동(11) 서초4동(9) 반포1동(8) 양재1동(12) 반포4동(12) 방배3동(13)
강 남 구	1	삼성1동(11)
	2	논현1동(13) 역삼1동(13)
	3	신사동(7) 대치3동(10) 압구정1동(11) 일원본동(10) 삼성2동(9) 일원1동(9) 대치4동(8) 개포4동(10) 개포2동(12) 역삼2동(9) 도곡2동(10)
송 파 구	1	잠실3동(10)
	2	석촌동(8) 잠실본동(10) 가락2동(10) 방이2동(10) 풍납2동(10) 삼전동(13) 송파1동(11) 거여2동(11)
	3	잠실5동(8) 풍납1동(10) 마천1동(9) 문정2동(11) 방이1동(10) 거여1동(11)
강 동 구	1	암사4동(10)
	2	상일동(8) 성내3동(10) 천호3동(8) 명일1동(12) 길2동(9)
	3	암사1동(9) 성내1동(8) 길1동(9) 천호4동(8) 고덕1동(17)

본 조사에 응답한 남녀 서울시민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징은 〈표 1-6〉과 같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저출산의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심층 분석에 활용되며,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이항로지스틱분석, 요인분석 등 고급통계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 표 1-6 |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실제 조사된 표본의 응답자 특성		가중치 부여 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N	%	N	%
전체		(2787)	100.0	(2500)	100.0
성별	여성	(1843)	66.1	(1656)	66.2
	남성	(944)	33.9	(844)	33.8
연령별	25~29세	(746)	26.8	(671)	26.8
	30~34세	(702)	25.2	(635)	25.4
	35~39세	(719)	25.8	(645)	25.8
	40~44세	(620)	22.2	(549)	22.0
혼인상태별	미혼	(1062)	38.1	(949)	37.9
	기혼	(1725)	61.9	(1551)	62.1
취업상태	취업	(1709)	61.3	(1523)	60.9
	비취업/미취업	(1078)	38.7	(977)	39.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948)	34.0	(848)	33.9
	비취업 여성	(895)	32.1	(808)	32.3
	취업 남성	(761)	27.3	(675)	27.0
	비취업 남성	(183)	6.6	(169)	6.8

		실제 조사된 표본의 응답자 특성		가중치 부여 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N	%	N	%
학력별	고졸 이하	(1087)	39.0	(954)	38.2
	전문대	(508)	18.2	(458)	18.3
	대학교	(1122)	40.3	(1023)	40.9
	대학원 이상	(70)	2.5	(65)	2.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715)	25.7	(630)	25.2
	200만~ 300만원 미만	(653)	23.4	(588)	23.5
	300만~ 400만원 미만	(628)	22.5	(568)	22.7
	400만원 이상	(761)	27.3	(689)	27.6
	모름/ 무응답	(30)	1.1	(25)	1.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54)	5.5	(142)	5.7
	화이트칼라	(727)	26.1	(656)	26.2
	블루칼라	(828)	29.7	(725)	29.0
	전업 주부	(674)	24.2	(610)	24.4
	학생/실업/비취업	(404)	14.5	(367)	14.7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92)	22.9	(365)	24.0
	상용근로자	(1145)	67.0	(1005)	66.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72)	10.1	(153)	10.0

II

출산율 변화와 정책대응

II 출산율 변화와 정책대응

1.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1)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

합계출산율로 측정되는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1960년 6.0명으로 아주 높았으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되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2006년과 2007년 연속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였으나 2008년 다시 감소되는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수준은 저출산 현상을 일찍이 경험한 프랑스(1.96명), 영국(1.84명), 미국(2.10명), 독일(1.33명), 일본(1.32명) 등 주요 OECD국가들의 출산율보다 낮은 최저수준으로서 우리사회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3]

결혼연령의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연령별 출산율 또한 큰 폭으로 변화하고,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을 토대로 한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은 장래 출산율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최근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김승권, 2004). 따라서 여성의 현재 총출생아수별로 추가자녀를 희망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출산율을 추정하고 있다. 1994년, 1997년, 2000년 실태조사에서 추가자녀 희망율에 의거한 희망 합계출산율을 산출하였는데, 한국의 기혼여성의 희망 합계출산율이 가까운 장래의 시기 합계출산율을 비교적 정확히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들의 출산조절이 추가자녀 희망여부와 거의 일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희망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한명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에 추가자녀 희망율이 약 60% 혹은 그 이하의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김승권 외, 2000)

3) 외국의 합계출산율 기준은 2007년도임

2) 출생아동 규모의 변화

출생아동수는 가임여성인구(15~49세) 규모의 영향을 받지만 이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출산율 저하의 결과는 출생아수 감소로 나타나며, 출산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가임여성인구가 감소하면 출생아수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가임여성인구의 규모와 출산율이 상호작용하여 출생아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지표는 출생아수의 변화이다. 1970년 약 100만7천명이던 출생아는 2003년에 49만3천5백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동 기간 하루 평균 신생아수가 2,759명에서 1,352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더구나 2003년부터는 가임여성 집단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출산율이 현저하게 반전되지 않는 한 출생아수의 감소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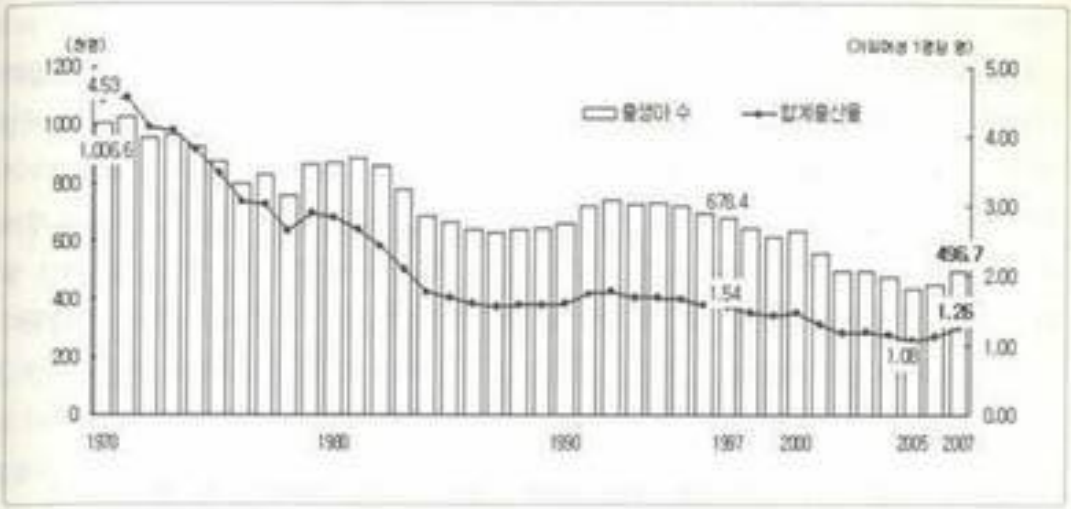
| 표 2-1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생아 수(천명)	678.4	643.0	616.3	636.8	557.2	494.6	493.5	476.1	438.1	451.5	496.7
증 감(천명)	-17.4	-35.4	-26.7	20.5	-79.6	-62.6	-1.2	-17.4	-38.0	13.5	45.2
증감률(%)	-2.5	-5.2	-4.2	3.3	-12.5	-11.2	-0.2	-3.5	-8.0	3.1	10.0
1일 평균(명)	1,859	1,762	1,689	1,740	1,527	1,355	1,352	1,301	1,200	1,237	1,361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14.8	13.8	13.2	13.4	11.6	10.3	10.2	9.8	9.0	9.2	10.1
합계출산율(전국)	1.54	1.47	1.42	1.47	1.30	1.17	1.19	1.16	1.08	1.13	1.26
합계출산율(서울)	1.34	1.27	1.21	1.26	1.10	0.99	1.00	1.00	0.92	0.97	1.06

2007년 출생아 수는 49만7천명으로 2006년보다 4만5천명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2006년보다 0.13명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등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분석된다.[4] 2007년 출생아 수 증가는 첫째아 출생증가가 전체 출생증가의 68.9%를 차지했고, 여성의 출산연령층(15~49세)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연령계층 중 가장 높았고, 전년대비 증가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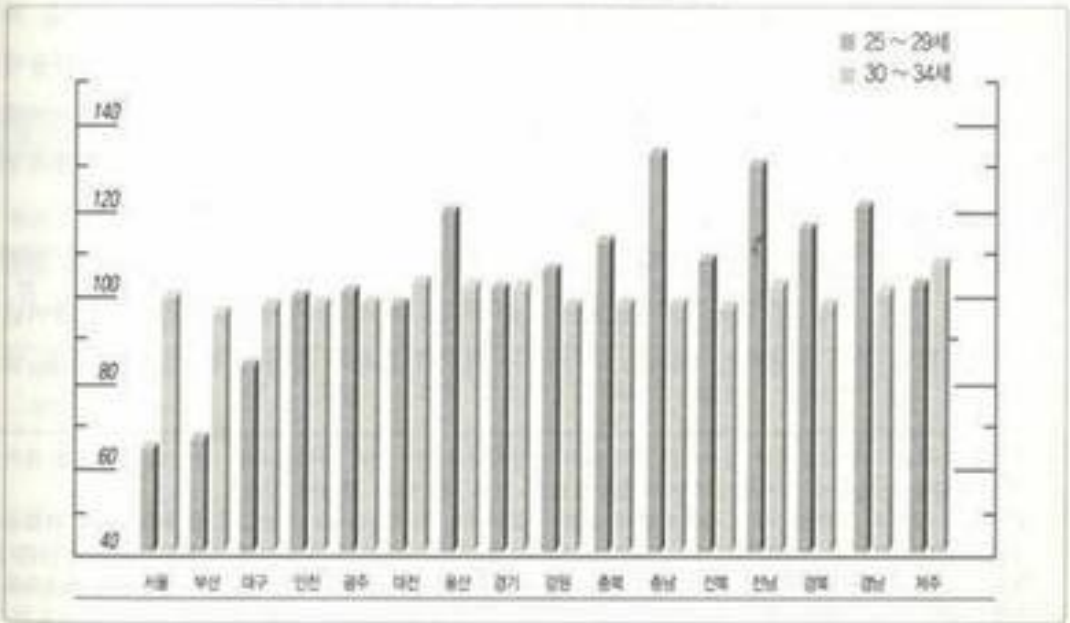
4) 제3차 베이비붐 효과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혼인·출산연령기에 도달하여 나타난 효과를 말한다.

〈그림 2-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대전, 경기, 제주는 3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이 20대 후반 여성들의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08). 시도의 연령별 출산율(〈그림 2-2〉)을 보면,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20대 후반 출산과 30대 초반 출산의 역전은 2005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림 2-2〉 시도별 연령별 출산율



3)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의 변화

이상자녀수, 현존자녀수, 합계출산율 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이상자녀수는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으나[5] 1990년대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존자녀수는 감소하거나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 이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개인 및 가족환경의 변화가 이상자녀수와 출산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김승권, 2001).

2.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

출산율의 변화는 결혼상태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사회와 같이,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 결혼연령의 변화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59-1999년 사이의 출산력 변화를 10년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결혼연령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59-1969년에는 10%이던 것이 1970년대에는 15%, 1980년대에는 39%, 1990년대에는 195%나 되었다(김승권, 2004). 이는 최근의 결혼연령 연장이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배우 출산력이 합계출산율에 기여하는 비중은 1959-1969년에는 90%나 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85%, 1980년대는 61%로 낮아졌고, 1990년대에는 -9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6] 이는 최근의 출산율 저하가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저하보다는 만혼과 독신생활의 증대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혼율 증대와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는 만혼 및 결혼기피, 출산 기피, 출산 불가 등으로 나타난다. 출생아의 98.4%가 법적 혼인상태에서 태어난 아동이고, 혼인 외의 출생아는 1.6%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혼과 출산의 결합도 출산율을 낮

5) 출산율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이상자녀수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상자녀수가 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6) 여기에서 -95%의 의미는 만일 결혼연령의 변화가 없었다면 합계출산율이 +95%의 반대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1989년의 1.6 수준에서 1999년의 1.42 수준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77 수준으로 상승할 것임을 의미하며, 미혼율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상쇄하고 그 이상으로 총출산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권(2004)

추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7] 또한 경기침체 및 소득불안정, 결혼가치관의 변화, 초혼연령의 상승, 자녀양육에 대한 질적 관심 증대, 자녀양육비 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자녀효용가치 감소, 이혼 등 가족불안정 증대, 불임부부의 증대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1) 결혼가치관의 변화와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의 결혼연령은 계속하여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미혼율을 보면, 25~29세 연령층의 미혼율은 1970년 10%에서 2000년 40%로 증가했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 1%에서 2000년 11%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이 43%에서 7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은 6%에서 28%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혼율의 증가와 결혼연령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결혼연령 상승은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활동 증가, 커리어개발 욕구 등에 기인한다. 남녀의 초혼연령이 1960년 남자 25.4세 여자 21.6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에는 남자 29.3세, 여자 26.5세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뚜렷한 만혼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지연시키는 현상은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에 주요 원인이다.

| 표 2-2 | 평균초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

(단위 : %)

구 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초혼연령	여자(전국)	25.5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8.1
	여자(서울)	26.1	27.3	27.5	27.8	28.0	28.3	28.6	28.7	29.0
	남자(전국)	28.4	29.3	29.6	29.8	30.1	30.6	30.9	30.9	31.3
	남자(서울)	28.7	29.7	29.9	30.1	30.5	30.9	31.2	31.2	31.5
첫 자녀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		26.7	27.7	28.0	28.3	28.6	28.9	29.1	29.2	-

7) 혼인 외의 출생자는 2006년 기준, 한국 1.5%, 일본 2.1%, 미국 38.5%(p), 영국 43.9%, 프랑스 49.5%, 이탈리아 18.6% (2007년 20.7%로 증가), 독일 30.0%를 차지한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경우, 혼외자 비율이 40~50% 가까이 된다. 통계청(2008)

2) 소자녀 선호와 양육에 대한 질적 관심의 증대

1960-1999년 간 기혼여성의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경향에 비추어,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는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가치관, 커리어 개발 욕구의 증대, 자녀양육 부담 증대 등이 기혼남녀의 자녀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후 약 2명 정도의 자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03년 평균 현존자녀수는 1.78명으로 1994년 및 1997년의 1.8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2000년보다는 다소 상승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기혼부부는 평균 2명에 약간 못 미치는 일정 규모의 자녀를 두고 이러한 수준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소득수준의 증가가 자녀수의 증가로 나타나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태도가 증가한다는 주장으로 대체되었다. 한국사회에서도 소자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자녀양육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 증대는 사교육비의 증대, 조기유학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이는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증대로 연결된다.

3) 젠더관계의 변화와 저출산

저출산 현상은 역사적으로 성인 남녀의 파트너십과 관련되어왔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을 둘러싼 가족구조, 노동시장 등 젠더관계와 사회체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더욱이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갖는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출산력 변화에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출산력의 변화는 젠더 관계의 변화, 정책 개입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경, 2005).

노동시장의 표준 노동자 모델은 돌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남성 생계 부양자 중심 모델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또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모델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돌봄의 역할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가족 내 책임을 전제하고 가족 내 성별분업을 유지한 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

는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여성만이 아닌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차이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율 하락에 대한 일반적 가정은 성별분업과 가족문화를 전제로 하는 근대 가족규범의 안정성이 약해지면서 저출산을 낳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자녀를 선호하게 되고,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OECD 국가의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이러한 가정과는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고등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가정이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가 늘고, 여성들의 의식이 향상해서 출산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역시 OECD 국가의 경우를 보았을 때, 여성교육수준의 향상이 출산력 저하로 나타났던 것과 반대로 출산율 증가와 비례하고 있다.

혼인 및 이혼율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가족 규범이 강하기 때문이다. 혼인율이 낮고 이혼율이 높은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출산안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혼인 가족의 정통성을 강하게 유지하는 남부 유럽 국가들은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낙태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출산력과 관계를 미친다는 가정에 여러 국가들이 출산율 조절 장치의 하나로 낙태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낙태정책의 변화는 출산율의 실질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폴란드의 사례는 출산력 증대를 위해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출산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는 90년에는 엄격한 규제, 95년에는 규제의 해제, 97년에는 다시 규제를 채택하였지만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게 출산율은 90년대에 계속 감소해왔다.

전통적인 근대가족의 모델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전담자의 성별분업이 출산과 육아에 가장 안정적인 가족형태라고 가정되어진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분업의 전형성을 해체하고 있는 가구 내 가사분담과 육아분담의 형평성이 출산에 친화적이다. 따라서 저출산에 대한 일반적 가정이 그와 같이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 혼인감소/이혼증가와 같은 파트너십의 변화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출산력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e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이론화하고 있다.

3.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1) 경기침체 및 소득불안정

결혼과 주거마련에 요구되는 고비용의 경제력은 결혼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주거비용의 부담과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남성의 미혼율을 높이고 비자발적 미혼상태에 있게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한 비정규직 직장 근로자의 증대와 과도한 주거비용 등은 결혼 연기 및 독신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비정규직의 증대와 청년실업의 양산은 저출산의 주요한 경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졌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가구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진 가족이 증가하였다.

2) 자녀양육비 부담 증대

가구의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사교육비 등이 지목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이 일반가정보다 더 큰 경제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중 하나가 바로 양육 및 교육비용의 문제이다. 부모는 과도한 경쟁사회 구도에서 자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질높은 양육 및 교육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한 많은 일들이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가족들의 시장의존이 커지고 보육서비스와 교육상품의 구매 비용이 매우 증가되었다.

자녀양육의 비용중 가장 큰 비중은 보육이나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다. 조기교육과 사교육 열풍,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주의 등으로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구소비지출 중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42.2%이지만 2명일 경우에는 60.7%, 3명일 경우에는 69.7%, 자녀수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72.6%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소비지출의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소득수준 상위 20% 가족은 보육비로 월평균 50만원을 지출하고 있고, 소득수준 하위 20% 가족은 월평균 약 20만원을 자녀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7).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자녀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되어 나타난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양육문제를 조사한 결과, 57.7%

가 양육 비용부담을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5). 일인생계부양자 가족의 경우, 62.2%로 늘어나고, 이인생계부양자 가족은 여성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64.0%,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에 50.5%로 감소된다.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녀보육과 양육에 대한 서비스 구매욕구는 보편적이지만 구매력의 차이로 저소득층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질적 수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를 제한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가족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4. 저출산의 정책적 요인

1) 인구증가억제정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1990년대 초 이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발달 등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한 영아사망율 급감, 소자녀 선호의 가치관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 현상이다. 특히, 출산율 수준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

| 표 2-3 | 인구증가억제기의 양육관련 정책

구 분	국가정책
1960년대	출산억제정책 도입
1970년대	• 지원제도 – 2자녀까지 소득세 면제, 근로자 가족계획경비에 대한 기업세 면제('77) –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 공공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피임기구 수입세 감면('78) – 공공병원에서 2자녀 출산후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출산비용 감면('80)
1980년대	• 지원제도 –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 주택자금/저소득층 생계비 우선지원('82) – 저소득층 불임수용자 생계비 지원('82) – 2자녀 이하 불임수용자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1차무료진료 실시('82) – 자녀교육비 감면대상, 공무원 가족수당/자녀교육비 지급 2자녀로 제한('82) – 의료보험대상 친정부모, 장인장모 확대('85)
1990년대	인구억제정책 폐지 및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한 인구정책으로 전환('96)
2000년대	출산지원정책으로 전환

자료 : 이삼식 외(2007:110)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채택된 인구증가억제정책이었다. 1961년 출산억제정책을 시작으로 1996년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전까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책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종류가 제한적이었고 자녀학비와 의료비 등을 위한 소득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족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정책역사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으로 형성된 소자녀관이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2) 저출산대책과 국가의 양육분담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2004년 이후부터 더욱 가시화되었다.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2004년 2월 설치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2005년 하반기에 설치되면서 2006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이 수립되어 새로마지플랜을 발표하였다. 새로마지플랜은 출산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양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정책적 지원이 잔여적 접근과 보육정책 방향의 불분명함,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의 실효성 미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접근성 제약,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계 등이 지적되었다(이삼식 외, 2007b)

3)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에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은 저출산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1) 보육정책

저출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보인 영역이 보육서비스이다.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

시설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7년 12월 현재 전국 30,85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344,132명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육정책에서 일률적인 보육료 산정기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조금의 부족, 보육종사자의 현직교육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출산 양육지원 시스템으로서 보육정책에 대한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도미향, 2006)

보육지원정책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목표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의 일가정양립과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뿐 아니라 미래의 양질의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으로 구분된다.

1990년 이후 보육시설과 이용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호한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시설은 전체의 10.4%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표 2-4>).

<표 2-4>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7.12.31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소계	법인 외	민간 개인			
시설수	전국	개소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	100	5.7	4.7	45.6	3.2	42.4	0.2	42.7	1.0
	서울	개소	5,532	637	31	2,590	245	2,345	17	2,174	83
		%	100	11.5	0.6	46.8	4.4	42.4	0.3	39.3	1.5
이용 아동	전국	명	1,344,132	135,302	144,845	815,096	68,268	746,828	1,764	226,342	20,783
		%	100	10.1	10.8	60.6	5.1	55.6	0.1	16.8	1.5
	서울	개소	224,144	52,964	2,445	126,528	13,104	113,424	524	36,479	5,204
		%	100	23.6	1.1	56.4	5.8	50.6	0.2	16.3	2.3

자료 : 보건복지가족 보육지원과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운영형태를 나타냄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관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선자, 2007).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율은 여성의 경

력단절을 막고 일가족양립을 위한 핵심적 지원제도인데, 영아보육에서도 수요에 비해 시설이용율은 매우 저조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합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율이 19.6%에 불과하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10명중 1명은 출산휴가 후 3년 이내 퇴직하고, 그중 37.3%가 아이를 맡길 적절한 시설이 없어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보육서비스에 확충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표 2-5)).

| 표 2-5 | 영유아 육아지원시설 이용율

(단위 : 명)

구 분	전체 아동(A)	보육시설 이용 아동(B)		시설이용율 (B/A)
		보육시설	유치원	
0세	479,102	25,225	-	5.3%
1세	478,115	79,885	-	16.7%
2세	479,029	176,140	-	36.8%
0~2세 소계	1,436,246	281,250	-	19.6%
3세	513,930	230,737	74,824	59.6%
4세	594,759	218,063	176,963	66.4%
5세	613,603	194,549	289,816	78.9%
3~5세 소계	1,722,292	643,349	541,603	68.8%
0~5세 총계	3,158,538	924,599	541,603	46.4%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여성가족부(2006), 「보육통계」 ;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통계연보」 ; 김선자(2007: 5)에서 재인용

영유아기 보육·교육은 아동보호와 초등학교 진학의 기초능력 배양을 넘어서 생애과정 전체에 걸친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설별 보육과 교육환경, 아동의 가정환경 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하여 장기적인 보육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조윤영·김정호, 2008).

직장보육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은 모든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의무공급을 적용하고 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거나 설치여건이 부적합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사정 때문에 정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의무사업장의 경우 보육수당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은 2007년 12월 현재 3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는 8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전국에서 시설수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 표 2-6 |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2007.12.31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수
		보육정원	보육현원	
전 국	320	20,783	15,124	1,926
서 울	83	5,204	3,958	533
경 기	77	5,728	4,387	589
인 천	22	961	839	112
충 남	16	1,156	612	63
경 북	16	894	573	72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최근 자녀양육에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출산을 중단하려는 기혼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소득부족이나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부족으로 인해 출산중단을 결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양육비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서도 비용문제가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이삼식 외, 2007b).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나타난 양육부담의 지원책들이 여전히 저소득층 중심의 잔여적 성격을 갖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는 0~4세 아동의 차등보육 및 교육비 지원,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은 2006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체아동의 80%까지 포함시킬 계획에 있다.

재원의 한계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소득층 지원조차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방식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가족양립지원이 사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노동(정규직 중심의)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구분되는 이중체계적 성격도 갖는다. 현행 보육지원정책은 보육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보조금에 맞벌이 가구나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조금 지원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1%에 불과하여,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1/20~1/30에 불과한 수준이며, OECD 평균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즉, 공적지원의 미흡으로 가족, 특히 여성들은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2007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보육료의 20~100%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이외에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두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표 2-7>). 그러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녀양육 가족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된다. 자녀양육가정의 소득 대비 보육 교육비 지출은 평균 8.3%로 나타나,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58.1%에 달한다.

| 표 2-7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현황 : 2007년

구 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대상자수
차등보육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지원 단가의 100%, 80%, 50%, 20%	563천명(+168천명)
만 5세아 무상보육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월 162천원	152천명(+152천명)
두자녀 이상 보육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둘째아부터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50%	40천명(+10천명)

자료 : 여성가족부(2006), 「2007년 예산개요」;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년 예산개요」

한편, 2006년부터 보육료, 교육료 차등지원과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금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의 도입은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을 국공립시설의 보육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보조금은 아동수에 따라 시설이 지원받는 총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나 교사인건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설 이용 가구의 아동은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저소득층이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취업모의 양육권을 지원하고 동시에 일-가족 양립을 보장해줌으로써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출산근로자에게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줄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음 60일의 휴가급여는 기업부담으로 유급휴가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휴가이다. 또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만 1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 표 2-8 | 산전후휴가제도의 특성

구 분	산전후 휴가	산전후휴가 급여
기업의 제공 의무	○	×
의무기업의 보편성 여부	모든 기업	-
기업의 비용부담 의무	○	○
기업의 실제 비용부담률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의 90일 통상임금액(상한 13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이외 기업은 60일 초과기간만 통상임금액(상한 135만원) 고용보험 지원
고정 편익량 여부	○(90일)	60일간 임금소득 비례, 100%, 30일은 무급
근로자 자격요건	○	○
근속 또는 고용기간 상의 자격요건	없음	최소3개월 고용보험 가입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료 : 김혜원 외(2007:43)

| 표 2-9 | 산전후휴가 급여실적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인원	총지급액	총출생아수	25~34세 고용보험가입 여성근로자수	25~34세 여성인구
2002	22,711	22,601	496,625		3,955,082
2003	32,133	33,522	493,471		
2004	38,541	41,610	476,052		
2005	41,104	46,041	438,062	1,083,612	
2006	48,972	90,886	-		

자료 : 김혜원 외(2007:44)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주어져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결원의 발생으로 인한 암묵적 비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2001년 월 20만원의 정액급여에서부터 시작하여 2003년 30만원, 2004년부터 40만원, 2007년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과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10 | 육아휴직제도의 특성

구 분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기업의 제공 의무	○	×
의무기업의 보편성 여부	모든 기업	-
기업의 비용부담 의무	○	×
기업의 실제 비용부담률	100% 아님. 정부가 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	비용부담 없음 고용보험에서 월고정급 50만원 지급
고정 편익량 여부	○ (1년, 1세 미만 시점에서 신청)	○ (월 50만원)
근로자 자격요건	○	○
근속 또는 고용기간 상의 자격요건	육아휴직 개신 시점에서 현 직장 1년 근속	6개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격 유지(6월)

자료 : 김혜원 외(2007:45)

2006년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사용자 비율은 27.4%에 불과하며, 육아휴직급여자 중 남성비율은 1.7%로서 남성근로자의 양육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남성들의 양육참여와 육아휴직제 활용은 일가족양립의 정책이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제도로서,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을 완화하고 자녀와의 가족시간을 좀더 갖고자 하는 남성근로자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이 2,390시간으로 OECD 국가중 가장 긴 일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특히 남성들이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직장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 표 2-11 |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실적

연도	지급액 (백만원)	인원(명)			월급여액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자 비율(%)	평균 육아휴직일수
		전체	여성	남성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20.9	여 195일
							남 158일
2004	20,603	9,304	9,123	181	40만원	23.7	여 209일
							남 186일
2005	28,242	10,700	10,500	200	40만원	25.5	여 211일
							남 185일
2006	34,521	13,670	13,440	230	40만원	27.4	여 216일
							남 191일

자료 : 김혜원 외(2007:46)

| 표 2-12 |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적

(단위 : 명)

연 도	육아휴직			
	전체(A)	여성(B)	남성(C)	남성비율(C/A*100)
2002	3,768	3,685	78	2.1%
2003	6,816	6,712	104	1.5%
2004	9,303	9,122	181	1.9%
2005	10,561	10,357	204	1.9%
2006	13,670	13,440	230	1.7%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2006.12.31; 이삼식 외(2007b: 123)에서 재인용

또한 휴가제도의 비탄력적 운영이나 휴가급여의 비현실적 수준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제의 활발한 이용과 이를 통한 남녀근로자의 일가족양립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30조에는 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시 부당해고 등에 노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사직압력, 부당해고, 전보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고용보험에 의한 모성보호(산전후휴가 등),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에서도 나타나며,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시급하다.

III

서울시 2544남녀의 가족의식과 출산행위

III 서울시 2544남녀의 가족의식과 출산행위

서울 시민의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각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다. 최근 많은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한국인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식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도 예외가 아니므로 서울 시민들의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의식,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저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한 규명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저출산 현상의 사회문화적 배경요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변화 및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출산행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식의 전반적 실태와 성, 연령, 혼인지위, 취업상태별 가족의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출산행위에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 25~44세 남녀 2,500명이 가족을 중시하는 전반적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의식과 가치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가족 및 출산 관련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분석하고자 함으로써 정책 대안까지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 가족가치관

1)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남녀 2500명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 (26.0%)이라고 4명 중 1명은 대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안정' (19.6%), '사회적 성공' (12.4%), '자녀' (12.1%), '건강' (11.4%)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정의 행복' 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성과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 자녀, 건강의 순서이다. 한편 남성의 경우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시되고 그 다음이 가정의 행복, 사회적 성공, 건강, 자녀의 순서로 성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를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남성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이 상당히 중시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정의 행복과 자녀 가치는 중시되는 반면,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은 중요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25~34세의 임신·출산·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에서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 표 3-1 | 응답자 특성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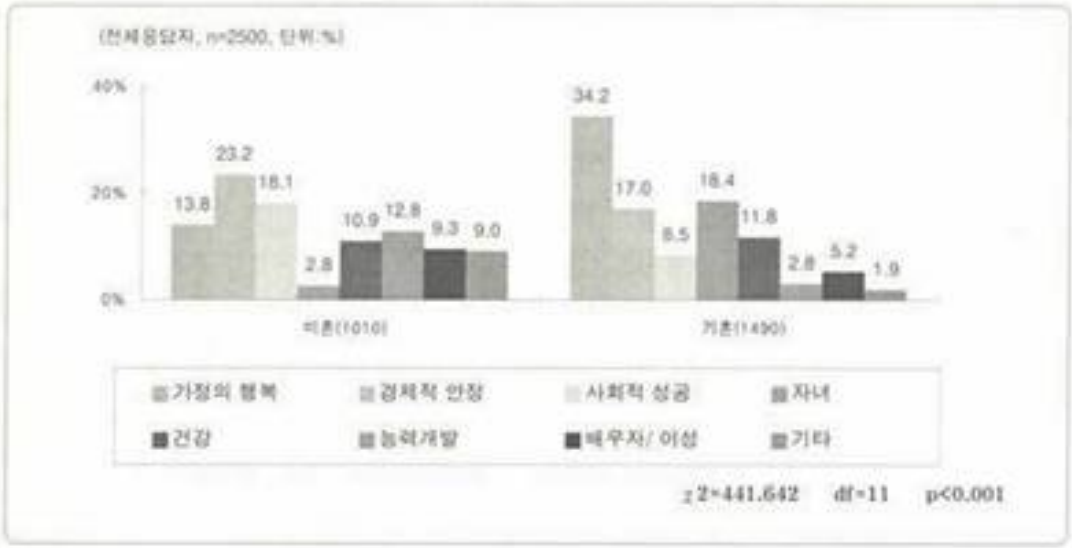
			가정의 행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성공	자녀	건강	능력 개발	배우자 /이성
전체		(2500)	26.0	19.6	12.4	12.1	11.4	6.9	6.8
성	여성	(1237)	30.3	16.6	6.4	16.2	12.4	5.7	7.6
	남성	(1263)	21.8	22.5	18.2	8.1	10.5	8.0	6.1
							χ^2=153.83	df=11	p(0.001
연령	25~29세	(664)	17.2	21.2	16.7	4.4	9.2	13.1	9.0
	30~34세	(640)	23.6	21.9	13.3	10.7	11.2	5.6	8.8
	35~39세	(648)	31.3	16.5	10.5	16.2	12.1	4.8	5.7
	40~44세	(548)	33.0	18.4	8.2	18.3	13.6	3.2	3.3
							χ^2=261.01	df=33	p(0.001
혼인 상태	미혼	(1010)	13.8	23.2	18.1	2.8	10.9	12.8	9.3
	기혼	(1490)	34.2	17.0	8.5	18.4	11.8	2.8	5.2
							χ^2=443.12	df=11	p(0.001
성 & 취업 상태	취업 여성	(634)	28.3	17.9	7.2	14.6	12.7	6.2	7.6
	비취업 여성	(603)	32.3	15.2	5.6	17.9	12.1	5.2	7.6
	취업 남성	(1010)	23.9	20.6	17.6	9.6	11.0	7.0	5.8
	비취업 남성	(253)	13.3	29.8	20.4	2.0	8.6	12.1	7.2
							χ^2=204.55	df=33	p(0.001
혼인& 취업 상태	미혼 취업자	(665)	15.2	22.2	17.5	3.4	11.5	11.7	9.3
	미혼 비취업자	(345)	11.3	25.3	19.1	1.8	9.5	15.0	9.3
	기혼 취업자	(979)	32.7	17.8	10.9	17.1	11.7	3.3	4.6
	기혼 비취업자	(511)	37.1	15.6	3.8	20.9	12.1	2.0	6.2
							χ^2=478.68	df=33	p(0.001

			가정의 행복	경제적 안정	사회적 성공	자녀	건강	능력 개발	배우자 /이성
학력	고졸 이하	(885)	25.5	19.4	8.3	16.0	14.5	5.0	6.6
	전문대	(459)	25.7	21.4	12.0	10.0	12.0	5.7	8.8
	대학교	(1086)	26.0	19.0	16.0	9.8	9.3	8.5	6.5
	대학원 이상	(70)	33.7	17.3	9.9	13.1	2.7	13.0	2.8
							χ^2=95.81	df=33	p<0.00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651)	13.2	23.1	16.6	2.9	11.4	12.3	9.4
	200만~ 300만원 미만	(608)	24.0	22.7	12.5	10.0	12.6	7.8	7.4
	300만~ 400만원 미만	(566)	30.8	18.9	11.9	16.5	11.6	3.1	5.3
	400만원 이상	(649)	36.5	13.2	8.1	19.9	10.6	3.6	5.4
	모름/ 무응답	(26)	22.9	29.1	22.0	2.4	2.6	12.8	2.8
							χ^2=349.64	df=33	p<0.001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30.4	20.0	11.1	12.6	4.9	7.3	6.6
	화이트칼라	(693)	25.7	18.6	14.7	10.0	10.4	8.9	7.2
	블루칼라	(782)	24.4	20.4	13.1	12.7	14.2	4.6	5.9
	전업 주부	(455)	38.3	13.4	3.2	21.9	12.2	2.1	6.7
	학생/실업/비취업	(401)	13.4	26.5	17.7	3.3	9.8	13.1	8.4
							χ^2=284.69	df=44	p<0.001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28.9	17.3	11.1	15.4	13.9	4.2	5.2
	상용근로자	(1082)	23.7	20.8	15.4	8.8	10.5	7.9	7.3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9.9	16.8	6.5	21.1	14.0	4.4	4.2
							χ^2=67.88	df=22	p<0.001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행복'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에서는 '경제적 안정' 과 '사회적 성공' 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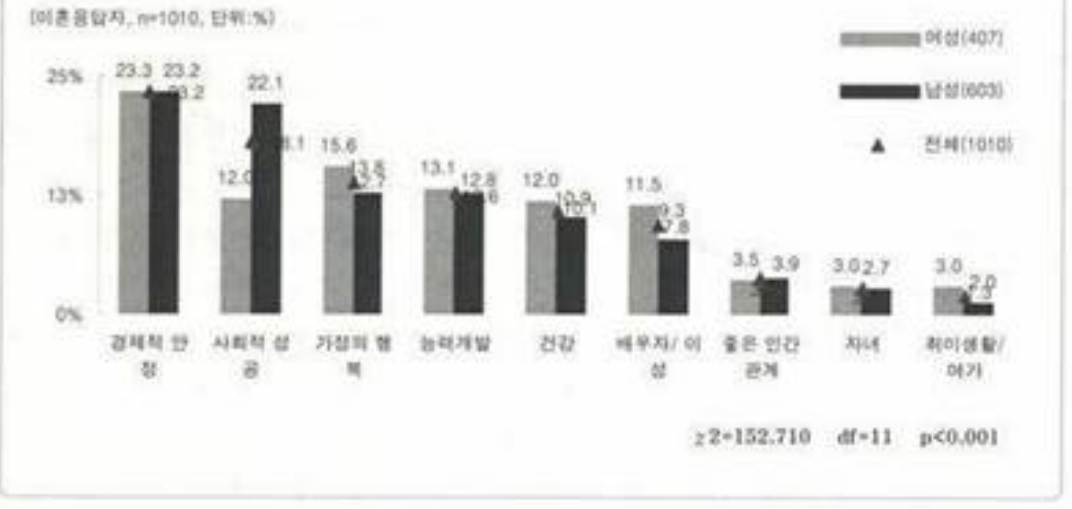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녀' 가 차지하는 위치는 혼인상태별로도 구분된다. 기혼집단과 비교해서 미혼집단의 대도에서는 '경제적 안정' 과 '가정의 행복' 이 서로 뒤바뀐 현상이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경제적 안정' 과 '사회적 성공' 의 가치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40~44세 미혼의 절반 정도가 '경제적 안정'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의 행복' 을 중시하는 비율은 낮았다. 또한 기혼의 경우 '자녀' 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8.4%이지만, 미혼은 2.8%에 불과해서 자녀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비율이 기혼집단의 경우 미혼집단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그림 3-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혼인상태별



다음으로는 미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그림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남녀 모두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배우자, 능력개발, 사회적 성공 등 여러 가치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으로 응답했으며, 이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림 3-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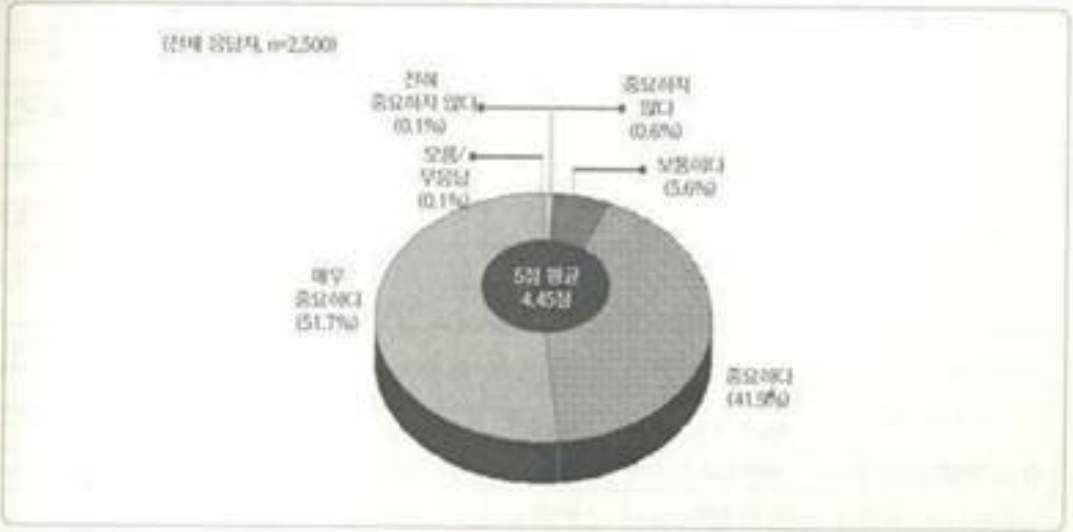


하지만 그 다음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미혼남성에게는 사회적 성공, 능력개발 순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여성에게는 가정의 행복, 능력개발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 가치는 미혼남녀 모두 3%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비록 가정의 행복이 차지하는 순위가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에게서 더 중요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미혼여성의 경우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 (15.6%)이 아닌 '경제적 안정' (23.2%)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의 중요성

서울시 거주 만 25~44세 남녀에게 인생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93.6%가 '중요하다' 와 '매우 중요하다' 고 답변하였고, '중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는 응답은 0.7%에 불과하였다. 나머지인 5.7%는 '보통이다' 라고 답함으로써, 응답자 대부분이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5점 척도 질문의 평균점수는 4.45점이다.

〈그림 3-3〉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는 성별과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과 혼인상태, 월소득,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으며, 미혼보다는 기혼이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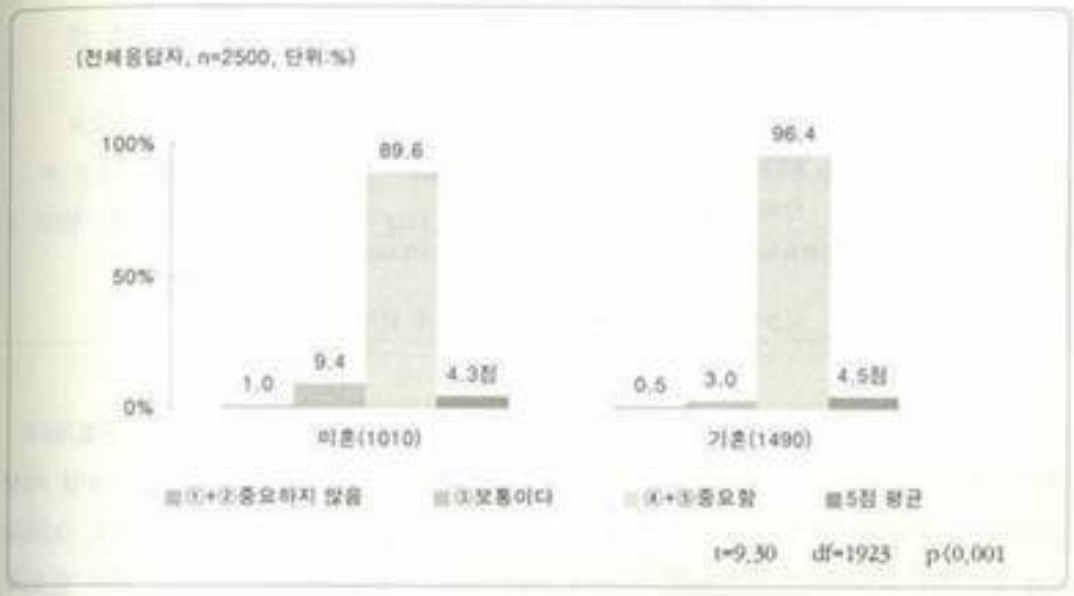
| 표 3-2 | 응답자 특성별 가족의 중요성

(단위 : %, 점)

		빈도(명)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5점 평균
전체		(2500)	0.7	93.6	**4.45**
연령별	25~29세	(664)	0.6	92.1	4.37
	30~34세	(640)	0.6	92.6	4.41
	35~39세	(648)	0.8	94.9	4.50
	40~44세	(548)	0.8	95.3	4.52
				F=8.05	df=2497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1.0	89.6	4.30
	기혼	(1490)	0.5	96.4	4.55
				t=9.30	df=1923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0.5	94.8	4.43
	비취업 여성	(603)	0.7	94.7	4.49
	취업 남성	(1010)	0.8	93.7	4.46
	비취업 남성	(253)	0.7	88.1	4.32
				F=4.92	df=2497 p(0.001
혼인 & 취업상태별	미혼 취업자	(665)	1.5	90.3	4.30
	미혼 비취업자	(345)	0.0	88.1	4.31
	기혼 취업자	(979)	0.1	96.7	4.55
	기혼 비취업자	(511)	1.2	95.9	4.53
				F=30.62	df=2497 p(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0.9	88.2	4.29
	200만~ 300만원 미만	(608)	0.8	94.0	4.43
	300만~ 400만원 미만	(566)	0.4	96.2	4.52
	400만원 이상	(649)	0.7	96.5	4.56
	모름/ 무응답	(26)	0.0	94.0	4.51
				F=24.21	df=2472 p(0.00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1.1	91.3	4.52
	화이트칼라	(693)	0.3	94.3	4.44
	블루칼라	(782)	0.9	94.5	4.45
	전업 주부	(455)	0.9	96.1	4.56
	학생/실업/비취업	(401)	0.5	88.9	4.31
				F=8.53	df=2497 p(0.001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0.7	95.0	4.51
	상용근로자	(1082)	0.7	93.3	4.4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0.3	97.7	4.61
				F=9.38	df=1641 p(0.001

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족중요도 인식이 가장 높고, 학생/실업/비취업 집단의 가족 중요도 인식이 낮게 나타난다.[8]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고용주, 임시/일용/무급종사자보다 가족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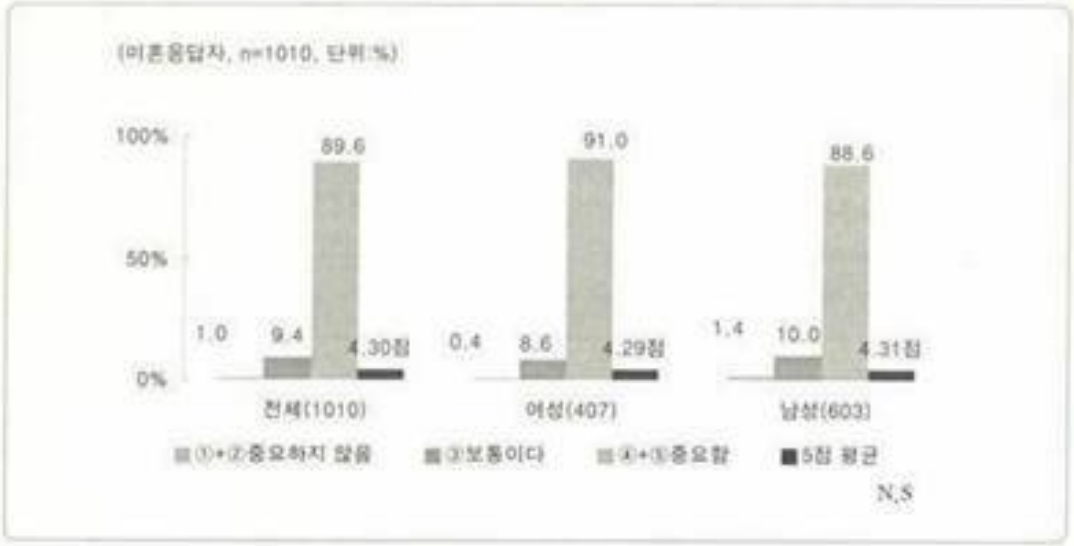
미혼은 인생에서 가족의 중요도를 5점 만점에 평균 4.30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점수는 기혼(4.55점)에 비해서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젊은 연령층, 특히 미혼들은 집단지향적이기 보다 자아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족의 가치만큼은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 중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미혼여성의 91.0%가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미혼남성은 88.5%에 그쳐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가족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기혼의 경우 성&취업상태별, 학력별, 월소득별, 취업상태별에 따라 가족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혼의 경우는 미혼과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8)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 가족이 '④+⑤중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직업 중에서 학생/실업/비취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4.52점으로 5점 평균이 높은 이유는 '⑤매우 중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61.7%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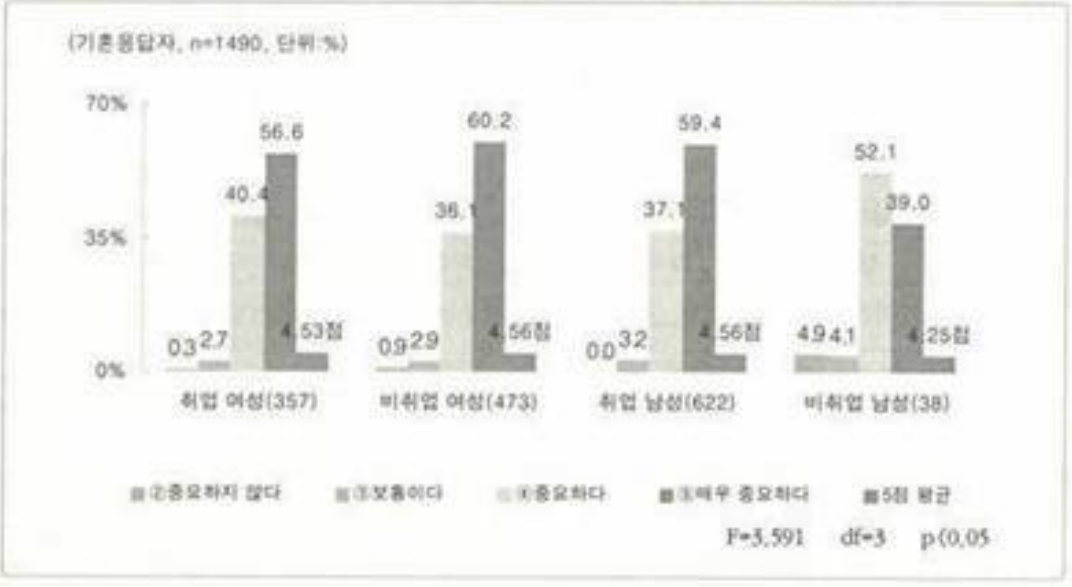
9) 미혼여성보다 미혼남성의 평균점수가 더 높아 남성이 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미혼남성이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평균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합한 값을 통해 미혼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미혼자의 성별 가족의 중요성 인식



성&취업상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취업여성이 '④+⑤중요하다'에서 97%로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다음이 취업남성 96.5%, 비취업 여성이 96.3%, 비취업남성 91% 순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점 평균에서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과 비취업 남성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하

〈그림 3-6〉 기혼자의 성&취업상태별 가족의 중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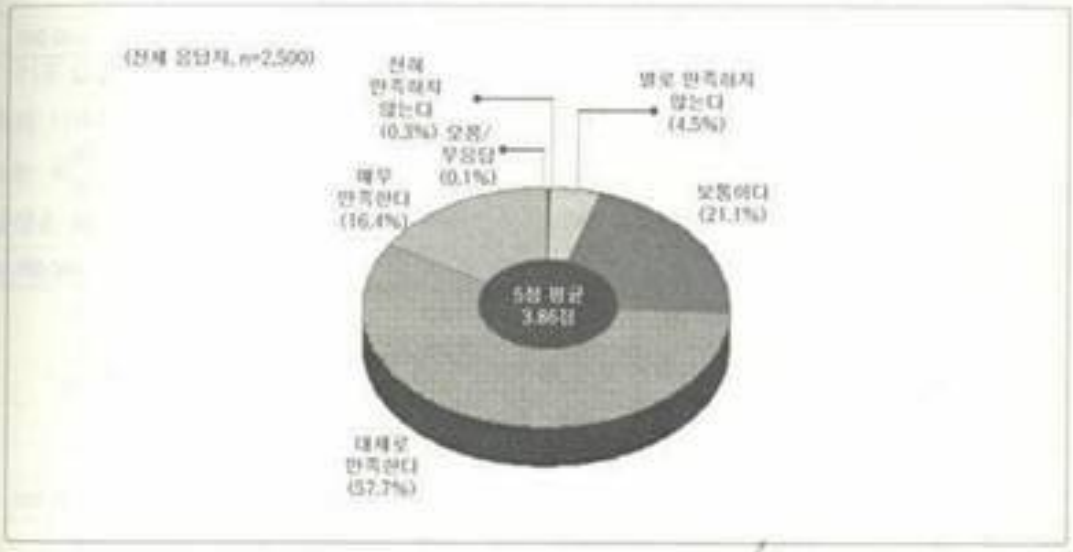


다' 의 응답률이 두 그룹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 취업/비취업 여성과 기혼 취업남성은 가족의 중요성을 유사하게 인식한 반면 기혼 비취업 남성은 다른 그룹에 비해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혼자들의 경우 그룹간의 특별한 차이없이 대부분이 5점 평균에서 4.3이상을 나타내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서울시 만 25~44세 남녀의 74.1%가 현재의 가족생활에 '만족한다' 고 응답하였다(5점 만점에 3.86점). 가족의 중요성 점수(4.45점)에 비하면 다소 낮은 점수지만, 비교적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7〉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가족생활 만족도는 성과 연령, 취업상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인상태와 월소득,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3-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혼보다는 기혼들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훨씬 높으며, 미혼 취업자보다는 기혼 취업자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고,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가정주부의 가족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고용주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높고, 임시/일용/무급종사자 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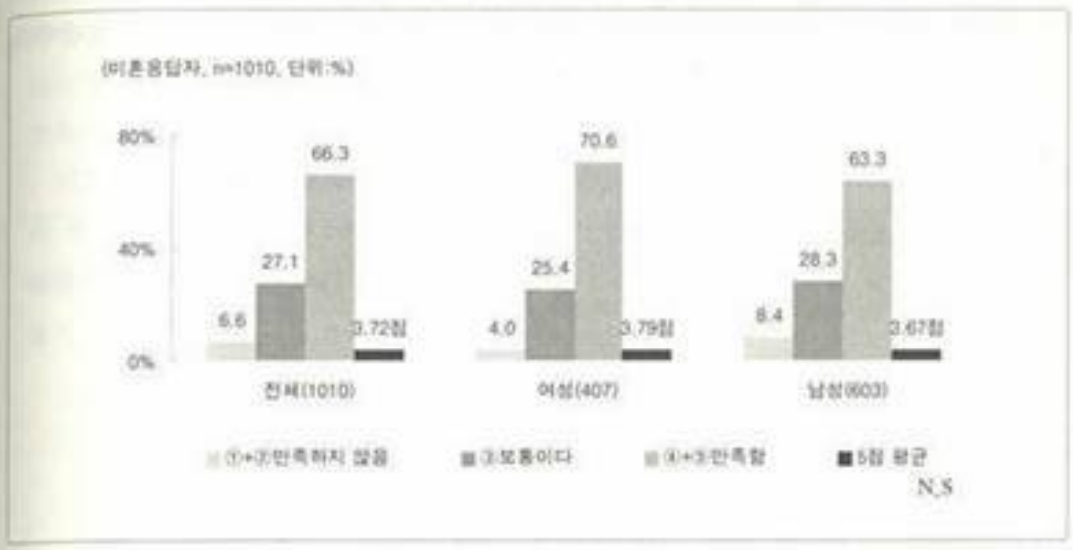
| 표 3-3 | 응답자 특성별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점)

		빈도(명)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5점 평균
[전체]		(2500)	**4.7**	**74.1**	**3.86**
[혼인상태별]	미혼	(1010)	6.6	66.3	3.72
	기혼	(1490)	3.5	79.4	3.95
				T=7.54 df=2039.05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4.4	73.8	3.84
	비취업 여성	(603)	3.5	76.9	3.92
	취업 남성	(1010)	3.9	75.6	3.88
	비취업 남성	(253)	11.9	61.9	3.65
				F=8.57 df=2497	p<0.001
[혼인 & 취업상태별]	미혼 취업자	(665)	5.3	67.5	3.73
	미혼 비취업자	(345)	9.2	63.9	3.70
	기혼 취업자	(979)	3.3	80.0	3.96
	기혼 비취업자	(511)	3.9	78.3	3.94
				F=19.82 df=2497	p<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8.1	64.6	3.70
	200만~ 300만원 미만	(608)	4.6	70.0	3.79
	300만~ 400만원 미만	(566)	2.8	82.7	3.98
	400만원 이상	(649)	2.6	80.5	3.98
	모름/ 무응답	(26)	18.4	59.0	3.44
				F=22.02 df=2471	p<0.00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6.3	73.9	3.89
	화이트칼라	(693)	2.8	75.9	3.87
	블루칼라	(782)	4.8	74.2	3.85
	전업 주부	(455)	3.0	80.0	3.97
	학생/실업/비취업	(401)	9.4	63.9	3.69
				F=7.85 df=2497	p<0.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2.7	79.1	3.94
	상용근로자	(1082)	4.2	74.2	3.84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7.5	67.1	3.78
				F=3.67 df=1641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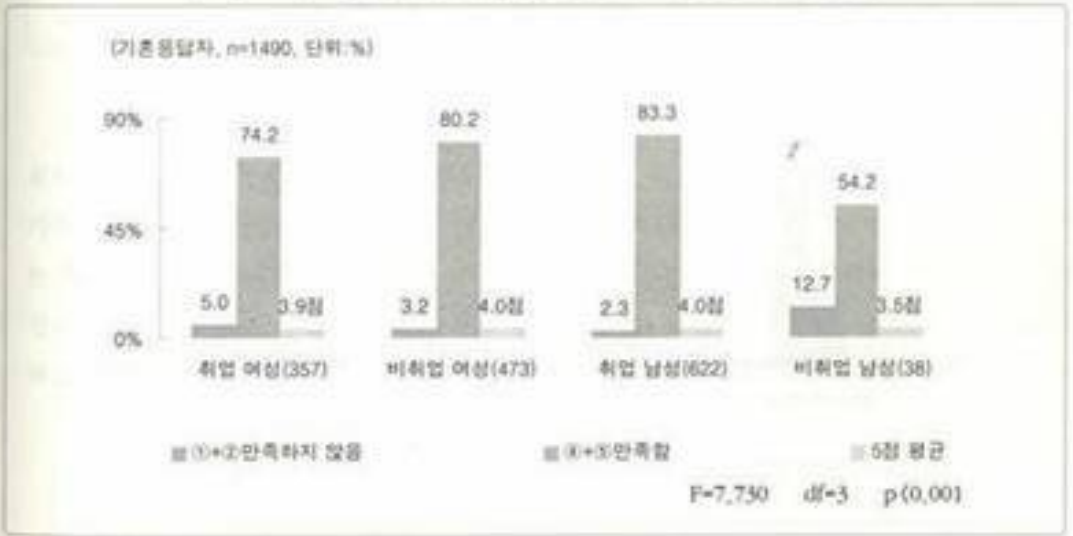
미혼의 가족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2점으로 기혼의 3.95점에 비해 낮고, 미혼 중에서도 성, 연령, 학력, 계층의식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미혼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는 미혼여성보다 낮았는데, 미혼여성의 70.6%가 만족하고 있는 데 비해, 미혼남성은 단지 63.3%에 그쳤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미혼자의 성별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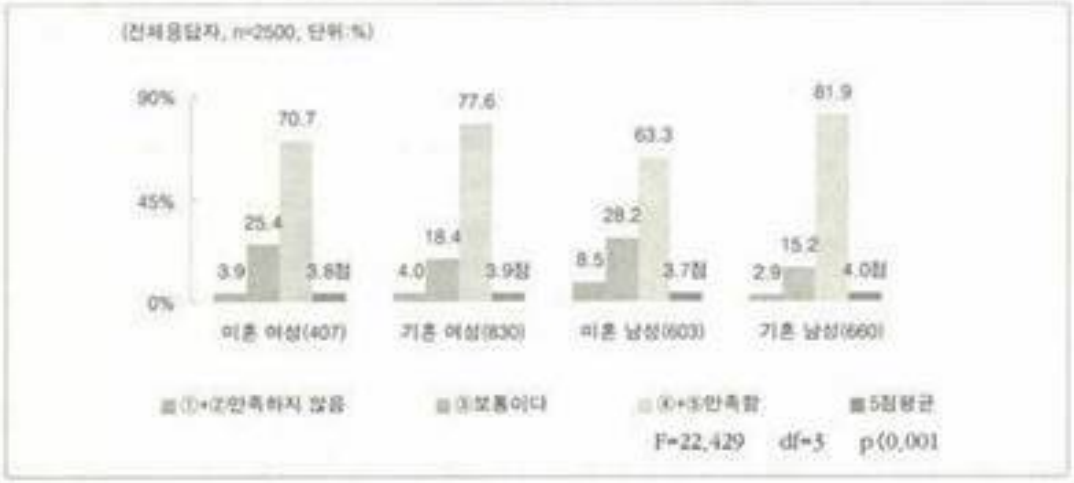
기혼집단에서는 연령별, 성&취업상태별, 학력별, 월소득별, 직업별, 고용상태별에 따라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취업남성의 가족생활만족도 보다 낮았는데, 취업여성의 74.2%가 만족하는데 비해 취업남성은 83.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여성의 경우 80.2%로 취업여성의 만족도보다 높은 반면 비취업남성은 가장 낮은 54.2%의 가족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9〉 기혼자의 성&취업상태별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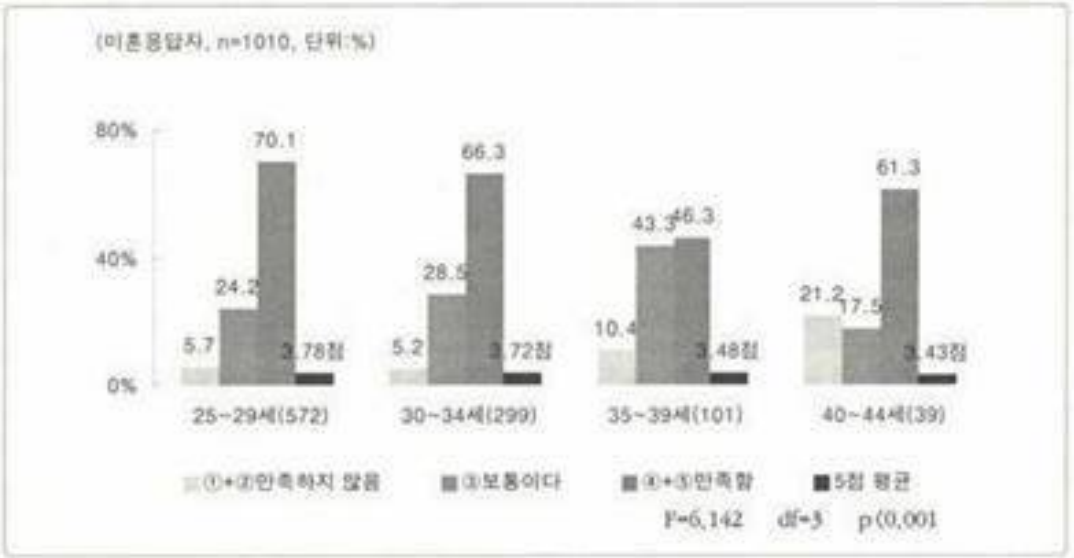
미혼남성(3.7점)은 가족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에 해당한다. 기혼남성(4.0점)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미혼남성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미혼여성(3.8점) 집단이다. 가족생활만족도에서 성보다는 혼인상태가 더 영향력 있는 변수인 것이다.

〈그림 3-10〉 성별 · 혼인상태별 현재의 가족생활 만족도



미혼자만을 대상으로 연령별 가족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그림 3-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5~29세의 연령층의 70.1%가 가족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만족도가 가장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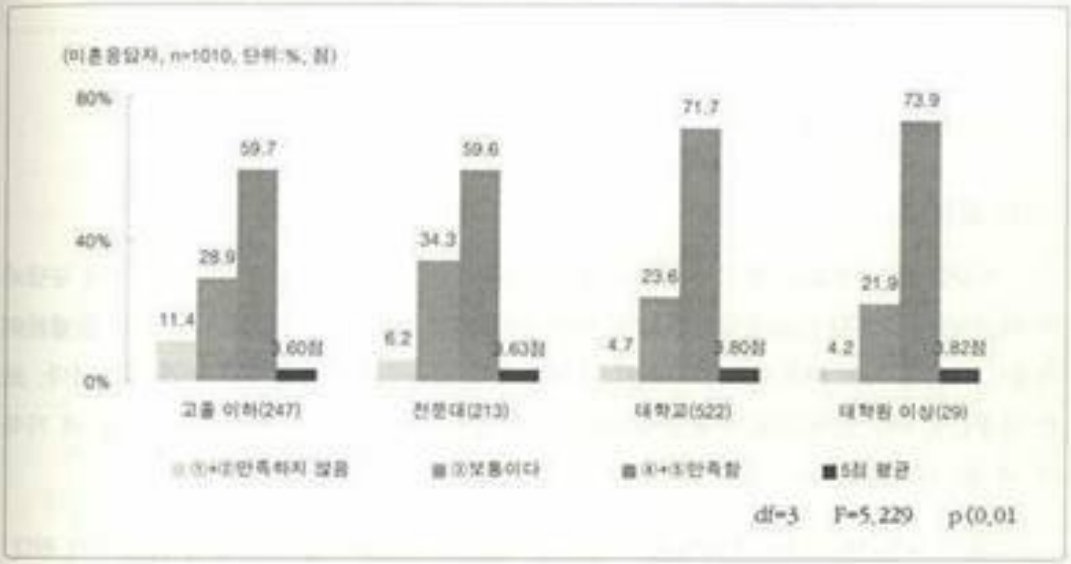
〈그림 3-11〉 미혼자의 연령별 가족생활 만족도



반면, 35-39세의 경우는 46.3%만이 이에 해당되어서 가족생활에 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미혼의 경우 연령과 가족생활 만족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40대 초반에서 가족생활 만족도가 30대 후반에 비해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난 점은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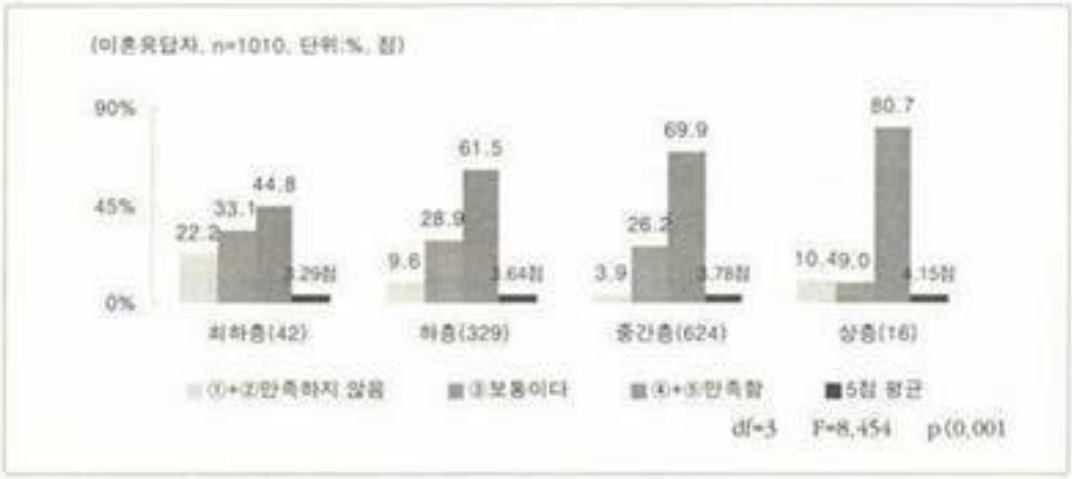
미혼자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학력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경우는 약 60%만 만족함으로써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대졸의 경우는 71.7%, 대학원 이상에서는 73.9%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족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미혼자의 비율이 더 많아짐을 〈그림 3-12〉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12〉 미혼자의 학력별 가족생활 만족도



또한 미혼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하층의 경우는 가족생활 만족 비율이 44.8%에 그쳤지만 하층에서는 약간 증가하여 61.5%, 중간층에서는 69.9%, 상층에서는 80.7%로 나타나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가족생활 만족도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력과 계층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생활만족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과 취업여부는 가족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미혼 - 계층의식별 현재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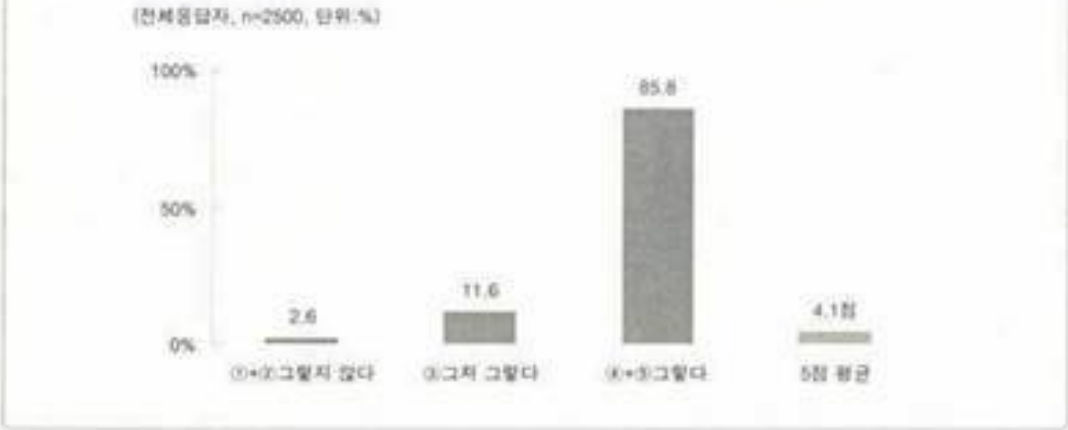


3) 가족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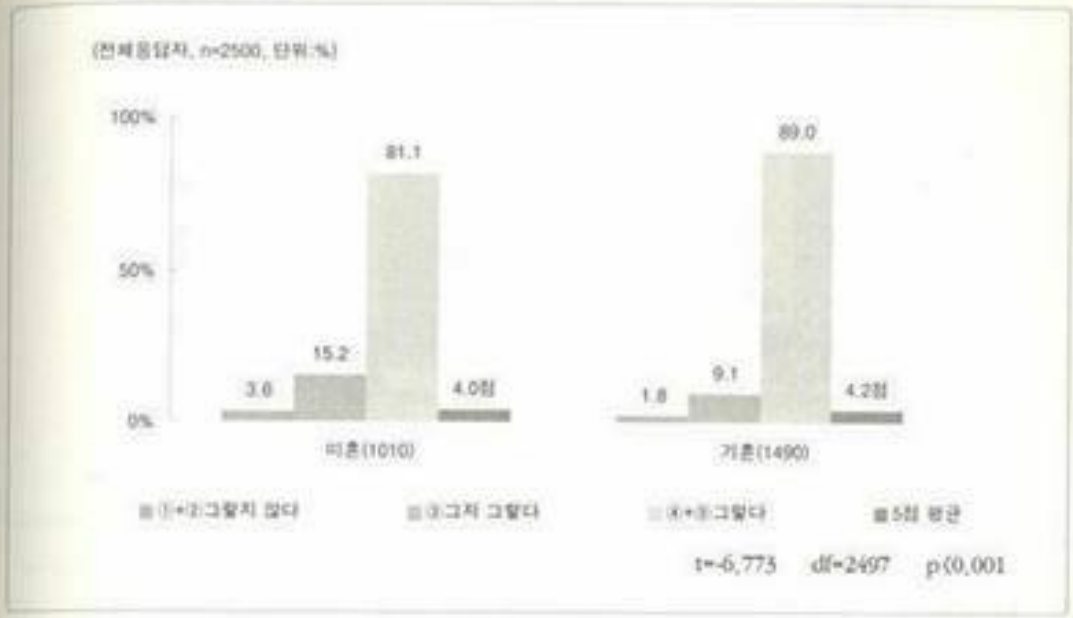
(1) 문항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8%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무급종사자보다는 자영업자/고용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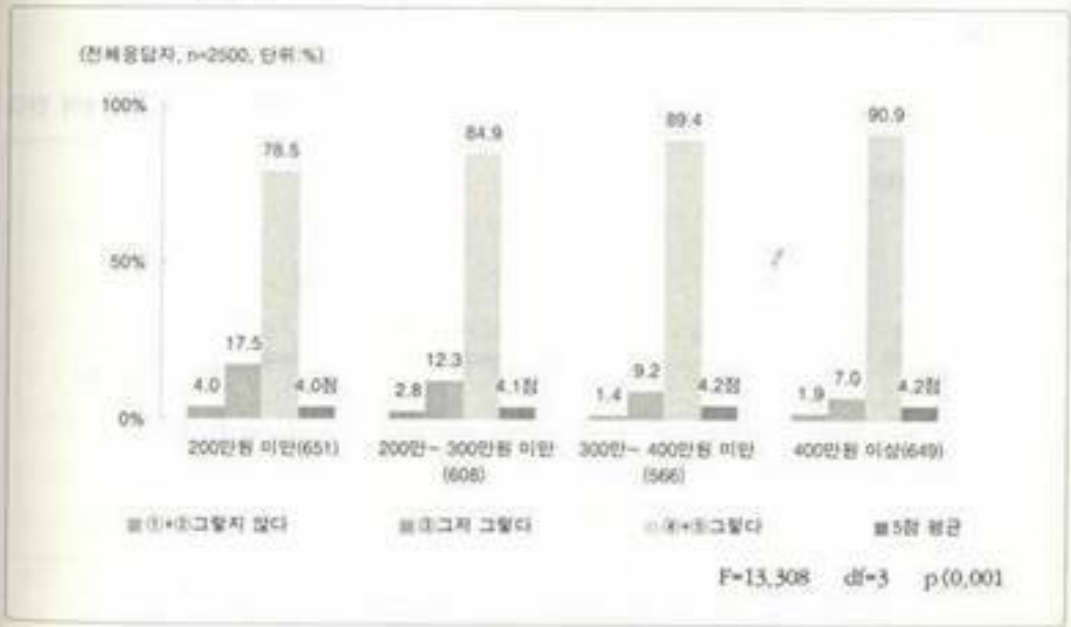
〈그림 3-14〉 가족/결혼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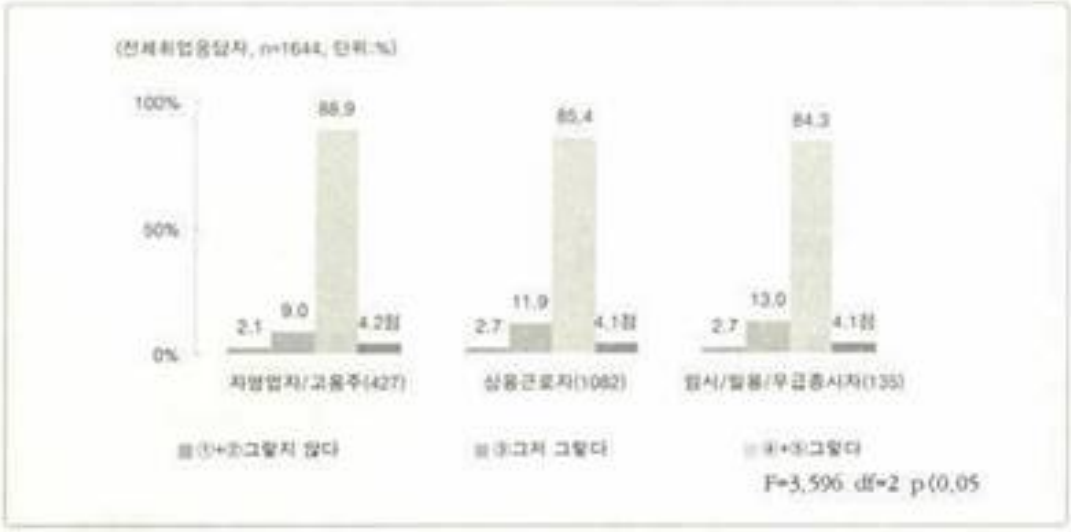
〈그림 3-15〉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혼인상태별



〈그림 3-16〉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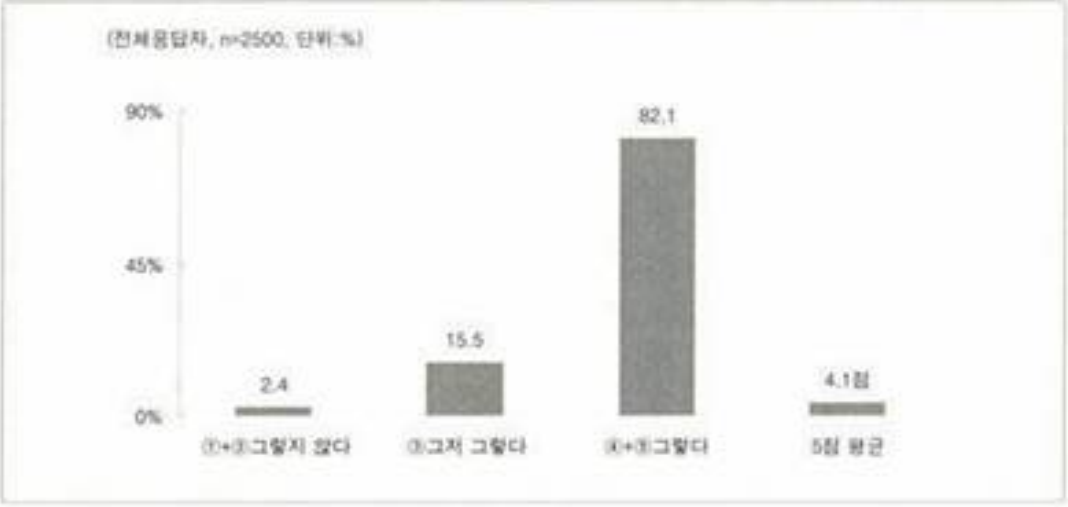
〈그림 3-17〉 가족/결혼관_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고용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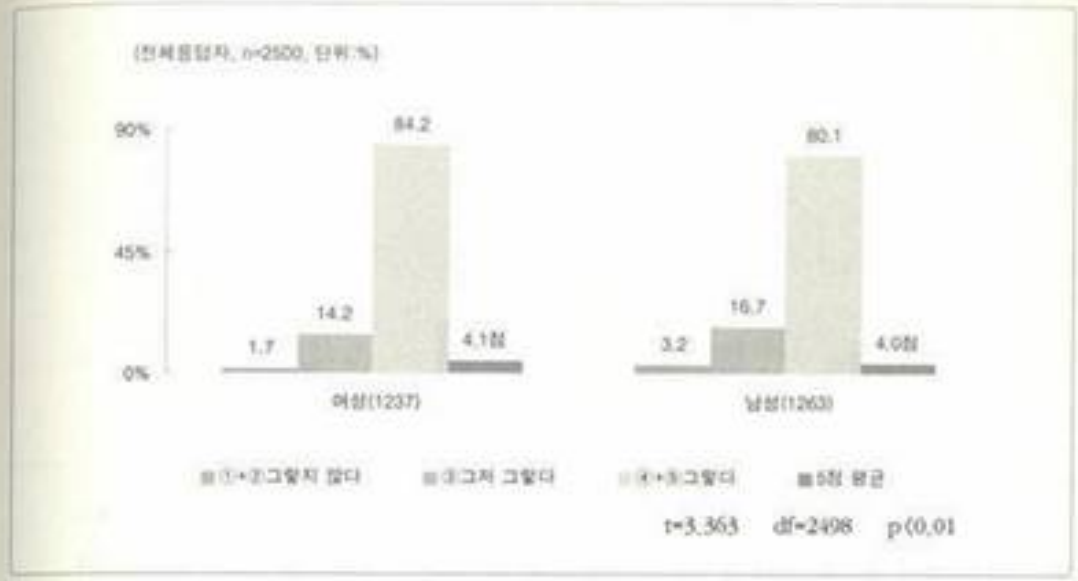
(2) 문항

'배우자 선택시 가족과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1%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 혼인상태, 월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연령이나 취업여부, 학력, 직업,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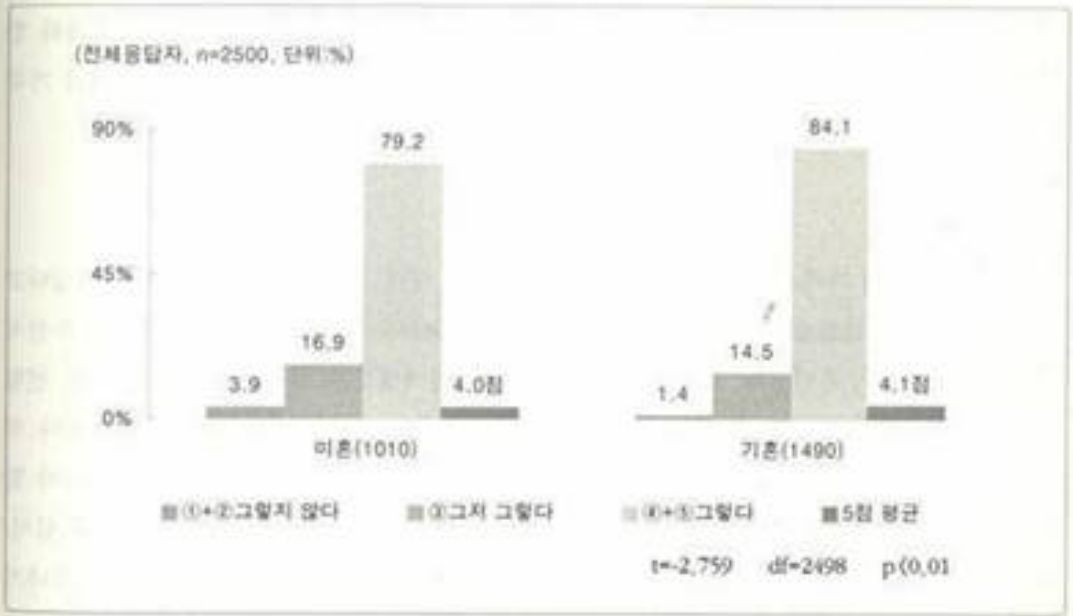
〈그림 3-18〉 가족/결혼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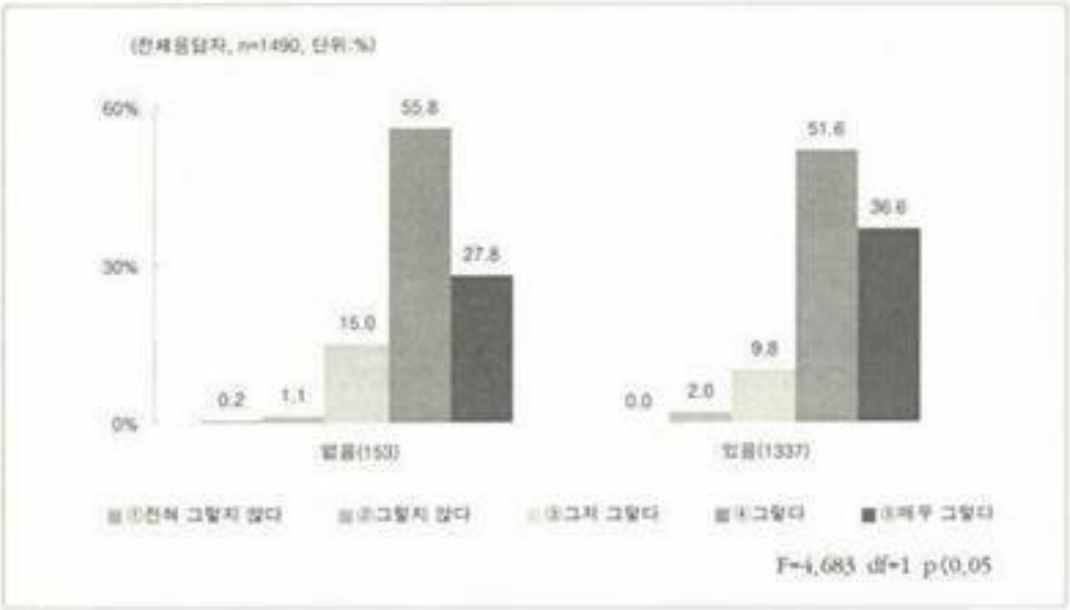
〈그림 3-19〉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성별



〈그림 3-20〉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혼인상태별



〈그림 3-21〉 가족/결혼관_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현재자녀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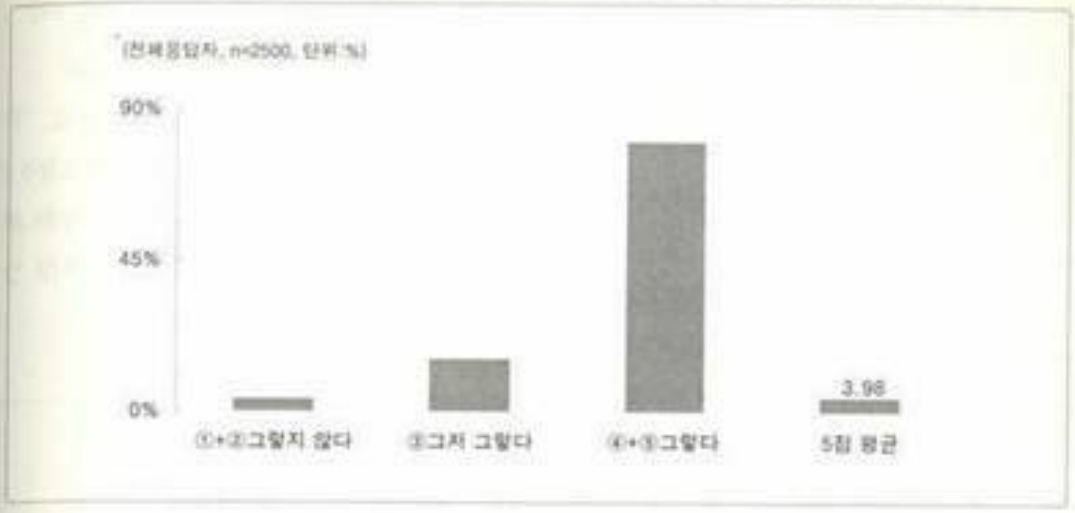


미혼(평균 4.03점)보다는 기혼(평균 4.1점)이, 남성 (평균 4.0점)보다는 여성(평균 4.1점)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 문항에서는 4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여줌에 따라 결혼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관계에 편입되어 생활세계가 변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중시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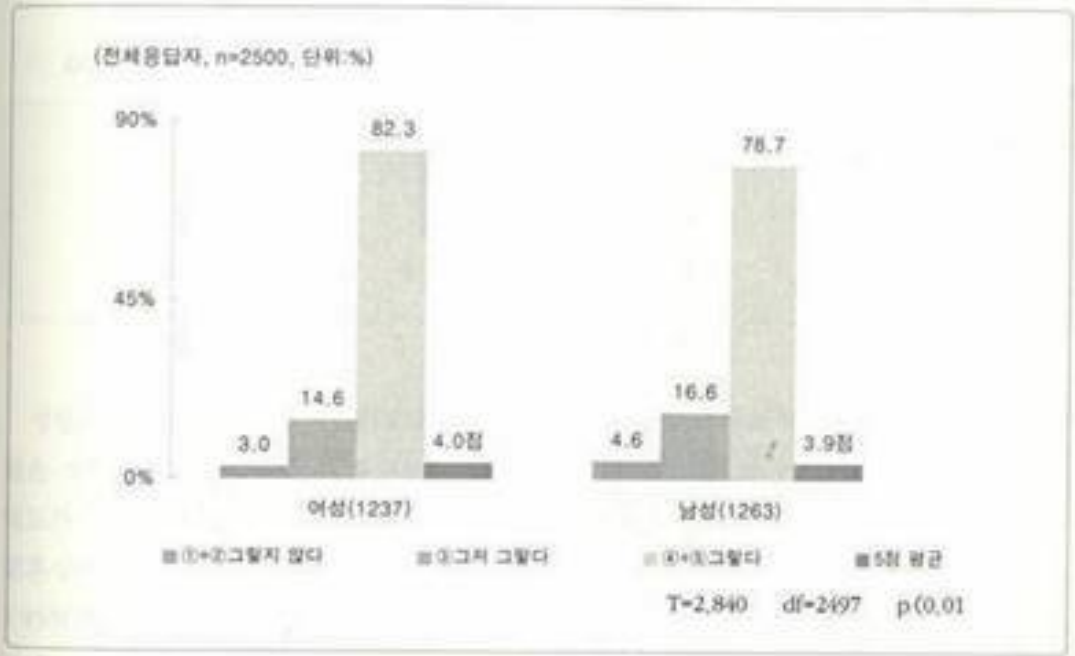
(3) 문항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98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보다 가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성별, 혼인상태, 소득수준,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연령과 취업여부,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평균 3.9점)보다 여성(평균 4.0점)이, 미혼(평균 3.9점)보다 기혼(평균 4.0점)이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우선의 가치관이 강하고,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무급종사자보다 자영업자/고용주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족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약간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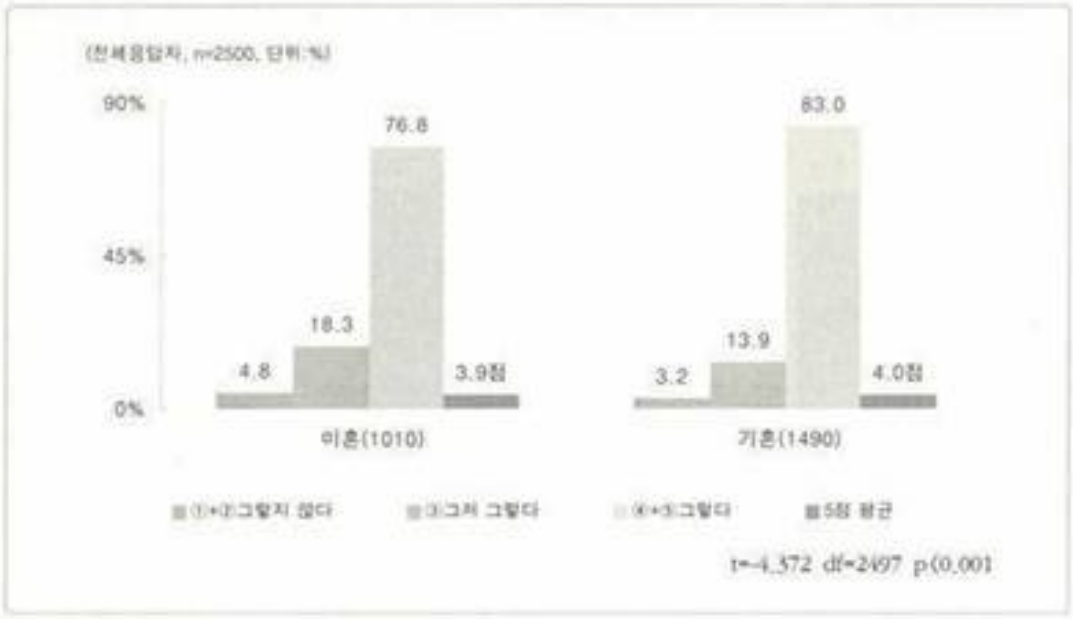
〈그림 3-22〉 가족/결혼관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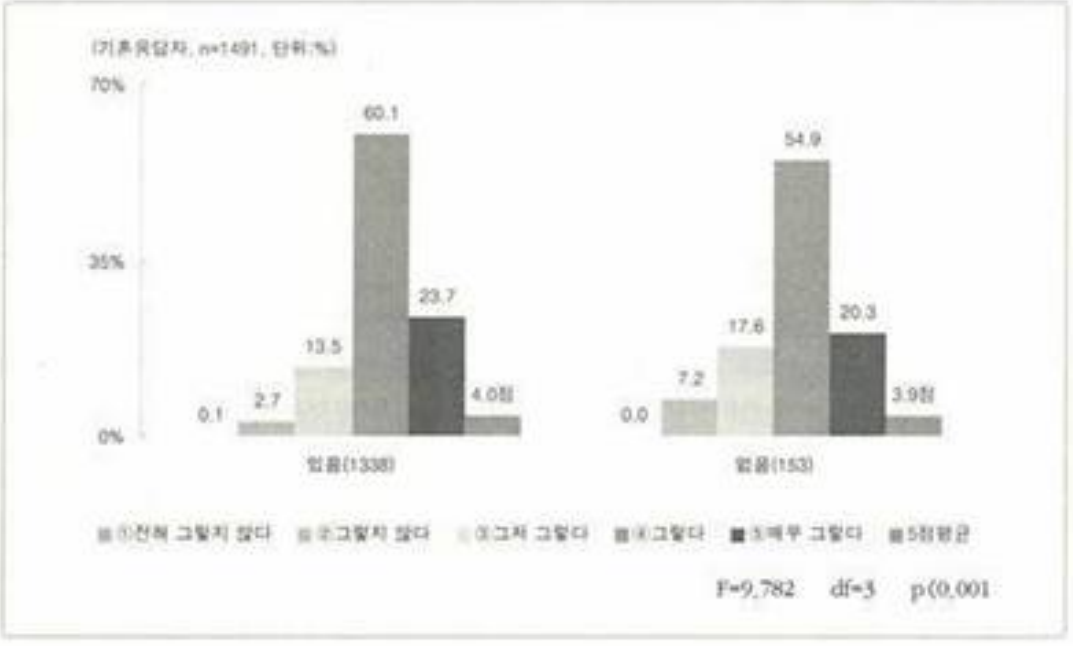
〈그림 3-23〉 가족/결혼관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 성별



〈그림 3-24〉 가족/결혼관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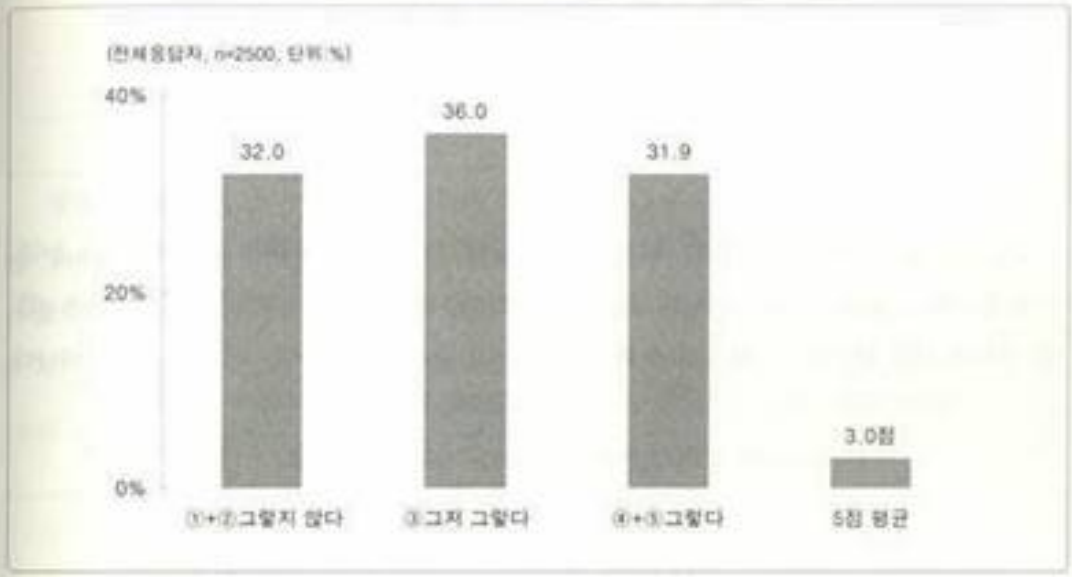
〈그림 3-25〉 가족/결혼관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자녀유무



(4) 문항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에 대해 31.9%는 '그렇다' 고 응답한 반면, 32.0%는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함으로써 양측 입장에 대한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으며, 평균점수 또한 5점 만점에 3.0점으로써 평균적으로 결혼과 일 가운데서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월소득수준 및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학력과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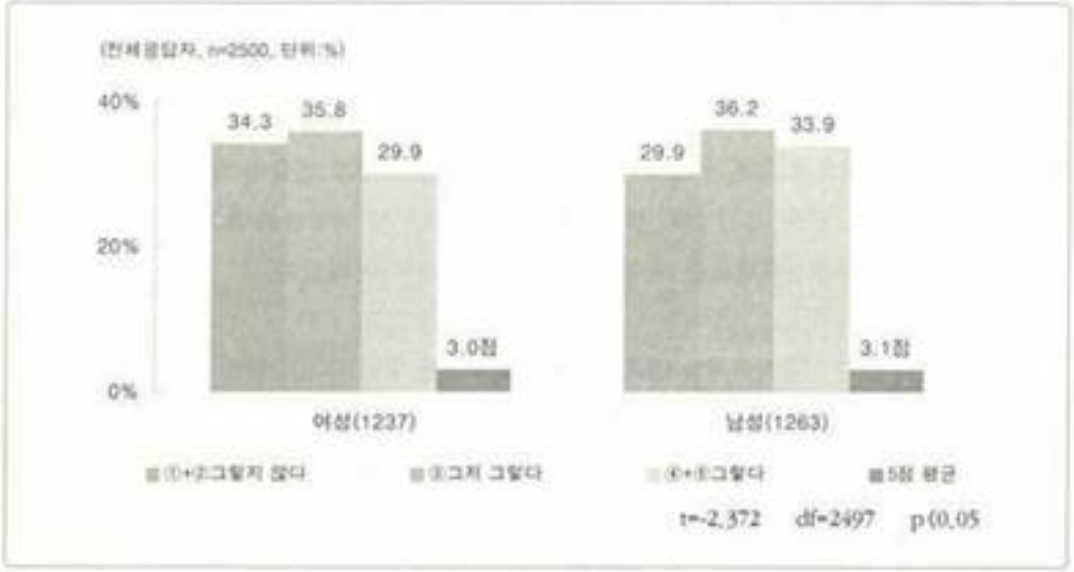
〈그림 3-26〉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별로는 여성(평균점수 3.0점)보다 남성(평균점수 3.1점)의 동의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일수록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 중심적 태도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20대의 일에 대한 강조는 만혼화와 연결되는 태도로 해석된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평균점수 2.9점)보다는 미혼(평균점수 3.2점)이, 비취업자(평균점수 2.93점)보다는 취업자(평균점수 3.04점)가 결혼보다 일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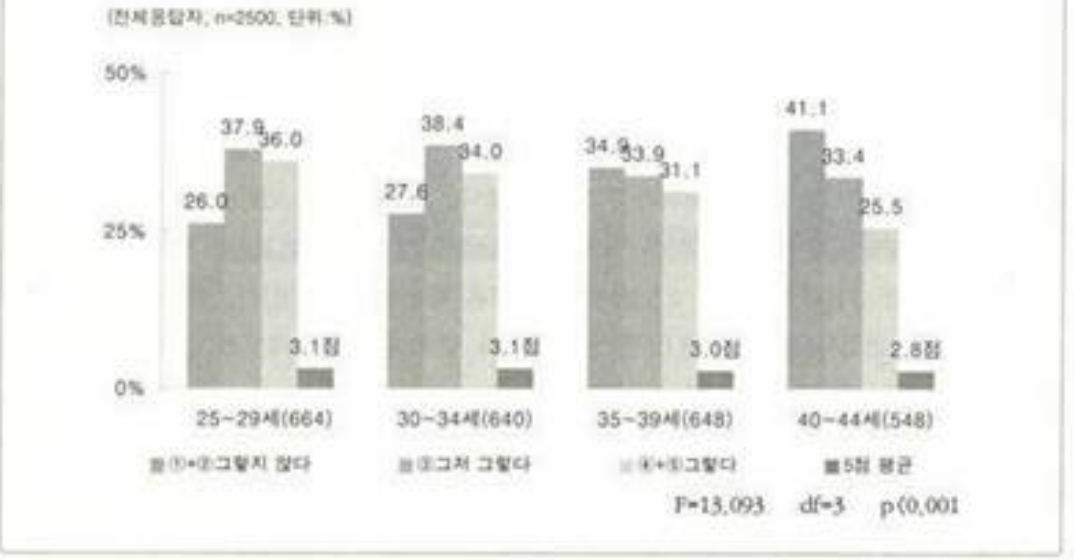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하는 비율이 감소되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생산직 종사자)가 결혼보다 일을 우선하는 태도에 동의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3-27〉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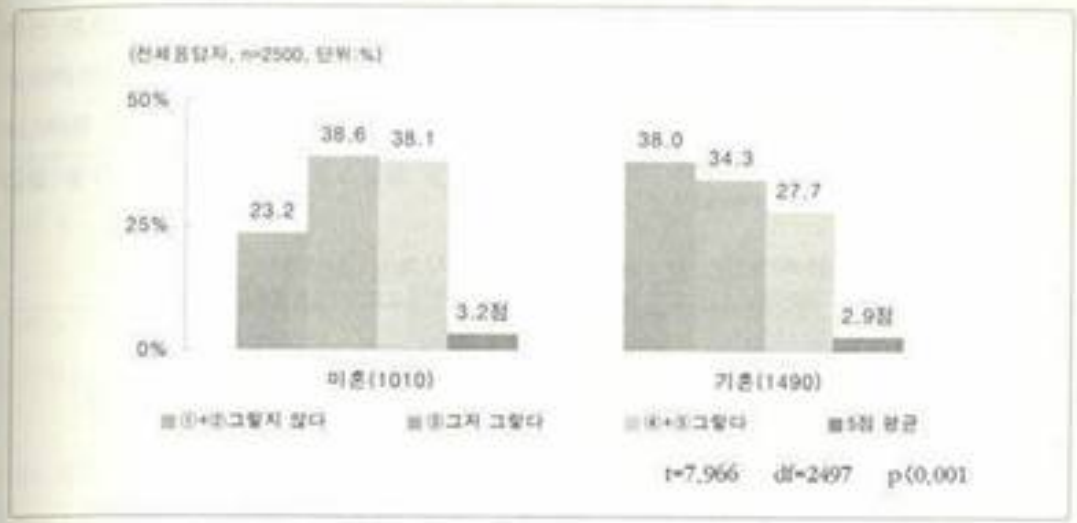


기혼자중 유자녀 가정의 응답자는 무자녀 가정 응답자에 비해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유자녀 가정은 34%가 동의하였으나, 무자녀 가정은 27%만 동의하였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에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8〉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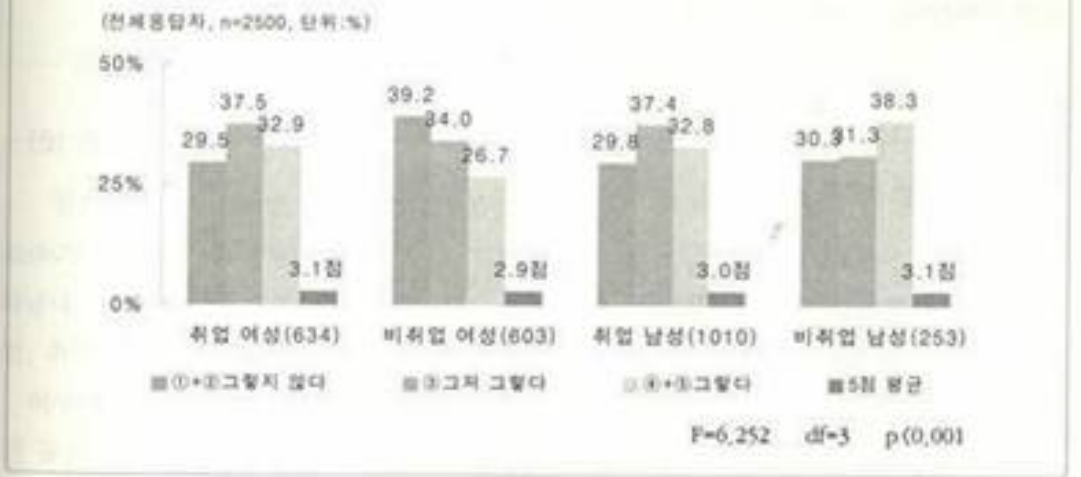


〈그림 3-29〉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 혼인상태별



성별 취업상태별로는 비취업남성 〉 취업여성 〉 취업남성 〉 비취업여성의 순서로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데 동의하고 있어 남성이 결혼보다는 일을 더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취업여성의 일중심성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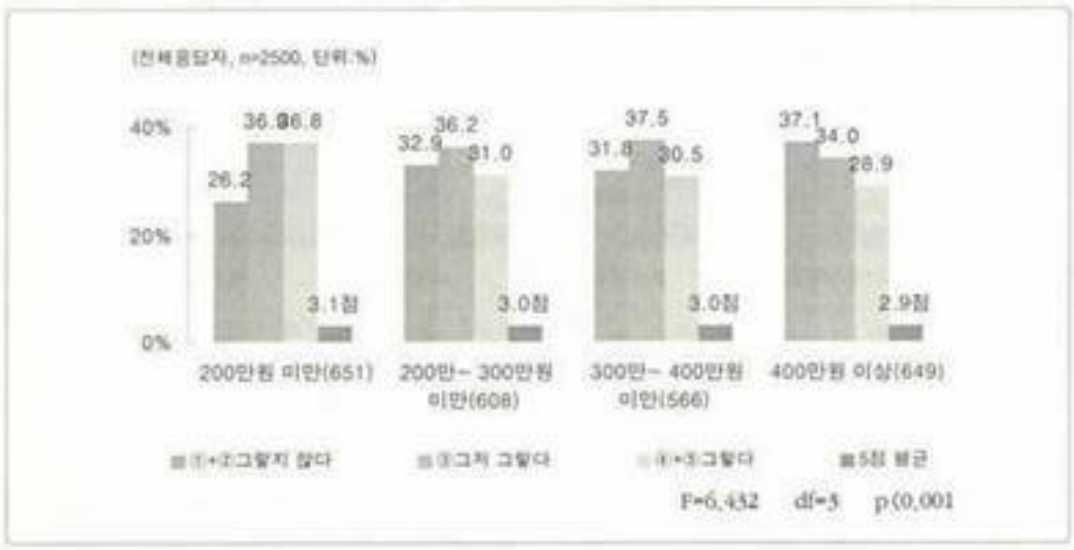
〈그림 3-30〉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성별 * 취업상태별



월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나타나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태도가 가장 강하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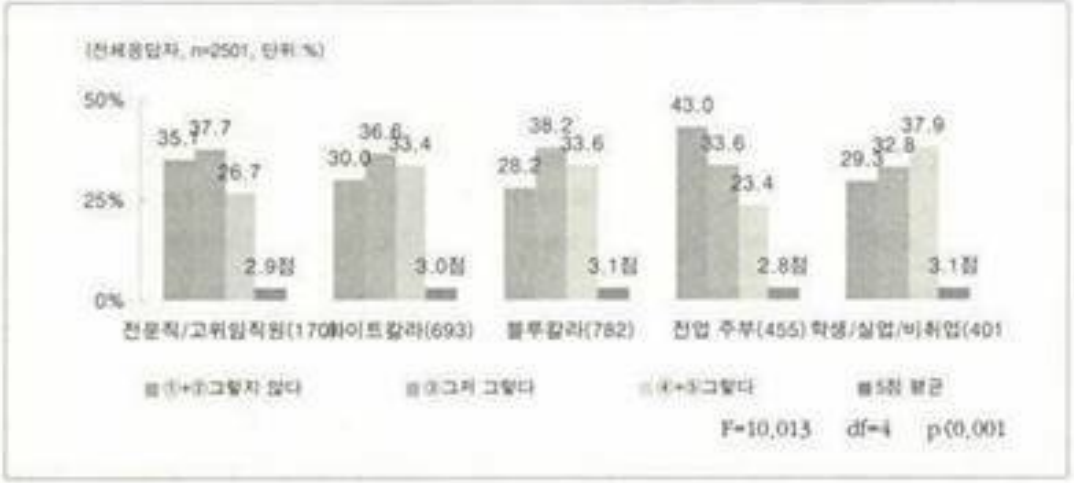
미혼과 저연령층이 포함된 집단이기 때문에 소득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연령과 혼인상태가 결합된 효과로 보인다.

〈그림 3-31〉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월소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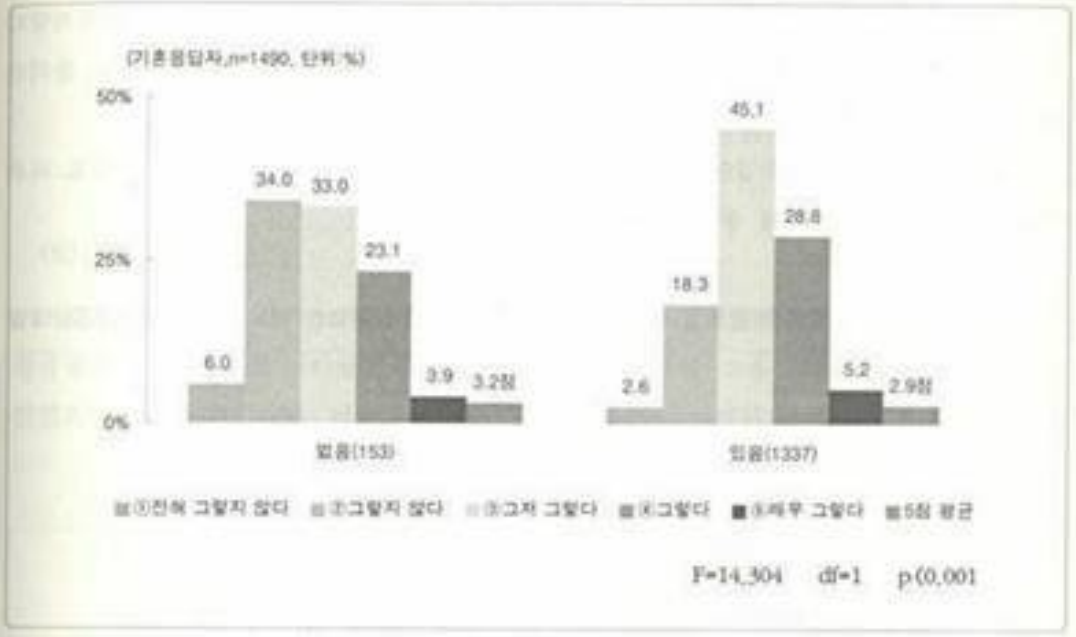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학생/실업/비취업자층을 제외하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유사하게 결혼보다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전업주부와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에 동의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림 3-32〉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직업별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데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층은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에 '그렇지 않다' 가 40% 정도 차지하지만, 유자녀층은 20.9%이고, 그렇다는 비율은 무자녀층이 27.0%이지만 유자녀층은 34.0%를 차지한다. 자녀있는 기혼들이 결혼보다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을 통한 생활안정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3〉 가족/결혼관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현재자녀유무



(5) 문항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해서 서울시 만 25~44세 남녀의 40.0%가 '그렇다' 고 응답하고, 32.7%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하였고 평균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혼인상태,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취업상태나 학력, 월소득 수준,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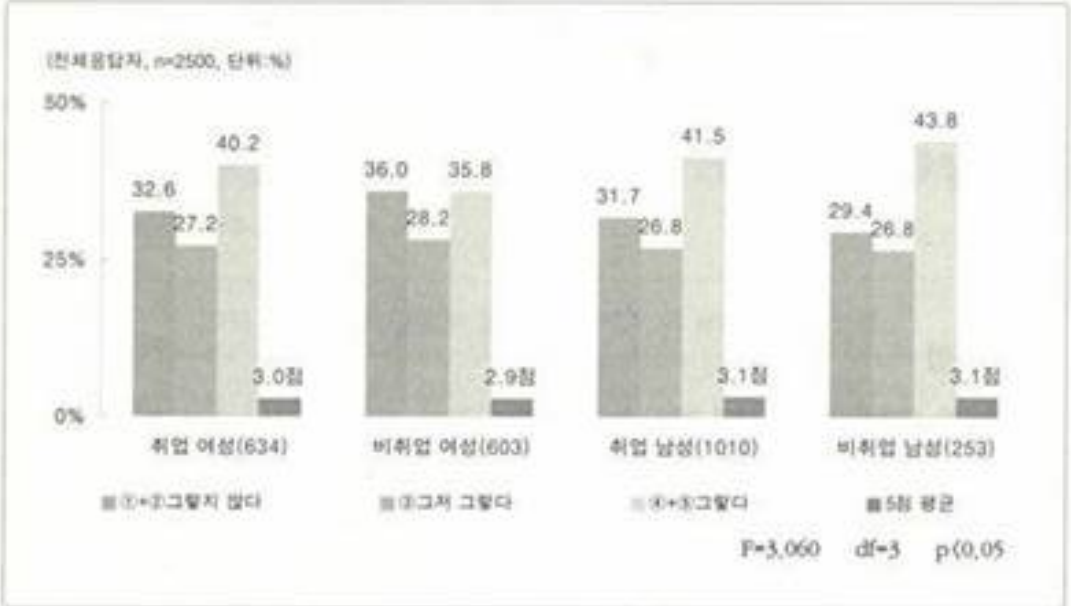
여성(평균점수 3.0점)보다는 남성(평균점수 3.1점)의 찬성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혼전 동거에 부정적이었다. 기혼(평균점수 3.0점)보다는 미혼(평균점수 3.2점)이 혼전 동거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전문직이나 전업주부에 비해 혼전 동거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도 화이트칼라의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가장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혼보다는 미혼이 혼전 동거에 더 긍정적이며, 미혼의 45.8%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성(49.3%)의 긍정적 태도비율이 미혼여성(40.6%)보다 높다. 기혼남녀는 매우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지만, 기혼남성(35.3%)보다 기혼여성(36.8%)이 혼전동거에 약간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46.5%가 혼전 동거에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30대 이상은 혼전 동거에 대해 20대와 뚜렷한 차이 보였다. 미혼집단 내에서는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소득층이 혼전 동거에 가장 높은 비율로(54.6%) 동의하였다. 200만원 미만의 미혼집단은 44.8%가 동의하였다.

이와 같이 결혼에 대한 젊은층, 특히 미혼집단의 태도는 가족에 대한 탈전통적 가치지향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서, 25~44세 연령 사이에서도 가족이나 결혼을 둘러싼 태도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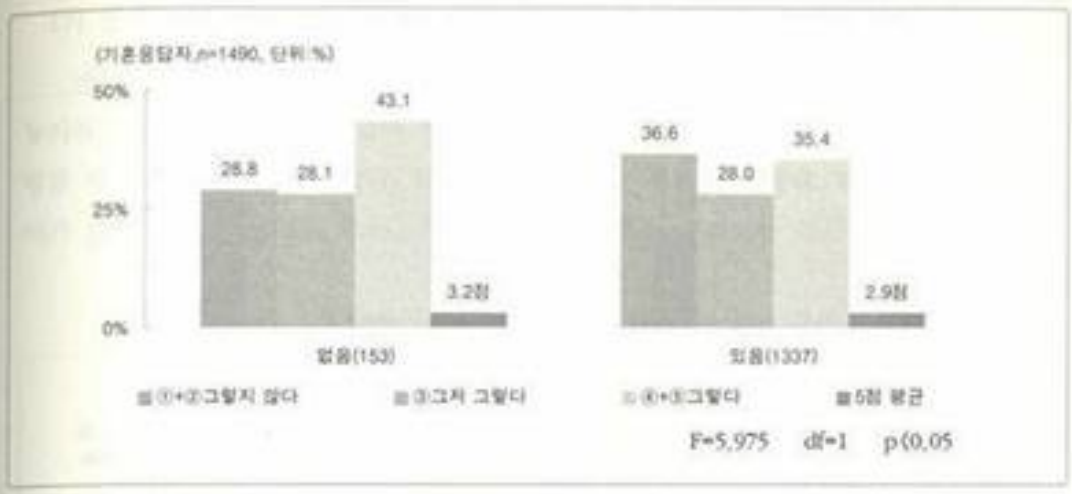
성별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동의비율이 높지만, 남성은 반대로 비취업남성이 취업남성에 비해 동의비율이 높다.

〈그림 3-34〉 가족/결혼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성별*취업상태별



기혼중 자녀가 있는 층이 자녀가 없는 층보다 동거에 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전통적인 가족질서에 더 순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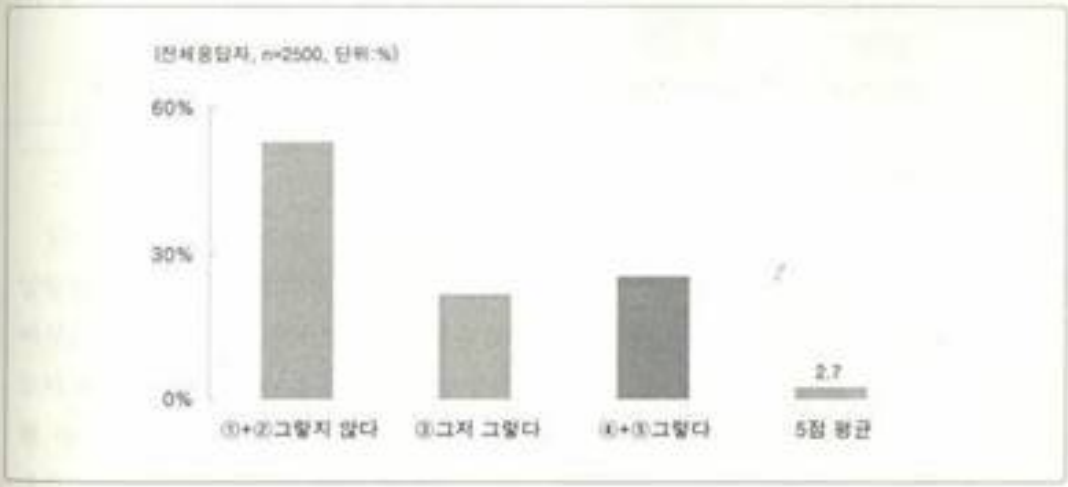
〈그림 3-35〉 가족/결혼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현재자녀유무



(6) 문항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에 대해 25.2%가 동의하고, 52.9%는 반대하였으며, 평균점수는 2.57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연령,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혼인상태, 취업여부, 학력, 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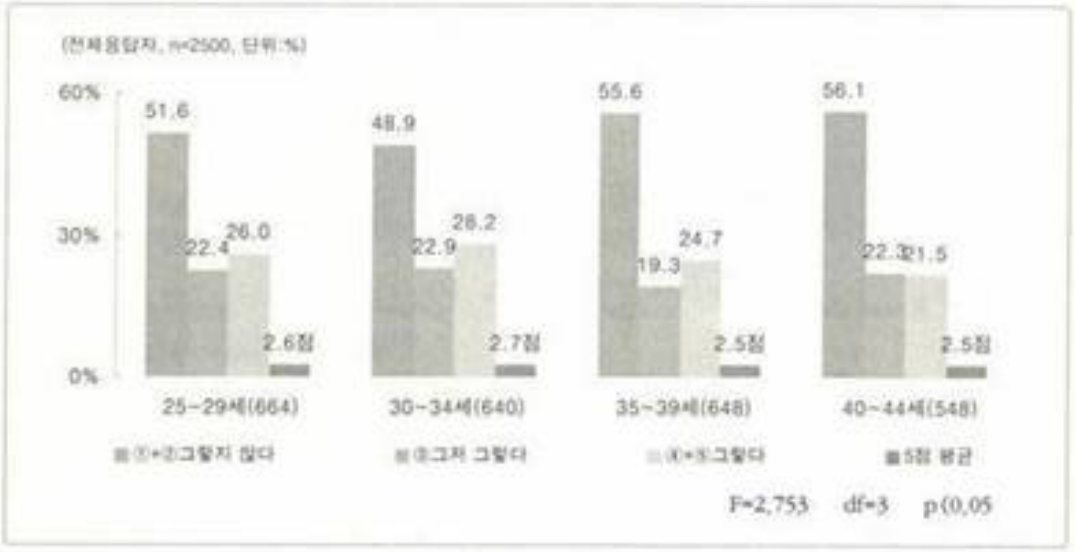
〈그림 3-36〉 가족/결혼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연령에 비례해서 비혼의 출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30대 초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혼 출산에 가장 긍정적이었다(평균 2.7점).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 전문직/고위임원직이나 전업주부보다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고용주나 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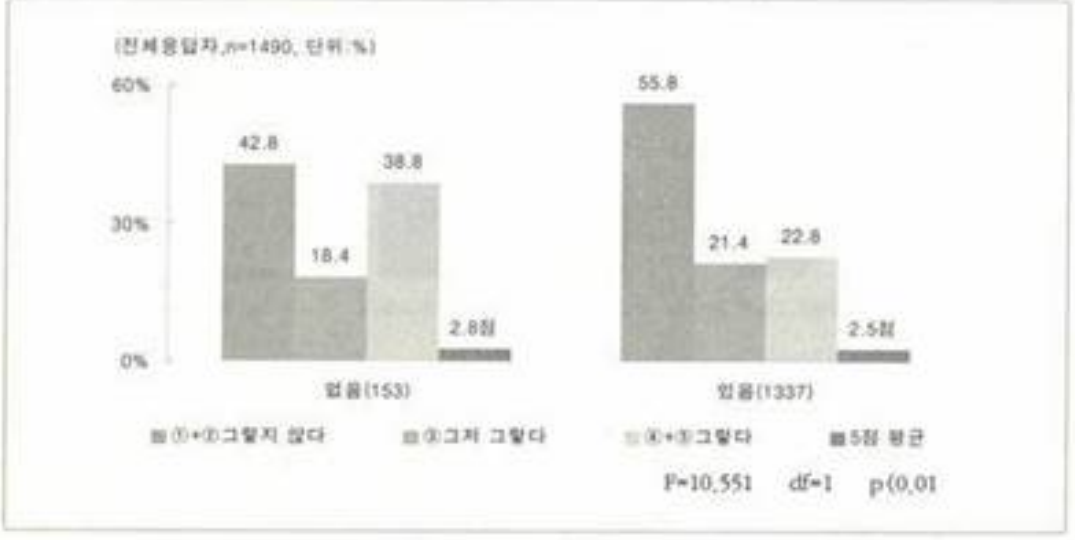
일용/무급종사자에 비해 지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가족/결혼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연령별



기혼자중 무자녀가정과 유자녀가정의 태도 차이가 큰데, 무자녀가정에서 비혼 출산을 긍정하는 비율이 38.8%로서 유자녀가정의 22.8%에 비해 크게 높다. 이 결과로부터 자녀가 없는 기혼 집단이 가족에 대한 탈전통적 가치가 유자녀 집단에 비해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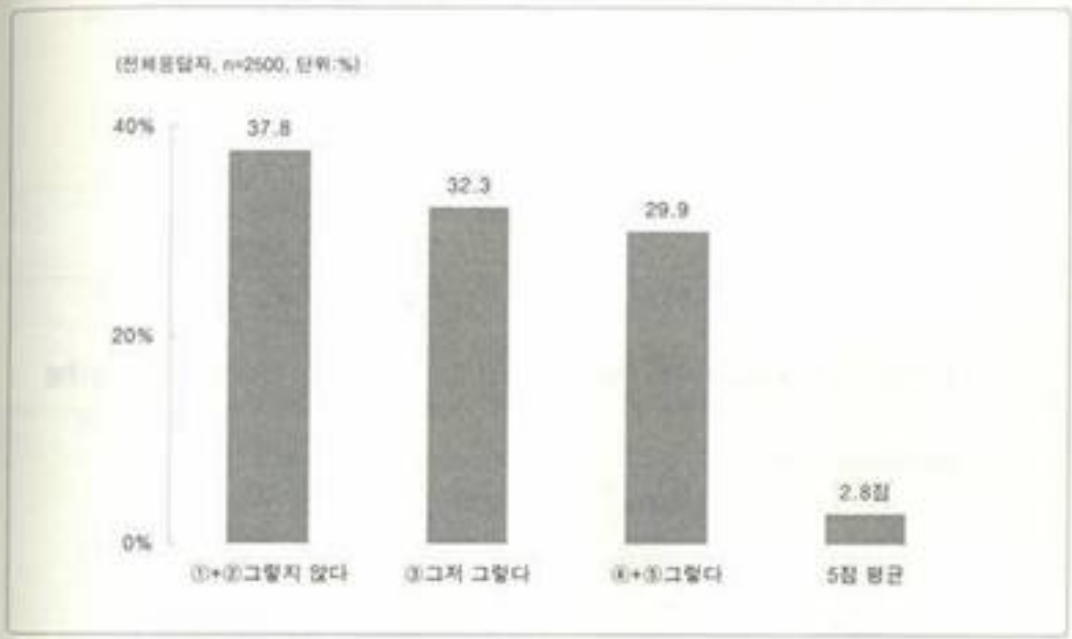
〈그림 3-38〉 가족/결혼관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 현재자녀유무



(7)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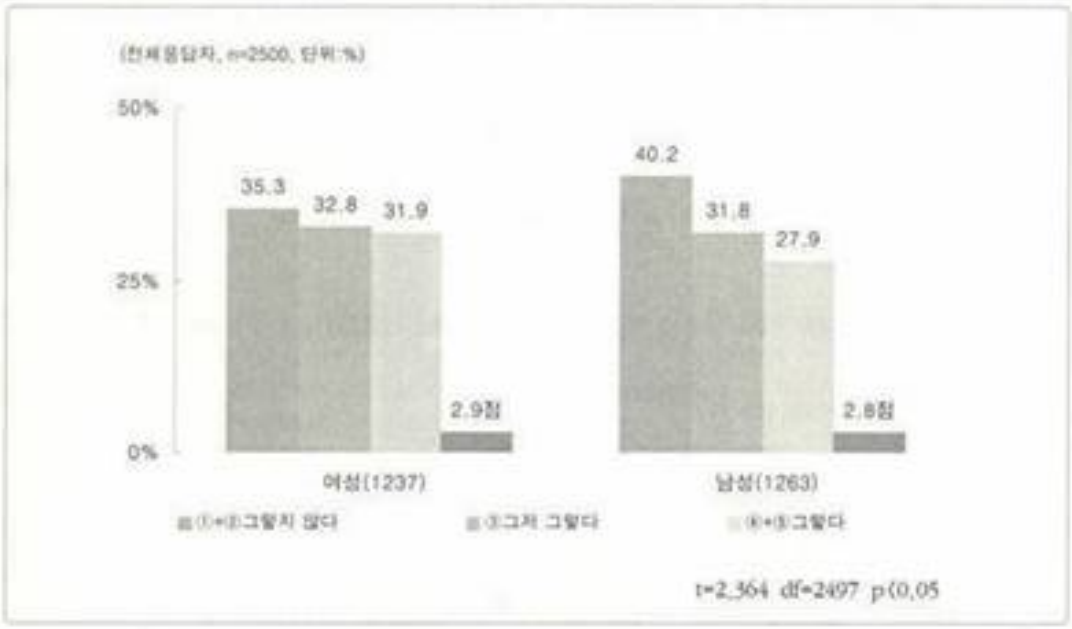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9.9%가 동의하고 37.8%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에 대한 긍정적 태도보다는 부정적 태도가 강했으며,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났다. 입양에 대한 태도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연령, 취업여부, 소득, 직업, 고용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39〉 가족/결혼관_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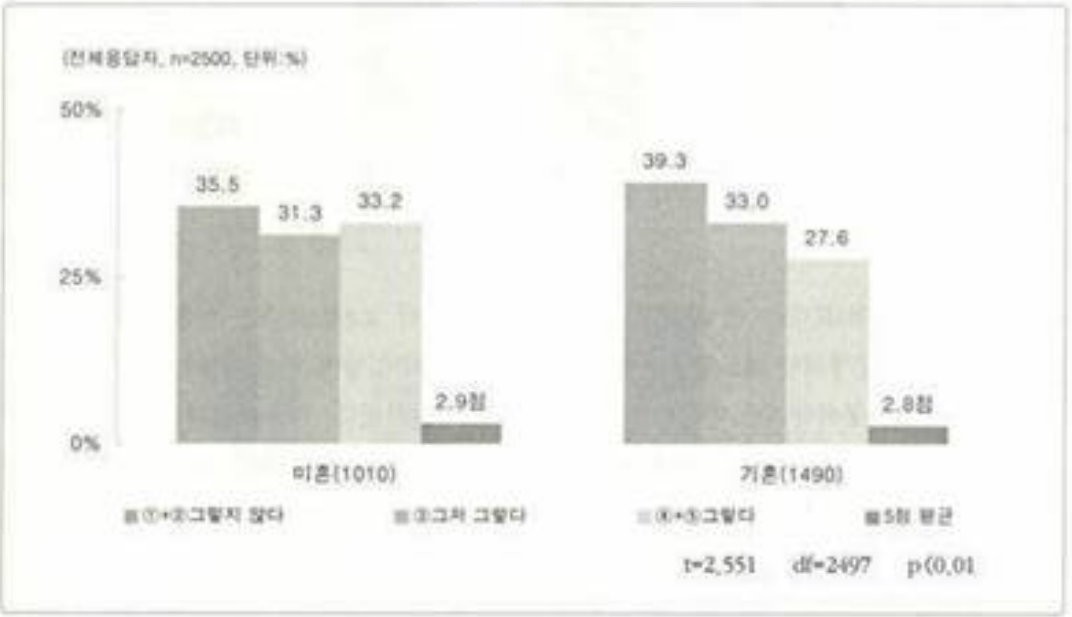


남성(평균 2.8점)보다는 여성(평균 2.9점)이, 기혼(평균 2.8점)보다는 미혼(평균 2.9점)이 입양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혼남녀의 입양에 대한 태도는 상이해서 미혼여성은 37.4%가 동의하지만 미혼남성은 20.3%만이 동의하였다. 미혼여성의 입양에 대한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미혼여성은 다른 어떤 집단에 비해 입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력에 비례하여 입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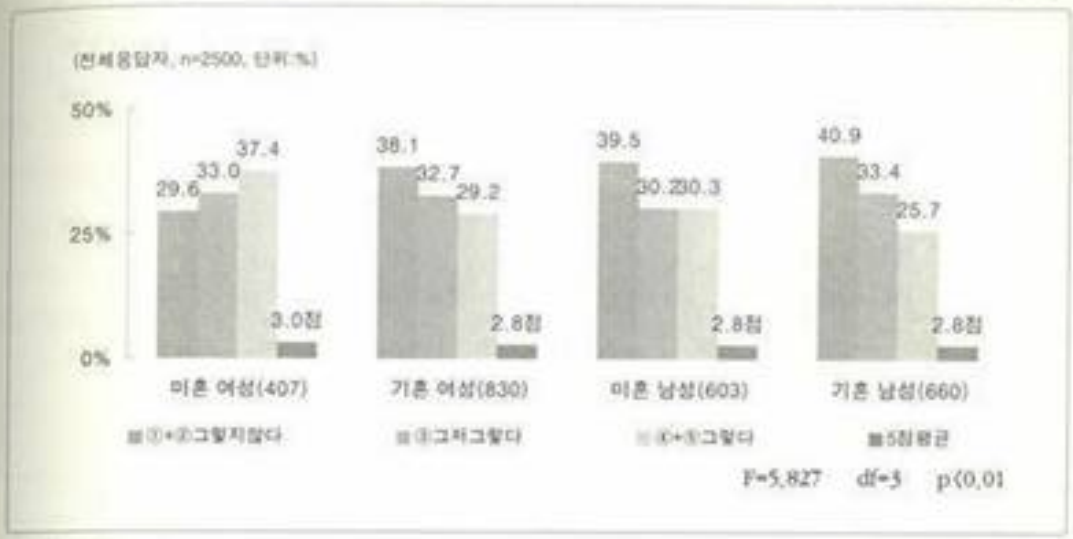
〈그림 3-40〉 가족/결혼관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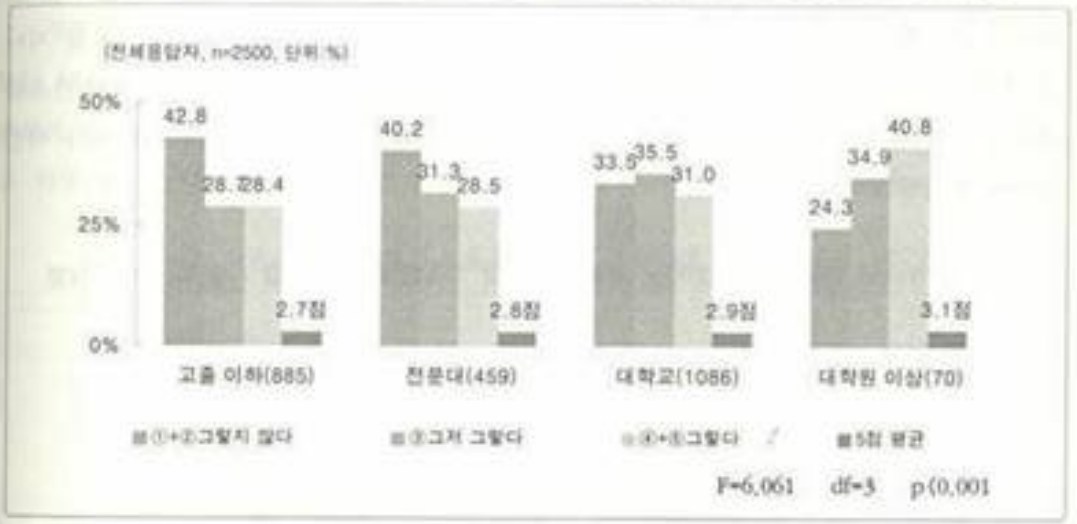
〈그림 3-41〉 가족/결혼관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혼인상태별



〈그림 3-42〉 가족/결혼관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성별*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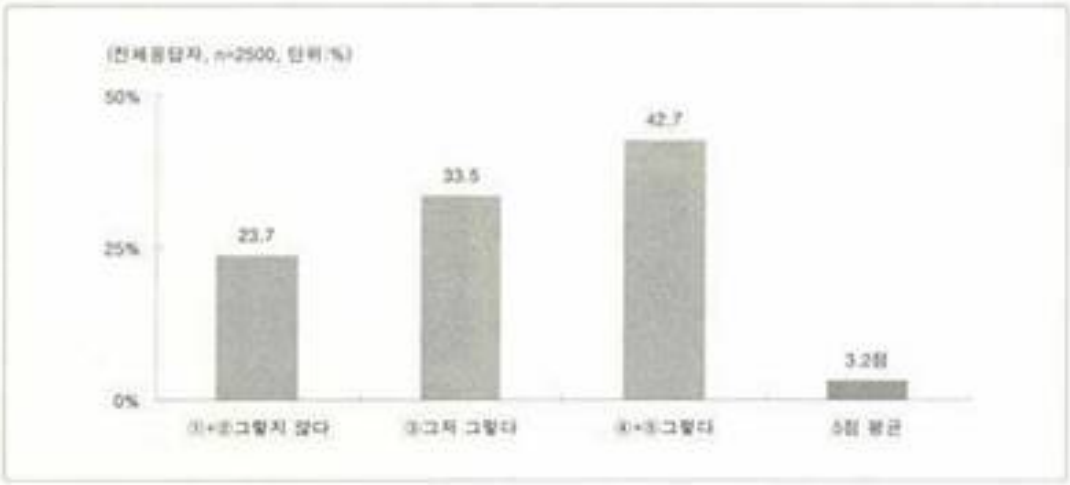
〈그림 3-43〉 가족/결혼관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학력별



(8)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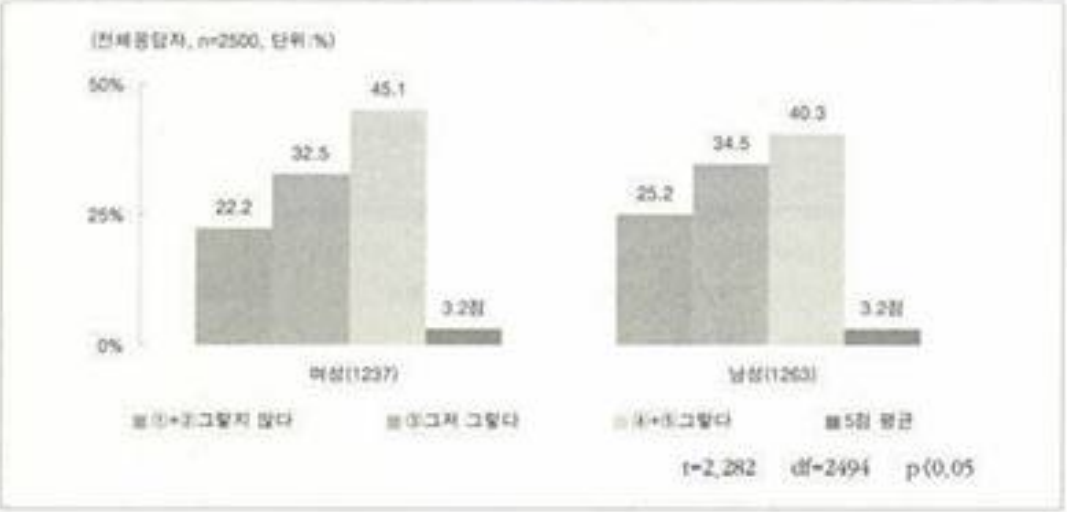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2.7%가 동의하였으며, 평균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성, 혼인상태, 학력, 소득,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림 3-44〉 가족/결혼관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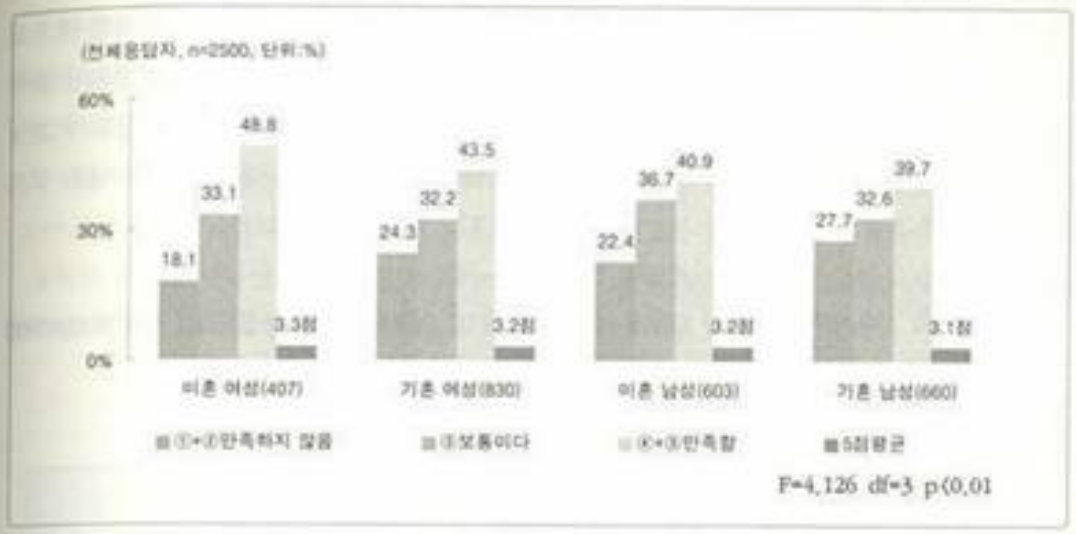


남성(평균 3.2점)보다는 여성(평균 3.2점)이, 기혼(평균 3.2점)보다 미혼(평균 3.3점)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해 편견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로는 미혼여성이 가장 호의적이고, 기혼여성과 기혼남성은 거의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이상 고학력층에서는 47% 이상이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중간소득 집단에 비해 관용도가 높았으며,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절반정도인 48.8%가 이런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그림 3-45〉 가족/결혼관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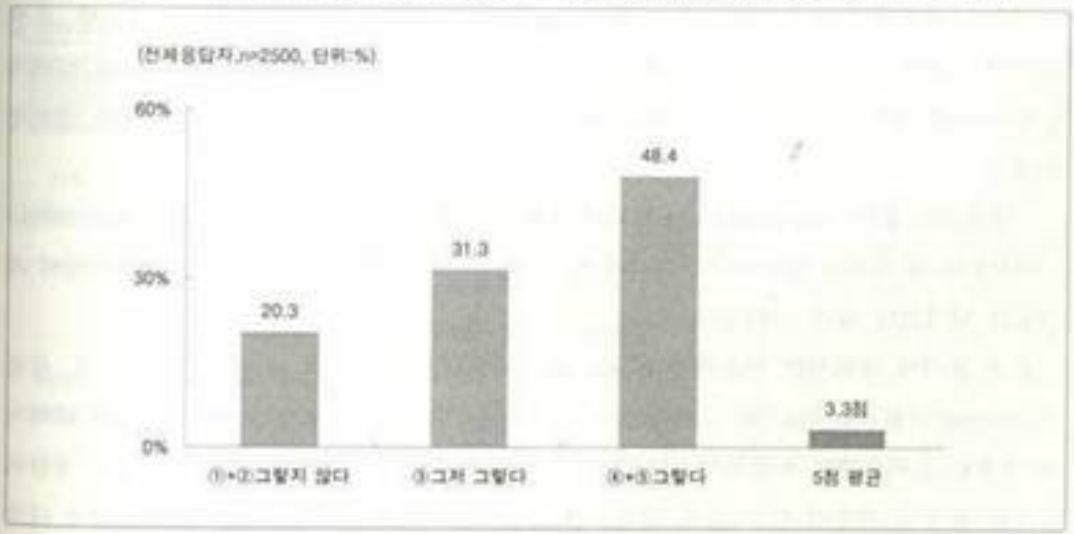
〈그림 3-46〉 가족/결혼관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성별*혼인상태별



(9)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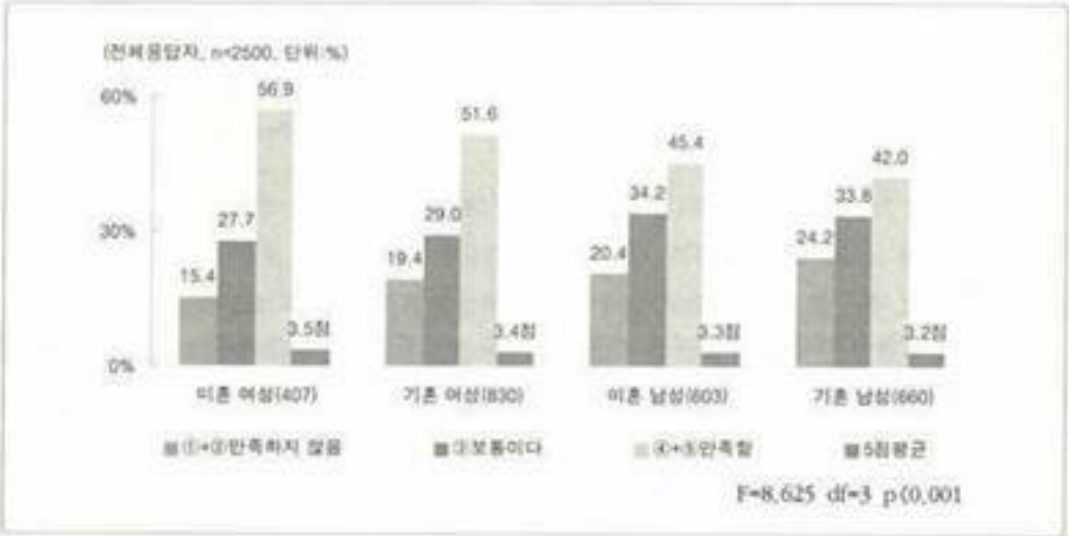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인 48.4%가 동의함으로써 이혼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성,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학력,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 3-47〉 가족/결혼관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남성(평균 3.2점)보다 여성(평균 3.4점)이 이혼을 부부갈등 발생시 가능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여성과 취업여성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가장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남성이 이혼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고, 기혼여성은 절반정도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취업여성이 이혼에 대한 관용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취업남성은 비취업 여성이나 비취업 남성에 비해서도 관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가족/결혼관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성별*혼인상태별



미혼은 기혼보다 가족중심의 가치가 약한 편이고, 한부모나 이혼, 비혼 출산, 입양, 혼전동거 등 탈전통적 가족가치관에 대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동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미혼여성의 지지도가 높고, 특히 입양과 이혼 등에서 미혼남성보다 높은 개방성을 보였다.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는 항목에 대해서는 미혼여성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는 가족우선의 가치에 있어서도 미혼여성의 지지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미혼여성(40.4%)보다 미혼남성(50.3%)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54.6%) 소득집단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소득수준과 비례하여 지지도가 높았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은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재정적 기반이 있고 삶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혼전 동거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입양에 대해서는 성과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혼남성(30.4%)보다 미혼여성(37.5%)의 지지도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집단(48.4%)에서 입양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32.1%)와 대졸(33.6%)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 소득수준, 학력수준 간 유의미한 차이 있었다. 미혼여성(57.1%)이 미혼남성(46.5%)에 비해 이혼에 대한 관용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에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집단에서는 54.5%, 고졸이하에서는 40.6%가 지지하는 반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집단에서는 74.2%가 이혼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 표 3-4 | 응답자 특성별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의견

(단위 : 평균점수)

구 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전체		4.12	4.08	3.98	3.01	3.04	2.57	2.83	3.20	3.31
성	여성	4.15	4.13	4.02	2.96	2.99	2.55	2.89	3.24	3.40
	남성	4.10	4.03	3.94	3.05	3.09	2.60	2.79	3.15	3.22
연령	25~29세	4.03	4.08	3.92	3.13	3.19	2.57	2.92	3.25	3.37
	30~34세	4.13	4.08	3.98	3.09	3.07	2.67	2.82	3.19	3.30
	35~39세	4.13	4.07	4.00	2.96	2.98	2.54	2.79	3.14	3.27
	40~44세	4.23	4.08	4.02	2.81	2.88	2.49	2.79	3.20	3.31
혼인 상태	미혼	4.01	4.03	3.90	3.19	3.16	2.61	2.90	3.25	3.35
	기혼	4.20	4.11	4.03	2.88	2.95	2.55	2.79	3.16	3.28
취업 상태	취업	4.12	4.09	3.99	3.04	3.06	2.58	2.83	3.19	3.29
	비/미취업	4.13	4.06	3.95	2.93	3.00	2.56	2.84	3.21	3.35

	문 항	기혼	미혼		
			전체	여성	남성
가족 중심성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4.20	4.01	4.01	4.01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4.03	3.90	3.97	3.85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11	4.03	4.10	3.98
개방적 가족관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3.16	3.25	3.34	3.19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3.28	3.35	3.48	3.2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2.55	2.61	2.61	2.60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2.88	3.19	**3.28**	**3.17**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2.95	3.16	3.08	3.22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2.79	2.90	3.03	2.81

2. 결혼가치관

1) 결혼에 대한 태도

서울시 만25-44세 전체 응답자 2500명의 74.4%는 결혼을 '가급적' 혹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함으로써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태도는 성별, 혼인상태, 학력, 소득 및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연령이나 취업여부, 고용상태별로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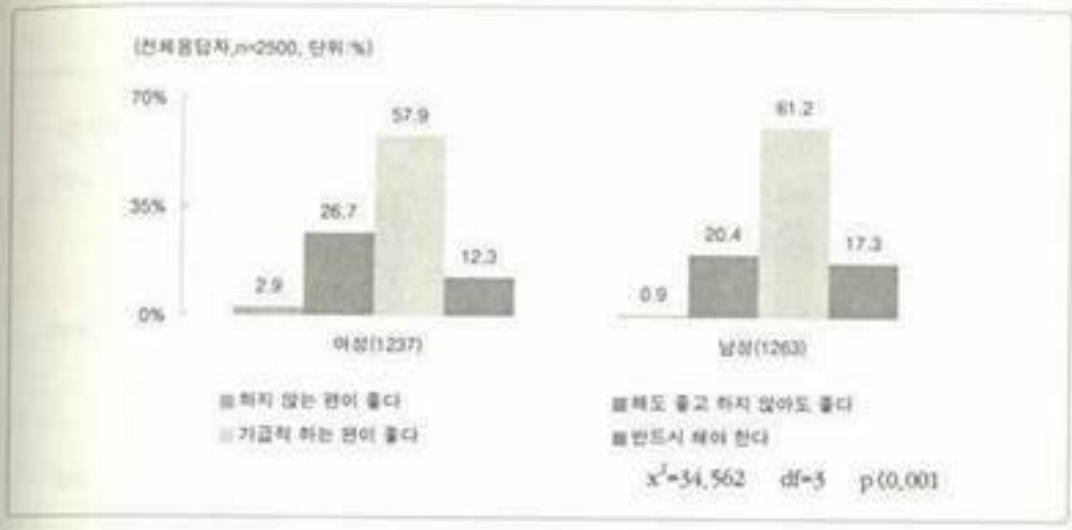
| 표 3-5 | 응답자 특성별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단위 : %)

		빈도 (명)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전체		(2500)	**1.9**	**23.5**	**59.6**	**14.8**
성별	여성	(1237)	2.9	26.7	57.9	12.3
	남성	(1263)	0.9	20.4	61.2	17.3
					χ^2=34.72	df=3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1.9	27.2	57.8	13.1
	기혼	(1490)	1.9	21.0	60.8	16.0
					χ^2=14.16	df=3 p<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3.2	29.1	56.2	11.4
	비취업 여성	(603)	2.5	24.3	59.6	13.2
	취업 남성	(1010)	0.8	20.2	61.5	17.4
	비취업 남성	(253)	1.6	21.2	60.2	17.1
					χ^2=40.77	df=9 p<0.001
혼인 & 취업상태별	미혼 취업자	(665)	1.8	28.1	57.6	12.4
	미혼 비취업자	(345)	2.1	25.5	58.1	14.4
	기혼 취업자	(979)	1.6	20.6	60.7	16.9
	기혼 비취업자	(511)	2.3	21.9	60.9	14.4
					χ^2=17.87	df=9 p<0.05
학력별	고졸 이하	(885)	2.9	25.1	56.4	15.5
	전문대	(459)	1.3	26.6	56.3	15.8
	대학교	(1086)	1.5	20.7	63.9	13.7
	대학원 이상	(70)	0.0	28.2	54.4	17.5
					χ^2=22.65	df=9 p<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2.1	28.9	**55.2**	13.9
	200만~ 300만원 미만	(608)	1.3	21.6	**63.1**	13.9
	300만~ 400만원 미만	(566)	2.1	22.6	**60.1**	15.0
	400만원 이상	(649)	2.0	20.2	**60.5**	16.9
	모름/ 무응답	(26)	1.9	37.6	53.4	7.1
					χ^2=19.49	df=9 p<0.05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2.5	23.2	54.8	19.6
	화이트칼라	(693)	1.2	23.4	64.1	11.2
	블루칼라	(782)	2.1	23.9	56.4	17.5
	전업 주부	(455)	2.6	20.6	62.0	14.3
	학생/실업/비취업	(401)	1.8	26.6	57.2	14.5
					χ^2=24.79	df=12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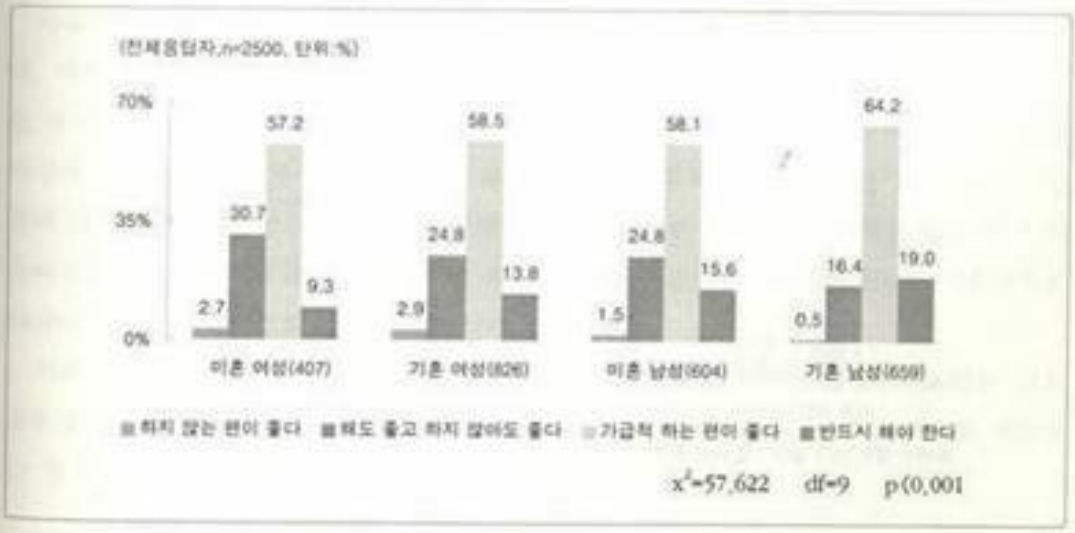
여성(70.2%)보다 남성(78.5%)이 결혼에 더 적극적이며, 미혼(70.9%)보다 기혼(76.8%)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혼의 27.2%와 기혼의 21%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림 3-49〉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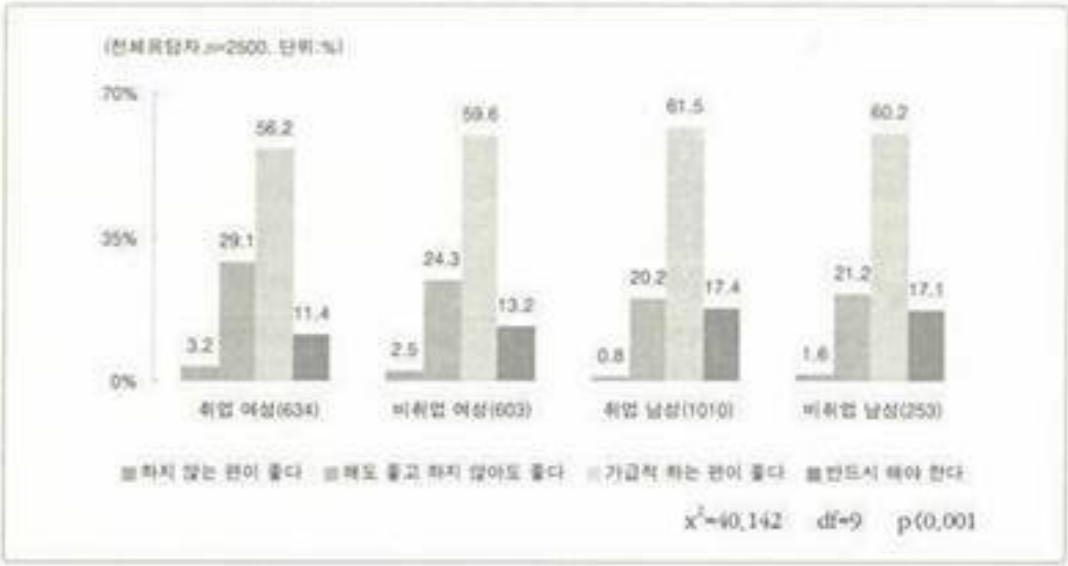
결혼에 대해서는 기혼남성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부정적 인식은 미혼여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기혼남성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50〉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 *혼인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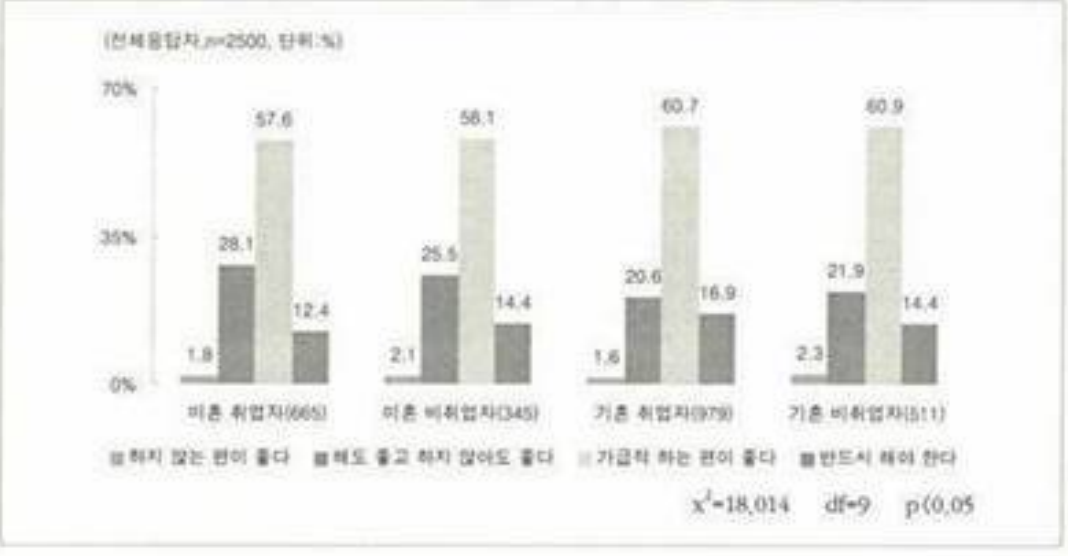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취업여성(29.1%)에게서 가장 강했다. 반면, 결혼을 반드시 혹은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는 적극적 태도는 미혼취업자(70.0%)보다는 미혼 비취업자(72.5%)에게서 더 강했다. 미혼취업자의 28.1%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 가장 결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림 3-51〉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성별*취업상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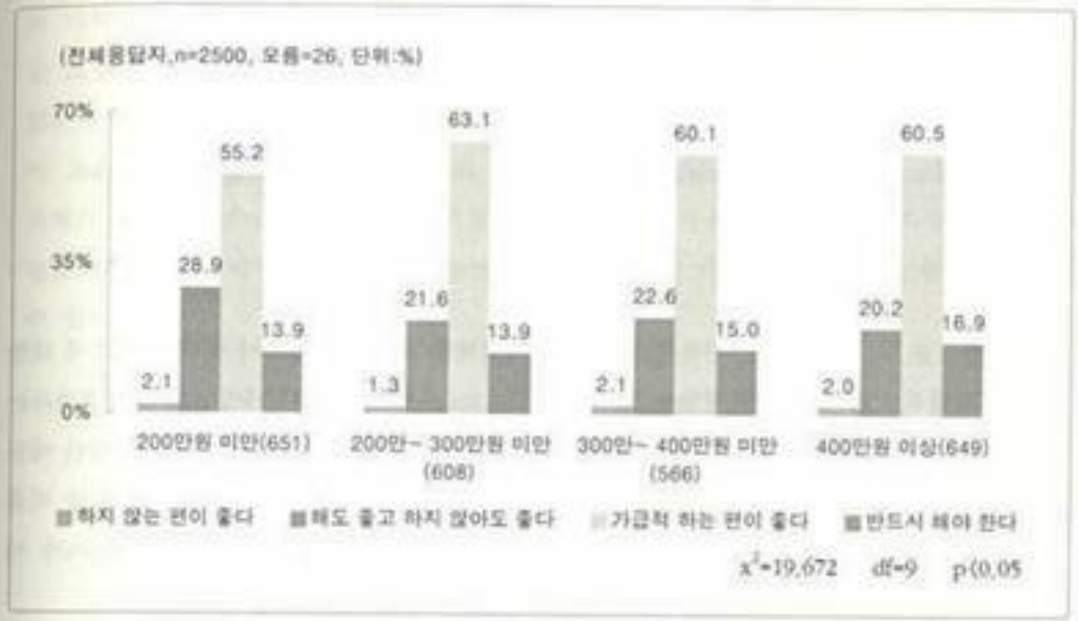


〈그림 3-52〉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혼인상태별 *취업상태별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의 월평균소득층에서 결혼에 대한 유보적, 부정적 태도가 가장 강하고(31.0%),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16.9%)에서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소득수준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정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53〉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월소득별



다음으로는 미혼자 1,010명에 국한해서 미혼남녀의 특성별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미혼남녀의 70.9%가 결혼을 가급적 또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갖지만,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66.6%, 미혼남성은 73.8%로서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결혼하는 것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미혼남성은 15.6%가 동의했지만, 미혼여성은 9.3%만 이에 해당했다. 반면 미혼여성의 30.7%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미혼남성은 24.8%만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이와 같이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커리어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인식결과로 보여진다.

〈그림 3-54〉 미혼자의 성별 결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하지만 〈표 3-6〉에 나타난 기존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혼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4년의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와는 유사한 편이지만,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는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을 합쳐서 50.4%에 불과하지만, 2008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70.9%가 이

| 표 3-6 | 결혼에 대한 태도 비교

2008년 조사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합계
전체(1010)	1.9	27.2	57.8	13.1	100
미혼 여성(407)	2.7	30.8	57.3	9.3	100
미혼 남성(603)	1.4	24.8	58.1	15.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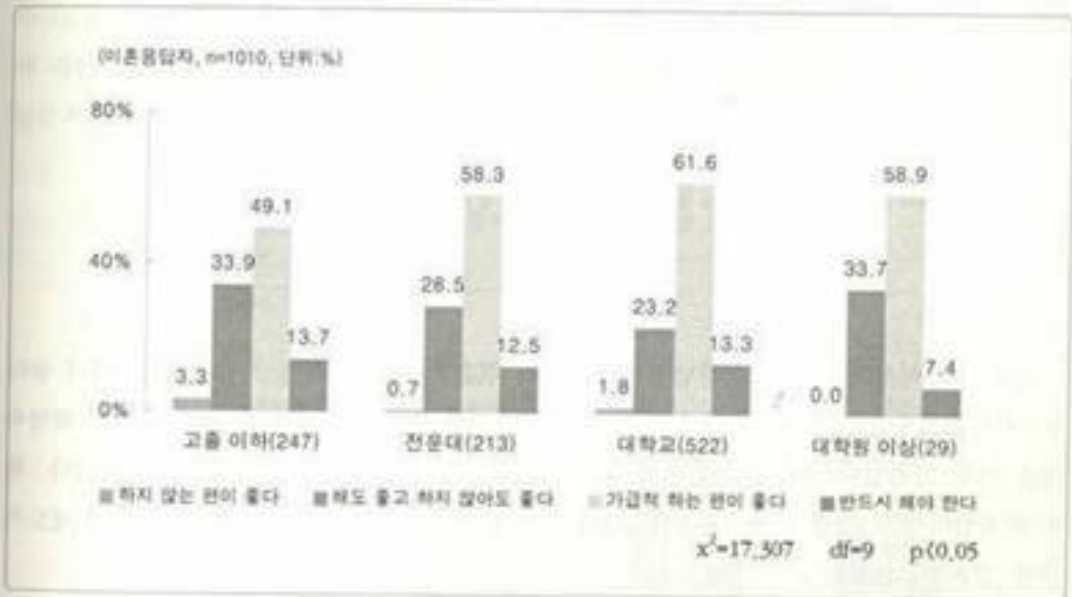
2005년 조사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는 편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	모르겠다
전체(1,455)	5.1	41.7	34.0	16.4	2.9
미혼여성(550)	6.9	52.9	28.2	9.5	2.5
미혼남성(905)	3.2	30.5	39.7	23.3	3.2

2004년 조사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가급적 할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전체(254)	5.1	0.8	22.4	47.6	24.0

에 해당된다.[10]

〈그림 3-5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타고 있다. 미혼의 학력별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을 합쳐서 살펴보면, 고졸(62.8%)보다는 전문대졸(70.8%)이 높고, 대졸은 74.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66.3%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고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각기 33.9%와 33.7%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답한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졸 이하에서는 3.3%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고졸 이하에서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 자체가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직장불안정과 저임금 등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도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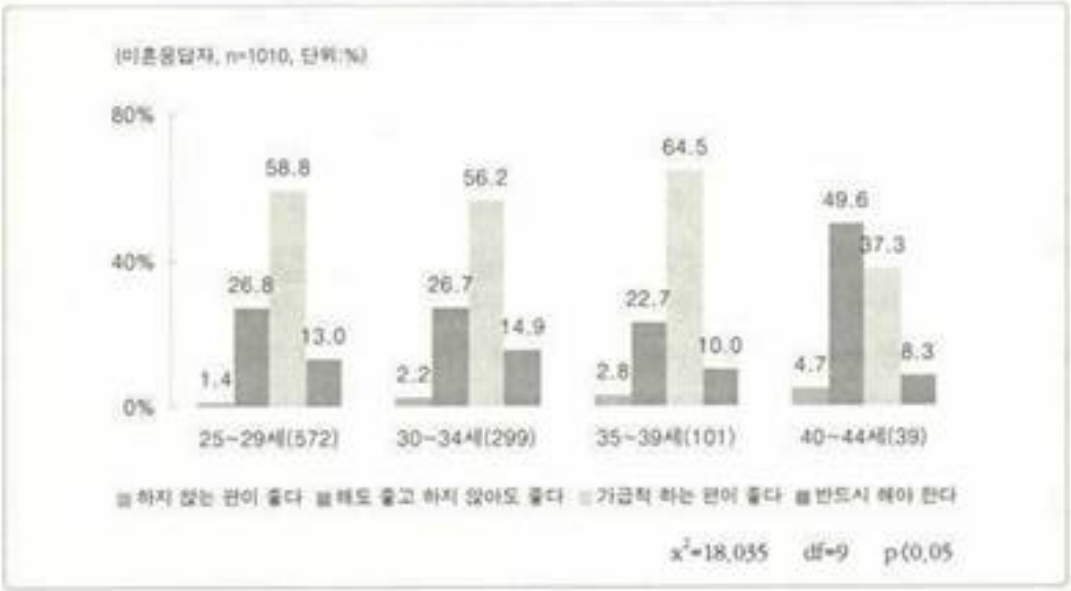
〈그림 3-55〉 미혼자의 학력별 결혼에 대한 태도



10) 2004년 조사(KWDI)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거주 25~40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기혼 746명, 미혼 254명), 2005년 보사연 조사는 전국 미혼남녀, 기혼여성 20~4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이번 조사결과와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자료를 25~44세로 국한하여 재구성하였다.

미혼 내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서 결혼을 가급적 하는 편이 좋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35-39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74.5%), 25-29세(71.8%), 30-34세(7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0-44세 미혼남녀는 45.6%에 그쳐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연령층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기존연구와 달리, 30대 후반(74.5%)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30-34세 미혼남녀 4명중 1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택적 태도(26.7%)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그림 3-56〉 미혼자의 연령별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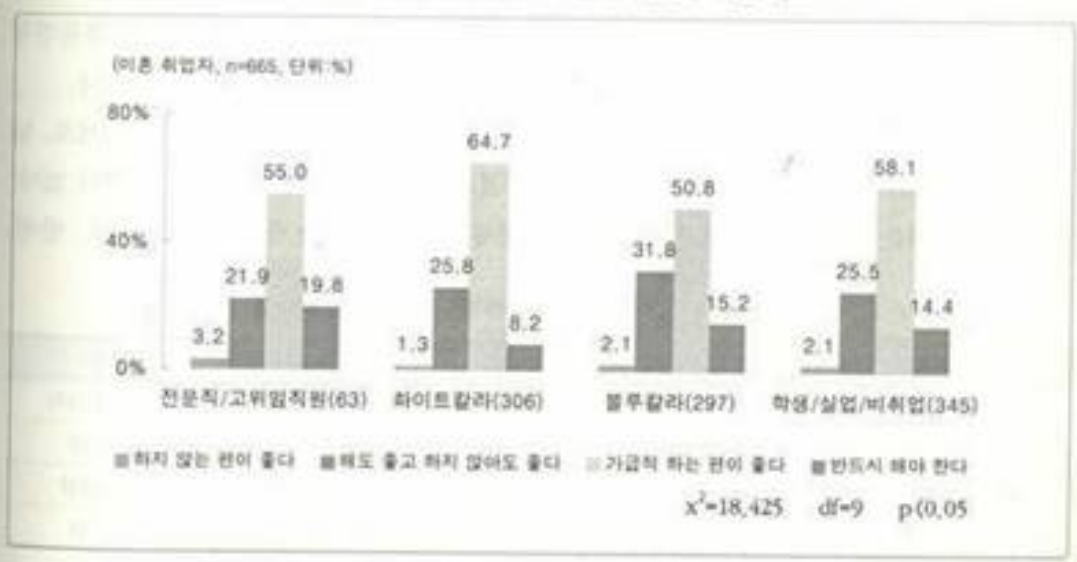
미혼 직장여성의 67.7%, 직장남성의 71.7%가 결혼은 반드시 혹은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미혼남성이 더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미혼 취업여성은 미혼 비취업여성(64.1%)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여성은 3명중 1명(33.5%)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유보적 태도가 강한 것은 나타났다.

〈그림 3-57〉 미혼자의 성*취업상태별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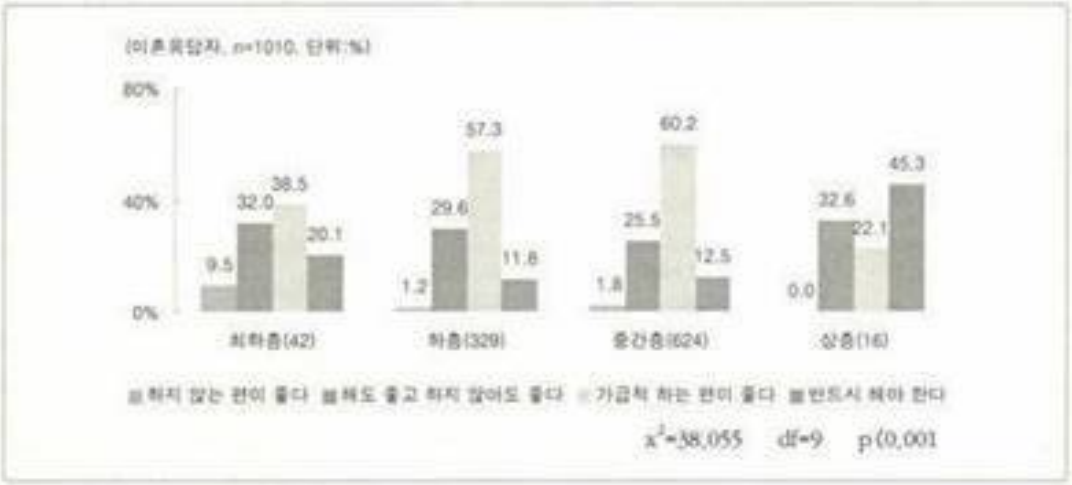
미혼 화이트칼라(72.9%)는 미혼 블루칼라(66.0%)보다 결혼을 가급적 혹은 반드시 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음으로써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생/실업/비취업자(72.5%)는 결혼에 대한 태도가 화이트칼라와 유사하고 전문직/고위임직원이 74.8%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직업별로 열거하면 전문직/고위임직원, 화이트칼라, 학생/실업/비취업자, 블루칼라의 순서이다.

〈그림 3-58〉 미혼자의 직업별 결혼에 대한 태도



다음은 결혼에 대한 태도를 계층의식에 따라 살펴보았다. 미혼 응답자중 중간계층(72.7%)은 하층(69.1%)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하지만, 최하층의 경우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율이 32.0%에 달하였으며, 상층은 반대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는 비율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중간층(72.7%), 하층(69.1%), 상층(67.4%), 최하층(58.6%) 순이다.

〈그림 3-59〉 미혼자의 계층의식별 결혼에 대한 태도



2) 이상적 결혼연령

서울시 25~44세 남녀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에 대해 여성은 28.0세로, 남성은 30.8세로 응답함으로써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이 남성에 비해 2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는 성, 연령, 혼인상태, 월소득 수준,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 자신의 결혼연령을 더 높게 생각하며(여성은 28.2세로, 남성은 27.8세로), 연령이 젊을수록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과 젊은 연령층이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평균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

| 표 3-7 | 이상적 결혼연령 인지 : 성별, 취업상태별

이상적 결혼연령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여성	남성	여성 응답자	남성 응답자	여성 응답자	남성 응답자
28.0세	30.8세	28.2세	27.8세	30.9세	30.7세
		취업여성	취업남성	취업여성	취업남성
		28.4세	27.7세	31.1세	30.7세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해 여성들은 30.9세로, 남성들은 30.7세로 응답하여,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여성 응답자들에 비해 더 낮게 생각하고 있다.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해 미혼여성은 31.6세로, 미혼남성은 31.3세로 응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평균인 30.8세보다 약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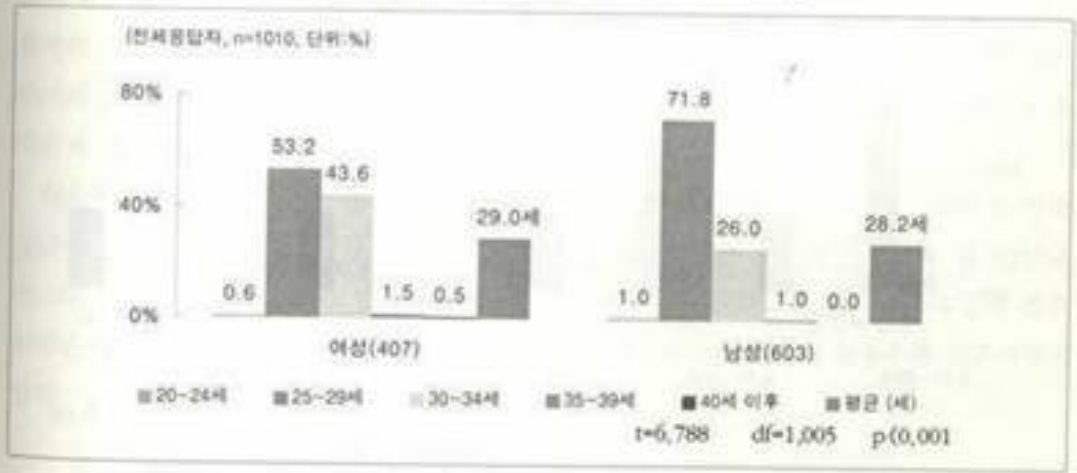
결혼연령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가족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결혼연령은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이기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개별가족의 반응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 및 가치변수와 연관성 하에서 미혼남녀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이상적 결혼연령 인지 : 성별, 취업상태별

이상적 결혼연령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여성	남성	미혼여성 응답자	미혼남성 응답자	미혼여성 응답자	미혼남성 응답자
28.5세	31.4세	29.0세	28.2세	31.6세	31.3세
		미혼취업여성	미혼취업남성	미혼취업여성	미혼취업남성
		29.1세	28.2세	31.6세	31.5세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 남녀의 결혼연령은 여성은 28.5세, 남성은 31.4세로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미혼여성은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29세로 미혼남성은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을 28.2세로 응답하여 남녀간 1세 정도 격차가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은 대체로 31세 정도로 수렴되어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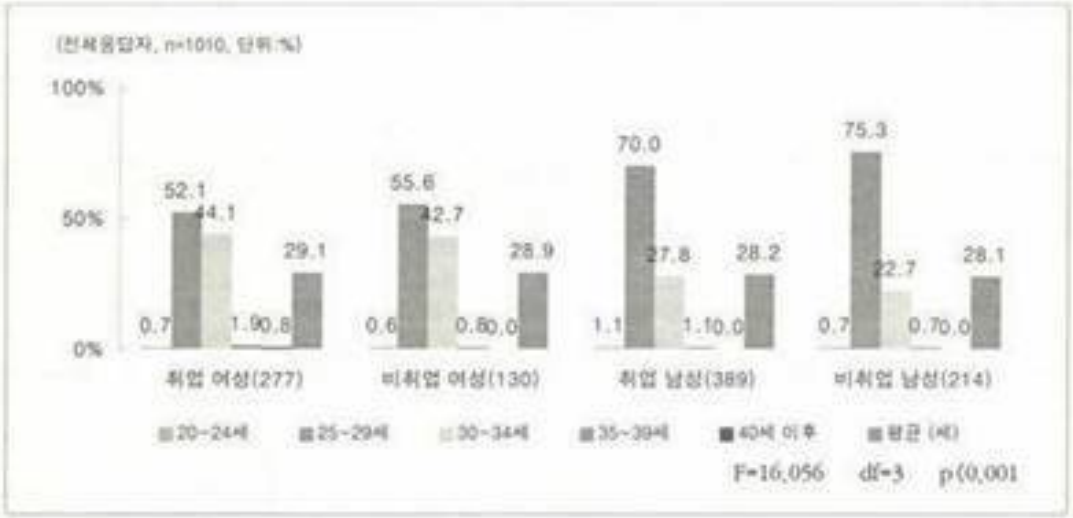
〈그림 3-60〉 미혼자의 성별 이상적 결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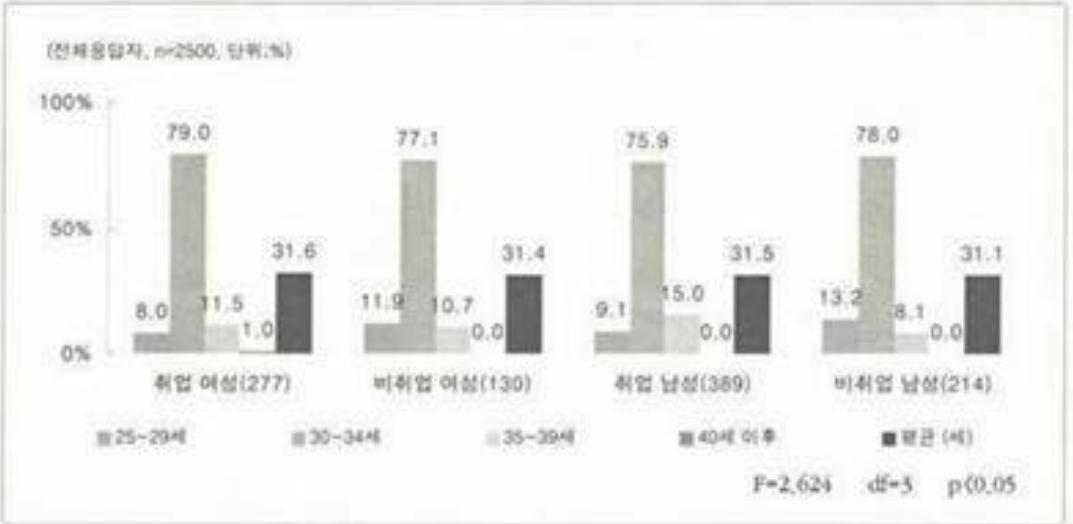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에 대해 조사한 경우의 미혼여성(28.94세)와 미혼남성(27.60세)에 비해 결혼연령 수준이 약간 더 상승해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취업중인 미혼여성은 여성의 결혼연령을 29.1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취업중인 미혼남성은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결혼연령을 28세 정도로 생각하여 약 1세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3-61〉 미혼자의 성&취업상태별 여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그림 3-62〉 미혼자의 성&취업상태별 남성의 이상적 결혼연령



위의 조사결과는 미혼남성보다 미혼여성이 결혼의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결혼에 적당한 시기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학력층일수록 결혼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자신과 이성에 대해 이상적 결혼연령을 비교적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계층간 이상적인 결혼시기에 대한 인식차이는 결혼의 기회비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결혼의 시기는 더욱 늦추어질 가능성이 있다.

3)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과 조건

서울시 만 25~44세 미혼남녀(1,010명)의 70.6%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직 모르겠다' 는 비율은 24.1%인 반면, 결혼의향이 '없다' 는 비율은 5.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혼의향은 연령과 소득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성, 취업여부, 학력, 직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여성 중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은 68.0%로 미혼남성(72.4%)에 비해 낮은 반면, 결혼의향이 없는 비율은 미혼여성(7.2%)이 미혼남성(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 는 응답은 미혼여성이 24.8%이고, 미혼남성이 23.5%로 미혼여성이 다소 높았다. 전반적으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없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미혼여성의 결혼관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25~44세 미혼자 중 가장 결혼의향이 높은 연령집단은 30~34세(72.1%)이었다. 그 다음은 25~29세(71.5%), 35~39세(68.8%), 40~44세(5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30대 초반의 결혼의향이 가장 높으며, 40대 초반의 결혼의향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30대 초반은 결혼 적령기이거나 약간 초과된 연령에 불과하므로 아직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40대 초반에서는 결혼 적령기를 이미 지난 연령으로 인식되어서 결혼을 포기하게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월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미혼자일수록 결혼의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66.5%가 결혼의향 있지만, 200만원대 집단에서는 74.7%, 300만원 대 집단은 79.2%, 400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은 84.8%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해서 소득수준과 결혼의향은 정적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

| 표 3-9 | 응답자 특성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구 분	빈도(명)	있다	없다	모르겠다	
성별	여성	407	68.0	7.2	24.8	
	남성	603	72.4	4.0	23.5	
						N.S
연령별	25~29세	572	71.5	3.1	25.4	
	30~34세	299	72.1	6.5	21.4	
	35~39세	101	68.8	8.6	22.6	
	40~44세	39	51.1	20.6	28.3	
				x^2=28.884	df=6	p(0.001
월소득별	200만원 미만	592	66.5	6.3	27.2	
	200~300만원 미만	270	74.7	3.6	21.7	
	300~400만원 미만	94	79.2	4.3	16.5	
	400만원 이상	33	84.8	2.0	13.1	
				x^2=14.186	df=6	p(0.05

4) 배우자 조건

미혼남녀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자원이 충족되었을 때 결합하며, 배우자조건은 미혼남녀 각각이 어떤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결혼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읽을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자(713명)가 제시하는 배우자 조건은 '신뢰와 사랑' (51.7%)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격(17.3%), 경제력(12.2%), 직업(4.9%), 가정환경(4.6%), 외모(4.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2005)이 조사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소 조사에서는 성격(32.1%)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신뢰와 사랑(21.2%), 경제력(16.2%), 건강(7.9%), 신체적 조건(6.2%)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신뢰와 사랑보다 성격이 중요시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신뢰와 사랑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경제력 가치는 약간 낮게 나타난 것이다.

배우자 조건은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의 경우 신뢰와 사랑(42.4%), 경제력(21.6%), 성격(15.0%), 직업(9.2%), 가정환경(4.1%)의 순이었고, 미혼남성의 경우 신뢰와 사랑(57.6%)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이 성격(18.8%), 외모(6.7%), 경제력(6.2%) 등의 순서로 나타

났다. 미혼여성은 미혼남성에 비해 '경제력'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시하고, 미혼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뢰와 사랑', '외모'를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 표 3-10 | 미혼자의 성별, 취업상태별 배우자 선택 조건

구 분		빈도(명)	신뢰와 사랑	성격	경제력	직업	가정 환경	외모 등 신체 조건	건강	기타 주)
전 체		713	51.7	17.3	12.2	4.9	4.6	4.4	1.8	3.1
성별	미혼여성	277	42.4	15	21.6	9.2	4.1	0.8	1.4	5.5
	미혼남성	437	57.6	18.8	6.2	2.1	4.9	6.7	2.1	1.6
							x^2=89.544	df=9		p<0.001
성& 취업상태별	취업여성	192	42.9	17.3	20.2	9.2	3.5	0.9	1.1	4.9
	비취업여성	85	41.4	10	24.6	9.3	5.4	0.5	2	6.9
	취업남성	285	59.1	18.6	5.1	2	4.7	7.5	2.1	0.9
	비취업남성	152	54.7	19.1	8.3	2.4	5.3	5.2	2.1	3
							x^2=100.415	df=27		p<0.001

주) '기타'에는 학력/학벌, 연령, 종교가 포함됨 p<0.001

미혼자의 배우자 선택 조건에 있어서는 연령, 학력, 소득, 직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배우자 조건에 대한 의견에서 미혼자의 하위집단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별 차이는 유의미해서 배우자 선택 조건으로 미혼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는 반면, 남성은 비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소(2005) 조사에 비해,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으로서 '경제력' 비중이 상당히 낮고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배우자 조건으로 여성의 '경제력' 비중은 약간 높은 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2005년과 비교해서 '성격' 비중이 낮아지고 '신뢰와 사랑' 같은 대인간 친밀성 조건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 표 3-11 | 미혼자의 성별 배우자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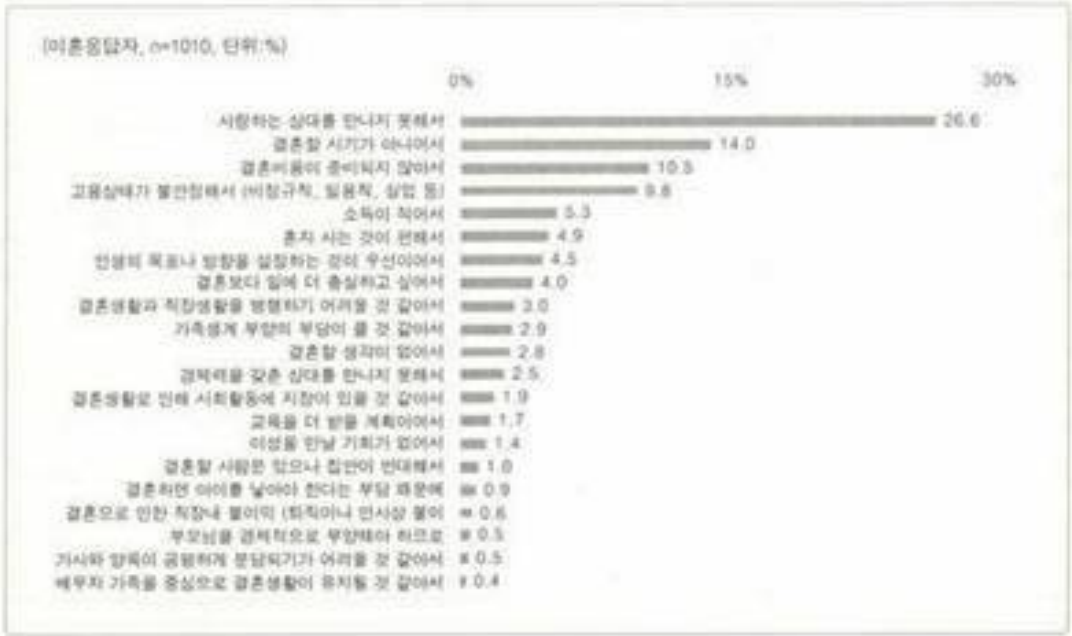
배우자 조건	미혼여성		미혼남성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경 제 력	30.8	21.6	5.5	6.2
성 격	23.8	15.0	38.2	18.8
신 뢰 와 사 랑	19.5	42.4	22.5	57.6
외모 등 신체적 조건	1.8	0.8	9.4	6.7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본 조사결과를 2005년의 전국조사와 비교하면, 서울시 미혼여성은 배우자 조건에서 '경제력'을 중시하는 성향이 약간 낮고, 신뢰와 사랑, 성격 등 내적 가치를 중시하는 비율이 더 높다. 서울시 미혼남성의 경우는 '신뢰와 사랑', 성격 등 정서적 가치 비중이 매우 높고, 경제력 조건이 약간 높은 반면, 외모 등 신체조건에 두는 외적가치 비중은 다소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5)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

서울시 만 25-44세 미혼남녀는 현재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26.6%), '결혼할 시기가 아니어서'(14%)라는 개인적 요인을 제외하면, '결혼비용이 준비되지 않아'(10.5%),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9.8%), '소득이 적어서'(4.9%),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4.5%) 등 경제적 요인과 싱글 라이프에 대한 선호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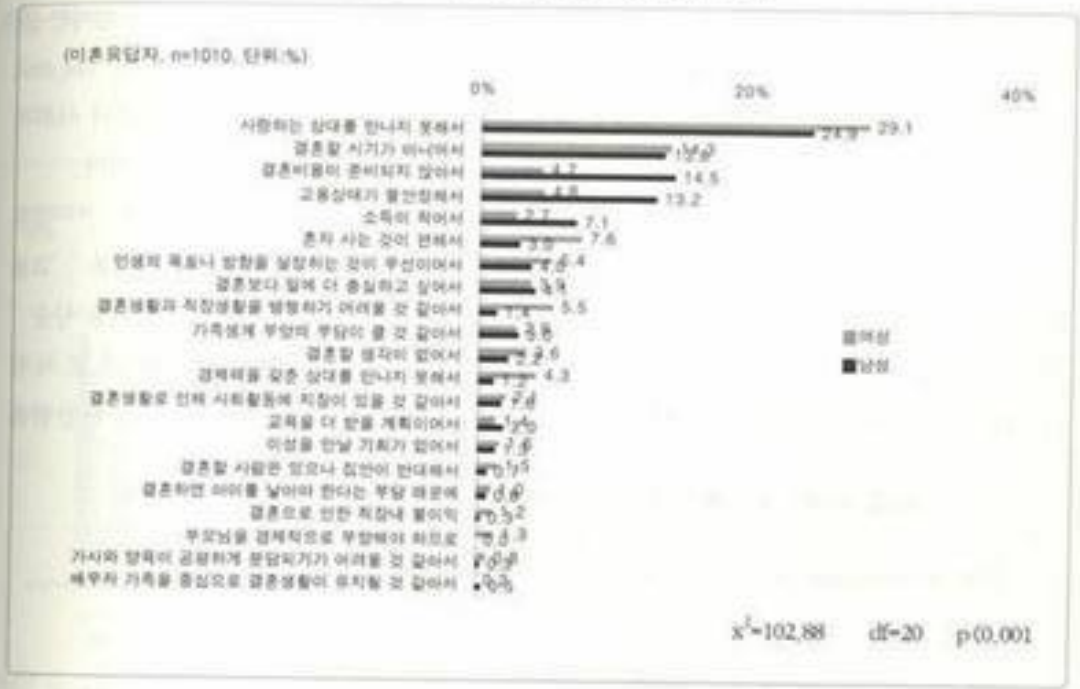
〈그림 3-63〉 미혼남녀의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1순위)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성별에 차이가 있었다. 미혼여성(407명)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29.1%), 결혼할 시기가 아니어서 (14.3%),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7.6%),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5.5%), 인생의 목표나 방향 설

정할 것이 우선이어서(5.4%)등 결혼비용이 준비되지 않아서(14.5%), 결혼할 시기가 아니어서(13.8%),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3.2%), 소득이 적어서(7.1%)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용상태의 불안정이나 소득, 결혼비용 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사는 것이 편해서, 일과 결혼생활의 병행이 어려울 것 같아, 인생의 목표와 방향설정이 우선이어서 등 싱글라이프와 결혼이 아닌 대안적 생활방식의 추구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3-64〉 성별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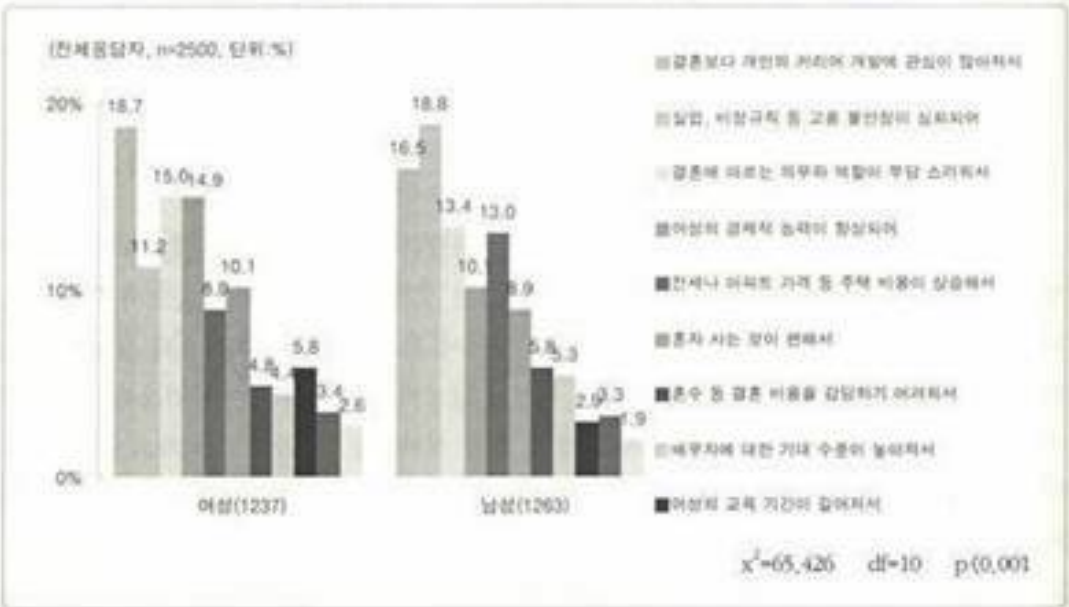
미혼 남녀 모두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미혼여성이 남성에 비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인생목표나 방향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더 인식하고 있어서 결혼에 따른 기회비용의 상실에 대해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경제력이 크며, 결혼을 한 후에 부딪힐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6) 만혼이나 비혼의 요인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만25~44세 남녀의 응답 비율은 '결혼보다 커리어개발'(17.6%), 고용불안정 심화(15.1%),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14.2%), 여성의 경제력 향상(12.5%), 주택가격 상승(11.0%),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9.5%) 순이었다. 이 질문은 1순위와 2순위에 대해 모두 질문하였으므로, 1순위와 2순위를 합쳐보았을 때는 3명중 1명꼴인 30.2%가 '결혼보다 개인의 커리어개발에 관심이 많아져서' 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 (27.5%),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 (26.4%), '고용불안정 심화' (22.6%), '주택비용 상승' (21.1%),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2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14.4%), '혼수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12.6%), '여성의 교육기간 길어져서' (10.4%), '만혼이 사회적 추세여서' (8.6%), '결혼규범 약화' (6.0%) 등을 만혼이나 비혼의 원인으로 들었다.

1순위 응답만을 갖고 성별 차이를 비교하면, 여성은 '결혼보다 개인의 커리어 개발' ,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 '여성의 경제력 향상'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고, 남성은 '고용불안정' '결혼보다 커리어 개발이 중요'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 부담' '주택 비용 상승' 등을 주된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여성 스스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추세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원인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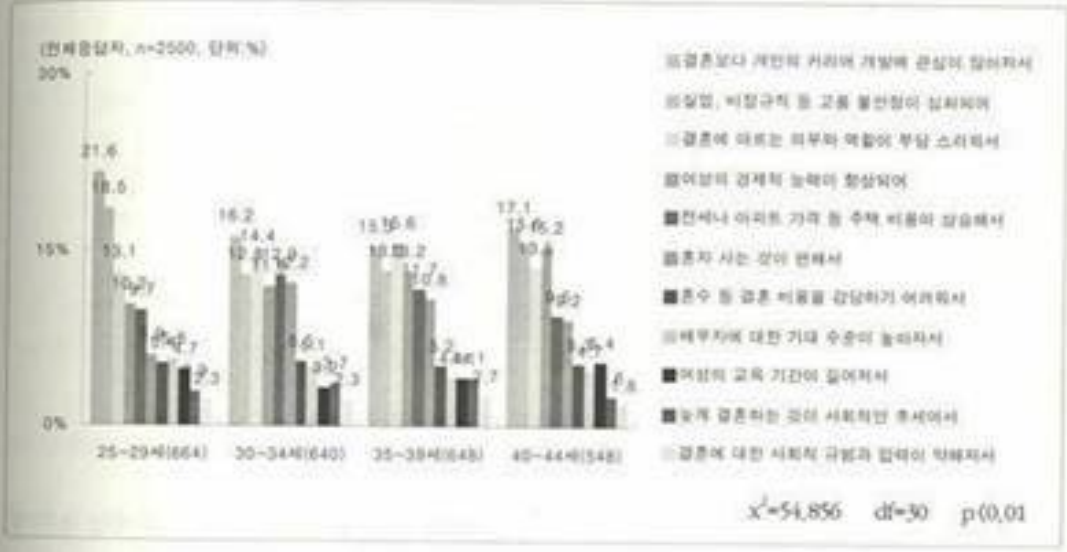
〈그림 3-65〉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성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경제력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 후반의 젊은층은 '결혼보다 커리어개발에 관심 많아' (21.6%)라는 요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미혼여성의 커리어개발에 관한 관심이 미혼남성보다 더 높아서 각기 24.2%, 17.1%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미룸으로써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기혼여성에게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혼남성의 경우는 22.9%가 고용불안정을 만혼과 비혼의 주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림 3-66〉 과거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연령별



7) 실제 결혼연령

서울시 25~44세 기혼응답자(1,490명)에 국한된 이 질문에서는 여성의 경우 실제 결혼연령은 24세 이하가 13.1%(195명)이고 25~29세가 68.7%(1,024명)이며, 30~34세는 16.4%(244명)이고 35세 이상은 1.7%(25명)인 것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결혼연령은 25~29세 사이가 가장 많고, 30~34세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의 비율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12 | 기혼 여성의 실제 결혼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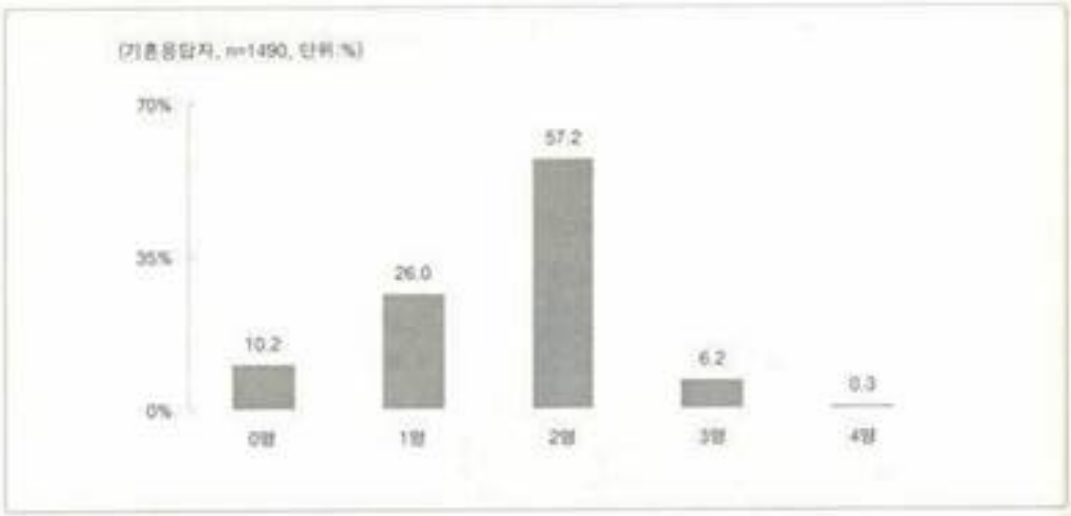
여성의 결혼연령	24세 이하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무응답	계
명	195	1,024	244	25	2	1,490
%	13.1	68.7	16.4	1.7	0.1	100.0

※ 여성응답자는 본인의 결혼연령, 남성응답자는 배우자의 결혼연령임

(1) 결혼연령과 출산의 관계

기혼응답자의 현재 자녀수는 2명이 5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명(26.0%), 0명(10.2%)의 순서이다.

〈그림 3-67〉 기혼응답자의 현재 자녀 수



평균 현재 자녀수는 1.60명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평균 자녀수는 적어서 25~29세는 0.70명, 30~34세는 1.29명, 35~39세는 1.67명이고 40~44세는 1.91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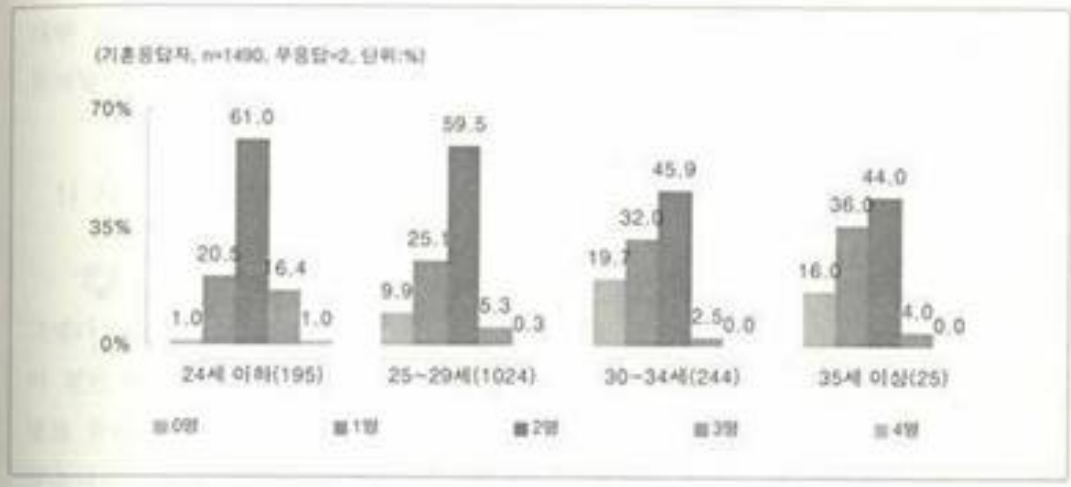
| 표 3-13 | 기혼응답자의 연령별 현재 자녀수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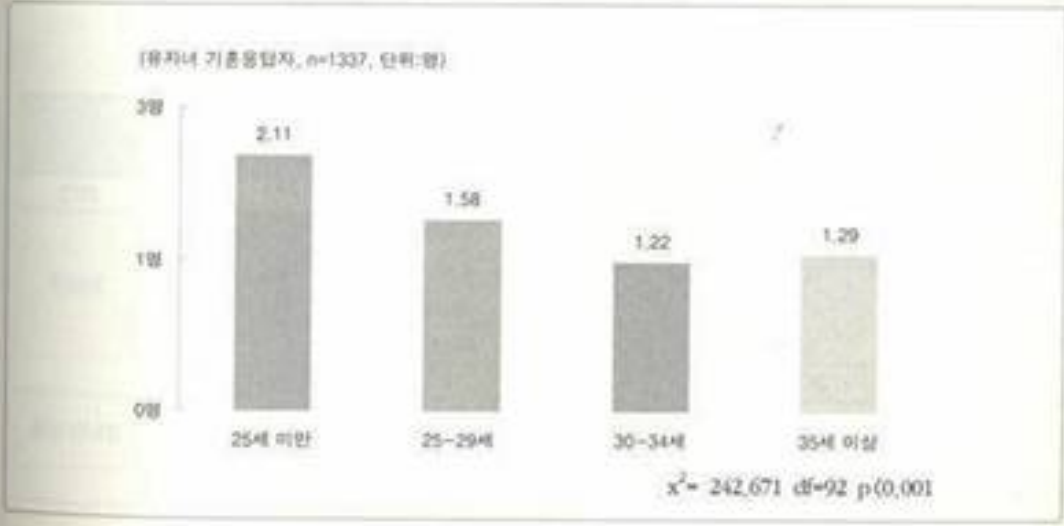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0명	1명	2명	3명	4명	평균 자녀수(명)	유의수준
전 체		(1490)	10.2	26.0	57.2	6.2	0.3	1.60	
연령별	25~29세	(92)	48.1	36.4	13.2	2.4	0.0	0.70	x^2=341.94 df=12 p(0.001
	30~34세	(341)	19.2	37.5	39.0	3.9	0.4	1.29	
	35~39세	(547)	5.5	28.8	59.4	6.3	0.0	1.67	
	40~44세	(509)	2.5	13.5	74.9	8.4	0.7	1.91	

실제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 분포를 보면,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진 경우 자녀 1명을 둔 비율이 높았으나, 결혼연령이 이른 경우에는 자녀 2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연령이 늦은 경우 2자녀보다는 1자녀의 비중이 높고, 30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는 자녀가 2명 있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이 30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 60% 정도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30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 이 비율은 50% 이하로 감소하고 대신 3명중 1명이 한 자녀를 두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30-34세 사이에 결혼한 집단의 20% 정도(19.7%)가 현재 자녀가 없고, 35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에도 16%는 현재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8〉 기혼여성의 결혼연령별 현재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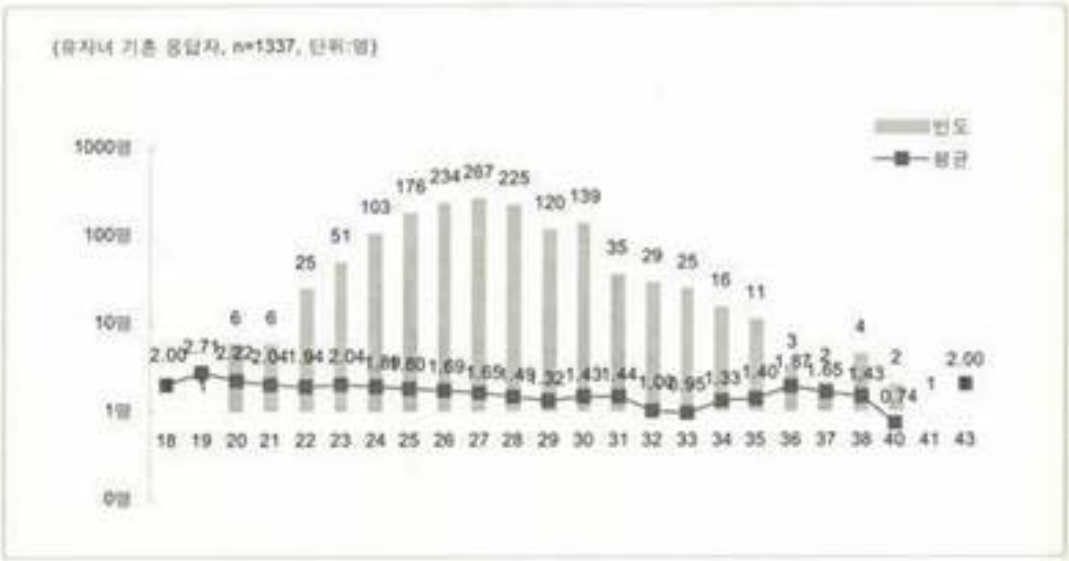


〈그림 3-69〉 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자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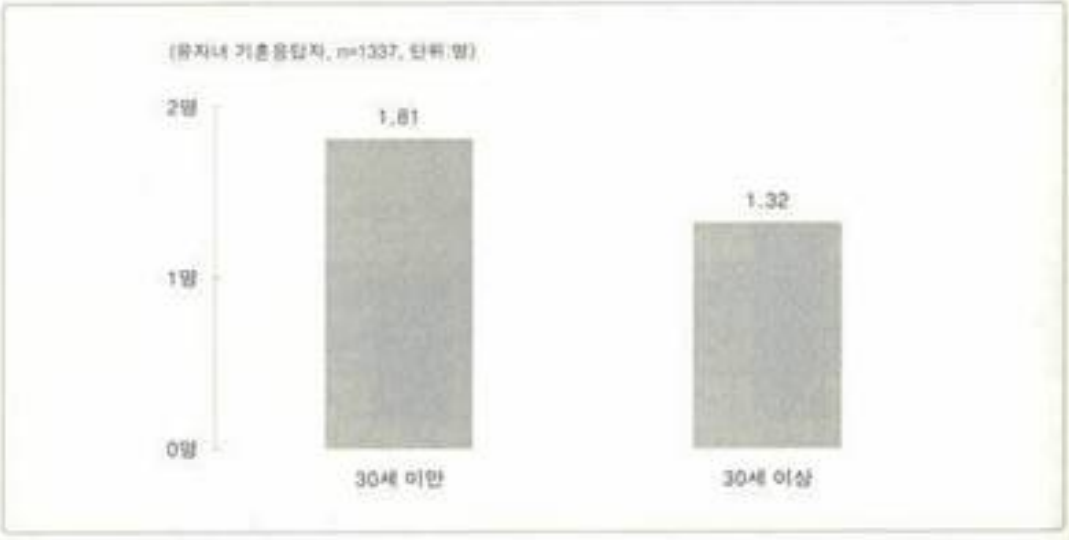


이들 조사 대상자가 출산을 모두 종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결혼연령과 출생아 수의 개연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결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를 비교해 보면, 25세 미만에 결혼한 여성들은 조사시점까지 평균 2.11명을 출산했으며 25-29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1.58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30-34세 사이에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1.2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35세 이상의 나이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평균 1.29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0〉 결혼연령별 실제 출생아수: 각 세별 빈도와 평균



〈그림 3-71〉 기혼여성의 결혼연령별 평균 출생아 수 : 30세 전후 비교



(그림 3-7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연령 30세를 전후로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30세 미만에 결혼한 집단의 경우 평균 출생아수가 1.81명으로 30세 이상의 나이에 결혼한 집단의 평균 출생아수 1.32명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결혼연령이 이를수록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3. 자녀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변화는 출산율 변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에 대한 태도 등을 통해 저출산의 요인을 설명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1)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는 것에 대해 서울시 25~44세 남녀의 54.6%는 그렇다고 응답했고, 16.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결혼 후 자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은 차지한다. 이러한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혼인상태, 소득 및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과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에서 자녀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보다 기혼이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 표 3-14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

		빈도(명)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5점 평균	
전체		(2500)	16.1	54.6	3.48	
연령별	25~29세	(664)	21.1	47.7	3.33	
	30~34세	(640)	16.9	52.0	3.43	
	35~39세	(648)	14.3	56.4	3.53	
	40~44세	(548)	11.3	64.0	3.67	
				F=14.18	df=2493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22.2	45.2	3.28	
	기혼	(1490)	12.0	61.0	3.62	
				t=-8.90	df=2044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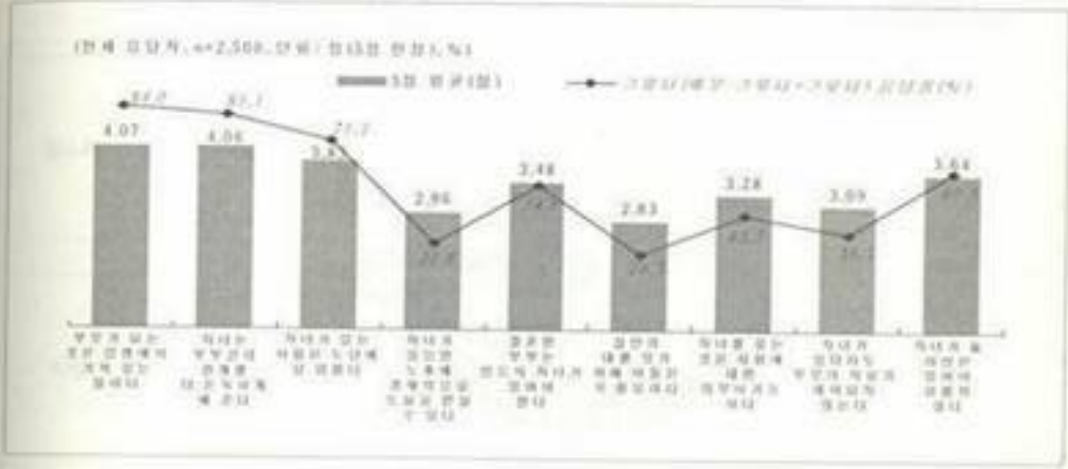
		빈도(명)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5점 평균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8.6	50.7	3.38	
	비취업 여성	(603)	15.7	56.9	3.51	
	취업 남성	(1010)	14.5	55.2	3.52	
	비취업 남성	(253)	17.4	56.7	3.52	
				F=3.15	df=2493	p<0.05
혼인 & 취업상태별	미혼 취업자	(665)	22.4	43.2	3.25	
	미혼 비취업자	(345)	21.8	49.0	3.34	
	기혼 취업자	(979)	11.8	60.5	3.62	
	기혼 비취업자	(511)	12.4	62.1	3.63	
				F=28.03	df=2493	p<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22.2	45.8	3.28	
	200만~ 300만원 미만	(606)	16.8	52.2	3.46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3.7	56.6	3.54	
	400만원 이상	(649)	11.6	64.1	3.66	
	모름/ 무응답	(26)	12.8	51.9	3.49	
				F=18.68	df=2467	p<0.00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14.3	59.0	3.58	
	화이트칼라	(693)	15.6	53.9	3.46	
	블루칼라	(782)	16.9	51.9	3.45	
	전업 주부	(455)	11.6	63.0	3.66	
	학생/실업/비취업	(401)	21.4	49.8	3.35	
				F=6.77	df=2493	p<0.001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자녀 필요성 점수가 낮고,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즉, 여성은 취업여부가 자녀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미혼취업자의 자녀 필요성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결혼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전업주부의 자녀 필요성이 가장 높고,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자녀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가치에 대한 태도

〈그림 3-72〉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이라는 데 응답자의 84.0%가 동의하였다. '자녀가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해준다' (81.1%), '자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71.3%) 등의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높은 비율로 동의하였지만, 남아선호(28.5%)나 노후부양의 기대감(32.8%)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경제적·도구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그림 3-72〉 자녀에 대한 가치관



| 표 3-15 | 응답자 특성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단위 :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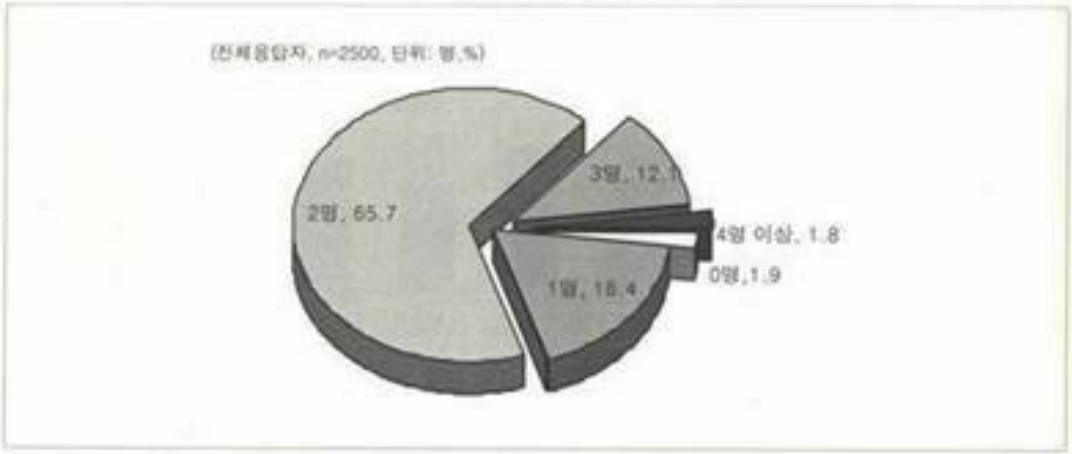
구 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준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자식을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
전 체		4.07	4.06	3.83	2.96	2.83	3.28	3.09	3.64
성	여성	4.09	4.06	3.84	2.92	2.71	3.22	3.02	3.63
	남성	4.06	4.06	3.82	3.00	2.94	3.34	3.16	3.64
연령	25~29세	4.02	4.04	3.81	2.99	2.73	3.25	3.11	3.56
	30~34세	4.09	4.04	3.81	2.98	2.81	3.21	3.09	3.62
	35~39세	4.11	4.05	3.84	2.96	2.86	3.27	3.09	3.64
	40~44세	4.09	4.11	3.87	2.89	2.93	3.41	3.08	3.74
혼인 상태	미혼	3.94	4.00	3.76	2.98	2.74	3.19	3.08	3.52
	기혼	4.16	4.10	3.88	2.95	2.89	3.34	3.10	3.72
취업 상태	취업	4.06	4.04	3.83	2.95	2.82	3.29	3.10	3.63
	비/미취업	4.10	4.09	3.83	2.99	2.84	3.27	3.08	3.65

3) 희망자녀수

희망자녀수는 출산력 변화를 전망하는 지표의 하나로 여성이 가임기 전체를 통해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 수를 의미한다. 실제 자녀수와 달리, 희망자녀수는 완결출산력이 아니므로 기대자녀수로 이해될 수 있다.

기·미혼을 통틀어 희망자녀수가 2명(65.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명(18.1%), 3명(12.1%)의 순서이다. 0명(1.9%)과 4명 이상(1.7%)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희망자녀수는 여전히 2명이 지배적이고 3명 이상 다자녀 희망은 약 14%(13.9%)를 차지한다. 서울시 만 25~44세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96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림 3-73〉 희망자녀 수



이러한 희망자녀수는 성과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반면, 연령, 혼인상태, 학력, 월소득수준,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표 3-16 | 응답자 특성별 희망자녀수

(단위 : %, 명)

		빈도 (명)	평균 희망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2500)	1.96	1.9	18.1	65.7	12.1	1.7	0.1
연령	25~29세	(664)	1.90	1.7	20.5	67.2	8.6	1.2	0.1
	30~34세	(640)	1.90	2.1	21.0	64.3	10.6	1.5	0.0
	35~39세	(648)	1.96	2.2	16.9	66.8	11.7	1.9	0.3
	40~44세	(548)	2.08	1.7	13.1	64.1	18.7	2.2	0.1
						x^2=48.84		df=18	p(0.001

		빈도 (명)	평균 희망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혼인 상태	미혼	(1010)	1.87	2.4	21.2	66.2	8.0	1.7	0.1
	기혼	(1490)	2.01	1.6	16.0	65.4	14.9	1.7	0.2
							x^2=34.77	df=6	p(0.001
혼인 & 취업 상태	미혼 취업자	(665)	1.87	2.4	22.0	65.7	7.5	1.8	0.0
	미혼 비취업자	(345)	1.89	2.4	19.5	67.1	9.1	1.6	0.2
	기혼 취업자	(979)	1.99	2.0	16.9	63.8	15.5	1.4	0.2
	기혼 비취업자	(511)	2.05	0.9	14.3	68.2	13.7	2.1	0.0
							x^2=51.05	df=18	p(0.001
학력	고졸 이하	(885)	1.98	1.7	17.8	64.9	13.3	1.4	0.0
	전문대	(459)	1.91	1.0	20.9	66.9	9.2	1.6	0.2
	대학교	(1086)	1.95	2.2	17.0	66.3	12.3	1.9	0.2
	대학원 이상	(70)	1.96	5.8	18.9	57.7	13.5	1.7	0.0
							x^2=34.95	df=18	p(0.01
월소득	200만원 미만	(651)	1.89	2.7	20.7	65.4	8.8	1.7	0.1
	200만~ 300만원 미만	(608)	1.96	1.7	18.3	65.7	12.6	1.2	0.0
	300만~ 400만원 미만	(566)	2.02	1.6	15.5	67.0	12.2	2.9	0.3
	400만원 이상	(649)	1.97	1.5	17.6	64.2	15.4	1.1	0.1
	모름/ 무응답	(26)	-	2.8	14.2	83.0	0.0	0.0	0.0
							x^2=37.88	df=24	p(0.05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1.96	3.2	18.5	60.7	14.4	3.0	0.0
	화이트칼라	(693)	1.87	2.5	20.4	67.2	8.7	0.5	0.2
	블루칼라	(782)	2.00	1.6	17.7	63.2	14.9	2.3	0.1
	전업 주부	(455)	2.07	1.0	13.8	67.9	14.1	2.3	0.0
	학생/실업/비취업	(401)	1.89	2.1	19.4	67.6	9.3	1.4	0.2
							x^2=49.27	df=24	p(0.01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2.01	1.9	17.1	61.8	17.0	2.1	0.2
	상용근로자	(1082)	1.90	2.2	20.2	66.0	9.8	1.2	0.2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05	2.2	14.8	62.6	17.1	2.8	0.0
							x^2= 24.92	df=12	p(0.05

* '모름' 은 제외함

희망자녀수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2명(65.4%), 1명(19.4%), 3명(10.9%), 0명(1.9%)의 순서이고 남성은 2명(66.0%), 1명(16.8%), 3명(13.3%), 0명(2.0%)의 순서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 3명을 원하는 경우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희망자녀수에서도 여성은 1.94명이고 남성은 1.9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여부도 희망자녀수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가 아니었다. 따라서 성과 취업여부라는 영향력 있는 변수에서 희망자녀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자녀수 자체에 대한 비

교적 동질적인 일반적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혼인여부는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로서, 미혼은 평균 희망자녀수가 1.87명으로서 평균 이하인데 반해, 기혼은 평균 희망자녀수가 2.01명으로 2명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21.2%)은 기혼(16.0%)보다 자녀 '1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고, 기혼(14.9%)은 미혼(8.0%)보다 3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한자녀 희망은 미혼집단에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희망은 기혼집단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미혼취업자는 자녀 1명을 희망하는 비율(22.0%)이 가장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자는 자녀 3명 희망비율(15.5%)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1명 희망비율(16.9%)과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20대(25~34세) 5명중 1명은 자녀 '1명'을 희망하고(20.5%), 40대(40~44세)는 자녀 3명 희망비율(18.7%)이 가장 높았다. 즉, 연령이 젊을수록 소자녀 선호가 두드러지고, 연령이 많을수록 다자녀 희망비율이 높다. 25~34세 연령층의 평균 희망자녀수는 1.90명이지만 35~39세는 1.96명으로 평균 이상이며, 40대 이상에서는 2.08명을 차지한다. 저연령층의 소자녀 선호와 고연령층의 다자녀 선호 경향은 혼인상대에 따른 차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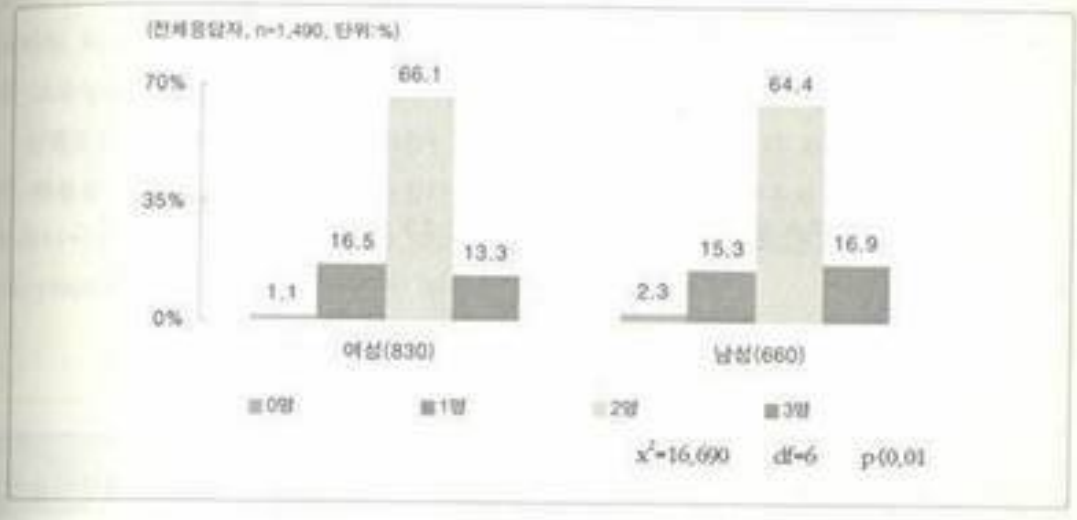
학력수준에 따라서 고졸이하(64.9%)보다는 전문대졸 및 대졸(66.9%, 66.3%)집단의 자녀 2명 희망비율이 높고, 한자녀 희망비율은 전문대졸 집단이 가장 높고(20.9%), 대졸(17.0%)보다는 고졸 이하(17.8%)가 약간 높았다. 또한 대학원 이상 집단에서도 18.9%로 약간 더 높았으며, 대학원이상의 고학력집단에서는 3명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도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희망자녀수는 고졸 이하가 1.9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이 1.96명, 대졸은 1.95명으로 나타나, 양극단의 학력수준에서 평균 희망자녀수가 가장 높다.

소득별 한 자녀 희망비율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7%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300만원 미만에서도 18.3%에 달했다. 2명 희망은 월소득 300만원~400만원 미만 집단에서(67.0%) 가장 높았다.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은 1명 희망이 17.6%이고 3명 희망비율도 15.4%로 높았다. 평균 희망자녀수는 300~400만원 미만대의 중간소득집단이 2.0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0~300만원 미만이 1.96명, 200만원 미만 저소득집단은 1.89명으로 가장 낮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희망자녀수도 적은 비례관계가 성립하지만,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는 평균 희망자녀수가 1.97로 다시 적어진다.

상용근로자층에서 2명 희망 비율이 66.0%로 가장 높고, 1명 희망비율도 20.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희망 자녀 3명 이상은 상용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고용주, 임시/일용/무급종사자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 희망자녀수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 집단에서 2.05명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고용주가 2.01명으로 2명 정도이지만, 상용근로자는 1.90명으로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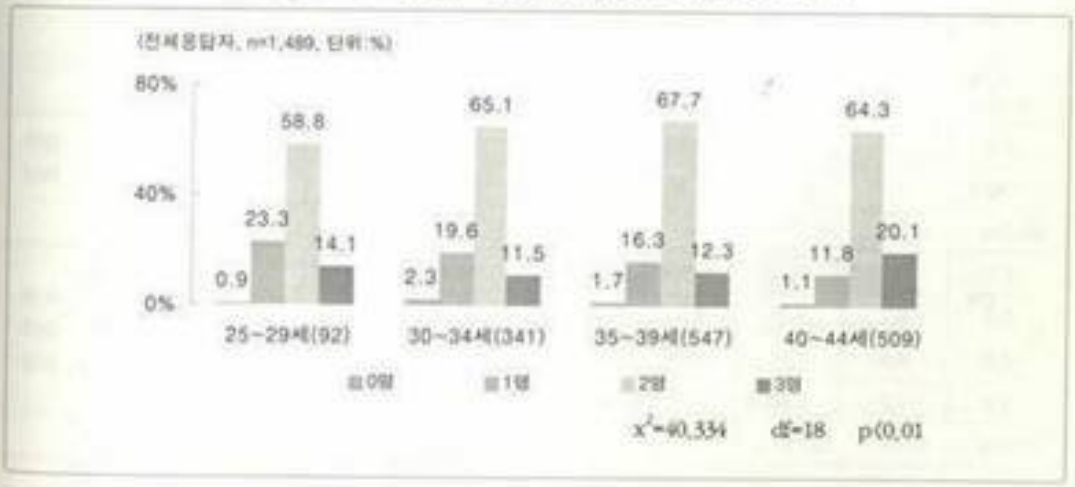
기혼집단에서는 성별, 연령별, 취업상태별, 소득수준별로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학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1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 3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다. 여성들이 소자녀를 지향하고 남성들이 다자녀를 지향하는 경향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3-74〉 서울시 기혼남녀의 희망하는 자녀 수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1자녀 희망비율이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2명 희망비율이 높아진다. 40대에서는 예외적으로 3명 이상 다자녀 선호비율이 20.1%로 가장 높고 2자녀 희망비율이 약간 적다. 25~35세 사이의 젊은 기혼집단에서 자녀 1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20% 정도

〈그림 3-75〉 서울시 기혼남녀의 연령별 희망하는 자녀 수



를 차지해서 다섯 커플 중 한 커플에 해당한다. 모든 기혼연령집단에서 3자녀를 희망하는 비율도 골고루 10% 이상은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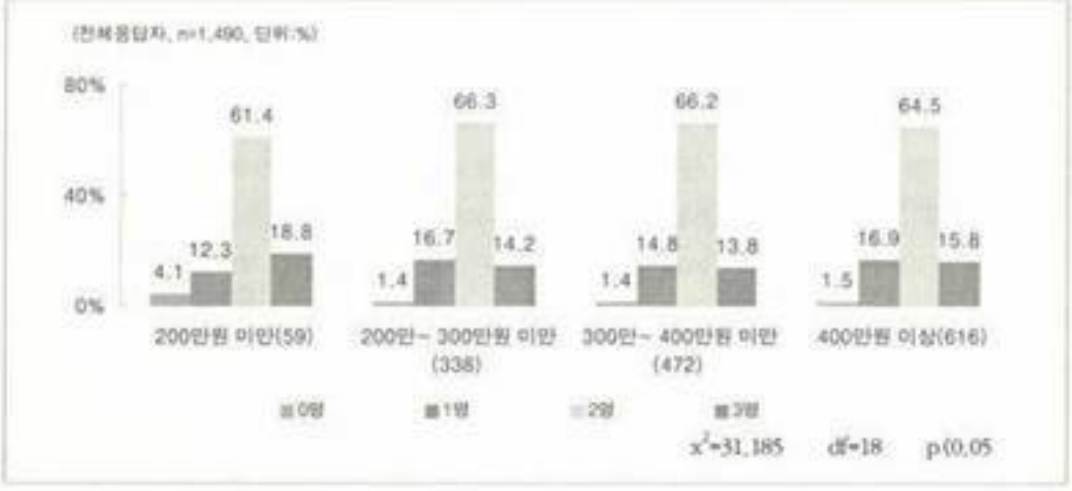
취업상태별로는 기혼취업자가 자녀 1명 희망비율이 더 높고, 3명 희망비율도 더높다. 비취업 집단에서는 자녀 2명 희망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3-76〉 서울시 기혼남녀의 취업상태별 희망하는 자녀 수



소득수준별로는 200-300만원 미만과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자녀 1명 희망비율이 높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과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자녀 3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무자녀 희망비율도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2자녀 희망비율이 65% 내외로 가장 높다.

〈그림 3-77〉 서울시 기혼남녀의 월소득별 희망하는 자녀 수



(1)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현재 자녀수는 2명이 57.2%로 가장 많고, 1명이 26.0%, 0명이 10.2%, 3명이 6.2%의 순서로 나타난다. 즉, 현재 기혼응답자의 자녀수는 2명, 1명, 0명, 3명 순이다. 이는 희망자녀수가 2명, 1명, 3명, 0명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 희망자녀로는 3자녀를 무자녀보다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자녀를 갖기가 힘들어서 무자녀가 3자녀를 가진 응답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녀수는 성, 연령, 취업여부,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월소득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자녀가 2명과 3명인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자녀가 1명인 비율은 남성 응답자에게서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5~29세 연령층의 절반 정도(48.1%)가 무자녀이며, 30~34세 연령층의 19.2%가 무자녀이다. 25~34세 연령층에서 한자녀 비율은 36~37%이며, 35~39세 연령층에서는 한자녀 비율이 28.8%이다.

| 표 3-17 | 응답자 특성별 현재 자녀 수

(단위 : 명, %)

		빈도 (명)	평균 자녀수(명)	0명	1명	2명	3명	4명
전 체		(1490)	1.60	10.2	26.0	57.2	6.2	0.3
성	여성	(830)	1.65	8.6	25.8	57.9	7.5	0.2
	남성	(660)	1.55	12.3	26.4	56.3	4.6	0.5
						x^2=10.34	df=4	p(0.05
연령	25~29세	(92)	0.70	48.1	36.4	13.2	2.4	0.0
	30~34세	(341)	1.29	19.2	37.5	39.0	3.9	0.4
	35~39세	(547)	1.67	5.5	28.8	59.4	6.3	0.0
	40~44세	(509)	1.91	2.5	13.5	74.9	8.4	0.7
						x^2=343.50	df=12	p(0.001
취업 상태	취업	(979)	1.56	11.6	27.0	55.4	5.5	0.5
	비취업/미취업	(511)	1.68	7.6	24.2	60.5	7.6	0.0
						x^2=12.66	df=4	p(0.05
성 & 취업 상태	취업 여성	(357)	1.58	11.2	27.4	53.8	7.0	0.5
	비취업 여성	(473)	1.70	6.7	24.6	60.9	7.8	0.0
	취업 남성	(622)	1.55	11.8	26.8	56.3	4.6	0.5
	비취업 남성	(38)	1.46	19.7	19.5	55.5	5.2	0.0
						x^2=21.92	df=12	p(0.05

			평균 자녀수(명)	0명	1명	2명	3명	4명
학력	고졸 이하	(638)	1.73	6.3	24.3	59.9	9.3	0.3
	전문대	(247)	1.41	14.5	33.2	48.9	3.4	0.0
	대학교	(565)	1.54	13.1	24.6	57.7	4.1	0.5
	대학원 이상	(40)	1.63	6.4	30.2	57.2	6.1	0.0
						χ^2=47.93	df=12	p(0.001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1.51	11.4	32.2	49.9	6.5	0.0
	화이트칼라	(387)	1.41	16.5	28.8	52.3	2.2	0.2
	블루칼라	(485)	1.70	7.7	24.5	59.1	7.9	0.8
	전업 주부	(455)	1.72	6.3	24.0	61.6	8.1	0.0
	학생/실업/비취업	(56)	1.41	18.7	25.7	52.0	3.6	0.0
						χ^2=59.26	df=16	p(0.001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330)	1.69	8.8	24.8	56.0	9.3	1.0
	상용근로자	(563)	1.45	14.4	29.2	53.3	3.1	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1.82	3.8	20.9	66.9	6.6	1.8
						χ^2=38.37	df=8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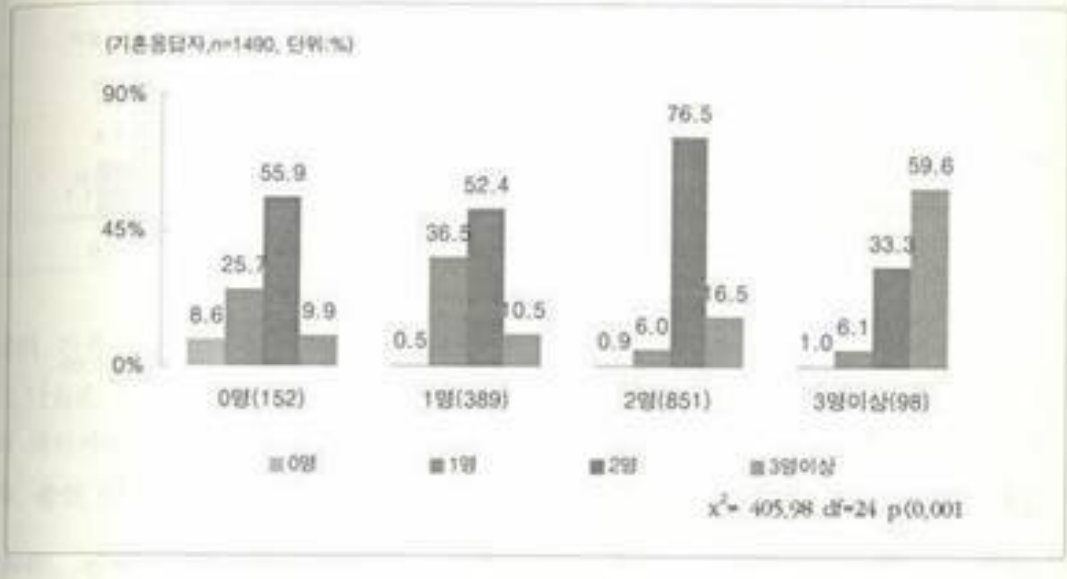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여성이 자녀수가 더 적고,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취업남성이 자녀수가 더 많다. 또한 학력수준별로는 고졸이하 저학력층(1.73명)이 가장 많고, 전문대졸(1.41명)이 가장 낮으며 대졸(1.54명)에서 대학원 이상(1.63명)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월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더 많게 나타나고,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층이 가장 많은 평균 자녀수(1.72명)에 해당하고 화이트칼라와 학생/실업자층이 자녀수가 적게 나타난다. 직업위세에 따른 일정한 자녀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자녀수가 1.45명으로 가장 적고, 임시/일용직의 자녀수가 1.82명으로 가장 많다.

최근의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출생아수의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최고학령층에서도 적은 수의 자녀에 최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출산력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이삼식 외, 2007:72),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 기혼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층에서 자녀수가 가장 많고, 전문대졸에서 자녀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를 보면,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이 2명을 희망하고 있고(55.9%), 1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25.7%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둘을 희망하는 비율은 52.4%로 나타나서 절반 정도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녀가 없거나 한명이 경우에 희망대로 출산한다면 앞으로 출산가능성이 최소 50%는 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자녀가 둘인 경우에 76.5%가 희망자녀 또한 두명이라고 응답해서 희망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사이의 일치비율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두 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두 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76.5%로 나온 것은 이해할만 하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 희망자녀수가 2명인 비율이 33.3%이고 희망자녀수도 3명인 경우는 약 60%에 달했다.

〈그림 3-78〉 현재 자녀수별 희망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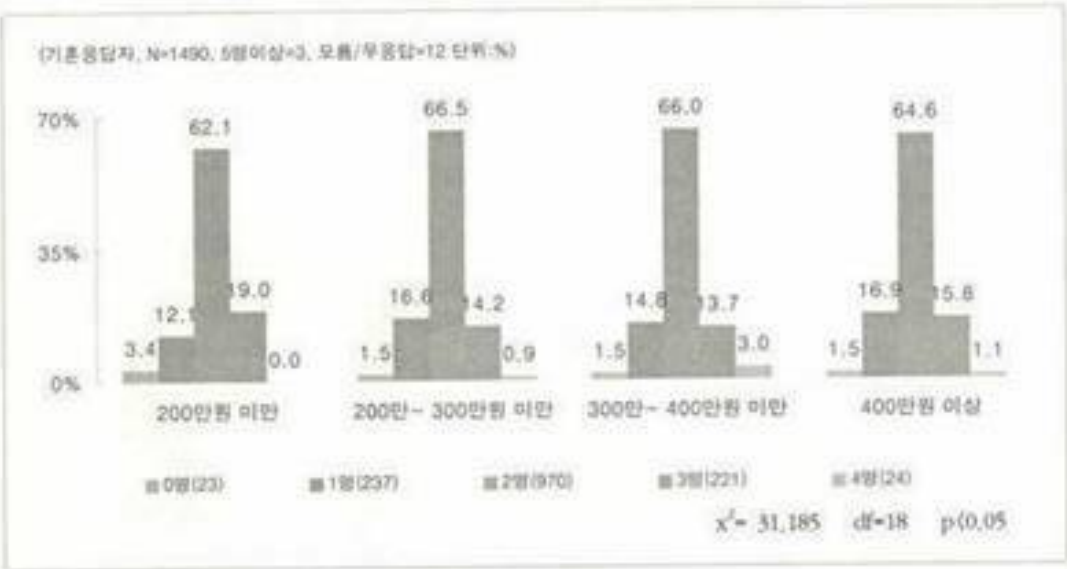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의 경우에 무자녀 희망비율 8.6%를 제외한 91.4%는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무자녀 혹은 한 자녀를 희망하는 비율 37.0%를 제외한 63.0%는 추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추가' 출산가능성은 결혼연령과 경제상황, 양육환경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현재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 출산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정책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월소득별 희망 자녀수

기혼응답자의 희망자녀수를 월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 소득층에서 65% 내외가 2명을 희망함으로써 2명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한국가족의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 비율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중간소득층에서 2자녀 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녀 희망은 200-300만원 미만 소득집단과 400만원 이상 소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3-79〉 소득집단별 희망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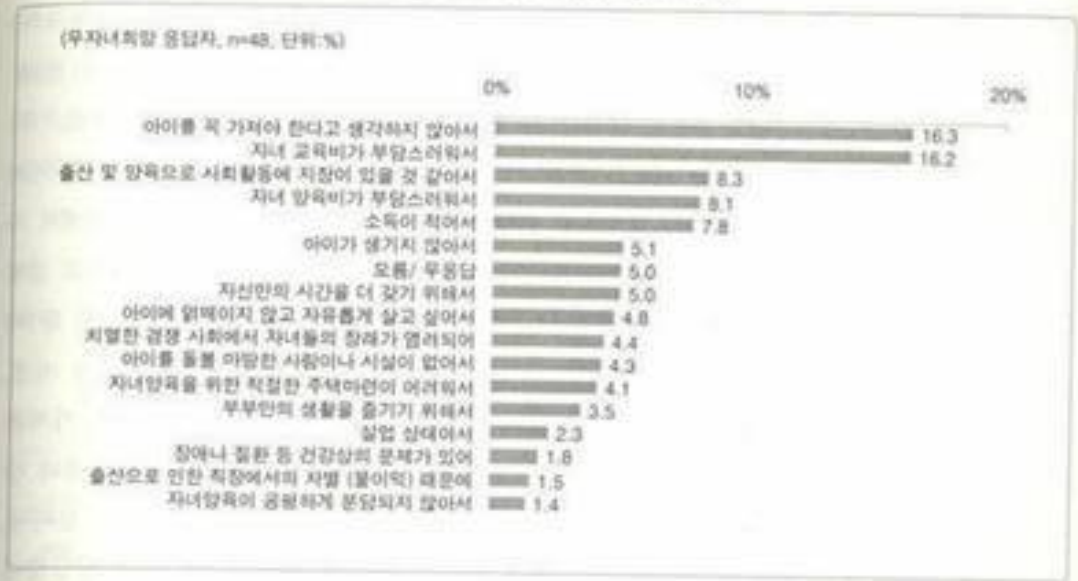


(3) 1자녀 혹은 무자녀를 희망하는 이유

전체 응답자의 1.9%에 해당하는 무자녀 희망자들이 자녀를 갖기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6.3%), '자녀 교육비 부담' (16.2%)이었다. 그 다음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 (8.3%), '자녀양육비 부담' (8.1%), '소득이 적어서' (7.8%) 등이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주택마련 어려움, 고용상태 불안, 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38.5%를 차지했고, 사회적 요인(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 지장, 보육시설 등 부족, 양육분담이 안되어서, 직장내 불이익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으며,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가 걱정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이 차지하는 비중이 34.0%에 해당했다(〈그림 3-8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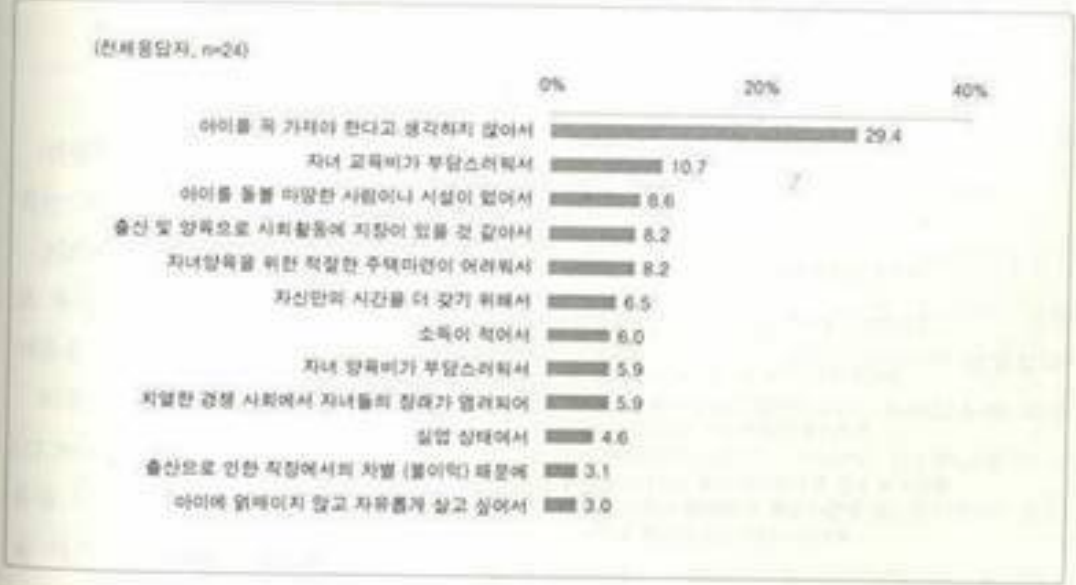
결혼 후 자녀를 원하지 않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4%에 불과하지만, 미혼여성(3.5%)이 미혼남성(1.7%)의 2배 정도에 해당한다.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29.4%)로서 1자녀 희망의 주된 이유인 경제적 요인과

〈그림 3-80〉 무자녀 희망의 이유



달리, 가족 및 결혼가치의 변화가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다음은 자녀교육비 부담(10.7%),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8.2%), 소득이 적어서(6.0%), 자녀양육비 부담(5.9%), 실업상태(4.6%) 등 경제적 요인이 35.6%를 차지한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사회적 인프라와 연관된 자녀돌봄 시설이나 사람의 부족(8.6%), 출산

〈그림 3-81〉 미혼남녀의 무자녀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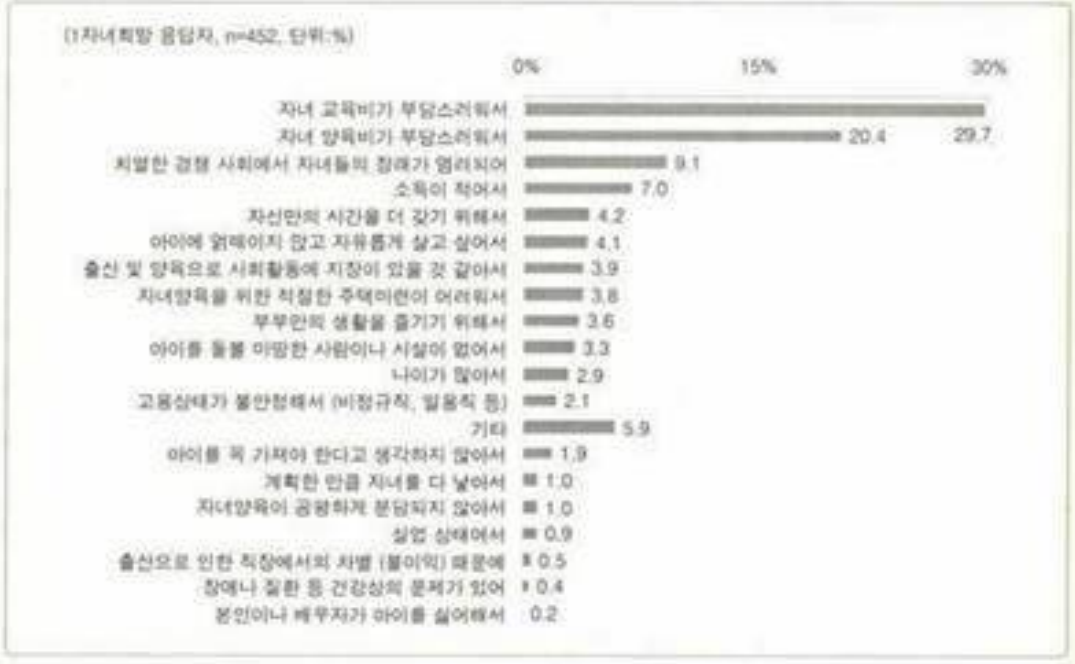


과 양육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8.2%) 등의 요인도 16.8%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 0명을 희망하는 싱글들은 경제·사회적 요인보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나타나 기존의 결혼 및 가족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자녀수를 '1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452명; 미혼 214명, 기혼 238명)은 그 이유로 '자녀교육비 부담'(29.7%)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했고, '자녀양육비 부담'(20.4%)이 뒤를 이어서 자녀교육 및 양육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되어'(9.1%), '소득이 적어(7.0%)'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주택마련 어려움, 고용상태 불안, 실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적 요인(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 지장, 보육시설 등 부족, 양육분담이 안되어서, 직장내 불이익 등)은 8.7%를 차지했으며,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가 걱정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이를 싫어해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해당했다(〈그림 3-82〉 참조).

무자녀 희망의 이유가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거의 유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면, 한자녀 희망의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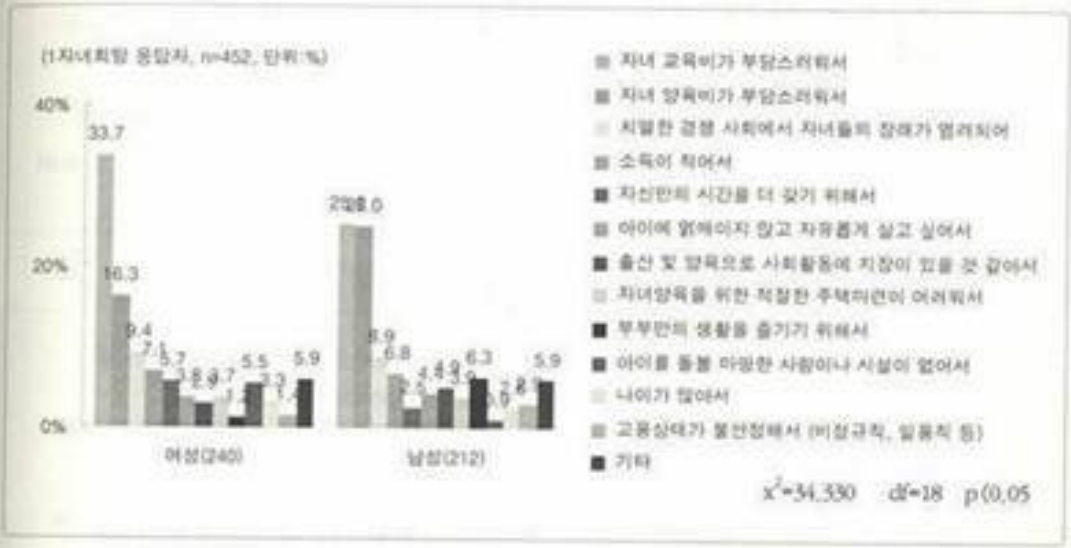
〈그림 3-82〉 1자녀 희망의 이유



갖기 원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의 가족 및 자녀가치에서 벗어난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비롯되었다면, 한자녀를 갖기 원하는 이유는 '다수의 희망인 2자녀' 를 원하지만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 희망자녀수의 기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녀 희망집단에 대해서 자녀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특히 자녀교육 및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자녀수 1명으로 응답한 여성들(240명)은 '자녀교육비 부담' (33.7%)이 가장 큰 요인이며, 자녀양육비 부담(16.3%)을 그 다음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들(212명)은 자녀교육비 부담(25.2%)과 자녀양육비 부담(25.0%)이 유사한 비율로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3-83〉 성별 한자녀 희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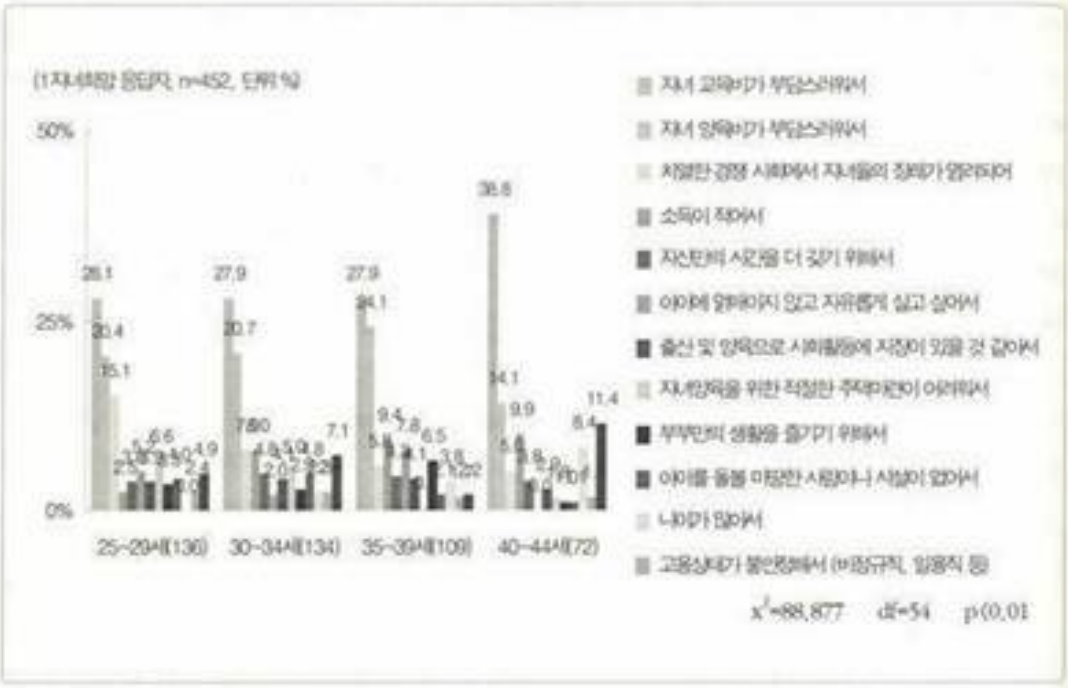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에서 '자녀교육비 부담' 요인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20대와 30대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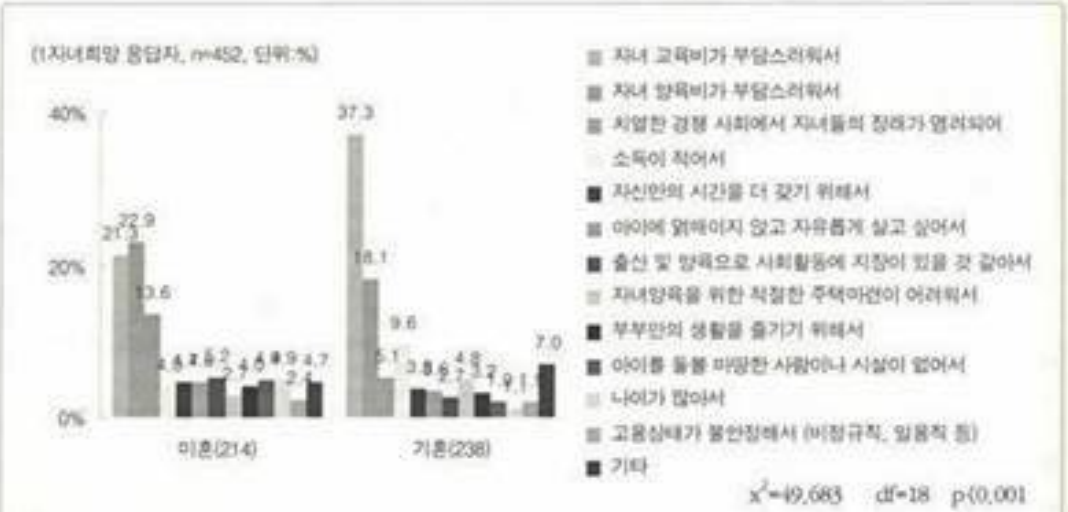
기혼은 '자녀교육비 부담' 을 가장 큰 요인으로, 미혼은 '자녀양육비 부담' 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함으로써 이들의 생애주기와 관련되어서 관심사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되어서' 라는 응답도 13.6%에 달하였다.

미혼집단중에서 한자녀를 희망하는 21.2%는 자녀 양육비 부담(22.9%), 자녀교육비 부담(21.3%)을 주된 이유라고 응답했다. '경쟁사회에서 자녀의 장래가 염려되어' (13.6%)가 그 다음을 차지해서,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경쟁사회의 심리적 부담도 자녀출산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4〉 연령별 한자녀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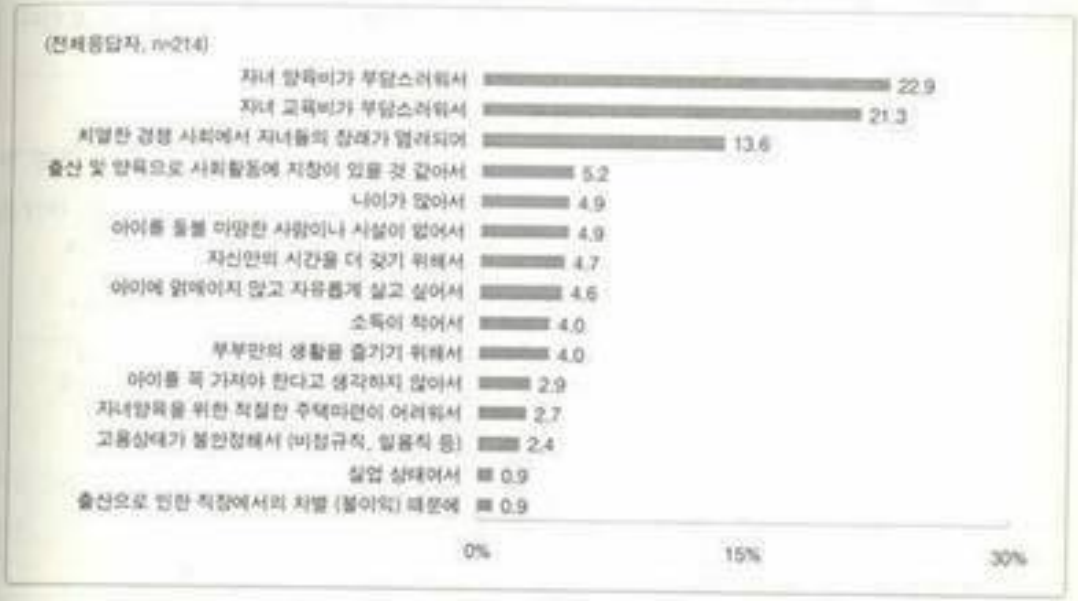
〈그림 3-85〉 혼인상태별 한자녀 희망 이유



전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소득부족, 주택마련 어려움, 고용상태 불안, 실업 등)이 54.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 지장, 보육시설 등 부족, 양육분담이 안되어서, 직장내 불이익 등)은 11.0%를 차지했으

며, 가치관 변화 등 문화적 요인(아이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 장래가 걱정되어,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이를 싫어해서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 해당했다. 경제적 요인이 절반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남녀에게도 경제적 요인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6〉 미혼남녀의 한자녀 희망 이유



한자녀를 희망하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지만,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에서 한자녀 희망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한자녀 희망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서 저출산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젊은 층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한자녀 희망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자녀출산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

한자녀 희망하는 미혼남녀 가운데 대졸집단이 48.1%를 차지하고,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한다. 2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학생/실업집단 등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의식별로는 중간층의 계층의식을 가진 미혼남녀가 한자녀 희망집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첫아이 출산 조건

미혼응답자(1,010명)는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첫아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28.4%)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27.3%)이고, '집을 만한 후에'(6.9%)까지 포함하면 62.6%가 경제적 요인이 충족되면 첫아이를 가지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배우자와 충분한 생활을 누린 후'(18.6%)에 첫아이를 갖겠다는 응답도 5명중 1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무자녀 맞벌이나 홑벌이가 결혼초기에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7〉 미혼들의 첫아이 출산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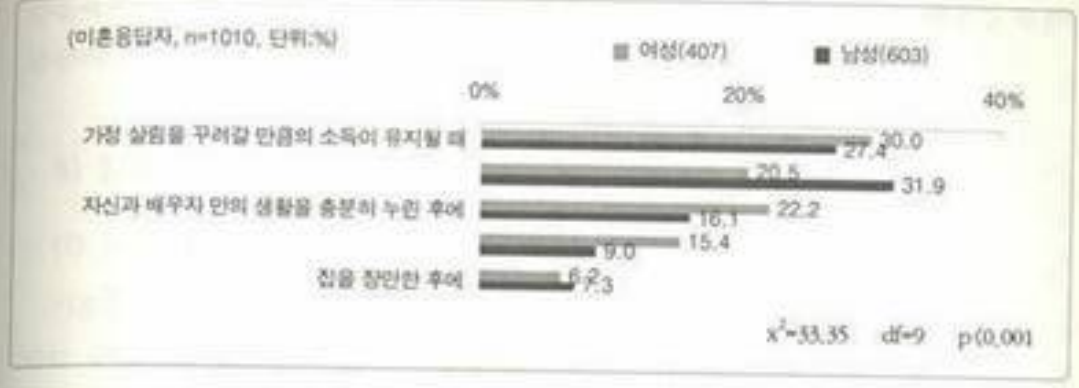


이러한 첫아이 출산의 조건에 대한 태도는 미혼들의 성, 연령, 취업상태, 고용형태 및 계층의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미혼여성은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가 3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배우자와 충분한 생활을 누린 후에'(22.2%),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20.5%)로 나타나지만, 미혼남성의 경우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성은 취업과 직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미혼여성은 가정생활을 유지할 만한 소득유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은 남성보다 덜 중시된다. 대신 미혼여성은 첫아이 출산의 조건으로 '나이 들기 전에'(15.4%)라는 생물학적 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부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에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태도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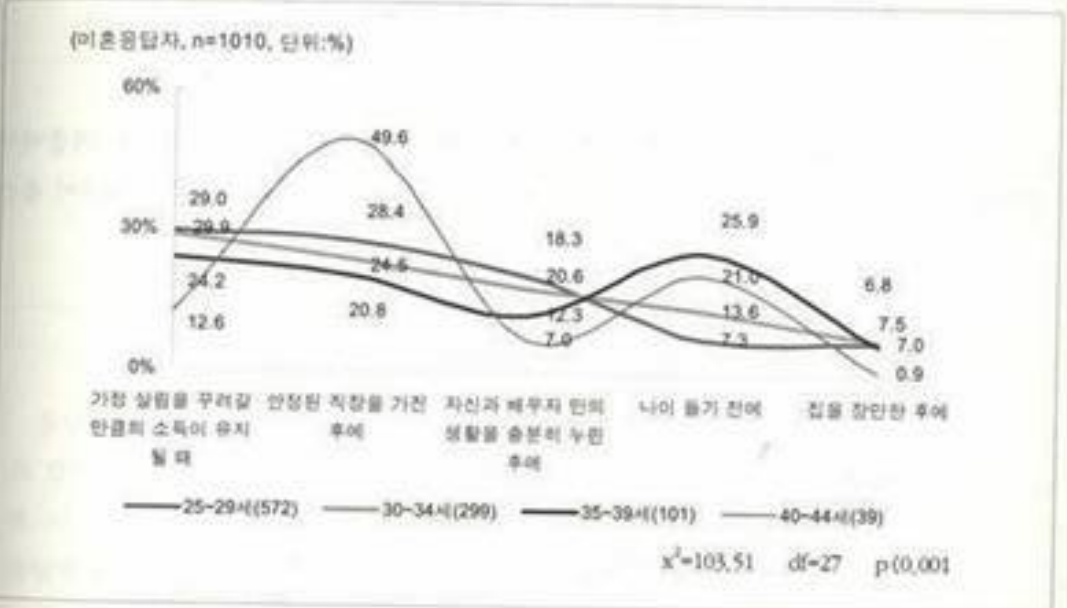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직장의 안정성과 소득안정 및 부부생활을 누린 후의 조건 비율

〈그림 3-88〉 미혼들의 성별 첫아이 출산의 조건



이 높은 반면, 고연령층의 경우 나이라는 생물학적 고려가 중시되고 40대에서는 안정된 직장 요인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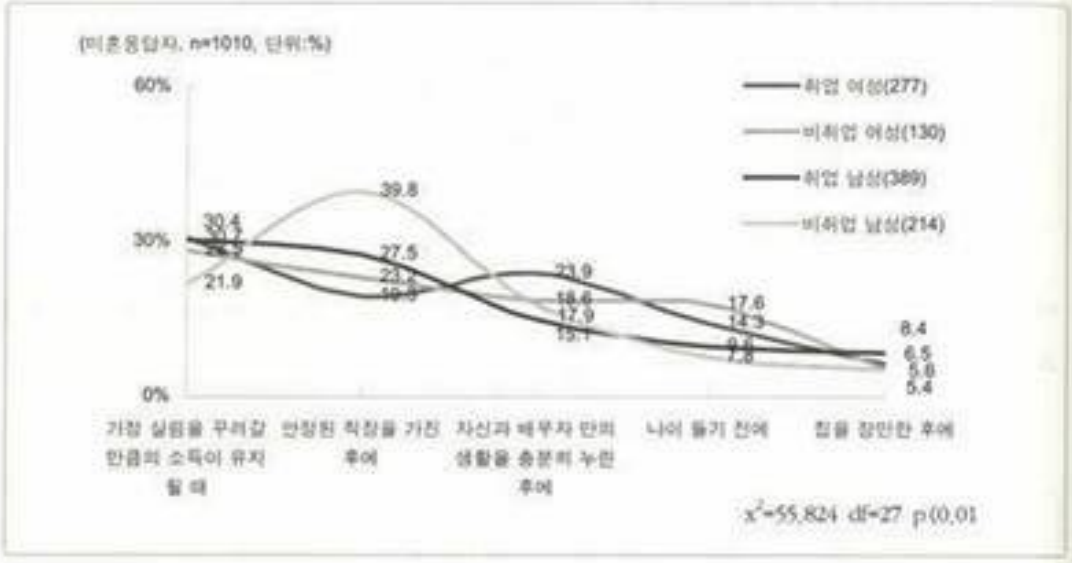
〈그림 3-89〉 미혼들의 연령별 첫아이 출산의 조건



취업여성과 취업남성의 첫아이 출산조건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미혼 직장여성은 부부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에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미혼직장남성에 비해 직장 안정성 요인은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취업남녀 모두 가정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됨으로써, 출산의 경제적 조건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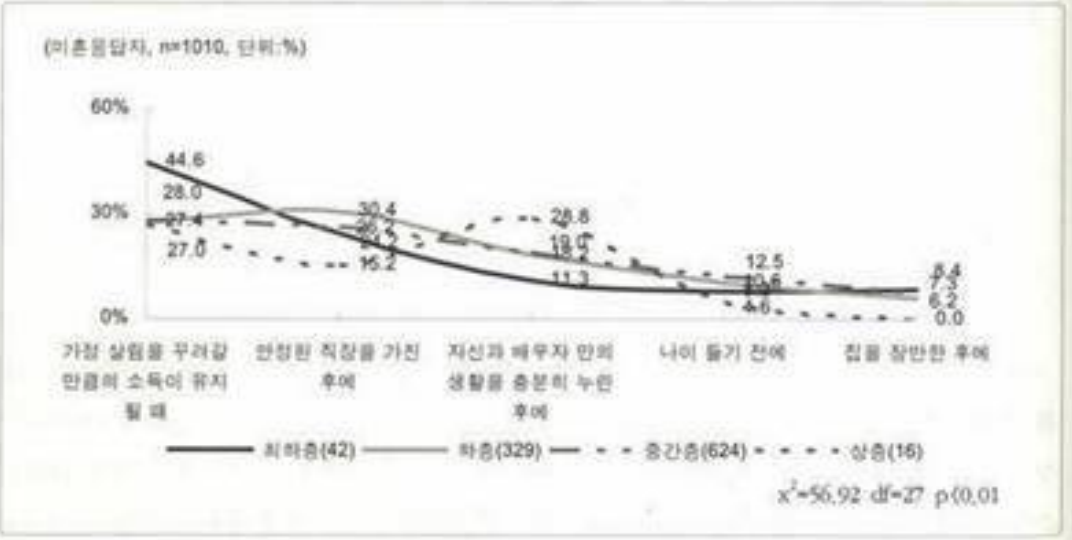
있다. 이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가계소득과 안정된 직장 같은 경제적 요인이 '첫아이 출산'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90〉 미혼들의 성별 취업여부에 따른 첫아이 출산의 조건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첫아이를 출산하겠다는 의사는 전 계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최하층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간층과 하층은 첫아이 출산

〈그림 3-91〉 미혼들의 계층의식별 첫아이 출산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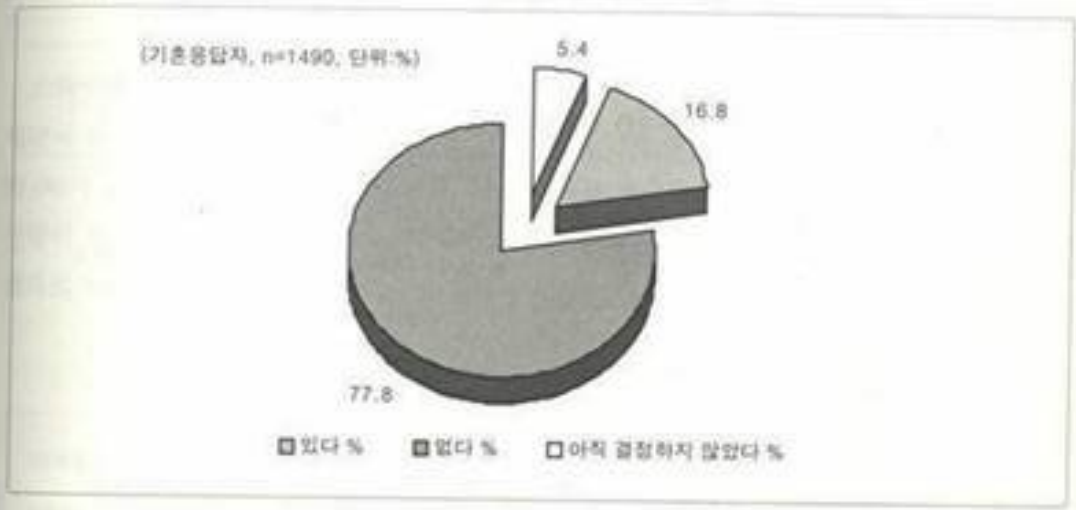
조건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보이지만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은 하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층에서는 다른 계층과 달리, 부부중심생활을 누린 후에 자녀를 갖겠다는 비율이 소득요인만큼이나 중요하게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

5) 향후 (추가) 출산 계획

(1) 기혼 특성별 출산계획

기혼응답자(1,490명)의 77.8%는 자녀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자녀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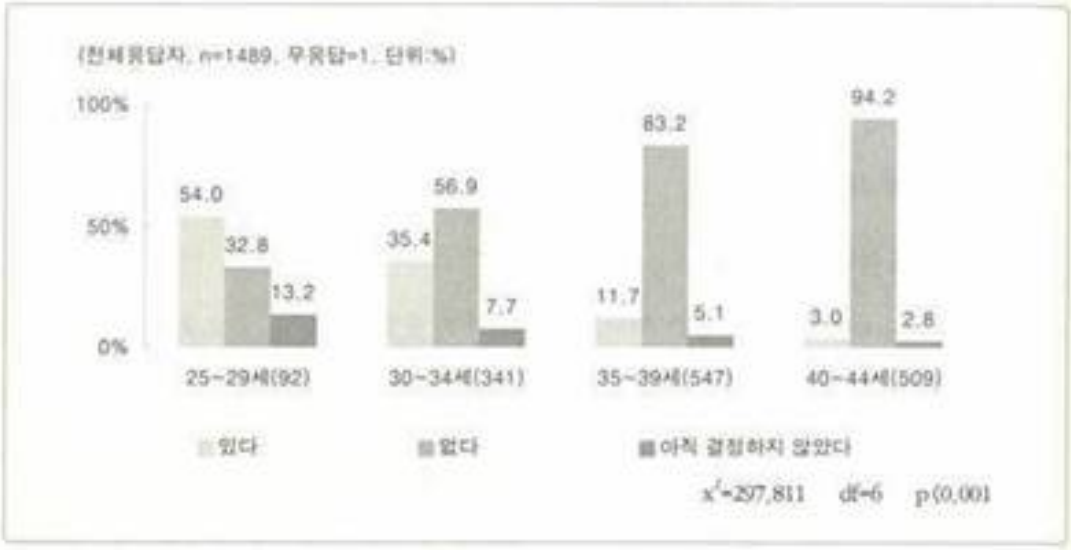
〈그림 3-92) (추가)자녀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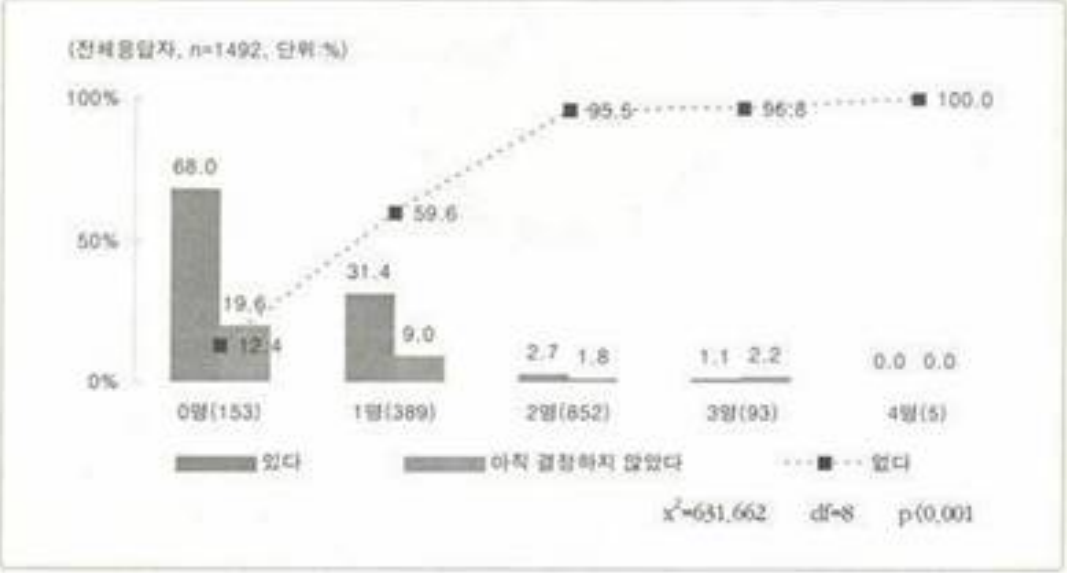
응답자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추가 출산계획에는 연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대 기혼응답자의 과반수인 54.0%는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30대 초반은 35.4%에 그쳤다. 하지만 35대 후반은 83.2%, 40대 초반은 94.2%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추가 출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수별로 추가출산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자녀수가 0명인 무자녀 기혼의 경우에 68%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1자녀를 둔 경우에는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가 31.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향후 (추가)자녀출산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녀가 없는 무자녀의 경우에도 향후 자녀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1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3〉 기혼의 연령별 (추가) 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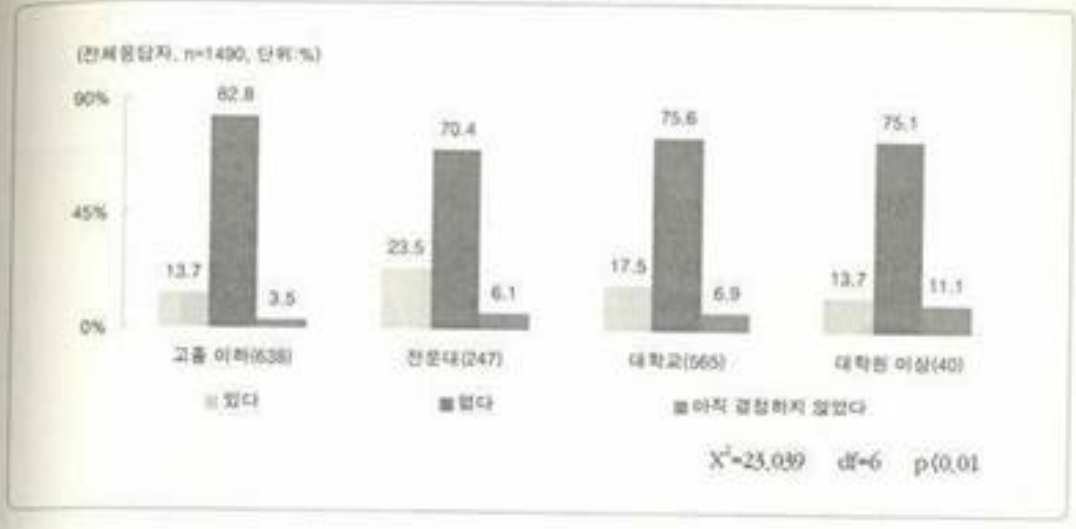


〈그림 3-94〉 현재자녀수별 (추가)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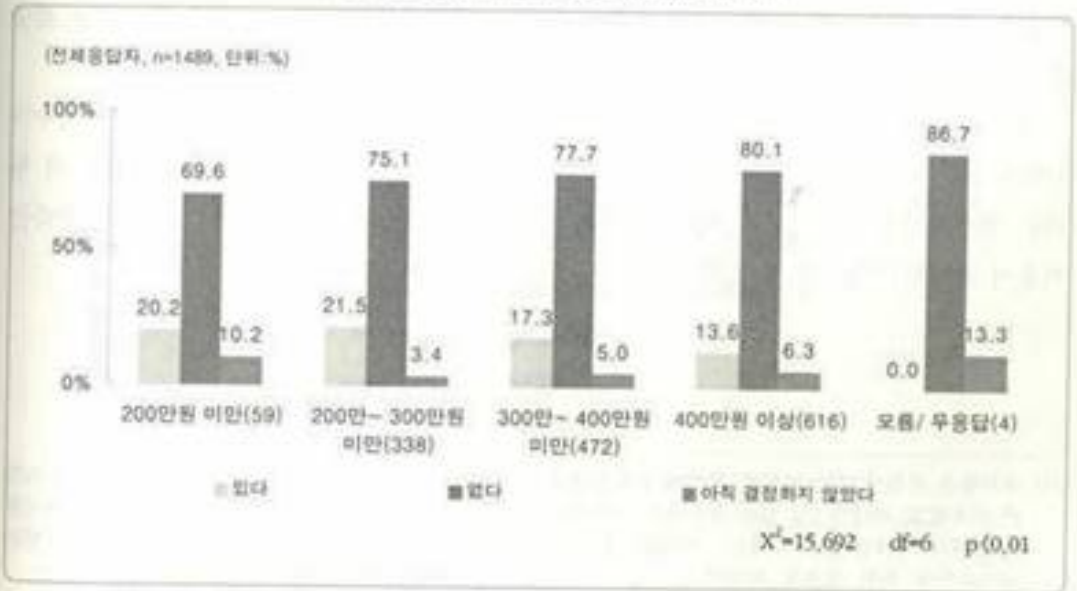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관성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서 추가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82.8%), 그다음은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로서 75% 정도를 차지한다. 전문대와 대졸자가 추가출산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3-95〉 학력별 (추가)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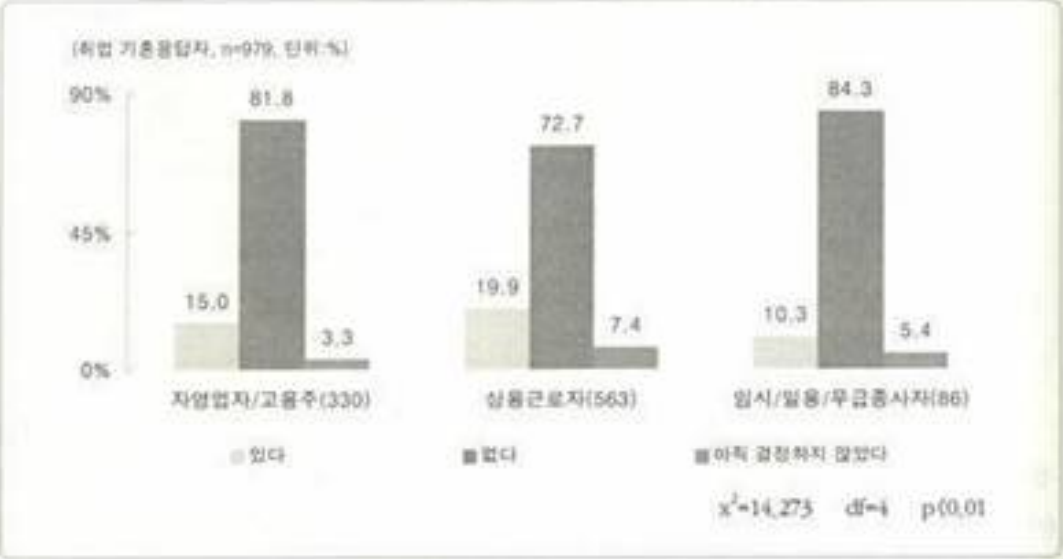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 이상 집단의 80.1%,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77.7%, 200만원~300만원 미만의 75.1%, 200만원의 69.6%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과 소득수준이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위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 출산계획은 축소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림 3-96〉 월소득수준별 (추가)출산계획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추가출산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19.9%), 자영업자/고용주(81.8%), 임시/일용직(84.3%)은 80% 이상이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97〉 고용상태별 (추가)출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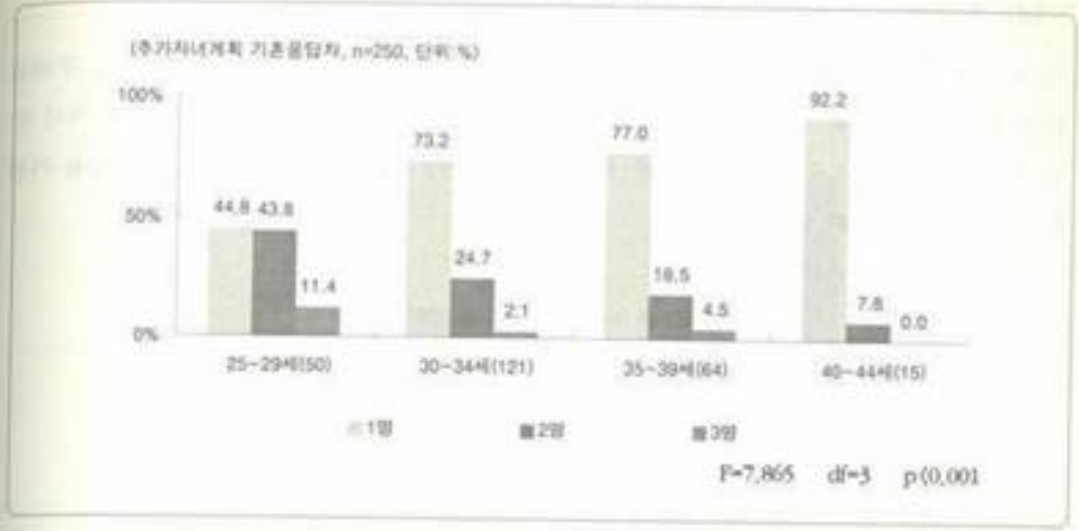
(2) (추가)출산 희망자녀수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에 약 70%정도는 1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2명을 희망하는 비율은 25.8%이며, 3명을 희망하는 경우는 4.5%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추가)출산을 희망하는 자녀수는 1.34명으로 나타났다.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 기혼응답자(250명) 가운데, 20대 후반은 앞으로 출산 희망자녀수가 1명(44.8%), 2명(43.8%)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30대 초반에서는 1명(73.2%)을 더 원하는 경우가 2명(24.7%)보다 훨씬 많았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추가 자녀 1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11)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에, 무자녀 기혼집단은 '결혼 후 출산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50.5%)가 가장 큰 이유였고,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64.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21.7%)로 나타나 자녀 2명의 경우 추가출산의향은 남아출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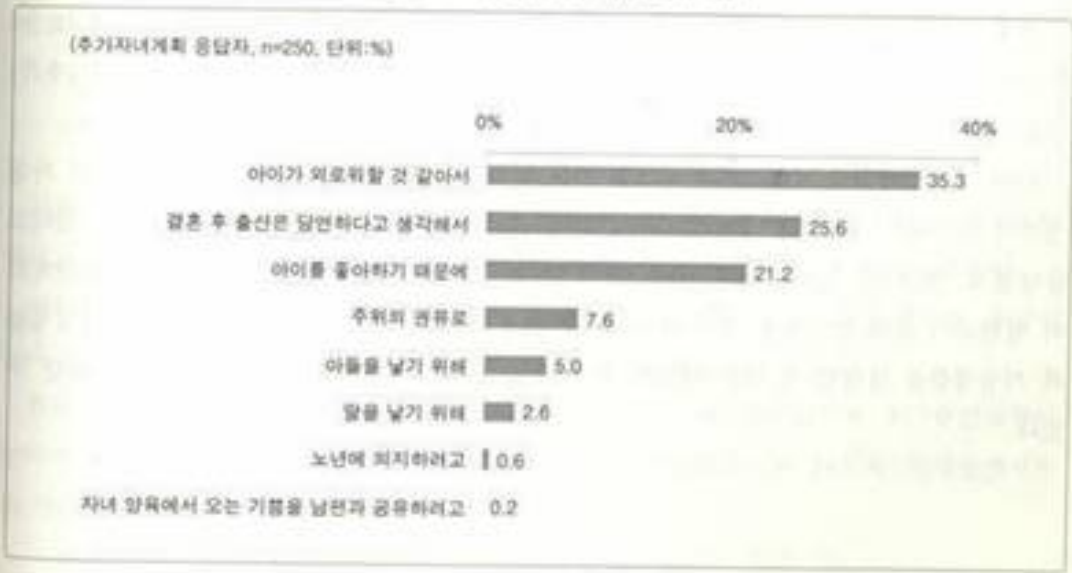
〈그림 3-98〉 연령별 (추가)출산 희망자녀수



(3) 추가출산의 이유

(추가)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아이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35.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결혼 후 출산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가 그 다음인 25.6%를 차지했으며, '아이를 좋아해서' 가 21.2%를 차지했다. 그 외에 주위의 권유로(7.6%), 아들을 낳기 위해(5.0%), 딸을 낳기 위해(2.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99〉 향후 (추가)출산의 이유



(4) 추가출산의 조건

(추가)출산의 조건으로 나이(32.1%) 같은 생물학적 조건을 제외하면,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23.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에 '자녀가 좀 커서 손이 덜 갈 때' (9.8%), '집을 장만한 후에' (9.0%), '배우자가 원할 때' (8.0%),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7.5%)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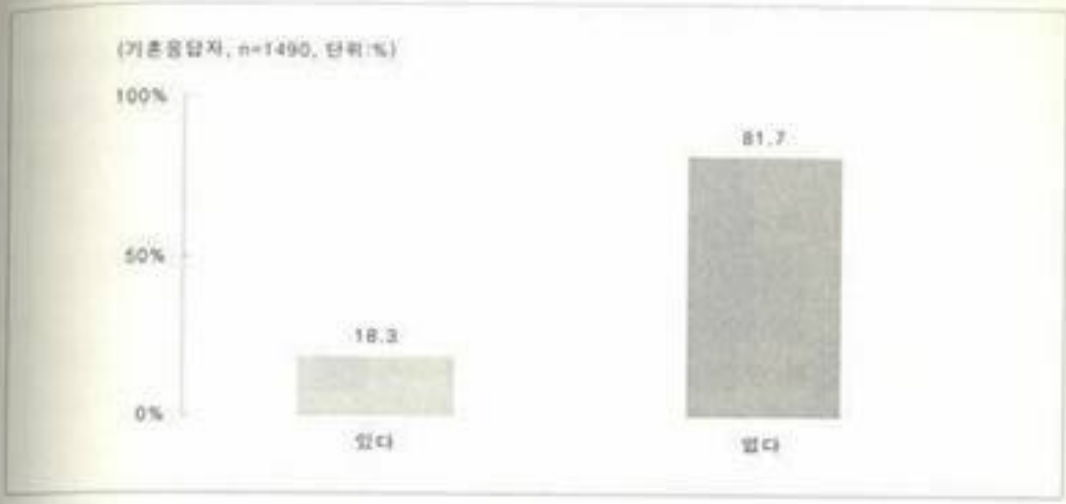
〈그림 3-100〉 (추가)출산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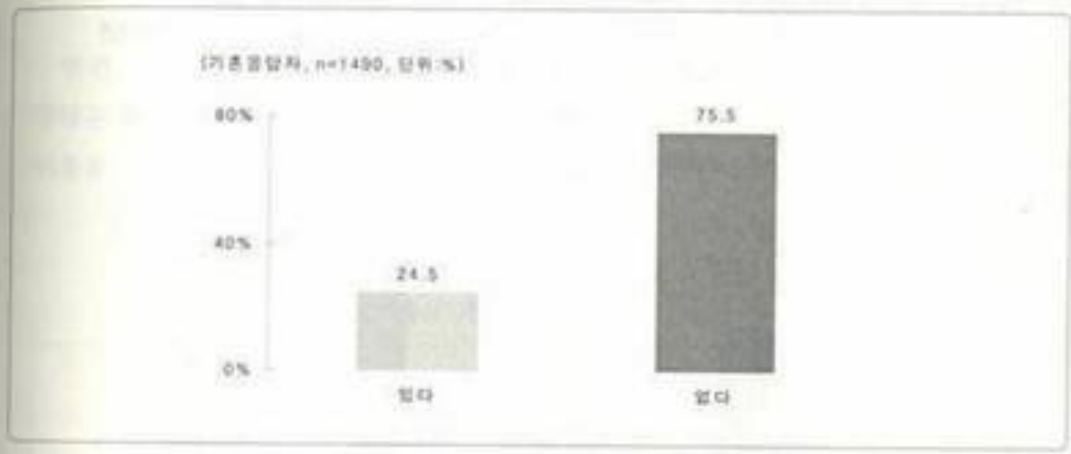
배우자와 양육분담이 동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추가)출산의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8.3%는 있다고 응답했지만 81.7%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양육분담의 조건이 없을 때의 (추가)출산의향(16.8%)(〈그림 3-92〉 참조)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준에 그친다.

한편,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상승한 24.5%의 응답자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75.5%는 없다고 응답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의 희망자녀 수만큼의 출산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 내의 양육분담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1〉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 출산의향



〈그림 3-102〉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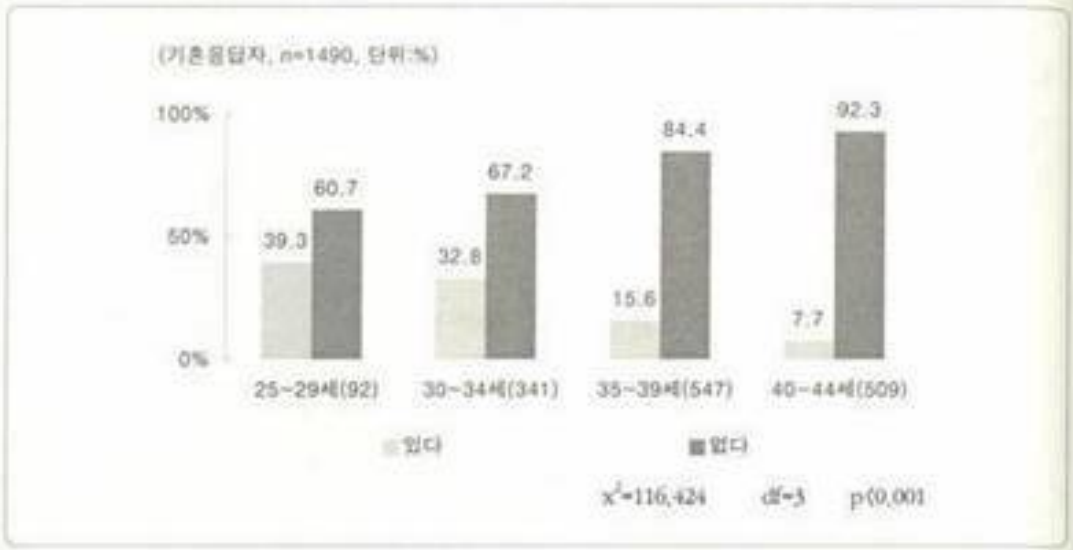


가정내 양육분담 환경조성과 사회의 일가족양립환경 조성은 추가출산의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혼집단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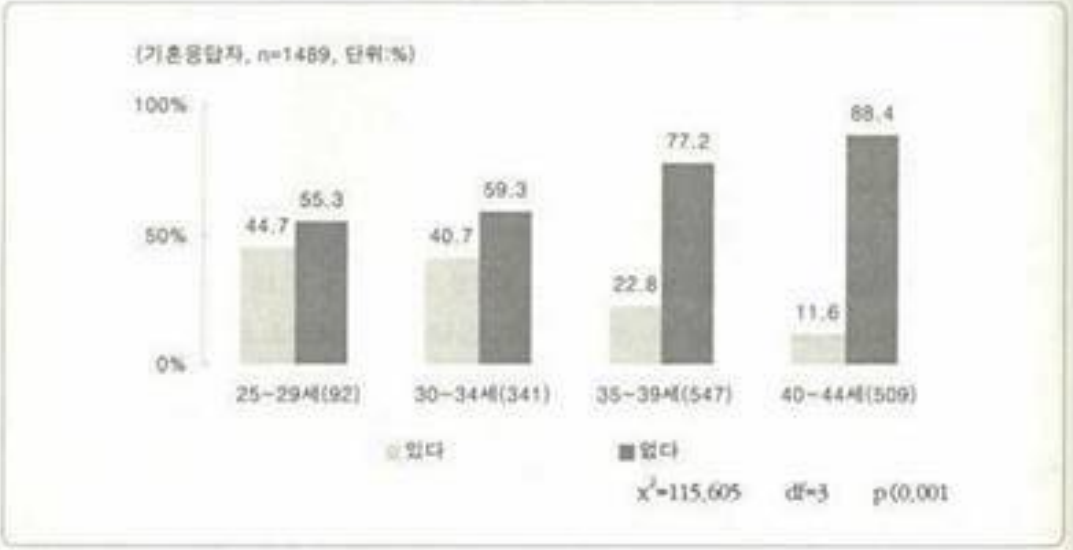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배우자와 양육분담이 이루어지면 출산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아 25~29세의 약 40% 정도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가족양립의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마찬가지로 저연령층일수록 추가출산의향이 높아지는데, 25~29세의 44.7%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0~34세의 연령층에서도 40.7%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3-103〉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출산의향*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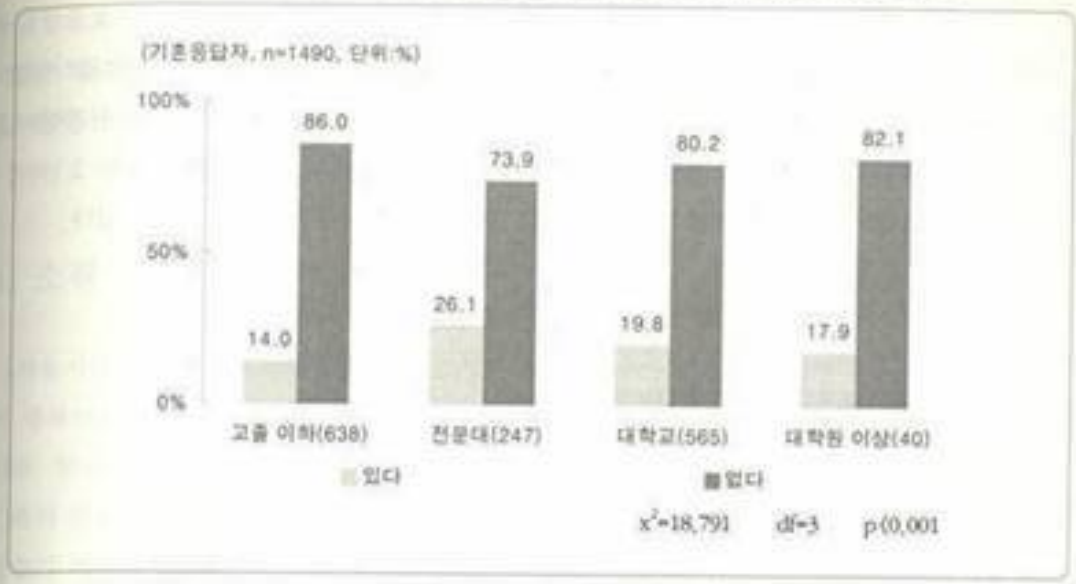


〈그림 3-104〉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 의향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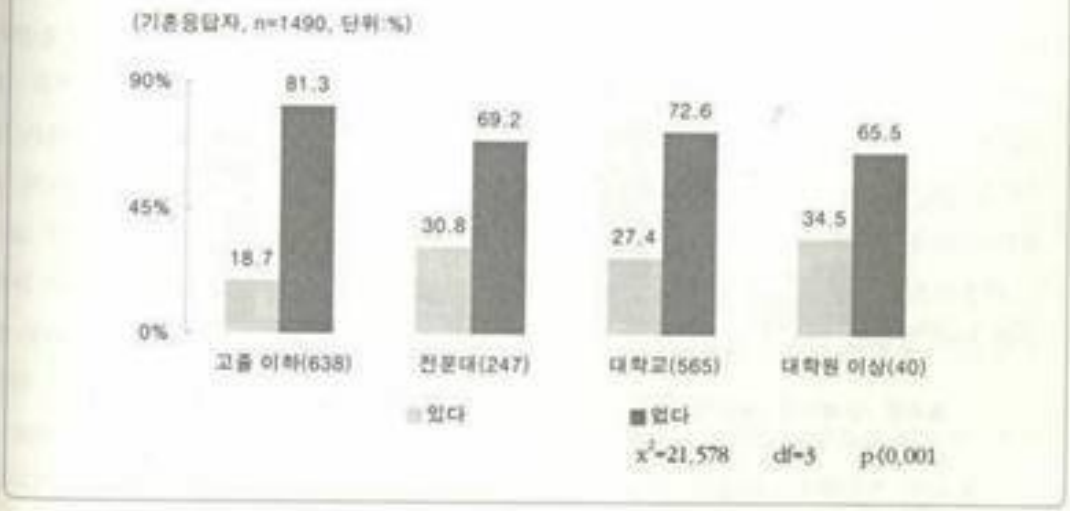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배우자와 양육분담이 이루어질 때, 추가출산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전문대졸(26.1%)이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14.0%)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3-105〉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추가)출산의향*학력별



한편,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대학원 이상(34.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30.8%)와 대졸(27.4%)도 유사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고졸이하(18.7%)에서는 출산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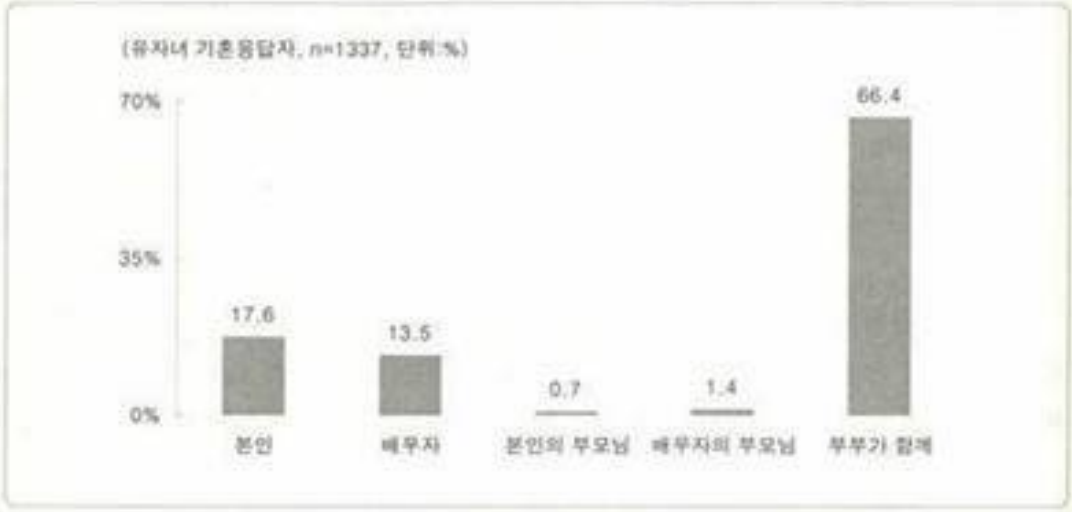
〈그림 3-106〉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된다면 (추가)자녀출산의향*학력별



6)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유자녀 응답자(1,337명)중 가장 많은 66.4%가 자녀출산을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고 답했고, 여성은 21.1%가 본인이, 9.7%는 배우자가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12.9%가 본인이, 18.4%는 배우자가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이 결과로 볼 때 출산결정은 대체로 부부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07〉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그림 3-108〉 성별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뿐만 아니라 여성응답자의 9.7%는 배우자가, 남성 응답자의 12.9%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응답함으로써, 10% 내외는 아내가 아닌 남편이 출산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관련정책을 여성만을 타깃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부단위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및 정책함의

서울시민의 가족관과 자녀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은 중요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가장 큰 의지가 되며, 다른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는 생각을 다수가 지니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 시에도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많은 응답자들은 가족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며, 자녀가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며,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상당수가 지니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기혼과 미혼을 막론하고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및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지만,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부모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부모가 됨으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많으며, 결혼으로 인해 커리어 설계에 방해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병행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고민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혼남성의 경우도 결혼비용과 고용 상태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자녀 출산 후에 발생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자녀출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 출산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만큼 실제로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해서 서울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비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젊은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짐을 지우고 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빚을 지지 않고 결혼당사자들이 자립적으로 결혼식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를 버림으로써, 간소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진정한 축하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결혼문화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결혼문화 모델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간소한 결혼식이 더 아름답고 당당한 자리라는 데에 대한 인식을 갖이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 교육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버리고 왜, 무엇 때문에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함께,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교안을 마련해서 대학생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풍토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를 낳기도 전에 경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기게 할 것인지를 우려하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액세서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는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가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하고 결에서 아이가 잘 하는 것을 더욱 잘 하게 만들고 또 아이가 원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보조자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부모는 아이들의 적성이나 개성에 관계없이 사회가 매긴 등급에 따라 성공하는 자녀로 크기를 바라며, 자신이 세운 목표에 근접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경쟁적 사회 풍토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다시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자녀에게 과다하게 기대를 걸고 교육열을 발현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경우들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하게 된다. 즉, 아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고정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기혼자들은 남편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충분히 벌어

오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한편, 아내는 자녀의 양육과 돌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부부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떠나서 부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육아로 고정시켜 온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참여로 자녀 육아와 교육의 역할을 전적으로 여성이 책임지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체계를 양성평등한 태도로 전환함으로써 어느 한쪽에게 과다하게 짐 지워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병행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Ⅳ

서울시 2544남녀의 일·가족양립 현실

IV 서울시 2544남녀의 일·가족양립 현실

이 장에서는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현실과 의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첫째, 응답자들이 자신의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또한 일·가족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둘째, 자녀 출산을 둘러싸고 응답자들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셋째, 일상에서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성별 가사 및 양육분담 실태에도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다.

1.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현실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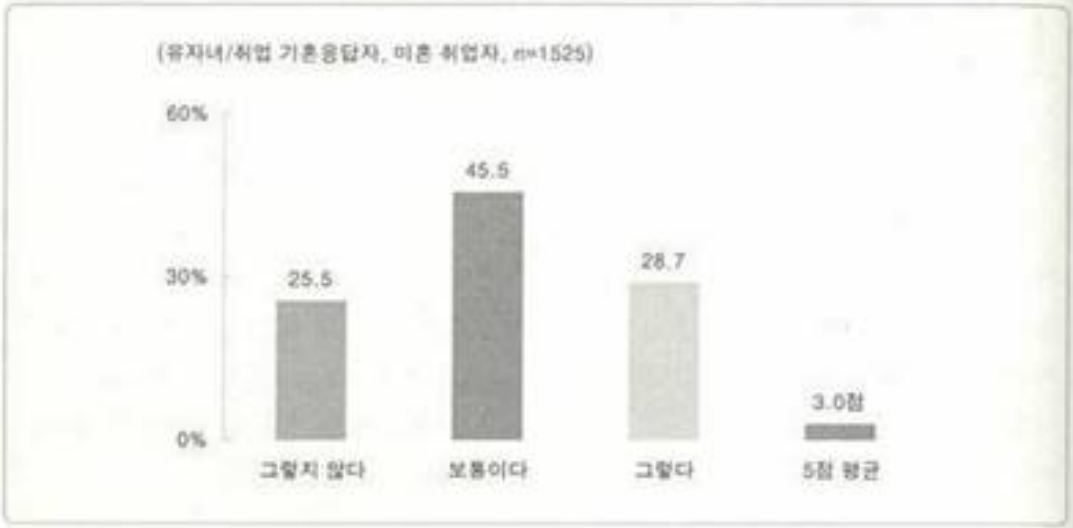
1) 일과 출산·양육 병행의 어려움

(1)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에 대한 평가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 하는 5점 척도 질문에 대해 출산 및 육아기간 중 취업자 및 미혼 취업자(총 1,525명)의 절반정도(45.5%)는 '보통' 이라고 응답했고, '그렇다' 고 긍정하는 비율은 28.7%를 차지했다.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5.9%였으며,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 여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3.03점으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표 4-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가족 병행에 대한 평가는 연령, 혼인상태, 성과 취업상태,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양립의 실현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연령층에서 높고(평균점수 3.18점), 결혼과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가 집중되어 있는 30대 연령층에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평균점수 2.97점). 혼인상태별로는 기혼(평균점수 2.96점)보다는 미혼(평균점수 3.12점)이 일·가족 병행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취업남성(평균점수 3.05점)의 경우 비취업남성(평균점수 2.53점)보다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그림 4-1〉 일가족 양립에 대한 평가



| 표 4-1 |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빈도(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1,525	2.3	23.2	45.5	26.6	2.1	25.5	28.7	3.03
연령	25~29세	377	1.5	17.9	44.6	32.4	3.1	19.4	35.6	3.18
	30~34세	366	3.1	28.7	38.8	25.9	3.2	31.8	29.2	2.97
	35~39세	428	2.7	23.1	49.7	23.5	0.8	25.7	24.3	2.97
	40~44세	354	1.9	23.2	48.1	24.9	1.4	25.0	26.3	3.01
							F=5.58	df=1519		p(0.001
혼인 상태	미 혼	665	1.7	22.2	42.0	30.3	3.4	23.8	33.7	3.12
	기 혼	859	2.8	24.0	48.1	23.8	1.1	26.8	24.9	2.96
							t=3.58	df=1376		p(0.001
성& 취업 상태	취업 여성	509	2.1	23.8	45.2	26.7	1.8	25.9	28.5	3.02
	비취업 여성	180	2.5	20.3	51.2	24.4	1.2	22.7	25.7	3.02
	취업 남성	811	2.3	22.6	44.9	27.4	2.6	24.9	30.0	3.05
	비취업 남성	25	5.6	50.7	28.5	15.2	0.0	56.3	15.2	2.53
							F=3.36	df=1519		p(0.05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318	3.7	24.9	45.5	25.4	0.5	28.6	25.9	2.94
	상용근로자	892	1.3	22.5	44.5	28.4	2.8	23.8	31.2	3.09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10	5.4	22.0	47.6	22.1	3.0	27.4	25.0	2.95
							F=4.55	df=1314		p(0.05

(2) 일·가족 양립 여부와 희망자녀수의 관계

일가족양립 여부는 자녀출산의 계획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에, 일가족양립 여부에 따라 희망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여건이 된다면 희망자녀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위 질문에 응답한 기혼 취업자(859명)의 일가족양립 평가에 따른 희망자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희망자녀수가 적을수록 일가족양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희망자녀수가 0명인 경우 모두 빈도수는 적지만 일가족양립이 전혀 혹은 대체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희망자녀수가 1명인 경우에는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는 응답(21.4%)보다 안 되고 있다는 응답(30.2%)이 높았다. 희망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는 일가족 양립이 되고 있다는 응답(25.8%)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23.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희망자녀수가 0~2명까지 사이에서는 일가족양립이 조화롭게 병행된다고 응답한 경우에 희망자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희망자녀수가 3명(35.2%), 4명(37.6%)으로 증가할수록 일·가족 양립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빠졌다. 희망자녀수가 3명인 경우에는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는 응답(25.0%)보다 안 되고 있다는 응답(35.2%)이 높게 나타났고, 희망자녀수가 4명인 경우에도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는 응답(25.1%)보다 안 되고 있다는 응답(37.6%)이 높게 나타났다. 일가족양립 여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희망자녀수의 관계는 희망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 일가족 양립이 대체로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4-2 | 희망자녀수에 따른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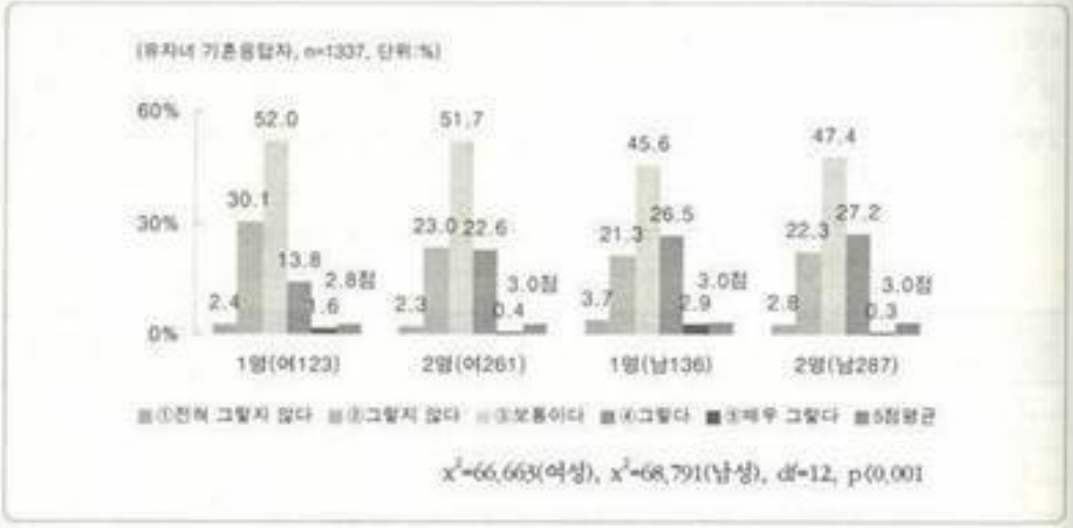
(단위 : %)

희망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유의수준
빈 도(명)	5	126	574	136	16	3	
전 혀 그렇지 않 다	40.0	3.2	1.9	5.1	6.3	0.0	
그 렇 지 않 다	60.0	27.0	21.4	30.1	31.3	0.0	χ^2=66.0
보 통 이 다	0.0	48.4	50.9	39.7	37.5	33.3	df=20
그 렇 다	0.0	19.8	24.9	23.5	18.8	66.7	p<0.001
매 우 그 렇 다	0.0	1.6	0.9	1.5	6.3	0.0	

희망자녀수와 달리, 현재 자녀수와 일가족 양립 여부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좀더 직접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에 일가족 양립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비교해보면, 기혼남녀간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4-2〉 참조). 우선, 기혼남성은 자녀수가 2명일 경우(27.5%)보다 1명일 경우(29.4%)에 '일·가족 양립이 조화롭다' 고 생각하

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나 그 차이는 미미했다. 즉, 기혼남성은 자녀가 1명일 경우에 일가족 양립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약간 높지만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다. 하지만 기혼여성은 자녀가 1명일 때(15.4%)보다 2명일 때(23.0%) 일·가족양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즉, 자녀가 많을 때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취업중인 기혼여성들은 자녀가 1명일 때 오히려 일·가족 양립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인데, 이는 자녀가 하나일 때는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관심이 더 투여될 수 있어서 여성들에게 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고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기혼여성의 기대치가 저하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지원 자원이 좀더 많은 기혼 취업여성들이 자녀를 2명 출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기혼남녀간 현재 자녀수에 따른 일가족양립 평가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취업중인 기혼여성은 특히 자녀가 1명일 때 일가족양립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혼남성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일가족양립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4-2〉 자녀수에 따른 성별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



기혼은 일가족양립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평균 3.03점보다 낮은 2.96점으로 기혼들의 일가족 양립 현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혼집단의 일가족양립 현실은 현재 자녀수뿐 아니라 부부의 경제활동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기혼집단의 맞벌이와 홑벌이의 비율 그리고 자녀수는 사회적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혼응답자중 현재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성생계부양의 가구형태(33.3%)와 맞벌이 형태의 비율(61.4%)이 3.3 대 6으로 맞벌이가 약 2배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일 경우에 이 비율은 역전되어 남성 홑벌이 대 맞벌이의 비율이 6 : 3.6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맞벌이 구조가 지배적이지만, 자녀가 한명이라도 생기면 여성은 자녀를 보살피고 남성 혼자 가계비를 조달하는 남성생계부양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순간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전환하는 기혼부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남성 홑벌이 가구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와 두 명일 경우에 남성 홑벌이 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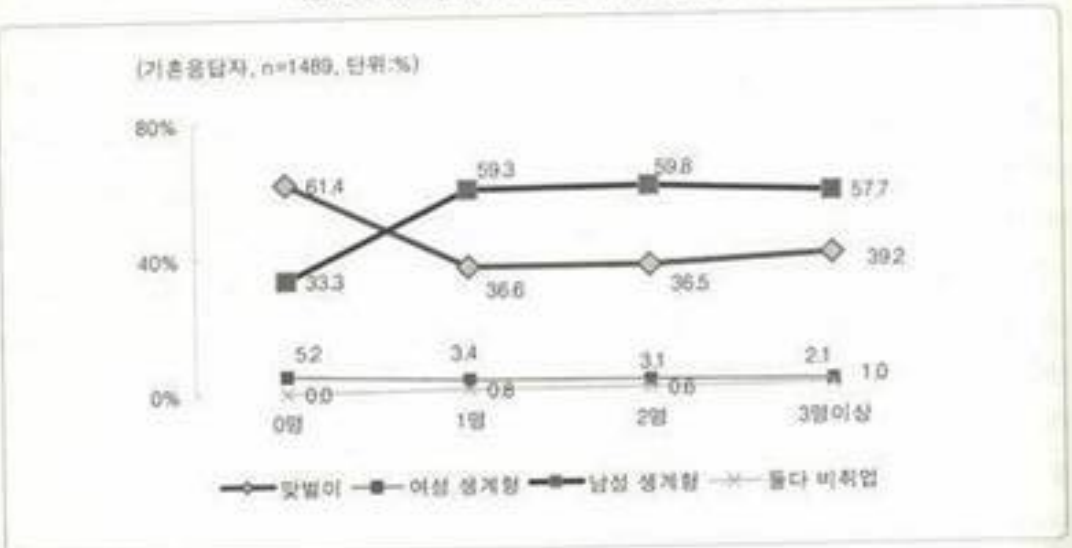
| 표 4-3 | 현재자녀수별 부부경제활동유형 분포

(단위 : %)

구 분	현재 자녀 수				계
	0명	1명	2명	3명 이상	
맞 벌 이	94 (61.4)	142 (36.6)	311 (36.5)	38 (39.2)	585 (39.3)
남 성 홑 벌 이	51 (33.3)	230 (59.3)	509 (59.8)	56 (57.7)	846 (57.0)
여 성 홑 벌 이	8 (5.2)	13 (3.4)	26 (3.1)	2 (2.1)	49 (3.3)
둘 다 비 취 업	-	3 (0.8)	5 (0.6)	1 (1.0)	9 (0.6)
계	153 (10.3)	388 (26.1)	851 (57.2)	97 (6.5)	1,489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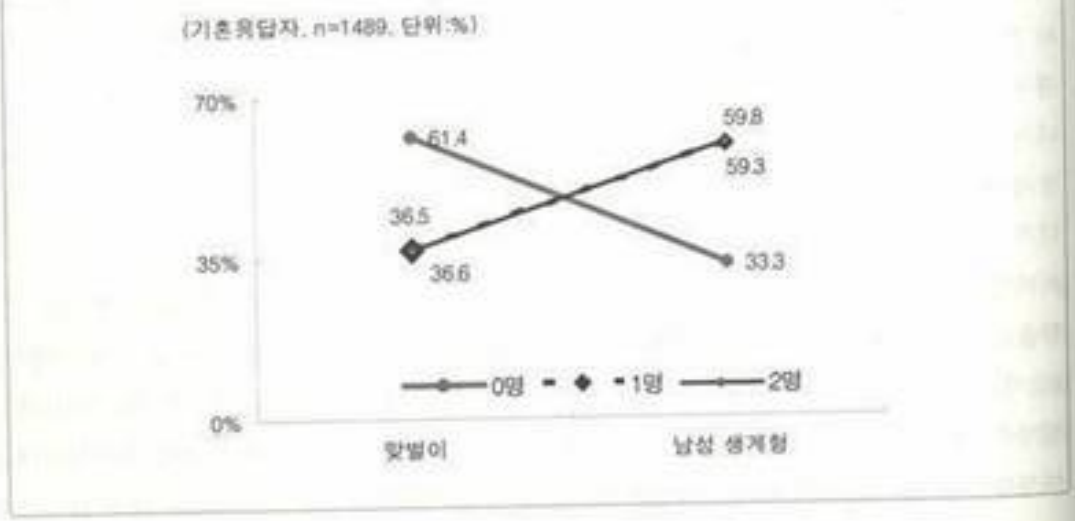
즉,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주로 첫째 자녀가 생기는 순간이라는 점이 이 조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그림 4-3> 참조). 자녀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 홑벌이와 맞벌이 비율이 거의 유사함으로써 자녀가 일단 하나 생겨서 양육과정에 들어가면,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미 퇴장한다는 M자 커브가 이 경우에도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 부부경제활동형태는 거의 유사한 데, 이는 아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여성들은 자녀가 생기는 순간 결정되며,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자녀가 늘더라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대로 일터에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유무가 자녀의 숫자에 비해 훨씬 더 강하게 부부경제활동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임신과 출산, 양육에 상관없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첫째 자녀 출산과 양육이 진행되는 30대 초반의 기혼여성들을 위한 고용유지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그림 4-3〉 현재 자녀수별 부부경제활동 유형



〈그림 4-4〉에서는 이와 같은 전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가 0명에서 1명으로 넘어갈 때, 맞벌이 비율이 61.4%에서 이미 36.6%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자녀가 생김과 동시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장이 절반정도는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는 또한 자녀 첫 출산시기에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이 집중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림 4-4〉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부부경제활동유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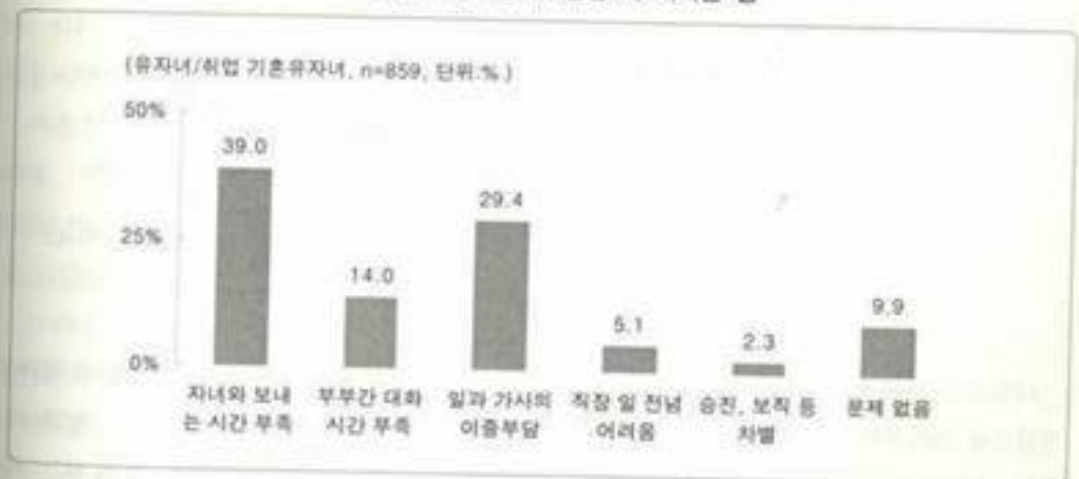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애시간에 따른 사건변화를 추적한 자료는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는 것이다. 즉,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이행시 가구유형 변화를 추적한 자료가 아니고, 자녀 0명과 자녀 1명 이상의 가구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진 가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 비해, 자녀가 1명일 경우 맞벌이 비율이 현격히 저하되어 있음을 매우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로부터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3명으로 늘이려면, 일가족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아울러 추론하게 된다.

(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시 가장 어려운 점

무자녀가구와 유자녀가구의 경제활동유형 차이는 기혼들의 일가족양립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일가족 병행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기혼 유자녀 취업자 859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인 39%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부족'(39.0%)을 꼽았다. 그 다음은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29.4%),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14.0%) 등으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가족양립시 어려운 점은 성별, 취업상태별, 학력별,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특히 남녀간 어려운 점의 차이는 일가족양립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림 4-5〉 일가족양립 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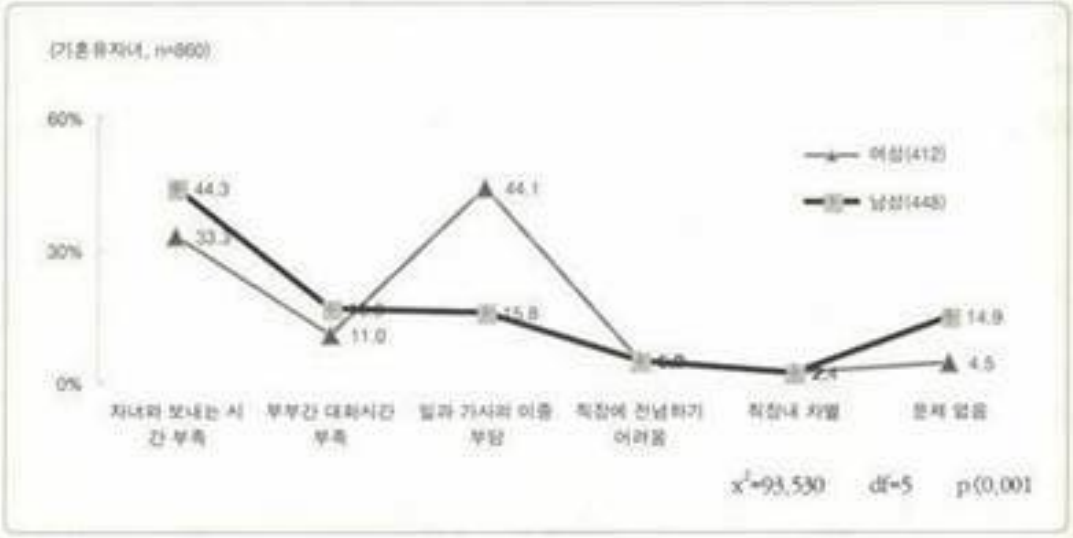
기혼여성의 절반 정도는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44.1%)이 일가족을 양립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족'(33.3%), '부부간 대화시간 부

족' (11.0%)을 들었다. 직장에 전념하기 어려움이나 직장내 차별 같은 요인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즉,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은 일영역보다는 가족영역의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자녀 기혼남성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44.3%)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은 '부부간 대화시간 부족' (16.8%),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 (15.8%)으로 나타나 기혼여성과는 다른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 (44.1%)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었고, 유자녀 기혼남성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부족' (44.3%)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일과 가족생활 병행에 문제가 없다는 남성은 14.9%로 여성 4.5%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서 젠더 차이가 뚜렷하였다. 그렇지만 기혼남녀 모두 일과 가족생활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기혼여성 95.5%, 기혼남성 85.1%), 그러한 어려움이 일 영역보다는 가족책임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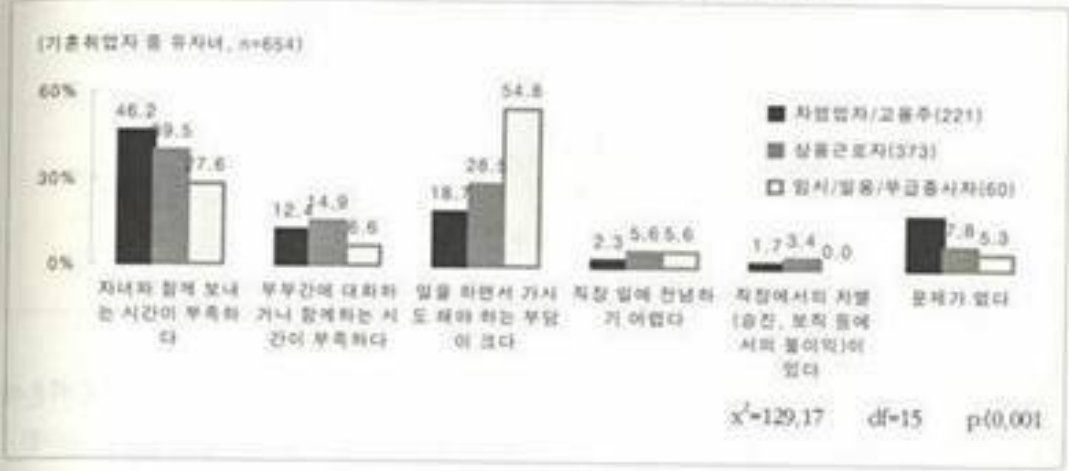
(그림 4-6) 기혼자의 성별 일가족양립시 어려운 점



다음으로는 고용상태별로 살펴본 결과, 유자녀 기혼취업자 중 상용근로자(373명)의 경우, 직장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 부족' (39.5%),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 (28.5%)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영업자/고용주의 46.2%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부족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지만 18.2%는 일가족 병행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절반 이상(54.8%)은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 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는데, 이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 집단을 위한 일가족양립 정책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7〉 기혼남녀의 고용상태별 일가족양립의 어려운 점



2) 자녀출산 및 양육과 근무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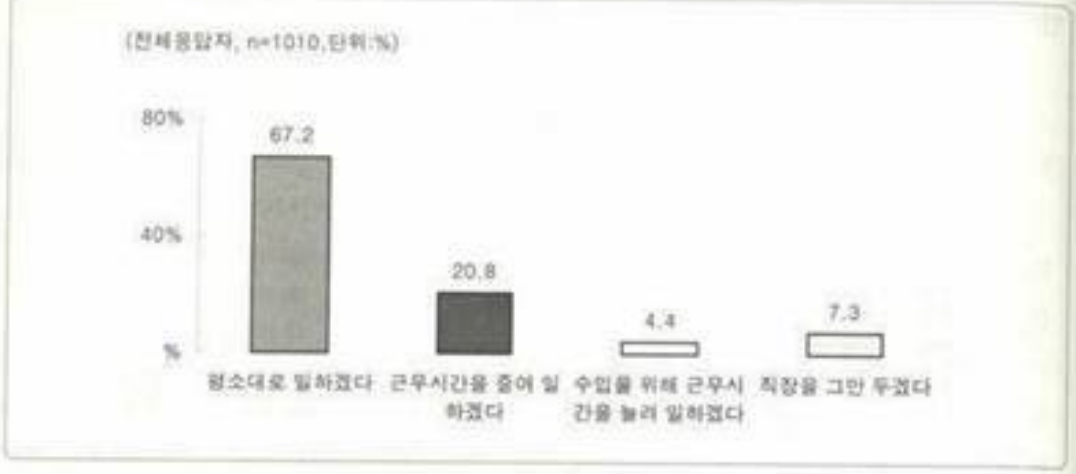
(1) 임신·출산기에 근무시간 조정 여부

미혼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시 일가족양립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화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 직장내 근무시간의 유연한 운용과 가족친화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다.

미혼응답자(1,010명)는 임신출산 시 자녀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평소대로 일 하겠다' (67.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20.8%), 직장을 그만두겠다(7.3%), 수입을 위해 근무시간을 늘려 일하겠다(4.4%)는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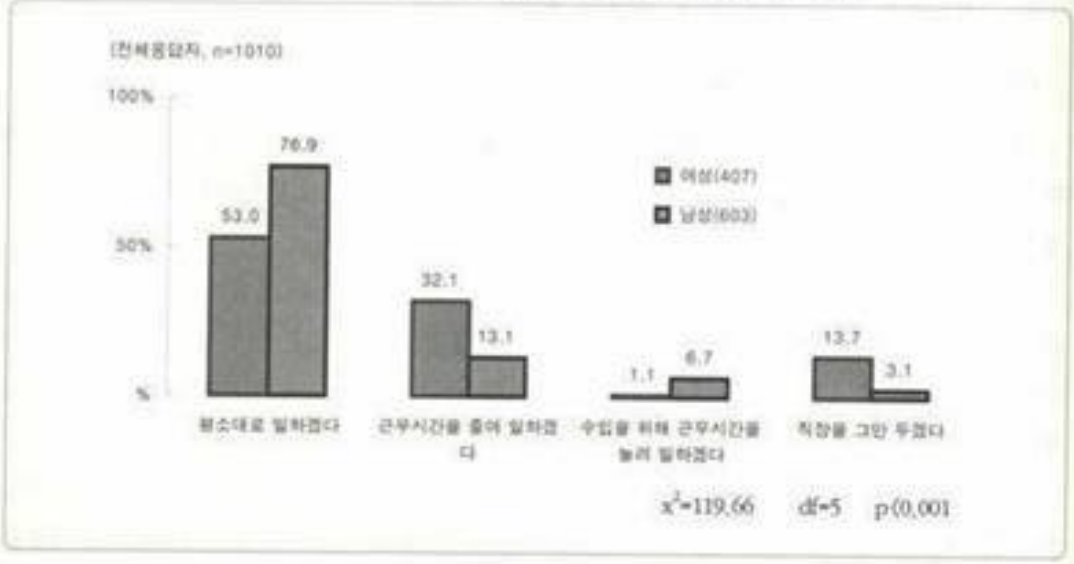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근무시간 조정여부는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평소대로 일하겠다(53.0%)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32.1%), 직장을 그만두겠다(13.7%)는 순서로 응답함으로써, 임신 출산 시 노동시간 단축 및 경력단절을 고려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45.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혼남성은 평소대로 일하겠다(76.9%)는 비율이 압도적이며, 근무시간 단축(13.1%)과 근무시간 연장(6.7%), 퇴사(3.1%)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미혼남성은 대체로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76.9%) 수입을 늘이기 위

〈그림 4-8〉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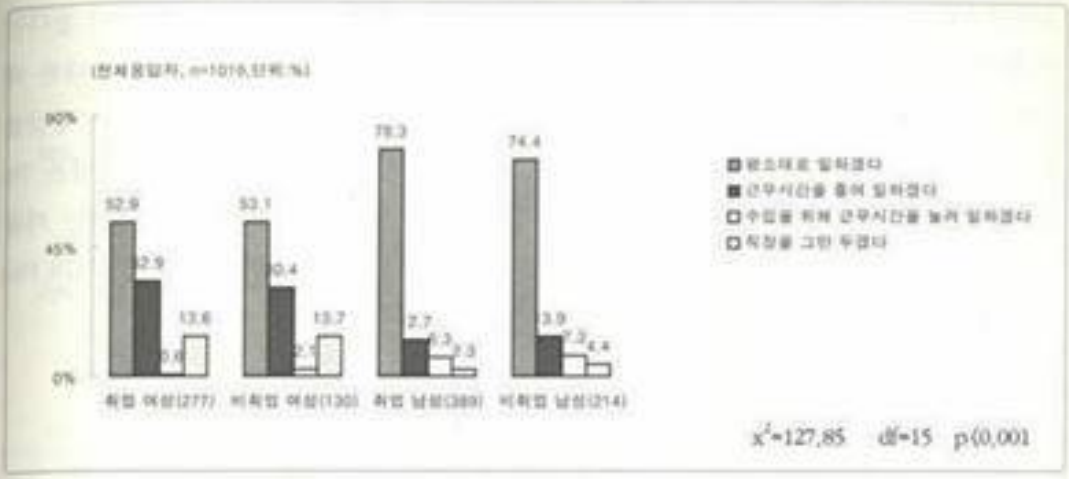
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겠다(6.7%)는 생각이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퇴사는 16.2%이어서 미혼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9〉 미혼자의 성별 출산/양육시 근무시간 조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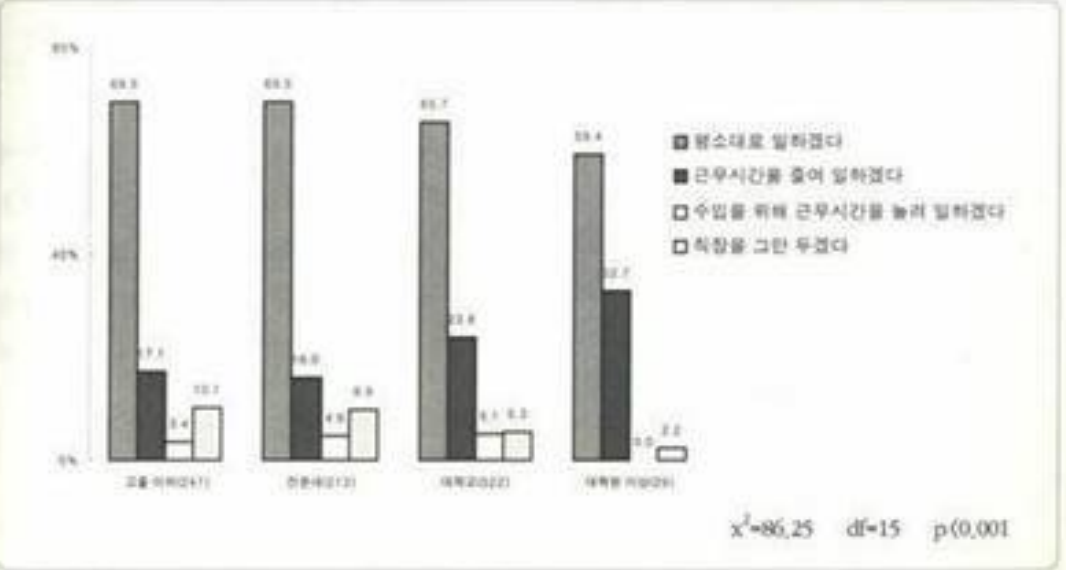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의사는 취업여부보다는 성별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중인 미혼과 비취업상태의 미혼은 성별로 동질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 여부보다는 젠더 역할변수가 일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10〉 취업상태별 성별 임신/출산/양육시 근무시간 조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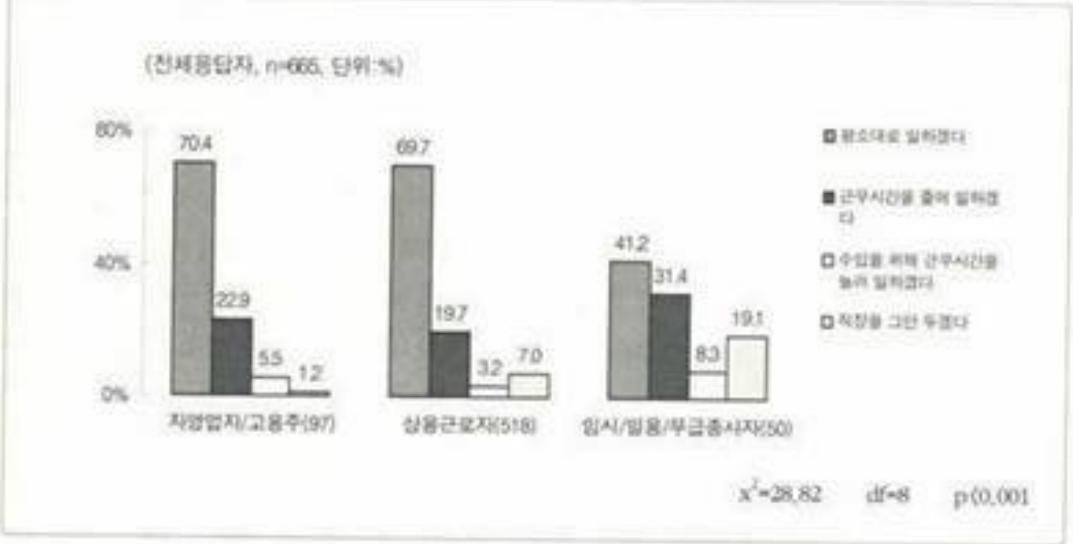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의 70% 정도는 평소대로 일하고, 16-17% 정도가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에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각각 23.8%, 32.7%로 나타난다. 또한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에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경력단절의 비율이 10% 내외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각각 5.3%, 2.2%로 낮다. 즉, 저학력층일수록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높

〈그림 4-11〉 미혼의 학력별 임신/출산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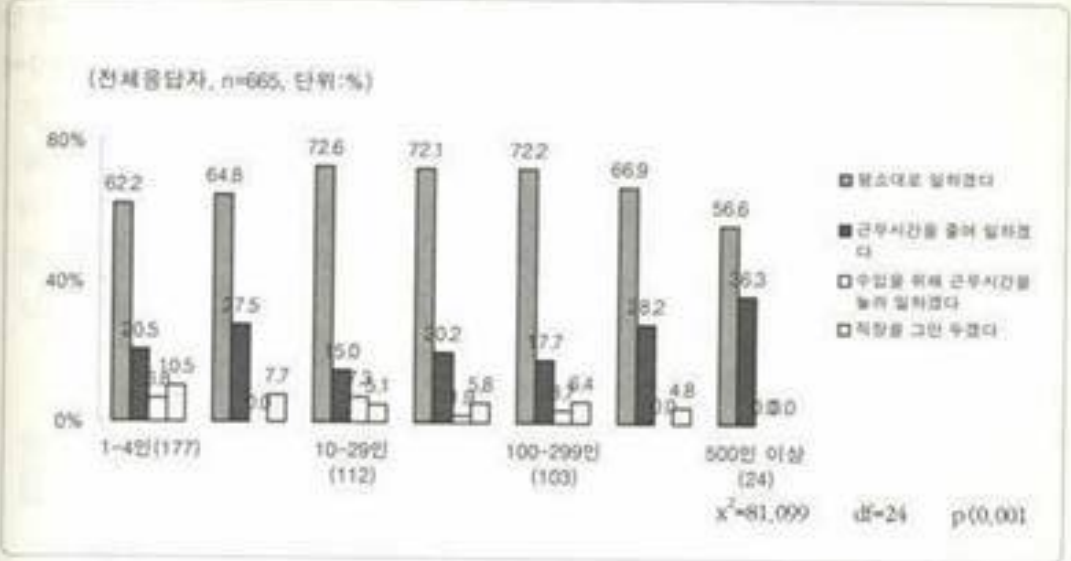
은 것이다. 이는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위치와 직무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층은 임신과 출산 시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의 고용유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취업중인 직장인 미혼남녀의 경우 고용상태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여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의 70% 정도는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응답을 했고, 20% 정도는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경우에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41.2%), 근무시간을 줄이겠다(31.4%), 직장을 그만두겠다(19.1%)는 비율로 나타나 근무시간 단축이나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50.1%를 차지했다.

〈그림 4-12〉 미혼의 고용상태별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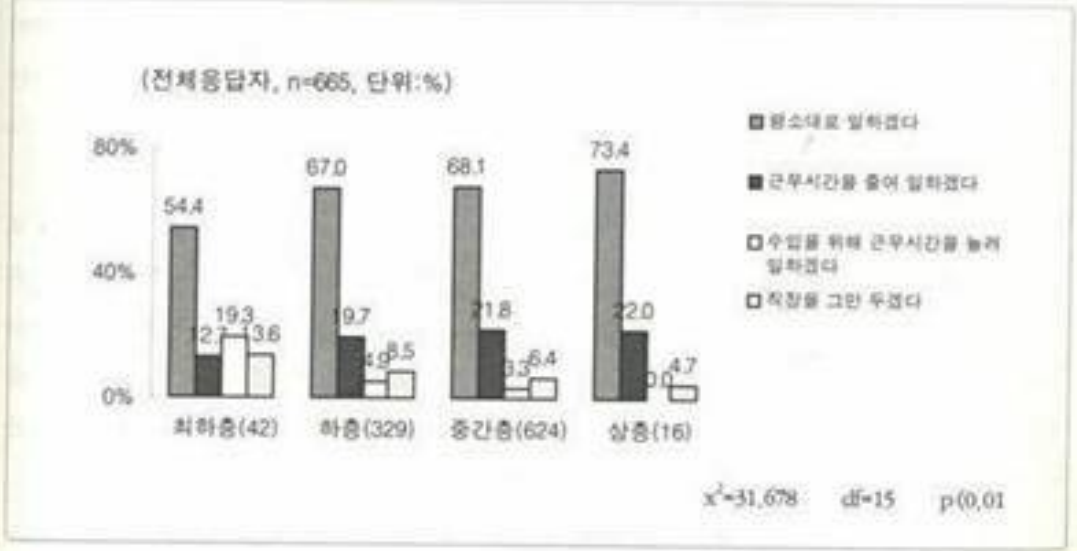
직장의 규모별로도 근무시간 조정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다. 300인 미만의 직장의 경우에 직장규모가 클수록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감소한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4인 이하 작업장에서는 10% 정도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응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3〉 미혼의 직장종사자수별 임신/출산 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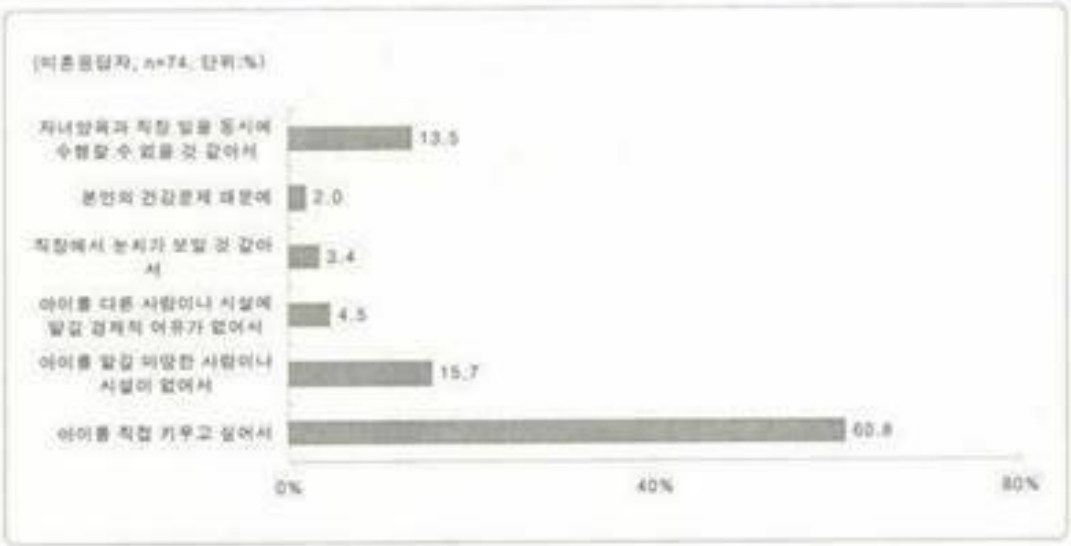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평소대로 일하겠다는 비율도 증가하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는 비율도 증가하는 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하층의 20% 정도는 수입을 위해 근무시간을 늘여서 일하겠다고 응답해 평소대로 일하는 비율이 낮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이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미혼의 계층의식별 임신/출산시 근무시간 조정 여부



임신/출산/양육기에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미혼자(7.3%)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60.8%), 아이 맡길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15.7%),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보육비 부족(4.5%), 직장에 눈치가 보여서(3.4%), 건강문제(2.0%)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림 4-15〉 임신/출산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와 같이 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선호(preferences)만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개입되었다고 해석하게 된다. 즉,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며, 서비스 질에 대한 불안요인이 직장을 관두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 부족이나 보육료 부담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한다는 20.2%의 응답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대상자 중 전업주부(455명)의 86.5%는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경험이 없는 비율은 13.5%에 불과하였다. 즉, 현재 전업주부의 다수가 결혼 후 취업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전업 주부(455명)는 기혼 비취업자(511명)의 89.0%에 해당함으로써, 기혼 비취업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계기로 여성 근로자의 7할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도 더 높은 비율의 여성이 결혼을 이유로 일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2)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취업자 혹은 취업경험자(2,090명) 가운데 자신이 일한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었다는 비율은 10.9%(228명)로 나타났다. 불이익에 대한 경험 비율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경우 똑같이 13.7%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남성은 8.4%로 다소 낮아서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는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에 대해 간접경험도 적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비취업 남성 중 직장에서 임신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 | 응답자 특성별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

(단위 : 명, %)

		빈도(명)	있다	없다	합계	유의수준
전체		2090	10.9	89.1	100.0	
성별	여 성	1045	13.7	86.3	100.0	x^2=16.86 df=1 p(0.001
	남 성	1045	8.1	91.9	100.0	
성 & 취업상태별	취 업 여 성	634	13.7	86.3	100.0	x^2=19.29 df=3 p(0.001
	비 취 업 여 성	411	13.7	86.3	100.0	
	취 업 남 성	1010	8.4	91.6	100.0	
	비 취 업 남 성	35	0.0	100.0	100.0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으로는 '은근한 압력'(45.6%)이 절반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퇴직 권유(29.7%), 원치 않는 부서 이동(18.7%), 휴직권유(12.1%)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 '퇴직 권유'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여성의 절반 이상(52.2%)은 '은근한 압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임신으로 인한 직장

| 표 4-5 | 성별 및 취업상태별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의 내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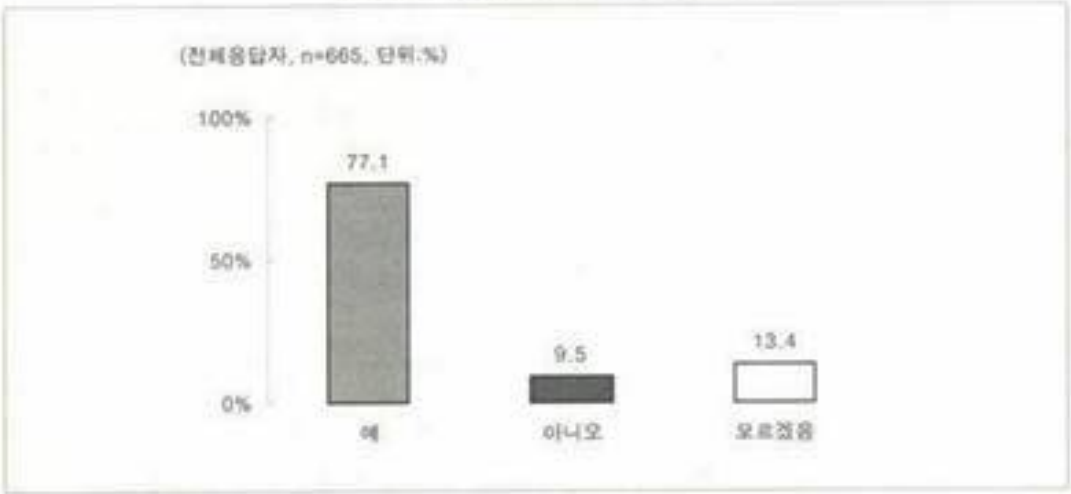
구 분		빈도 (명)	휴직 권유	퇴직 권유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은근한 압력
전 체		(228)	12.1	29.7	18.7	45.6
성	여 성	(143)	14.3	27.2	14.2	49.8
	남 성	(85)	8.3	34.0	26.4	38.4
					x^2=8.089	df=3 p(0.05
성 & 취업 상태	취 업 여 성	(87)	11.7	22.2	16.1	52.2
	비취업 여성	(56)	18.5	34.9	11.2	46.3
	취 업 남 성	(85)	8.3	34.0	26.4	38.4
						N.S

내 불이익이 가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라도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퇴직제

미혼취업자(665명)에게 '귀하의 직장은 여직원이 결혼한 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있는가' 를 질문한 결과, 77.1%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9.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결혼한 여직원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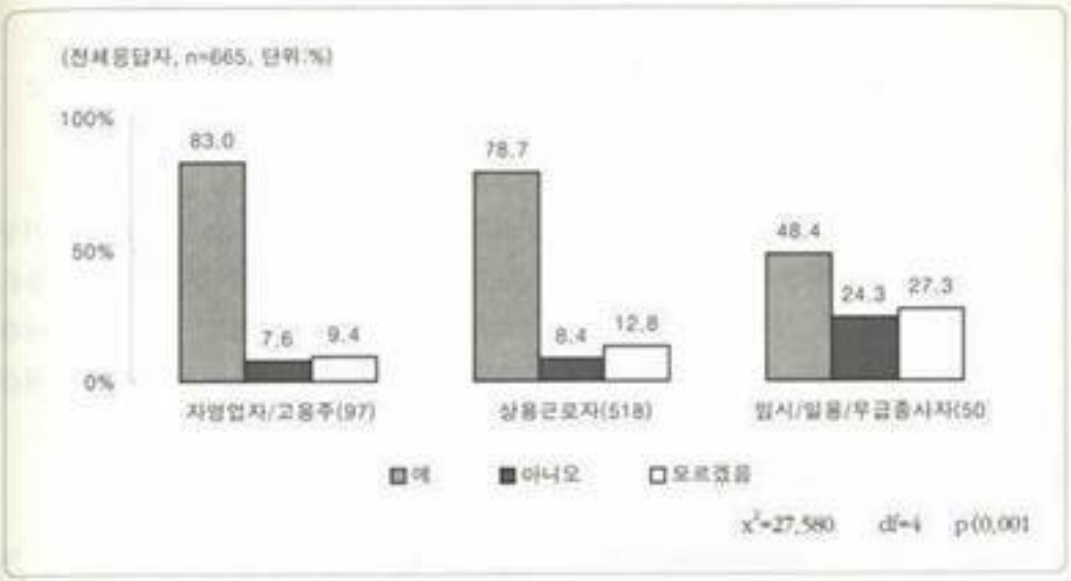
〈그림 4-16〉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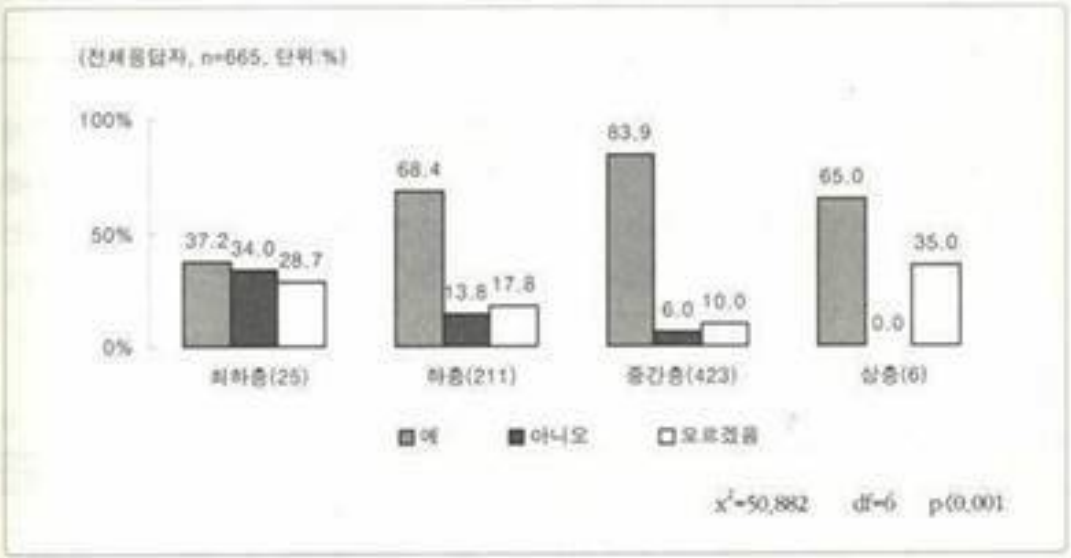
결혼퇴직제에 적용을 받는 직장종사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미혼여성은 7.6%이고 미혼남성은 10.8%에 해당하였다. 특히,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24.3%가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상용근로자 중에서는 단지 8.4%가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직장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임시/일용/무급종사자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이미 2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도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미혼취업자의 계층의식에 따라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직장 종사자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결혼퇴직제가 없는 직장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하층의 34.0%는 결혼퇴직제가 적용되는 직장 종사자라는 응답이 나와 빈곤계층에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7a〉 고용상태별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그림 4-18〉 계층의식별 결혼퇴직제 적용 직장 비율



2. 가족책임과 경제활동참여

1) 일과 가정의 균형

(1) 주당 근로시간

취업중인 기혼남녀(979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으로 일일 평균 10시간 이상(10.32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평균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도 39.7%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기혼여성이 주당 평균 48.8시간일하고 있고 남성은 53.2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혼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이 매우 높은 44.2%에 달하고 있다.

| 표 4-6 | 기혼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

		빈도(명)	30시간 이하	31~40시간	41~50시간	51~60시간	61시간 이상	평균(시간)
전체		(979)	3.2	18.9	38.2	28.3	11.4	51.6
성별	여성	(357)	7.4	22.1	38.7	24.4	7.4	48.8
	남성	(622)	0.8	17.1	37.8	30.5	13.7	53.2

응답자의 배우자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보다 약간 짧은 시간인 주당 평균 50.4시간(일일 평균 10.08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5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비율은 35.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응답자의 남편은 평균 51.9시간 일하고 있으며, 남성 응답자의 아내는 평균 46.1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8시간 더 길게 나타났다(〈표 4-7〉 참조).

| 표 4-7 | 배우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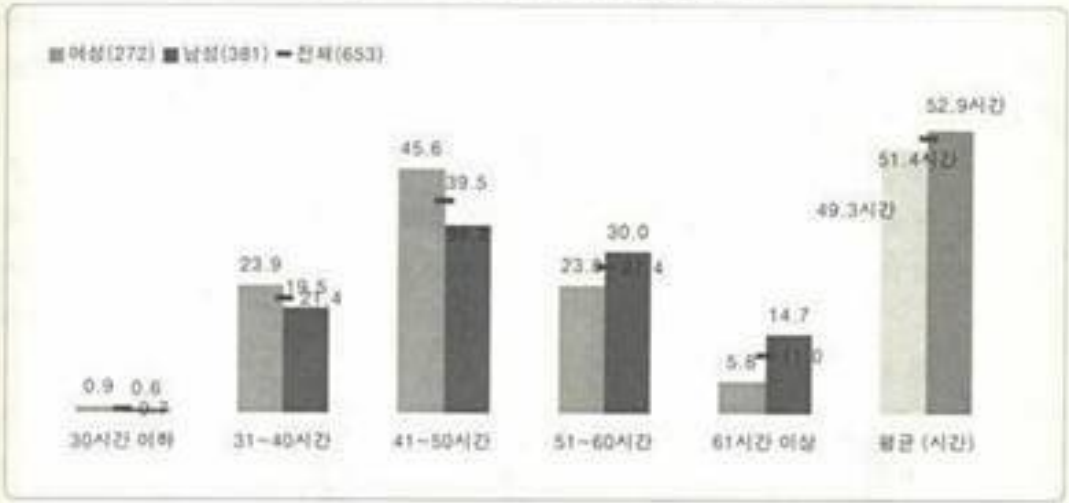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하	31~40 시간	41~50 시간	51~60 시간	61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 체		(1091)	3.2	19.6	41.6	26.2	8.8	50.4
성	여성	(812)	0.6	16.7	42.1	29.9	10.0	51.9
	남성	(278)	10.9	27.8	40.3	15.3	5.1	46.1
연령	25~29세	(83)	0.0	15.5	53.1	23.0	7.6	50.4
	30~34세	(261)	0.2	19.5	50.1	21.9	7.7	50.4
	35~39세	(396)	3.7	23.2	39.9	24.9	7.7	49.6
	40~44세	(351)	5.7	16.4	34.6	31.4	11.2	51.3

* 모름/무응답 제외

미혼남녀(전일제, 653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으로, 기혼자의 근로시간 51.6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남녀는 기혼이나 미혼이나 상관없이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근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미혼여성이 주당 평균 49.3시간(하루 9.86시간), 미혼남성이 평균 52.9시간(하루 10.58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에 비해 주당 3.6시간 더 길게 나타났다. 미혼남녀간 주당 근로시간 격차인 3.6시간은 기혼남녀간 평균 근로시간 격차가 5.8시간인 데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하는 주당 61시간 근로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크다. 〈그림 4-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14.7%가 주당 61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단지 5.8%에 그치고 있다. 반면, 주당 50시간 이하의 근로자 비율에는 미혼여성들이 미혼남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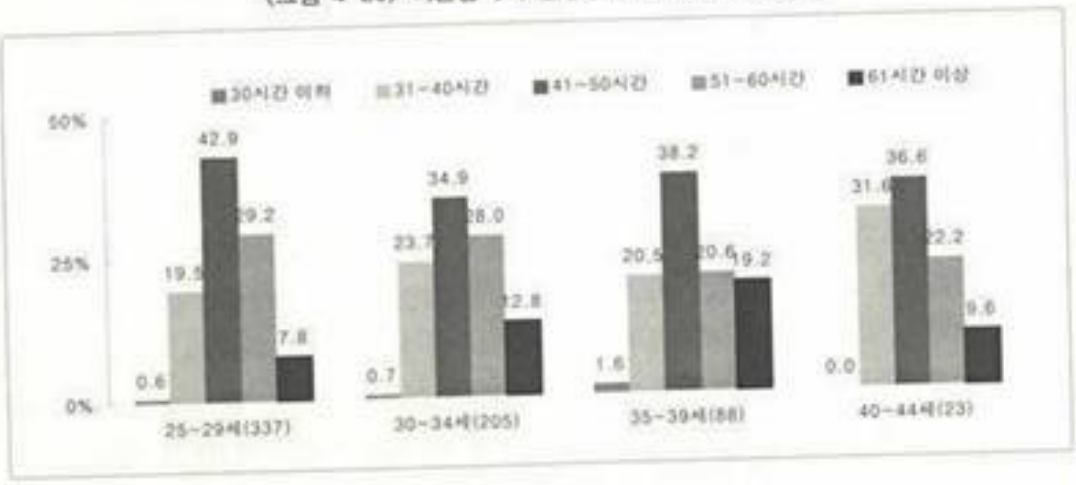
〈그림 4-19〉 미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미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0〉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30대 후반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가장 높다. 주당 6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비율만을 살펴보면, 30대 후반은 19.2%로 30대 초반이 12.8%, 40대 초반이 9.6%, 20대 후반이 7.8%인 것과 비교해서 훨씬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경우에도 50시간 이상 비율이 30% 정도에 해당하여 미혼들의 근로시간이 대체로 장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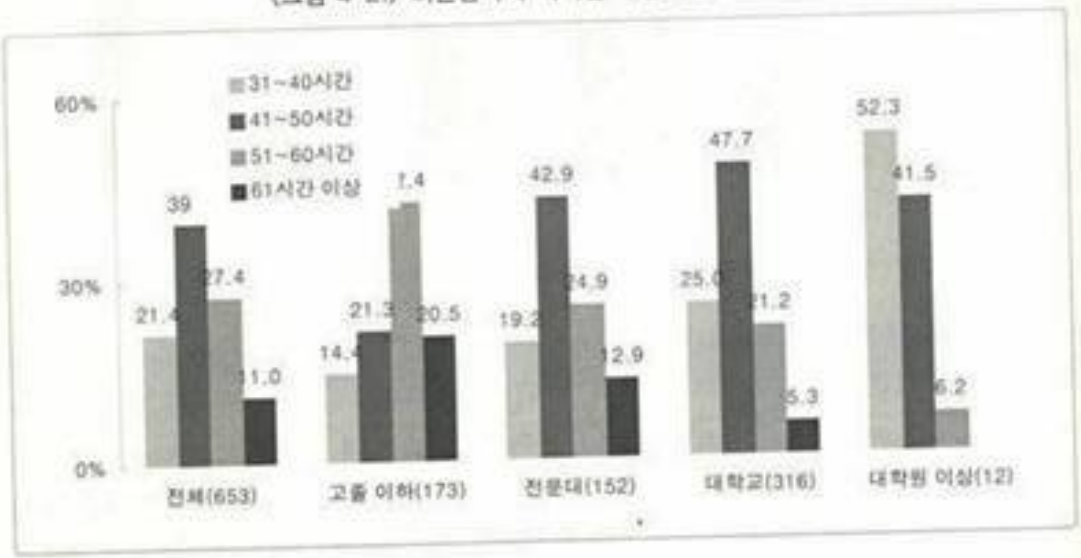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학력별 근로시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4-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력간 근로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학력과 근로시간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

〈그림 4-20〉 미혼남녀의 연령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졸이하의 근로시간이 55.6시간으로 가장 길고 대졸은 49.0시간, 대학원 이상은 43.6시간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51~60시간이 42.4%, 61시간 이상도 20.5%나 차지하는 반면, 대졸의 경우 41~50시간이 절반가량인 47.7%를 차지하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52.3%가 4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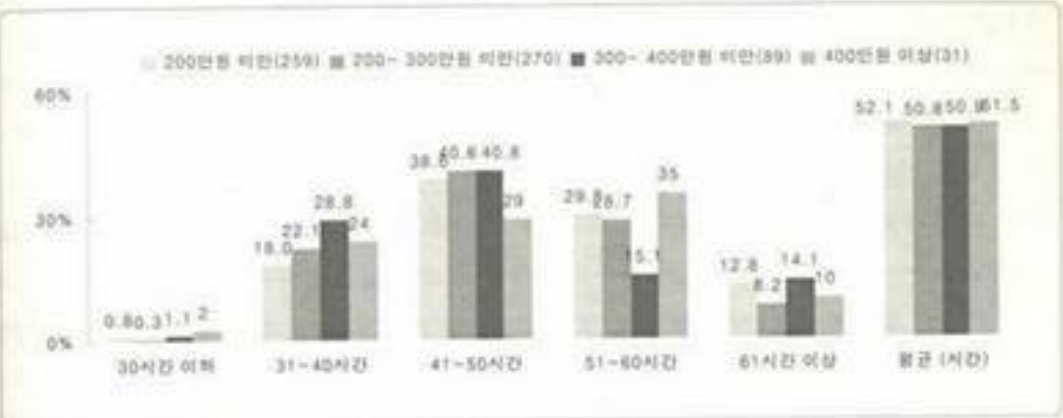
〈그림 4-21〉 미혼남녀의 학력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전일제 미혼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월소득수준과 거의 상관관계가 없을 정도로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 내외로 유사하였다. 단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2.1시간으로 가장 긴 노

동시간을 보이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림 4-22〉 미혼남녀의 월 소득별 주당 근로시간



(2) 생활시간 배분

일가족의 양립은 시간분배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만 25~44세 남녀는 일·가정·학습·여가의 4가지 생활세계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투여하는 영역은 '일'로 나타났다. 자신의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이 분배되는 영역이 '일'이라는 응답자가 59.2%이고, '가정'이라는 비율이 32.2%, 학습이라는 비율이 5.3%, 여가라는 비율이 3.2%이었다.

이러한 생활시간 배분은 성과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학력, 소득, 직업 등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은 생활세계의 시간분배 그림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쪽이 일과 가정인 비율이 거의 유사했다(각각 45.4%, 47.7%). 하지만 남성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70% 이상인 반면,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은 17.0%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남성이 일중심적 생활유형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서울시 만 25~44세 여성은 일중심형과 가정중심형으로 이분되지만, 남성은 대체로 일중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25~29세 젊은 연령층 중에서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62.7%에 달함으로써, 일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일중심성의 비율은 감소하고 가정중심성 비율이 증가하며, 25~29세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학습'에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따라 생활시간의 분배 유형에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미혼은 기혼보다 일중심성

| 표 4-8 | 응답자 특성별 생활시간 분배 유형

(단위 : 명, %)

		전체	일	가정	여가	학습	유의수준
		2500	59.2	32.2	3.2	5.3	
성	여성	1237	45.4	47.7	3.6	3.3	x^2=282.77 df=3 p(0.001
	남성	1263	72.9	17.0	2.8	7.3	
연령	25~29세	664	62.7	17.6	6.1	13.5	x^2=215.63 df=9 p(0.001
	30~34세	640	60.6	32.7	3.3	3.4	
	35~39세	648	56.3	40.1	1.4	2.0	
	40~44세	548	56.9	39.8	1.7	1.4	
혼인상태	미혼	1010	70.5	11.6	6.4	11.4	x^2=435.45 df=3 p(0.001
	기혼	1490	51.6	46.1	1.0	1.1	
취업상태	취업	1644	76.4	21.5	1.5	0.6	x^2=657.32 df=3 p(0.001
	비취업/미취업	856	26.3	52.7	6.5	14.4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70.7	27.0	1.6	0.5	x^2=1132.44 df=9 p(0.001
	비취업 여성	603	18.7	69.4	5.6	6.2	
	취업 남성	1010	79.9	18.0	1.3	0.6	
	비취업 남성	253	44.5	12.9	8.6	33.9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85.5	11.3	2.6	0.7	x^2=1472.08 df=9 p(0.001
	미혼 비취업자	345	41.7	12.3	13.8	32.2	
	기혼 취업자	979	70.2	28.4	0.7	0.5	
	기혼 비취업자	511	15.9	80.0	1.6	2.4	
학력	고졸 이하	885	52.2	41.5	4.1	2.1	x^2=132.60 df=9 p(0.001
	전문대	459	63.8	30.9	3.0	2.1	
	대학교	1066	63.1	25.9	2.7	8.3	
	대학원 이상	70	58.7	19.7	0.9	20.7	
월소득	200만원 미만	651	60.8	14.4	8.2	16.6	x^2=3428.12 df=12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608	64.3	32.3	1.2	2.0	
	300만~ 400만원 미만	566	56.8	41.4	1.4	0.3	
	400만원 이상	649	56.2	41.9	1.1	0.7	
	모름/ 무응답	26	31.5	29.8	16.2	22.5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82.1	14.6	0.5	1.7	x^2=1411.39 df=12 p(0.001
	화이트칼라	693	77.6	20.3	1.5	0.5	
	블루칼라	782	74.0	24.0	1.6	0.4	
	전업 주부	455	12.8	84.6	1.6	0.9	
	학생/실업/비취업	401	41.7	16.5	12.1	29.7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75.8	22.0	1.2	0.8	N.S.
	상용근로자	1062	77.3	20.4	1.7	0.5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70.9	28.5	0.0	0.5	

이 강해서 '일' 에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70.9%에 달한다. 반면, 기혼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51.6%이고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46.1%로 나타나 그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미혼취업자의 경우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비율이 85.5%나 차지해서 기혼취업자(70.2%)보다 더 높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도 70.7%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일수록, 미혼일수록, 또한 그 중에서도 미혼취업자일수록 일중심성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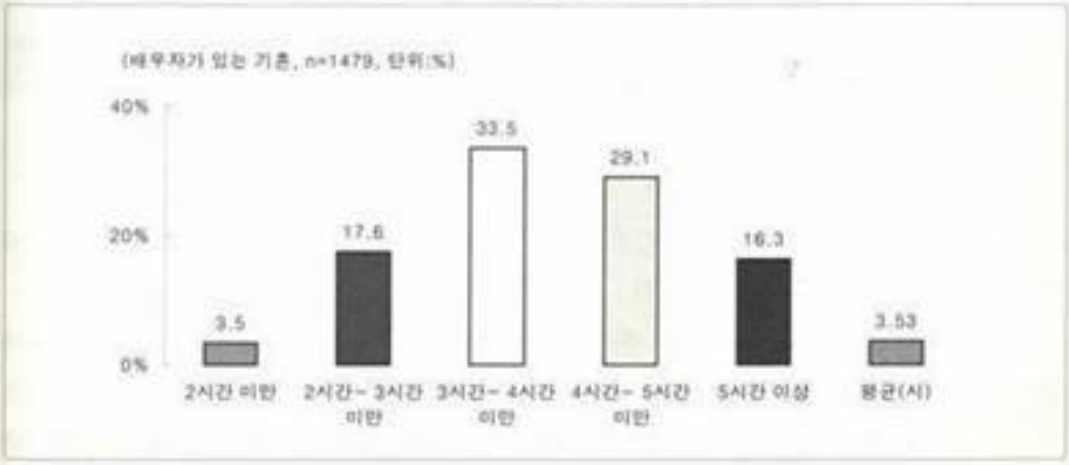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60.8%이지만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56% 정도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전문직/고위임직원의 82.1%가 '일' 에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이트칼라 또한 77.6%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블루칼라는 이보다 낮은 74.0%가 일중심성을 드러냈다. 전업주부의 84.6%는 '가정' 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가정에 가장 많은 생활시간을 투여하는 집단은 전업주부(84.6%), 기혼 비취업자(80.0%), 비취업여성(69.4%) 순이었다. 기혼집단의 경우 일중심 그룹(51.6%)과 가정중심 그룹(46.1%)으로 양분되고, 미혼집단은 일중심 그룹(70.5%)과 가정중심 그룹(11.6%)으로 나뉘지만 일중심 그룹 비율이 훨씬 많은 것이 특징이다.

(3)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가족시간

가. 평일

평일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3시간~4시간 미만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4시간~5시간 미만(29.1%)에 해당한다. 2시간~3시간 미만(17.6%)과 5시간 이상

〈그림 4-23〉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평일)



(16.3%)은 유사한 비율을 차지했다. 평일 3시간 이상 함께 보내는 비율이 78.9%에 해당하고, 평균 212분(약 3시간 32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간량은 취업여부 및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여성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206분이고 취업남성의 경우 211분으로 평균에 가까웠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평균 215분을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블루칼라의 경우 207분으로 화이트칼라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다.

| 표 4-9a | 응답자 특성별 평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단위 : %)

		빈도 (명)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균 (분)	유의수준
전 체		(1479)	3.5	17.6	33.5	29.1	16.3	212	
성 & 취업 상태	취 업 여 성	(349)	5.9	20.4	32.5	26.6	14.7	206	F=6.26 df=1478 p(0.001
	비 취 업 여 성	(471)	3.6	15.9	32.2	31.5	16.8	213	
	취 업 남 성	(620)	2.3	17.3	36.3	28.3	15.8	211	
	비 취 업 남 성	(38)	0.0	15.8	13.6	34.6	36.0	271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6.2	22.3	34.6	24.9	12.0	195	F=5.59 df=1478 p(0.001
	화 이 트 칼 라	(384)	2.5	16.7	34.3	27.6	18.9	215	
	블 루 칼 라	(479)	3.8	18.9	35.5	28.4	13.3	207	
	전 업 주 부	(454)	3.5	16.1	32.7	31.0	16.7	212	
	학생/실업/비취업	(55)	2.3	14.6	15.2	37.6	30.3	260	

이러한 평일 시간배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0으로 크게 높지는 않았다. 만족도는 성, 연령, 취업여부, 학력, 소득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불만족이 23.4%, 만족이 34.0%로 만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4-23> 참조).

나. 토요일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토요일 시간은 5시간 이상이 73.4%를 차지했고 평균 428분(약 7시간)으로 평일의 2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량은 연령, 취업여부, 학력, 소득,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고, 취업상태에 따라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취업자의 경우 412분이지만 비취업의 경우 459분으로 비취업자가 47분 더 길게 나타났

(그림 4-24)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토요일)



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토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서, 고졸의 경우 366분이지만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경우 각각 476분, 529분이었다. 월소득이 높을수록 토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72분)와 블루칼라(359분) 간의 시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58분으로 가장 길고,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경우 오히려 배우자와 보내는 토요일 시간이 364분으로 더 적었고, 자영업자/고용주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아 346분으로 6시간 미만이었다.

| 표 4-9b | 응답자 특성별 토요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단위 : %)

		빈도 (명)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4시간 미만	4시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균 (분)	유의수준
전 체		(1479)	1.3	4.6	7.8	12.8	73.4	428	
성	여성	(820)	2.1	5.1	6.8	11.1	75.0	436	N.S
	남성	(659)	0.2	4.1	9.1	15.0	71.5	419	
연령	25~29세	(92)	0.9	4.9	6.9	7.8	79.5	459	F=5.64 df=1478 p<0.001
	30~34세	(339)	0.4	4.3	9.3	11.0	75.1	447	
	35~39세	(542)	1.4	5.1	6.6	13.0	73.9	442	
	40~44세	(506)	1.8	4.4	8.4	14.8	70.7	395	
취업 상태	취업	(969)	1.3	5.2	8.5	14.4	70.6	412	T=3.83 df=1477 p<0.001
	비취업/미취업	(509)	1.1	3.5	6.5	9.9	78.9	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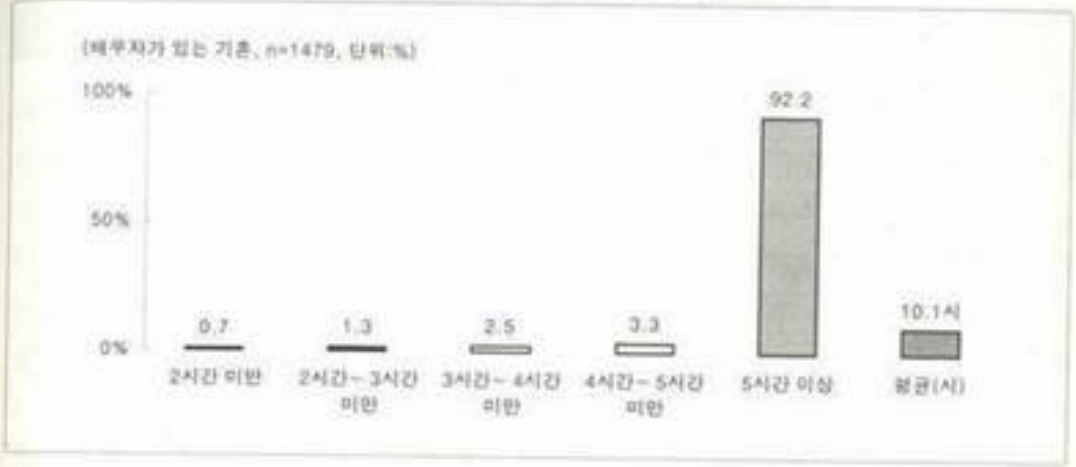
		빈도 (명)	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미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균 (분)	유의수준
전 체		(1479)	1.3	4.6	7.8	12.8	73.4	428	
성 & 취업 상태	취업 여성	(349)	3.3	6.7	6.4	12.6	71.0	408	F=5.25 df=1478 p(0.01
	비취업 여성	(471)	1.2	3.8	7.0	10.0	77.9	456	
	취업 남성	(620)	0.2	4.4	9.7	15.4	70.3	414	
	비취업 남성	(38)	0.0	0.0	0.0	8.5	91.5	493	
학력	고졸 이하	(627)	2.0	7.1	10.8	16.6	63.4	366	F=30.84 df=1478 p(0.001
	전문대	(247)	0.5	3.9	5.2	15.6	74.8	462	
	대학교	(565)	0.8	2.6	5.7	7.8	83.1	476	
	대학원 이상	(40)	0.0	0.0	7.3	7.7	85.0	52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4)	1.6	6.4	10.7	10.1	71.3	409	F=3.89 df=1474 p(0.01
	200만~ 300만원 미만	(336)	0.8	6.1	9.8	14.2	69.1	412	
	300만~ 400만원 미만	(470)	1.2	3.3	9.6	14.7	71.3	411	
	400만원 이상	(616)	1.6	4.8	5.1	10.9	77.6	452	
	모름/ 무응답	(4)	0.0	0.0	17.5	16.0	66.6	320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3.0	6.4	7.2	15.2	68.3	435	F=19.07 df=1478 p(0.001
	화이트칼라	(384)	0.2	1.1	4.0	8.0	86.8	472	
	블루칼라	(479)	1.9	8.3	12.5	19.3	58.1	359	
	전업 주부	(454)	1.1	3.7	7.1	10.4	77.6	453	
	학생/실업/비취업	(55)	0.9	2.3	1.4	5.9	89.5	507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327)	2.4	9.1	13.3	19.2	56.0	346	F=29.18 df=968 p(0.001
	상용근로자	(559)	0.4	2.0	5.6	11.5	80.5	458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4)	3.5	11.3	9.2	15.0	60.9	364	

이러한 토요일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평일의 경우보다 높아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 취업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력, 소득,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 및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함께 하는 시간이 긴 것에 비례하여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직업별로는 토요일에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일요일

일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608분(약 10시간)으로 평일보다 6시간 30분정도 길고, 토요일보다는 3시간 정도 길게 나타났다.

〈그림 4-25〉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일요일)



이러한 시간은 토요일과 유사하게 연령, 취업상태, 학력,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취업자보다 비/미취업자의 시간이 길고,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시간이 길었다. 고용상태별로는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임시/일용/무급종사자(599분)보다 상용근로자(626분)의 경우 일요일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일요일 시간보내기에 대한 만족도는 평일(3.10점)과 토요일(3.30)보다 높은 3.45점이다

| 표 4-10 | 응답자 특성별 일요일에 배우자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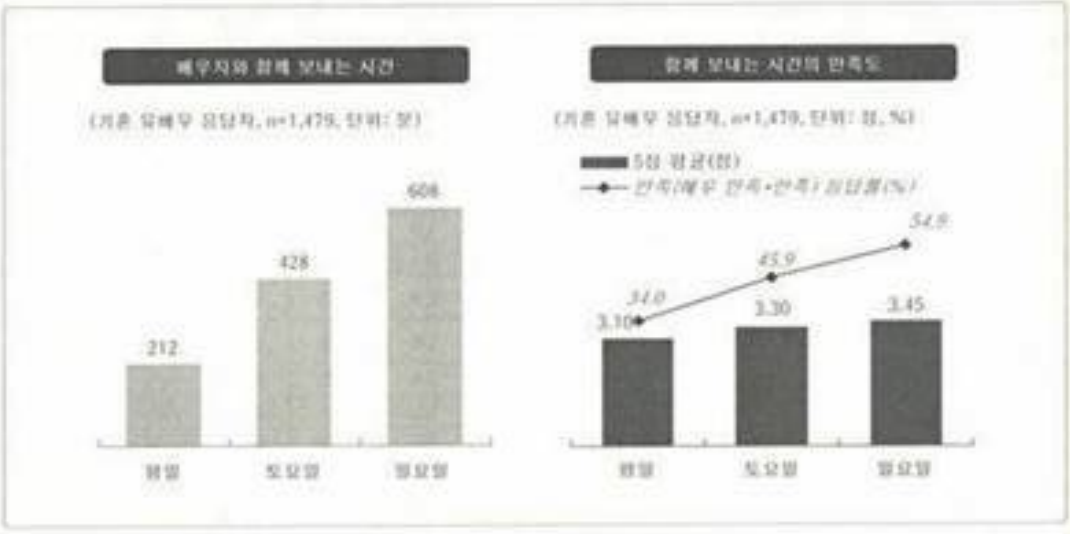
(단위 : %)

		빈도 (명)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균 (분)	유의수준
전 체		(1479)	0.7	1.3	2.5	3.3	92.2	608	
성	여성	(820)	1.2	1.5	2.0	2.3	92.9	614	N.S
	남성	(659)	0.0	1.0	3.0	4.6	91.4	602	
연령	25~29세	(92)	0.9	3.1	3.6	0.6	91.8	632	F=6.08 df=1478 p(0.001
	30~34세	(339)	0.1	1.7	1.5	1.8	94.9	624	
	35~39세	(542)	0.6	1.2	1.9	4.0	92.3	627	
	40~44세	(506)	1.0	0.8	3.5	4.2	90.5	573	
취업 상태	취업	(969)	0.6	1.5	2.9	4.1	91.0	598	F=2.49 df=1109.97 p(0.05
	비취업/미취업	(509)	0.8	0.9	1.6	1.9	94.7	628	
학력	고졸 이하	(627)	1.1	1.8	3.6	5.2	88.4	568	F=13.59 df=1478 p(0.001
	전문대	(247)	0.5	0.9	1.6	1.5	95.5	649	
	대학교	(565)	0.3	1.0	1.5	2.0	95.2	627	
	대학원 이상	(40)	0.0	0.0	3.4	5.6	91.0	714	

		빈도 (명)	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평균 (분)	유의수준
전 체		(1479)	0.7	1.3	2.5	3.3	92.2	608	
월소득	200만원 미만	(54)	1.6	3.0	4.0	3.4	88.1	555	N.S
	200만~300만원 미만	(336)	0.6	1.1	3.5	5.8	89.0	601	
	300만~400만원 미만	(470)	0.5	0.6	2.7	2.6	93.6	602	
	400만원 이상	(616)	0.7	1.8	1.5	2.6	93.3	622	
	모름/무응답	(4)	0.0	0.0	0.0	0.0	100.0	514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1.6	1.9	3.9	7.8	84.9	609	F=9.74 df=1478 p(0.001
	화이트칼라	(384)	0.0	0.2	0.5	1.8	97.5	645	
	블루칼라	(479)	0.8	2.5	4.6	5.1	87.0	557	
	전업주부	(454)	0.8	1.0	1.8	2.0	94.3	629	
	학생/실업/비취업	(55)	0.9	0.0	0.0	1.1	97.9	618	
취업자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327)	1.0	2.2	4.1	7.9	84.9	549	F=11.59 df=968 p(0.001
	상용근로자	(559)	0.0	0.6	2.2	2.2	95.0	626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4)	2.7	4.5	2.6	2.4	87.9	599	

((그림 4-16참조), 이러한 만족도는 취업여부와 학력,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여성(3.35점)보다는 취업남성(3.49점)의 만족도가 높고, 고졸이하(3.39점)보다는 대졸(3.50점) 및 대학원 이상(3.77점)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52점)가 블루칼라(3.37점)보다 높고,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정리하면 〈그림 4-26〉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4-26〉 배우자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및 만족도



2) 선호하는 부부경제활동 유형과 자녀수

서울시 25~44세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와 부부 경제활동유형은 다양한 조합중에서 3가지 형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둘이면서 남편은 전일제 근무에 부인은 가사전담,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형태가 각각 25.7%, 22.7%, 2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 2명에 남성생계부양-여성전업주부 형태가 2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부인은 시간제, 남편은 전일제 형태의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2.7%, 남편과 부인 모두 전일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0.3%를 차지한다. 그 밖에 자녀 1명에 부인과 남편 모두 전일제 맞벌이 선호가 8.7%, 자녀 3명 이상에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형태가 5.7%, 자녀 1명에 부인 시간제, 남편 전일제 맞벌이가 4.5% 등의 순서로 선호되었다. 무자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1.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상적 가구유형에서도 극히 미미한 비율을 차지했다. 자녀수에서는 2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희망자녀수'에서도 확인되었듯이(3장) 가장 높고, 남성의 이상적인 경제활동은 전일제 근로가 지배적인 형태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가사전담(전업주부)이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적 자녀를 2명으로 했을 때, 최소한 기혼여성의 시간제 이상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43.0%를 차지하였다(<그림 4-27> 참조). 자녀수와 관계없이, 부부의 맞벌이 선호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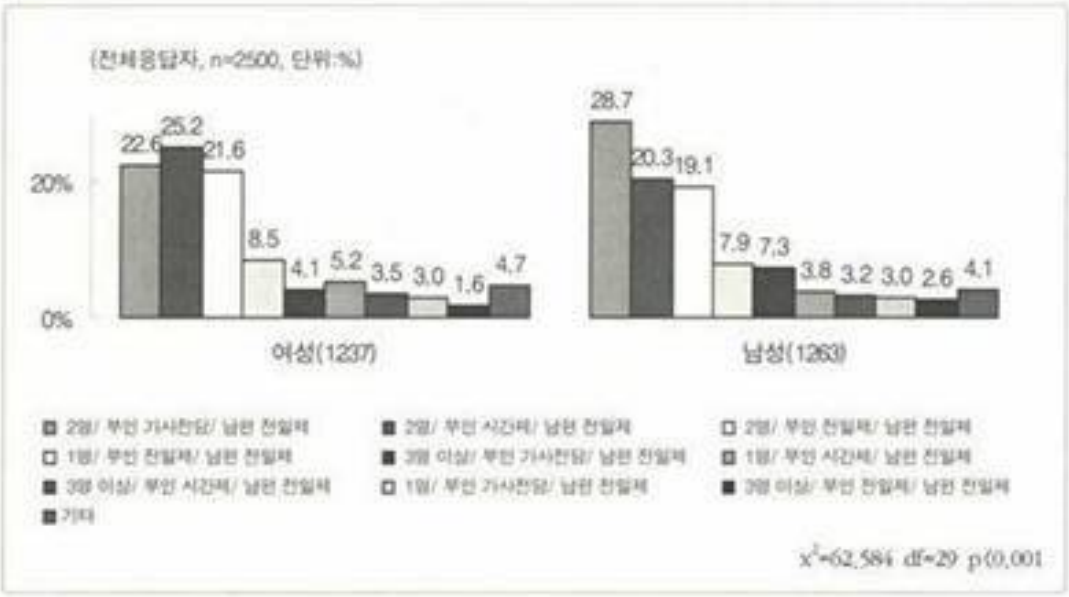
<그림 4-27> 이상적 자녀수와 부부의 경제활동 유형



64.5%이고 여성의 가사전담에 남성 홑벌이 선호비율은 34.7%로 약 3명중 1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족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성, 연령, 학력, 직업, 고용상태 등 거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이상적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3가지 주된 형태에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 가장 큰 차이는 자녀 2명에 전통적 남성생계부양형 가구형태에 대한 선호가 여성(22.6%)보다 남성(28.7%)이 더 높다는 점이다. 반면, 자녀 2명에 여성 시간제 근로형태의 맞벌이나 전일제 형태의 맞벌이는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형태이다(여성은 최소 65.6% 이상, 남성은 최소 56.9% 이상). 그렇지만 남성의 절반이상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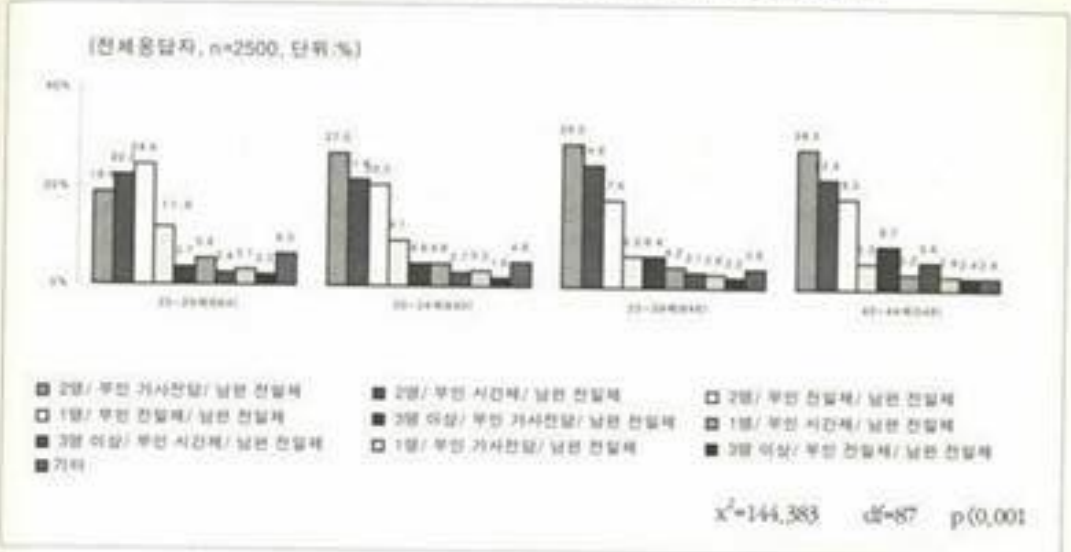
〈그림 4-28〉 성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연령별로는 25~29세의 저연령층의 선호도가 다른 연령층과는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25~29세의 68.2%가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시간제 포함)을 희망하는 맞벌이 지향을 나타낸다. 특히, 자녀 2명에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 형태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낮은 것이 특징이다. 반면, 30~40대는 선호유형의 패턴이 유사하고 맞벌이와 홑벌이에 대한 선호도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한다. 25~29세의 저연령층은 자녀 둘에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고, 자녀 1명에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도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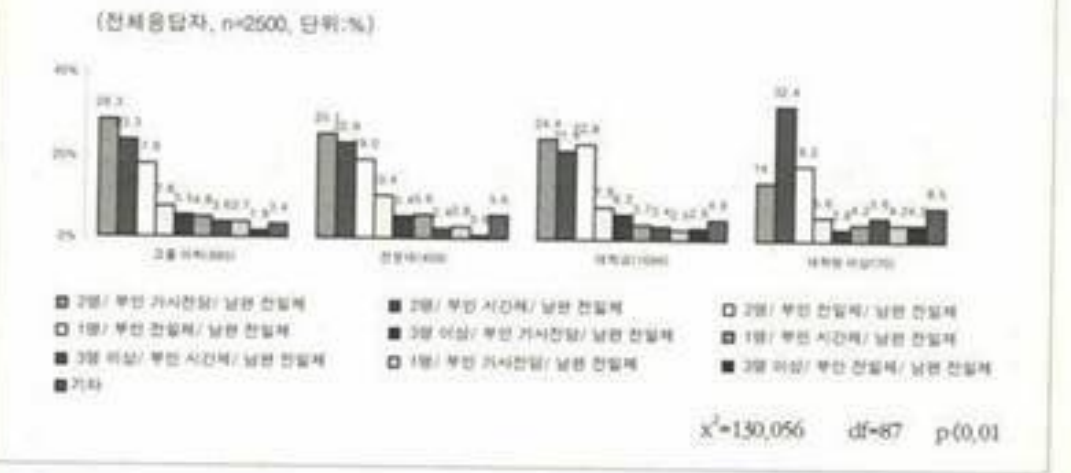
학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도 매우 뚜렷하다.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은 자녀 2명에 남성생계

〈그림 4-29〉 연령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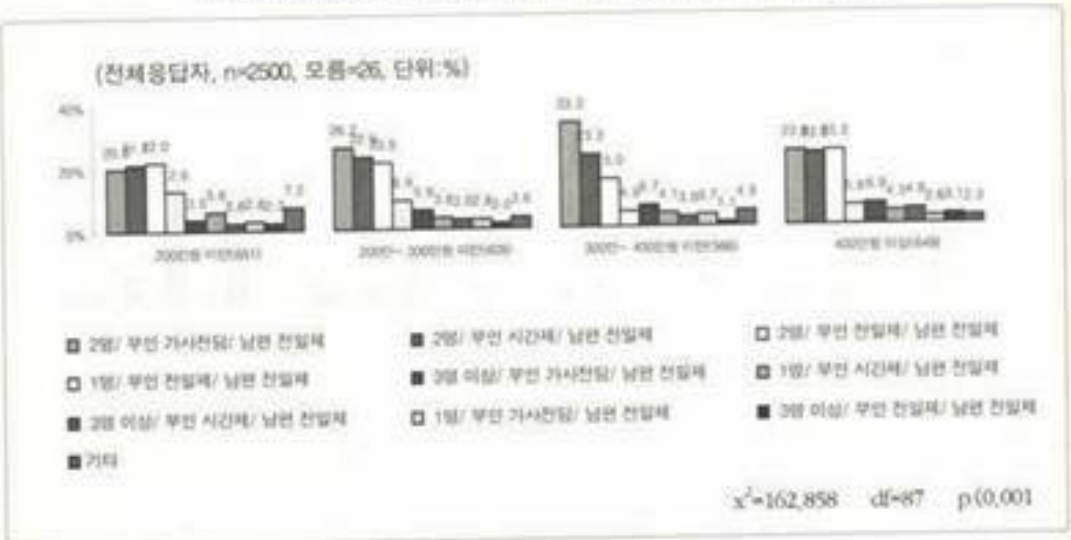
부양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대졸집단은 자녀 2명에 맞벌이를 가장 선호하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은 자녀 2명에 부인의 시간제 근로형태의 맞벌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30〉 학력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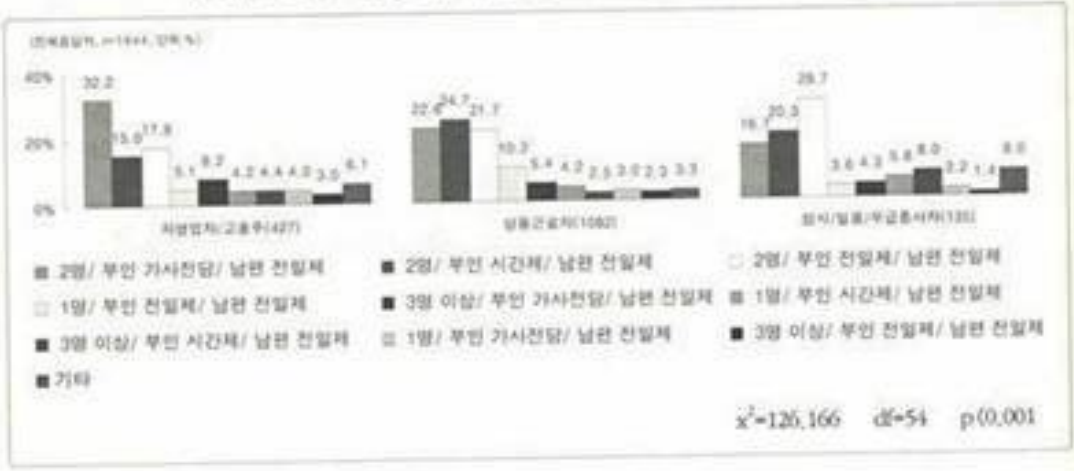
월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2명에 남성생계부양형태를 선호하지만,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는 이런 전통적 가족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300만원대 소득집단에서 자녀 2명에 남성홑벌이 형태가 가장 선호된다.

〈그림 4-31〉 월소득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고용상태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에서 자녀 2명에 남성홑벌이가 가장 선호되고, 상용근로자층은 3가지 주된 형태가 골고루 희망되고 있지만 자녀 2명에 시간제 맞벌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오히려 자녀 2명에 맞벌이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고 자녀 2명에 전통적인 남성 홑벌이에 대한 선호도는 16.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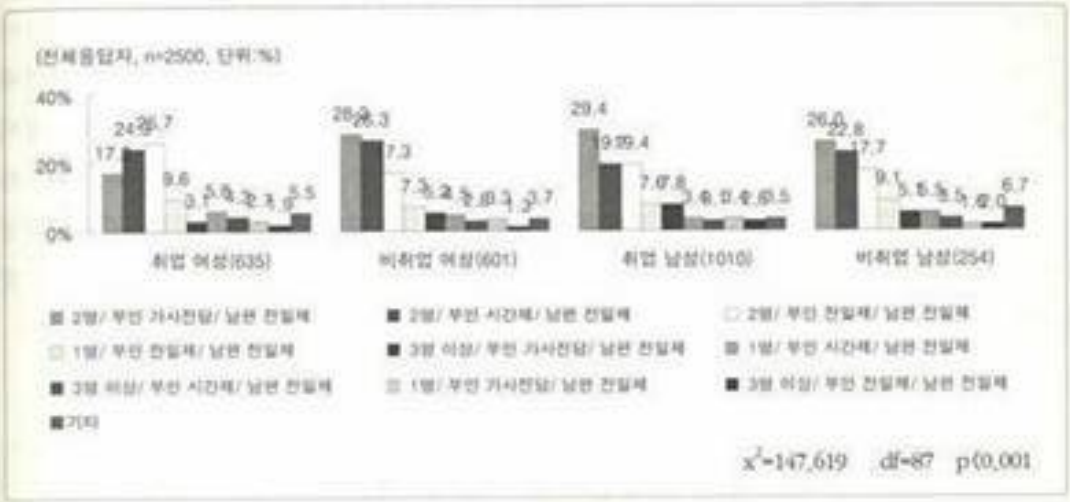
〈그림 4-32〉 고용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성별 취업상태에 따른 이상적 자녀수와 부부경제활동 유형에서는 취업여성의 선호도 패턴이 다른 집단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 즉, 자녀 2명에 전일제 맞벌이 선호가 가장 높고(25.7%), 자녀 2명에 남성 홑벌이(17.2%)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다. 반면, 취업남성은 자녀

2명에 남성 홑벌이 형태의 선호도(29.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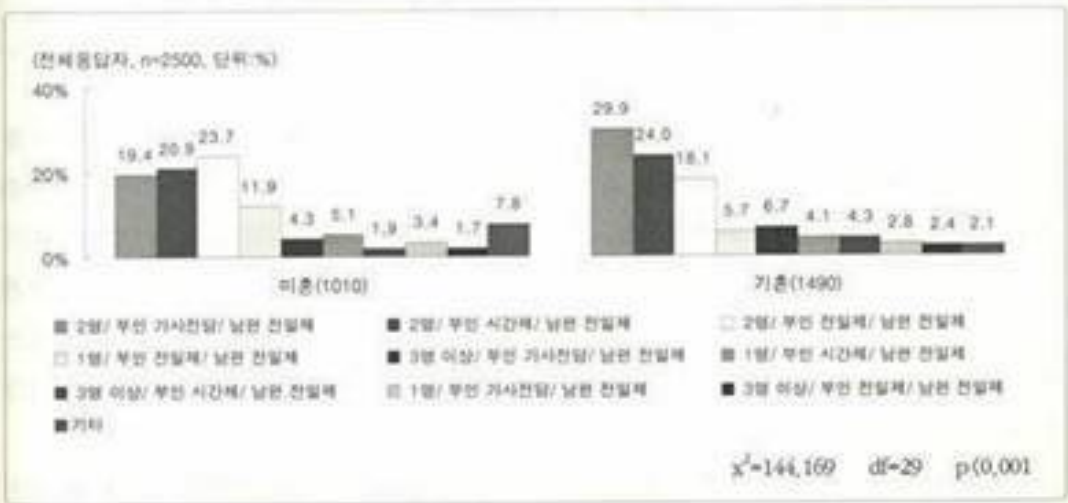
〈그림 4-33〉 성 & 취업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x^2=147.619 df=87 p(0.001

미혼집단은 '2명의 자녀와 전일제 맞벌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 2명+여성 시간제+남성 전일제' (20.9%)이었다. 자녀 둘에 홑벌이 지지비율은 19.4%로 나타나 전체 평균 25.7%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미혼집단에서 자녀 하나에 맞벌이 가구형태를 지지하는 비율이 11.9%나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기혼은 자녀 둘에 남성 홑벌이 형태(29.9%)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이 자녀 둘에

〈그림 4-34〉 혼인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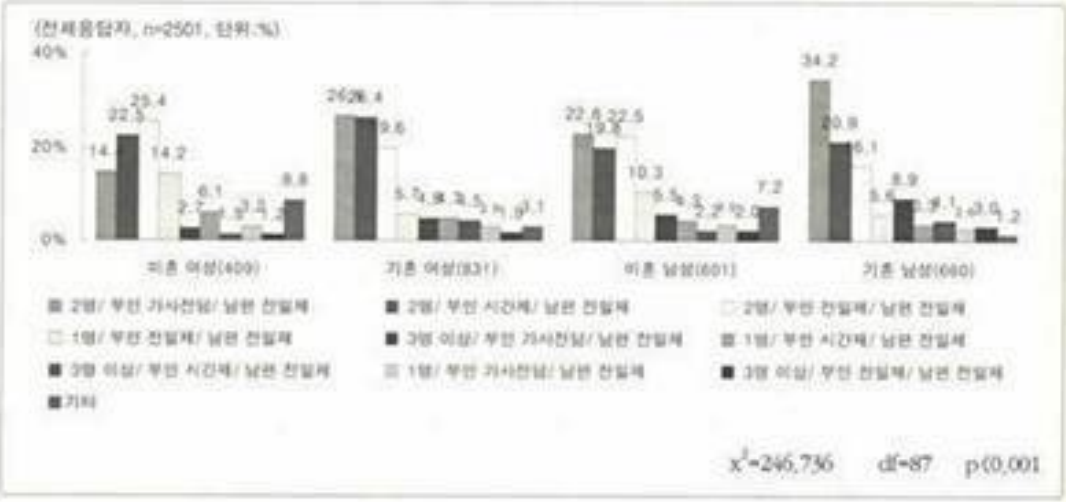


x^2=144.169 df=29 p(0.001

부인 시간제, 남편 전일제 형태를 지지한다(24.0%). 자녀 둘에 맞벌이 형태의 가구에 대한 선호는 18.1%였다.

미혼과 기혼내부의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은 자녀 2명에 남성 홑벌이와 자녀2명에 부인 시간제 맞벌이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26% 정도로 유사하고, 자녀 2명에 전일제 맞벌이 형태에 대한 선호가 20%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기혼남성은 자녀 2에 남성 홑벌이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3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녀 명에 부인 시간제 맞벌이, 전일제 맞벌이의 순서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에서는 자녀 2명에 맞벌이 선호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자녀 2명에 전통적인 남성 홑벌이에 대한 선호도에서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미혼남성은 22.8%가 이런 형태를 선호하는 반면, 미혼여성은 그 절반정도인 14.4%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성&혼인상태별 이상적인 자녀수 및 부부의 경제활동유형



미혼남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구형태는 자녀 2명에 부부 모두 전일제 맞벌이를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표 4-11〉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녀2명 + 부인 전일제 + 남편 전일제]가 2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자녀 2명 +부인 시간제 + 남편 전일제]가 20.9%, [자녀 2명 + 부인 가사전담 + 남편 전일제] 19.4%, [자녀 1명 + 부인 전일제 + 남편 전일제] 11.9%의 순서이다. 남성생계부양의 홑벌이에 자녀 2명의 전통적 핵가족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은 14.5%에 불과하고, 미혼남성은 22.7%에 해당하여 미혼남녀간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가사전담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비율은 23.0%에 불과하며, 미혼남성은

| 표 4-11 | 미혼남녀의 이상적인 자녀수+부부경제활동 유형

(단위 : %)

유 형	전체	여성(407)	남성(603)
자녀 2명 + 부인 전일제	23.7	25.6	22.5
자녀 2명 + 부인 시간제	20.9	22.6	19.7
자녀 2명 + 부인 가사전담	19.4	14.5	22.7
자녀 1명 + 부인 전일제	11.9	14.2	10.4
자녀 1명 + 부인 시간제	5.1	6.1	4.3
자녀 3명 이상 + 부인 가사전담	4.3	2.7	5.4
자녀 1명 + 부인 가사전담	3.4	3.1	3.5
		x^2=43.838 df=26	p<0.05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를 희망하는 미혼남녀의 비율은 많아야 30% 내외이며 70% 이상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를 희망하는 가운데 여성의 전일제 희망비율은 미혼여성이 42.8%이고, 미혼남성 35.9%이며, 여성의 시간제 희망비율은 미혼여성이 34.7%, 미혼남성 30.5%로서 시간제보다는 전일제 맞벌이를 미혼남녀 공히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의 홑벌이를 전제로 운영되었던 사회제도들이 앞으로는 맞벌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1) 여성의 결혼 후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기혼여성의 이상적 경제활동유형에 대해 전일제(31.4%)와 시간제(33.3%), 가사전담(34.8%)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이상적 경제활동유형에 대한 의견은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여부, 학력, 월소득, 직업 및 고용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3가지 경제활동유형에 대해 골고루 지지하지만, 여성은 시간제(36.6%), 전일제(32.7%), 가사전담(30.3%)의 순서로 결혼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 정도(69.3%)에 달했다. 남성은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으로 가사전담(39.2%),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해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30.0% 정도를 차지하였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10% 정도 낮았다. 연령이 젊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특히 전일제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5~29세 연령의 40% 정도는 기혼여성의 전일제 노동을 지지하고, 40~44세 연령의 40% 정도가 기혼여성의 가사전담을 지지했다.

미혼의 기혼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는 전일제(38.6%), 시간제(32.2%), 가사전담(27.7%)의 순이었고, 기혼은 가사전담(39.6%), 시간제(34.0%), 전일제(26.4%) 순으로 나타나, 결혼지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연령효과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여성은

| 표 4-12 | 응답자 특성별 기혼여성의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단위 : 명, %)

		빈도(명)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유의수준
전체		(2500)	31.4	33.3	34.8	
성	여성	(1237)	32.7	36.6	30.3	x^2=24.24 df=2 p(0.001
	남성	(1263)	30.0	30.0	39.2	
연령	25~29세	(664)	39.6	33.8	26.0	x^2=45.83 df=6 p(0.001
	30~34세	(640)	31.6	32.5	35.2	
	35~39세	(648)	26.8	33.9	38.5	
	40~44세	(548)	26.5	32.8	40.6	
혼인상태	미혼	(1010)	38.6	32.2	27.7	x^2=53.73 df=2 p(0.001
	기혼	(1490)	26.4	34.0	39.6	
취업상태	취업	(1644)	33.3	31.8	34.2	x^2=9.52 df=2 p(0.01
	비취업/미취업	(856)	27.6	36.1	35.9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38.3	37.4	23.8	x^2=60.27 df=6 p(0.001
	비취업 여성	(603)	26.9	35.8	37.0	
	취업 남성	(1010)	30.2	28.3	40.7	
	비취업 남성	(253)	29.3	36.7	33.4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39.4	31.3	27.7	x^2=65.30 df=6 p(0.001
	미혼 비취업자	(345)	37.2	34.0	27.7	
	기혼 취업자	(979)	29.2	32.1	38.6	
	기혼 비취업자	(511)	21.1	37.5	41.5	
학력	고졸 이하	(885)	27.8	33.7	37.9	x^2=18.17 df=6 p(0.01
	전문대	(459)	31.0	35.2	33.8	
	대학교	(1086)	34.4	31.2	33.5	
	대학원 이상	(70)	31.0	46.2	22.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651)	37.9	34.2	27.2	x^2=53.29 df=6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608)	32.6	31.5	35.1	
	300만~ 400만원 미만	(566)	21.5	33.8	44.3	
	400만원 이상	(649)	32.7	33.4	33.7	
	모름/ 무응답	(26)	20.3	38.5	38.8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25.7	39.3	33.6	x^2=50.26 df=8 p(0.001
	화이트칼라	(693)	37.2	28.7	32.8	
	블루칼라	(782)	31.6	32.9	35.6	
	전업 주부	(455)	21.0	35.9	43.1	
	학생/실업/비취업	(401)	35.0	36.3	27.8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24.2	30.9	44.9	x^2=50.04 df=4 p(0.001
	상용근로자	(1082)	38.0	29.7	31.3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5.3	51.2	23.5	

기혼여성의 전일제 지지비율이 38.3%로 가장 높고, 취업남성은 가사전담 지지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전일제 지지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력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지지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하에서는 기혼여성의 가사전담 지지비율(37.9%)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서는 가사전담보다는 시간제(특히, 대학원이상)와 전일제(특히, 대졸) 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기혼여성의 전일제 참여 지지비율이 높고, 300~400만원 집단에서는 가사전담 지지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층은 가사전담 지지비율(43.1%)이 가장 높지만 시간제(35.9%)와 전일제(21.0%)를 합해 보면, 가사전담보다는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비율(56.9%)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업주부 자신도 가사전담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지지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2) 남성의 결혼 후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기혼남성의 이상적 경제활동유형으로는 전일제(96.5%)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태도의 단일성은 기혼여성의 이상적 경제활동유형에 대한 태도와는 뚜렷이 대비된다. 기혼남성의 이상적 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는 연령, 혼인, 월소득,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성, 취업여부,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13)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젊은 연령일수록 남성의 전일제 지지비율이 감소하고, 미혼보다는 기혼의 남성전일제 지지비율이 높으며, 취업여성보다는 취업남성 스스로의 지지비율이 높았다. 미혼취업자의 경우 기혼취업자에 비해 남성의 전일제 지지비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혼남성의 전일제 지지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문/고위직보다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기혼남성의 전일제 경제활동을 지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3 | 응답자 특성별 기혼남성의 이상적 경제활동 유형

(단위 : 명, %)

		빈도 (명)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유의수준
전체		(2500)	96.5	2.6	0.3	-
성	여성	(1237)	96.3	2.9	0.3	N.S.
	남성	(1263)	96.8	2.3	0.2	
연령	25~29세	(664)	94.7	3.9	0.7	χ^2=21.03 df=6 p(0.01
	30~34세	(640)	96.1	3.3	0.1	
	35~39세	(648)	97.0	2.1	0.0	
	40~44세	(548)	98.8	0.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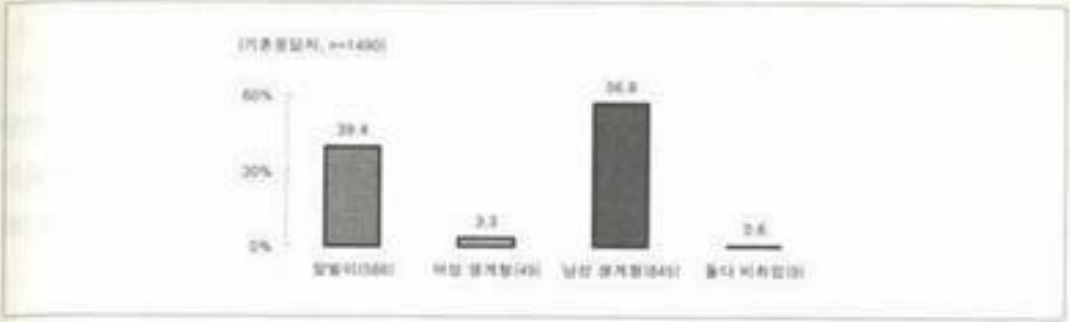
		빈도 (명)	전일제 (%)	시간제 (%)	가사전담 (%)	유의수준
혼인상태	미혼	(1010)	94.1	4.1	0.5	x^2=18.67 df=2 p<0.001
	기혼	(1490)	98.2	1.6	0.1	
취업상태	취업	(1644)	96.7	2.3	0.4	N.S.
	비취업/미취업	(856)	96.2	3.3	0.0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95.7	3.2	0.6	x^2=13.61 df=6 p<0.05
	비취업 여성	(603)	96.9	2.7	0.0	
	취업 남성	(1010)	97.3	1.7	0.3	
	비취업 남성	(253)	94.6	4.8	0.0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94.3	3.5	0.7	x^2=26.94 df=6 p<0.001
	미혼 비취업자	(345)	93.6	5.3	0.0	
	기혼 취업자	(979)	98.3	1.4	0.2	
	기혼 비취업자	(511)	98.0	2.0	0.0	
학력	고졸 이하	(885)	97.3	1.8	0.3	N.S.
	전문대	(459)	95.4	4.3	0.2	
	대학교	(1086)	96.4	2.6	0.2	
	대학원 이상	(70)	97.3	2.7	0.0	
월소득	200만원 미만	(651)	94.2	4.6	0.5	x^2=23.33 df=6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608)	97.5	1.6	0.0	
	300만~ 400만원 미만	(566)	96.3	3.0	0.6	
	400만원 이상	(649)	98.2	1.4	0.0	
	모름/ 무응답	(26)	95.0	2.6	0.0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94.2	3.7	0.4	x^2=16.27 df=8 p<0.05
	화이트칼라	(693)	97.3	1.4	0.3	
	블루칼라	(782)	96.8	2.7	0.5	
	전업 주부	(455)	97.9	2.1	0.0	
	학생/실업/비취업	(401)	94.4	4.8	0.0	
취업자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95.9	3.7	0.4	x^2=22.44 df=4 p<0.001
	상용근로자	(1082)	97.5	1.2	0.4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93.3	6.7	0.0	

3) 맞벌이와 홑벌이 분포

서울시 25~44세 남녀는 이상적 자녀수 및 부부경제활동유형 선호도에서 자녀수와 상관없이 여성 가사전담에 남성 홑벌이가 이루어지는 전통적 핵가족모델을 35% 정도 선호하였지만(기혼집단은 이보다 높은 39.7%가 선호함), 실제로 기혼응답자 가운데 이러한 남성 홑벌이 가구는 56.8%를 차지하고, 맞벌이 가구형태는 약 40%(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홑벌이 가구나 부부실업가구의 비율은 각각 3.3%, 0.6%로 미미했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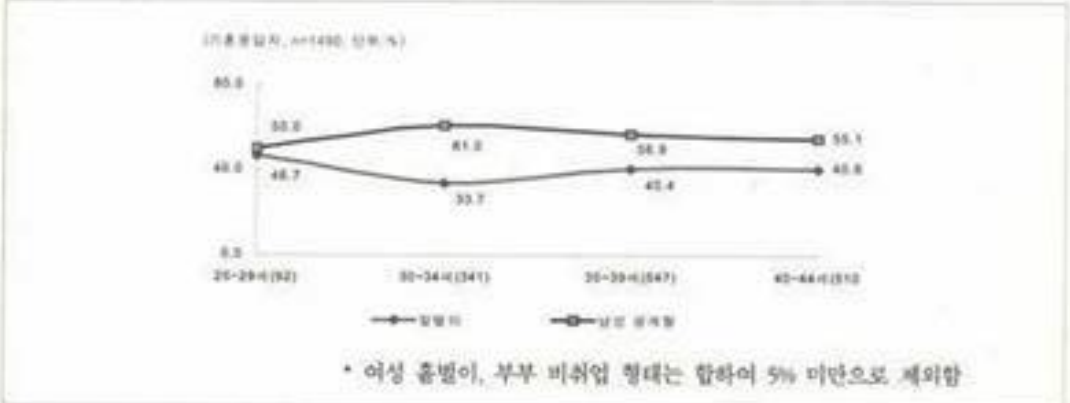
〈그림 4-36〉 기혼부부의 경제활동유형



연령별로 살펴보면, 25~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성 홑벌이(50.0%)와 맞벌이(46.7%)가 거의 유사한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맞벌이 비율이 높다.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는 30~34세 연령층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고(33.7%) 남성 홑벌이 비율이 61.0%에 해당했다. 30~44세 사이에서는 남성 홑벌이 대 맞벌이 비율이 6 : 4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결혼 초기에 맞벌이를 했다가 임신과 출산, 초기 양육을 계기로 남성 홑벌이로 전환된 뒤 35세 이후에 맞벌이가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이 기혼부부의 경제활동유형에서도 나타났다. 남성 홑벌이는 3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30대 후반과 40대 초반까지 약간 감소하지만 50% 이상을 차지한다. 맞벌이 유형은 30대에 저점을 이루고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다소 증가하지만 20대에 나타난 맞벌이 비율까지는 회복하지 못한다.

〈그림 4-37〉 기혼부부의 연령별 경제활동유형



* 여성 홑벌이, 부부 비취업 형태는 합하여 5% 미만으로 제외함

12) 2005년, 서울시 맞벌이 가구 비율은 30.1%로서, 전국 35.2%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선주 외(2007)

3. 부부 역할에 대한 태도

1) 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지지

(1) 문항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는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가족모델에 대한 지지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남편은 직업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는 것에 62.6%가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소득,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적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지지도가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지지하는

| 표 4-14 | 부부역할 -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단위 : %)

		BASE FOR %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500)	16.5	20.9	62.6	3.6점
성별	여성	(1237)	18.0	22.4	59.5	3.5점
	남성	(1263)	15.0	19.4	65.5	3.6점
				t=-2.584	df=2,497	p(0.05
연령별	25~29세	(664)	21.5	25.0	53.4	3.4점
	30~34세	(640)	16.0	21.6	62.2	3.6점
	35~39세	(648)	14.2	19.5	66.4	3.7점
	40~44세	(548)	13.8	16.7	69.6	3.7점
					F=13.447 df=3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20.6	24.5	54.9	3.4점
	기혼	(1490)	13.8	18.5	67.8	3.7점
				t=-6.666	df=2,497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20.1	23.0	57.0	3.5점
	비취업 여성	(603)	15.9	21.7	62.2	3.6점
	취업 남성	(1010)	14.1	19.5	66.4	3.6점
	비취업 남성	(253)	18.7	19.2	62.1	3.5점
					F=5.346 df=3	p(0.01
학력별	고졸 이하	(885)	13.7	21.2	65.1	3.7점
	전문대	(459)	20.0	20.7	59.2	3.5점
	대학교	(1086)	17.0	20.9	62.0	3.5점
	대학원 이상	(70)	22.1	17.3	60.6	3.4점
					F=4.482 df=3	p(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23.1	25.9	50.9	3.3점
	200만~ 300만원 미만	(608)	14.6	19.9	65.6	3.7점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1.6	20.0	68.3	3.7점
	400만원 이상	(649)	16.3	17.8	65.9	3.6점
	모름/ 무응답	(26)	7.9	15.1	77.0	3.7점
					F=18.095 df=3	p(0.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14.1	16.0	69.8	3.7점
	상용근로자	(1062)	16.4	22.5	61.1	3.6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3.2	22.6	54.2	3.3점
					F=7.318 df=2	p(0.01

비율이 높았다. 기혼의 경우에는 67.8%가 남성 부양자 이데올로기에 지지했지만, 미혼의 경우 54.9%로 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 대졸보다, 대졸이 대학원졸 이상보다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집단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았고 전업주부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가장 적게 지지하는 것은 이들이 가장 젊은 연령층에 속하기 때문으로 부부역할관이 연령효과와 결합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2) 문항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는 가내돌봄노동에 대한 성별분업의식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대한 지지보다

| 표 4-15 | 부부역할 -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단위 : %)

		빈도(명)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2500)	12.8	29.0	58.1	3.5점
성별	여성	(1237)	16.0	31.4	52.6	3.4점
	남성	(1263)	9.8	26.6	63.6	3.7점
				t=-6.267	df=2,497	p(0.001
연령별	25~29세	(664)	15.2	32.2	52.6	3.4점
	30~34세	(640)	13.5	30.1	56.2	3.5점
	35~39세	(648)	11.8	29.5	58.7	3.6점
	40~44세	(548)	10.6	23.0	66.4	3.7점
				F=7.846	df=3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14.7	32.0	53.3	3.5점
	기혼	(1490)	11.6	27.0	61.4	3.6점
				t=-3.684	df=2,497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8.2	31.4	50.5	3.4점
	비취업 여성	(603)	13.7	31.4	54.8	3.5점
	취업 남성	(1010)	8.9	26.1	65.0	3.7점
	비취업 남성	(253)	13.2	28.7	58.1	3.6점
				F=15.525	df=3	p(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17.1	30.2	52.6	3.4점
	200만~ 300만원 미만	(608)	9.8	32.3	57.9	3.6점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0.4	26.4	63.1	3.6점
	400만원 이상	(649)	13.9	26.6	59.5	3.6점
	모름/ 무응답	(26)	5.5	36.1	58.4	3.6점
				F=6.665	df=3	p(0.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12.5	23.0	64.5	3.6점
	상용근로자	(1082)	11.5	30.8	57.7	3.6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0.3	23.4	56.4	3.4점
				F=3.487	df=2	p(0.05

점수가 낮았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성, 연령, 혼인상태, 성&취업상태별, 소득,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평균 3.4점)보다 남성(평균 3.7점)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미혼(평균 3.5점)보다 기혼(평균 3.6점)의 지지도가 높고, 취업여성(평균 3.4점)은 취업남성(평균 3.7점)보다 지지도가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견해에 지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평균 3.56점)와 임시/일용/무급종사자(평균 3.42점)가 자영업자/고용주(평균 3.64)보다 지지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과 젊은 연령층, 미혼, 취업여성 등은 돌봄노동의 성별분업을 상대적으로 덜 지지하는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문항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54점으로 나타났으며, 성, 연령, 혼인상태, 취업상태, 학력, 소득,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평균 3.50점)보다 남성(평균 3.58점) 스스로 남성생계부양 역할을 더 지지하고, 미혼(평균 3.40점)보다 기혼(평균 3.64점)의 지지도가 높았다. 또한 연령이 젊을수록 이런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에 대한 지지도는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견해에 대한 지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 표 4-16 | 부부역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단위 : %)

		빈도(명)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500)	12.9	28.6	58.5	3.54점
성별	여성	(1237)	14.6	29.4	56.0	3.50점
	남성	(1263)	11.3	27.8	60.9	3.58점
				t=-2.364	df=2,497	p(0.05
연령별	25~29세	(664)	17.5	32.3	50.3	3.40점
	30~34세	(640)	12.7	30.7	56.5	3.52점
	35~39세	(648)	12.5	26.4	61.1	3.56점
	40~44세	(548)	8.1	24.3	67.6	3.73점
				F=14.742	df=3	p(0.001
혼인상태별	미혼	(1010)	16.9	32.0	51.1	3.40점
	기혼	(1490)	10.2	26.3	63.5	3.64점
				t=-6.908	df=2,497	p(0.001
취업상태별	취업	(1644)	12.0	27.8	60.2	3.57점
	비취업/미취업	(856)	14.7	30.2	55.1	3.49점
				t=2.047	df=2,497	p(0.05

		빈도(명)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4.0	30.3	55.8	3.50점
	비취업 여성	(603)	15.2	28.5	56.2	3.51점
	취업 남성	(1010)	10.7	26.2	63.0	3.62점
	비취업 남성	(253)	13.3	34.3	52.3	3.46점
					F=4.068 df=3	p(0.01
학력별	고졸 이하	(885)	9.3	29.2	61.5	3.64점
	전문대	(459)	12.5	31.4	56.1	3.53점
	대학교	(1086)	15.7	27.1	57.1	3.48점
	대학원 이상	(70)	17.9	25.5	56.7	3.41점
					F=6.108 df=3	p(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18.0	31.9	50.0	3.38점
	200만~ 300만원 미만	(606)	12.5	27.2	60.4	3.58점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1.5	28.1	60.5	3.60점
	400만원 이상	(649)	9.5	27.3	63.2	3.63점
	모름/ 무응답	(26)	11.9	24.0	64.1	3.56점
					F=11.333 df=3	p(0.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10.4	27.5	62.1	3.63점
	상용근로자	(1082)	12.0	27.3	60.8	3.57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17.1	32.6	50.2	3.39점
					F=4.040 df=2	p(0.05

(4) 문항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10점으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취업여성의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대해서는 성, 연령, 혼인상태, 성 & 취업상태별, 학력, 월소득별로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있었다.

여성(평균 3.0점)보다 남성(평균 3.2점)의 지지도가 높고, 25~29세 젊은 연령층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평균 3.0점). 혼인상태별로는 미혼(평균 3.0점)보다 기혼(평균 3.1점)의 지지도가 높았다. 취업여성(평균 2.7점)의 지지도가 가장 낮았는데, 취업남성(평균 3.2점)과의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취업여성(평균 3.0점)에 비해 취업남성(평균 3.2점)의 지지도가 높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젊은 연령층이 많은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집단이 가장 지지도 낮았다(평균 3.0점).

부부간의 전통적 성역할분업에 대해 여성과 젊은 연령층, 미혼집단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4-17 | 부부역할-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단위 : %)

		빈도(명)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500)	29.3	32.5	38.3	3.1점
성별	여성	(1237)	33.5	31.6	34.8	3.0점
	남성	(1263)	25.1	33.3	41.6	3.2점
				t=-4.945	df=2,497	p(0.001
연령별	25~29세	(664)	32.9	31.9	35.2	3.0점
	30~34세	(640)	29.5	30.3	40.1	3.1점
	35~39세	(648)	29.7	33.3	37.0	3.1점
	40~44세	(548)	24.0	34.6	41.4	3.2점
				F=3.191	df=3	p(0.05
혼인상태별	미혼	(1010)	32.0	32.3	35.6	3.0점
	기혼	(1490)	27.4	32.5	40.1	3.1점
				t=-2.483	df=2,497	p(0.05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34.9	32.1	33.0	3.0점
	비취업 여성	(603)	32.0	31.2	36.7	3.0점
	취업 남성	(1010)	24.2	34.3	41.4	3.2점
	비취업 남성	(253)	28.5	29.0	42.5	3.2점
				F=8.939	df=3	p(0.001
학력별	고졸 이하	(885)	26.3	33.5	40.2	3.2점
	전문대	(459)	33.8	31.2	35.0	3.0점
	대학교	(1086)	29.1	32.9	37.9	3.1점
	대학원 이상	(70)	39.8	20.0	40.2	2.9점
				F=2.943	df=3	p(0.0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34.6	31.2	34.1	3.0점
	200만~ 300만원 미만	(608)	27.2	31.1	41.7	3.2점
	300만~ 400만원 미만	(566)	27.2	33.4	39.4	3.1점
	400만원 이상	(649)	28.0	33.7	38.4	3.1점
	모름/ 무응답	(26)	21.4	43.7	35.0	3.2점
				F=3.706	df=3	p(0.05

2) 탈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지지

(1) 문항 '남편은 아내와 육아 및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에 대해 5점 만점에 3.74점의 지지도가 나타나 공평한 가사 및 양육분담에 대한 의식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성, 성별 취업상태,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 학력, 소득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평균 3.85점)이 남성(평균 3.64)에 비해 가사분담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취업자 중에서도 취업여성(평균 3.87점)이 취업남성(평균 3.66점)에 비해 가사분담 의식이 더 강했다.

| 표 4-18 | 응답자 특성별 부부간 가사 및 육아분담에 대한 생각

(단위 : %)

		빈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유의수준
전 체		(2500)	0.2	5.1	28.8	52.0	13.9	5.3	65.8	3.74	
성	여성	(1237)	0.2	4.0	26.0	50.7	19.1	4.2	69.8	3.85	t=6.77 df=2497 p(0.001
	남성	(1263)	0.1	6.3	31.6	53.2	8.7	6.4	61.9	3.64	
성 & 취업 상태	취업 여성	(634)	0.2	3.6	24.3	52.8	19.0	3.9	71.9	3.87	F=16.49 df=2496 p(0.001
	비취업 여성	(603)	0.2	4.3	27.8	48.4	19.2	4.5	67.6	3.82	
	취업 남성	(1010)	0.2	5.4	32.0	53.3	9.1	5.6	62.4	3.66	
	비취업 남성	(253)	0.0	9.7	30.3	52.8	7.2	9.7	59.9	3.57	
고용 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0.0	5.6	26.9	53.6	13.8	5.6	67.5	3.76	F=5.73 df=1643 p(0.01
	상용근로자	(1062)	0.3	4.5	30.9	52.9	11.5	4.8	64.3	3.71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0.0	3.8	20.9	53.4	21.9	3.8	75.3	3.93	

(2) 문항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에 대한 지지도는 5점 만점에 2.6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남편이 가사를 전담하는 성역할 반전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집단별로 차이가 있어서 화이트칼라(평균 2.69점)가 블루칼라(2.55점)보다 지지도가 높았고, 미혼 취업자(평균 2.59점)보다 미혼 비취업자(평균 2.78점)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혼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기혼 취업자와 기혼 비취업자가 모두 2.63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실업/비취업 집단의 지지도가 평균 2.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4-19 | 부부역할 –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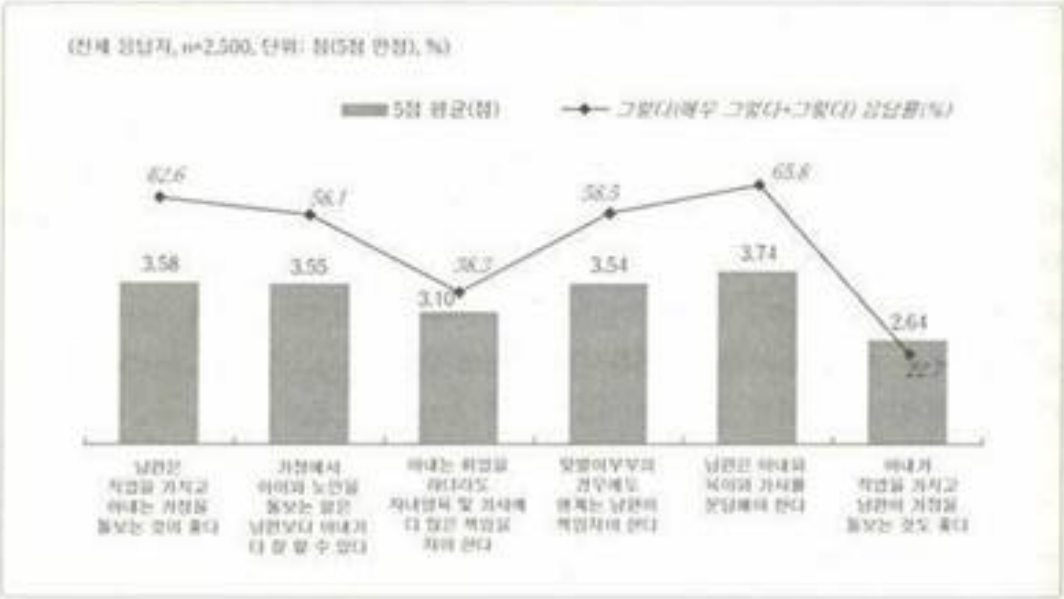
(단위 : %)

		빈도 (명)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500)	43.9	33.1	22.7	2.64점
혼인 & 취업상태별	미 혼 취 업 자	(665)	46.0	34.1	19.9	2.59점
	미 혼 비 취 업 자	(345)	38.3	36.5	24.5	2.78점
	기 혼 취 업 자	(979)	44.1	32.7	23.0	2.63점
	기 혼 비 취 업 자	(511)	44.9	30.4	24.7	2.63점

N.S

		빈도 (명)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5점 평균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44.3	30.4	25.3	2.60점
	화 이 트 칼 라	(693)	41.7	34.1	24.2	2.69점
	블 루 칼 라	(782)	47.8	33.3	18.8	2.55점
	전 업 주 부	(455)	45.1	31.3	23.6	2.61점
	학생/실업/비취업	(401)	39.1	34.6	25.8	2.78점
						N.S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47.9	33.4	18.8	2.52점
	상 용 근 로 자	(1082)	42.7	33.8	23.4	2.66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52.0	29.5	17.8	2.51점
					F=3.371 df=2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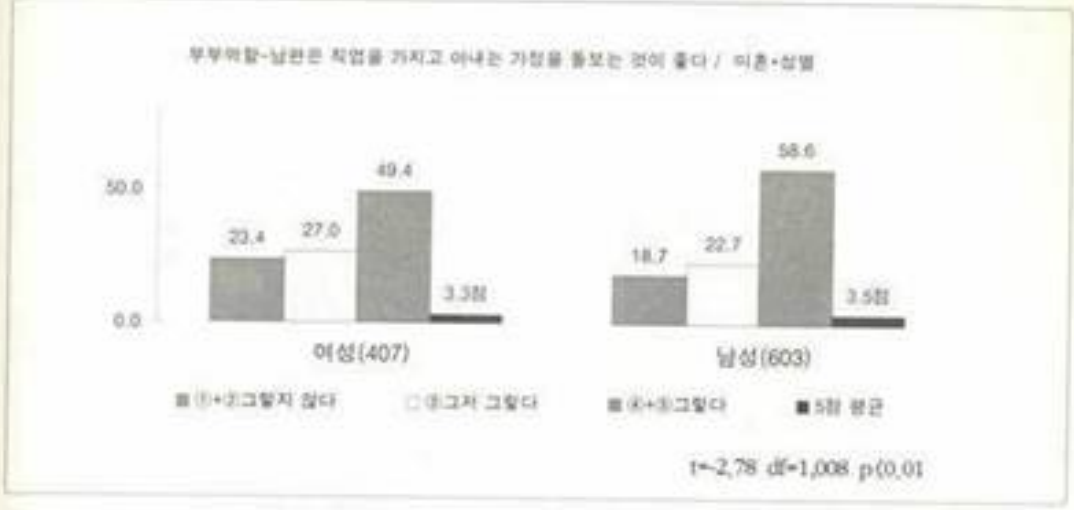
〈그림 4-38〉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3) 미혼남녀의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는전통적인 부부간 성역할분업에 대해 미혼여성보다는 미혼남성이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절반정도가 전통적 역할분업에 찬성하지만 미혼남성은 60%정도에 달했다. 반대로 미혼여성 23.4%가 전통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미혼남성은 18.7%만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림 4-39〉 전통적 부부역할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조사결과에서는 미혼여성의 51.0%와 미혼남성의 67.1%가 전통적 성별분업을 지지하였다. 2005년도 조사에 비해 2008년에 진행된 이 조사에서 미혼남녀 모두 동의비율이 낮아져 전통적 성역할을 반대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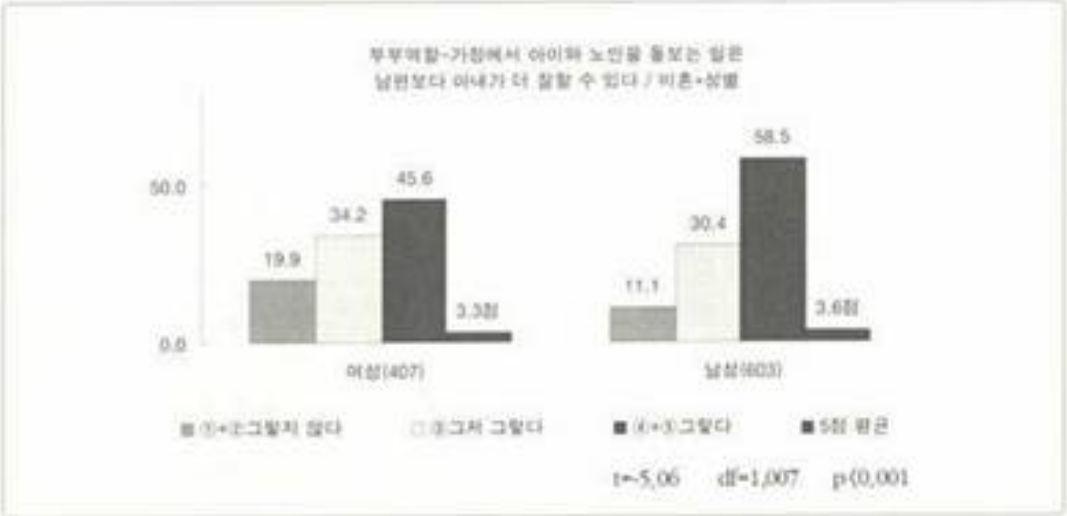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5~34세 젊은층은 절반 정도만 이런 견해에 찬성하고 20% 정도는 반대했다. 그러나 35세 이상 미혼남녀의 경우 60% 이상이 이런 견해에 지지하고 반대의견은 낮게 나타났다

취업중인 미혼여성의 경우 52.4%가 찬성하지만, 비취업 미혼여성은 43.1%만이 이런 견해에 찬성했다. 취업중인 미혼남성은 57.6%, 비취업 미혼남성은 60.4%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비취업 여성이 이런 전통적 부부역할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지만,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비취업 남성이 전통적 부부역할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 상반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취업집단이 전통적 부부성역할의 변화를 더 원한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에 대해 미혼여성의 45.6%, 미혼남성의 58.5%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미혼남성보다는 미혼여성이 전통적인 돌봄노동의 여성전담에 대해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34세와 35~44세 연령층 간에 태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전통적인 돌봄노동의 여성전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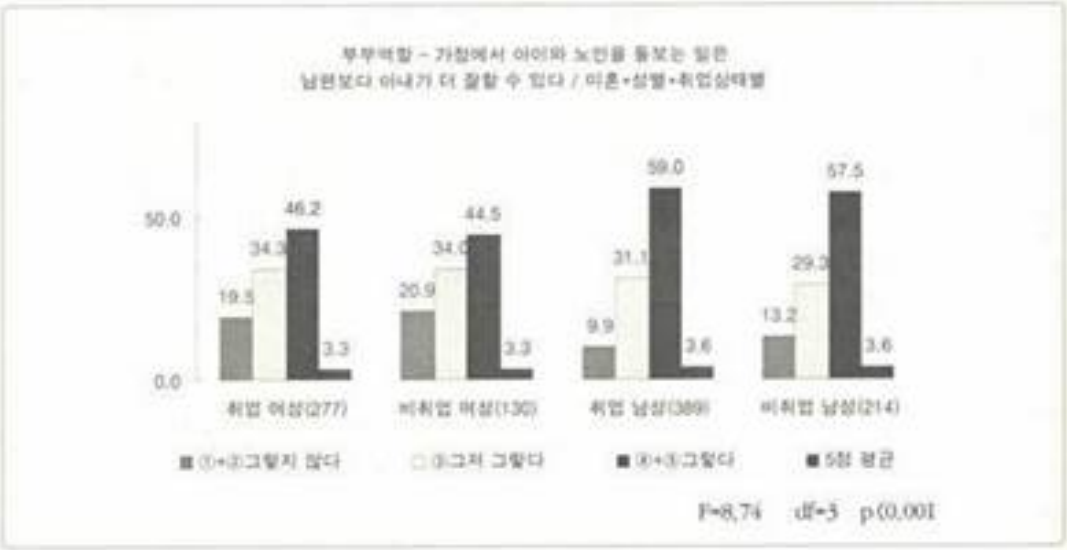
성별과 취업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태도가 매우 유사하고 취업남성과 비취업남성의 태도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취업여부보다는 성별 차이가 태

〈그림 4-40〉 돌봄노동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도를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여성의 46.2%가 찬성하고 19.5%는 반대하지만, 취업남성의 경우 59.0%가 찬성하고 9.9%만이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취업중인 미혼남녀간 전통적인 돌봄노동의 여성전담에 대한 태도에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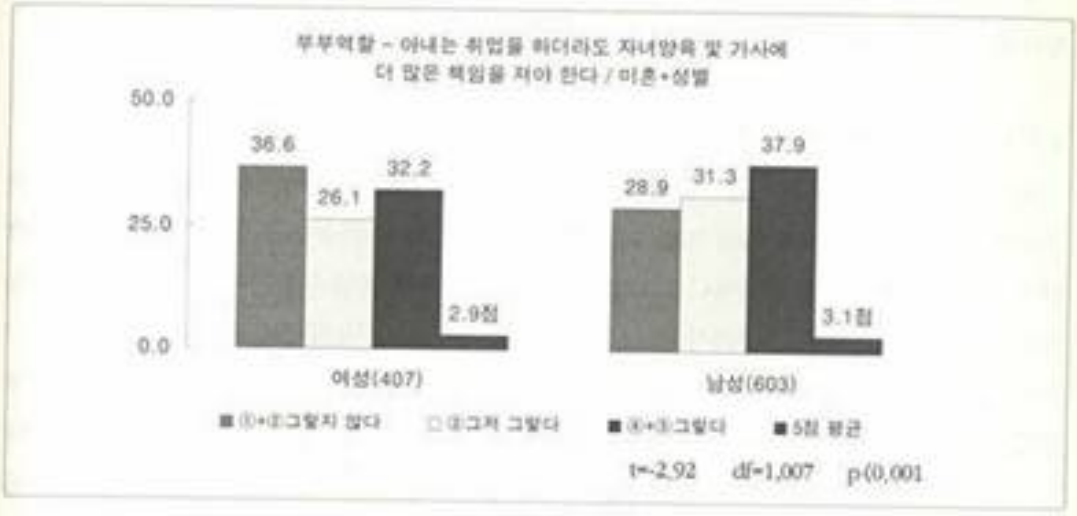
〈그림 4-41〉 돌봄노동에 대한 미혼자의 성별, 취업상태별 태도



(3)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는 것에 미혼여성 3명중 1명(32.2%)이 동의하였으나, 반대 비율이 더 높아 36.6%였다. 한편, 미혼남성의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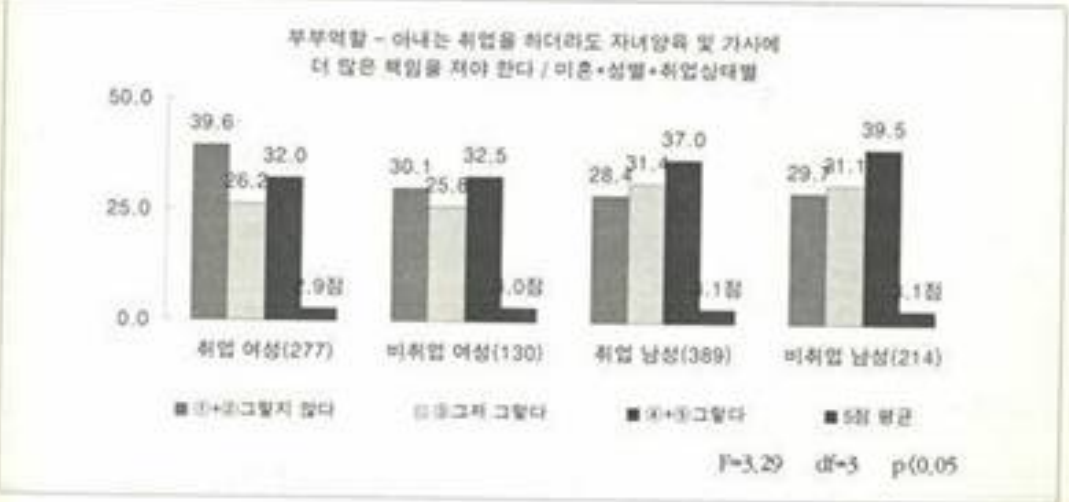
는 동의하고 28.9%는 반대함으로써 미혼남성의 지지도가 더 높지만,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사의 이중부담(책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혼남성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2〉 기혼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미혼 직장여성의 40% 정도는 기혼여성의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지지하지 않고, 비취업 여성의 경우는 30% 정도가 반대하였다. 미혼남성의 경우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찬성 비율이 더 높지만 반대비율도 30% 정도에 달했다. 미혼의 직장남녀가 결혼 후 여성의 일가족 이중부담에 대한 생각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의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 있

〈그림 4-43〉 기혼여성의 이중부담에 대한 미혼남녀의 취업상태별 태도



는 것으로 보인다.

4) 상황에 따른 가사분담 의식

부부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성역할의식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평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남성 생계부양의 경우

만일 남편만 취업한 남성생계부양 가족의 경우에 가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83.1%이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5.3%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성, 성과 취업상태, 학력,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나머지 연령, 소득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83.7%, 남성의 82.5%가 '남편만 취업했다면 가사는 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러한 응답으로부터 여성 자신의 동의비율이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는 흥미로운데, 고졸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평

| 표 4-20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남편만 취업한 경우

(단위 : %)

		빈도(명)	부인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전체		(2500)	83.1	15.3	1.6	
성별	여성	(1237)	83.7	15.1	1.1	
	남성	(1263)	82.5	15.5	2.0	
				x^2=19.317	df=4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82.7	15.5	1.6	
	비취업 여성	(603)	84.7	14.6	0.6	
	취업 남성	(1010)	83.0	15.1	1.9	
	비취업 남성	(253)	80.3	17.4	2.3	
				x^2=25.144	df=12	p(0.05
학력별	고졸 이하	(885)	80.7	18.4	0.8	
	전문대	(459)	85.0	12.3	2.7	
	대학교	(1086)	84.4	14.1	1.6	
	대학원 이상	(70)	80.1	16.0	3.9	
				x^2=37.993	df=12	p(0.001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83.2	14.9	1.7	
	상용근로자	(1082)	82.6	15.5	1.9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84.4	14.0	1.7	
				x^2=16.271	df=8	p(0.05

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18.4%로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에서도 16.0%가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했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가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율이 15.5%로 가장 높고 부인이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가 84.4%로 가장 높다.

(2) 맞벌이 부부일 경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책임져야 한다' 는 비율은 16.7%에 불과하고 82.2%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태도는 성, 연령, 취업상태, 학력, 소득,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87.4%)이 남성(77.0%)보다 공평분담을 더 지지하고, 연령이 젊을수록 맞벌이의 공평한 가사분담을 지지하였다. 취업자(80.3%)보다는 비/미취업자(85.8%)의 경우가 공평한 가사분담을 더 지지하고, 취업여성은 86.7%, 취업남성은 76.3%로 10% 정도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맞벌이의 경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는 것에 덜 지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소득수준과 학력에 반비례해서 나타났다.

| 표 4-21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위 : %)

		빈도(명)	부인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전체		(2500)	16.7	82.2	1.1
성별	여성	(1237)	11.7	87.4	0.8
	남성	(1263)	21.6	77.0	1.4
				x^2=47.928 df=4	p(0.001
연령별	25~29세	(664)	13.6	85.4	1.0
	30~34세	(640)	14.8	83.9	1.2
	35~39세	(648)	17.9	81.2	0.9
	40~44세	(548)	21.3	77.3	1.3
				x^2=24.096 df=12	p(0.05
취업상태별	취업	(1644)	18.5	80.3	1.3
	비취업/미취업	(856)	13.3	85.8	0.9
				x^2=12.744 df=4	p(0.05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2.2	86.7	1.2
	비취업 여성	(603)	11.3	88.2	0.5
	취업 남성	(1010)	22.4	76.3	1.3
	비취업 남성	(253)	18.2	80.0	1.8
				x^2=54.079 df=12	p(0.001

		빈도(명)	부인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성 & 혼인상태별	미혼 여성	(407)	8.4	90.9		0.7
	기혼 여성	(829)	13.4	85.8		0.8
	미혼 남성	(603)	18.9	79.6		1.5
	기혼 남성	(660)	23.9	74.7		1.4
				χ^2=64.194	df=12	p(0.001
학력별	고졸 이하	(885)	15.7	83.5		0.8
	전문대	(459)	14.9	82.8		2.4
	대학교	(1086)	17.9	81.3		0.7
	대학원 이상	(70)	21.5	75.2		3.3
				χ^2=22.020	df=12	p(0.0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12.6	86.0		1.4
	200만~ 300만원 미만	(606)	18.1	81.6		0.3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6.1	82.2		1.7
	400만원 이상	(649)	19.6	79.2		1.2
	모름/ 무응답	(26)	24.7	75.3		0.0
				χ^2=26.057	df=12	p(0.05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22.1	75.7		2.2
	상용근로자	(1082)	16.9	82.2		0.9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19.0	79.3		1.7
				χ^2=37.269	df=8	p(0.001

(3) 여성-생계부양의 경우

다음으로는 현실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성-생계부양의 경우에 가사를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하였다. '남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책임져야 한다' 는 비율은 75.5%로 남성생계부양의 경우 여성의 가사전담 지지비율(83.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성, 연령, 혼인상태, 직업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학력,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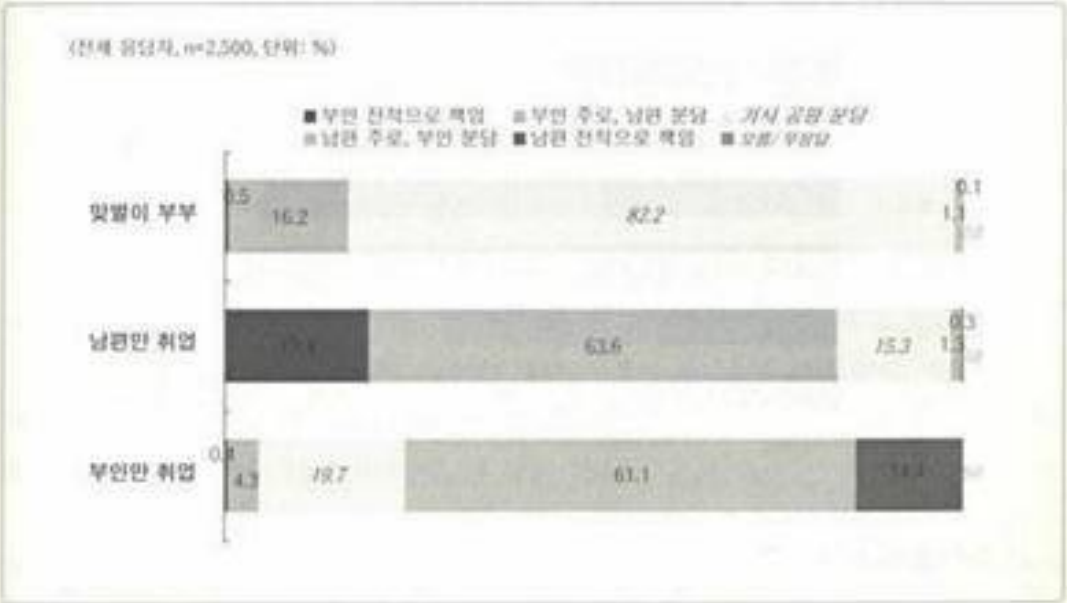
고졸이하의 경우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22.2%로 가장 높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23.7%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이 높았다.

| 표 4-22 |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 부인만 취업한 경우

(단위 : %)

		빈도(%)	부인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남편
전체		(2500)	4.7	19.7	75.5
학력별	고졸 이하	(885)	3.1	22.2	74.5
	전문대	(459)	4.6	18.6	76.8
	대학교	(1086)	6.0	18.6	75.4
	대학원 이상	(70)	6.9	12.3	80.8
				x^2=28.925 df=12	p<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2.4	23.7	74.0
	200만~ 300만원 미만	(608)	4.3	20.9	74.7
	300만~ 400만원 미만	(566)	4.1	18.1	77.6
	400만원 이상	(649)	7.8	16.3	75.9
	모름/ 무응답	(26)	12.7	12.2	75.1
				x^2=38.267 df=12	p<0.001

〈그림 4-44〉 상황별 가사분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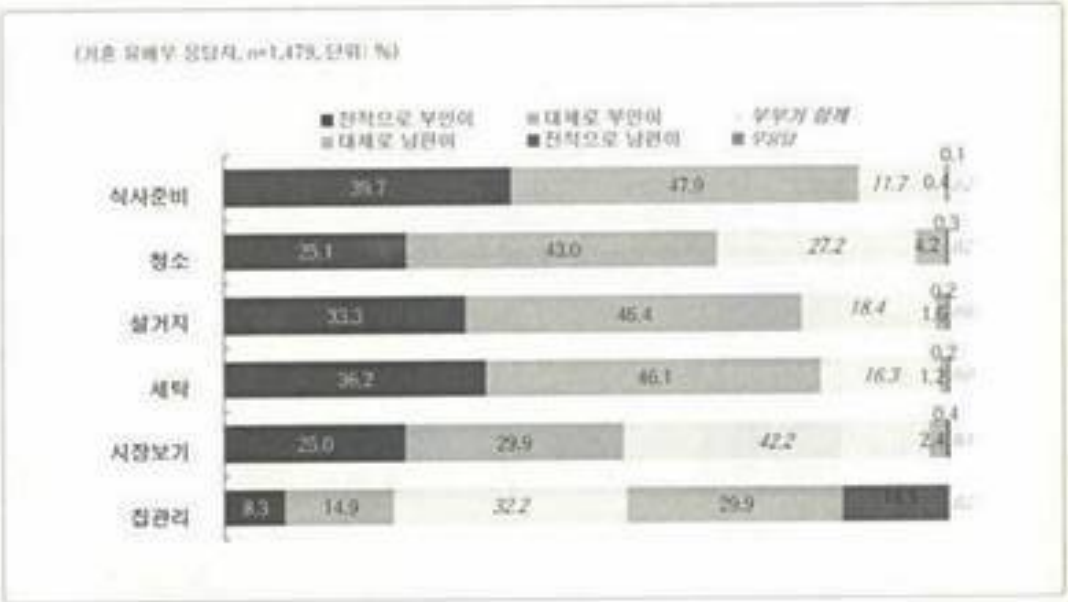
4. 가사 및 돌봄역할 분담 실태

1) 가사분담 실태

기혼 유배우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집안일의 가사분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식사준비와 청소, 설거지, 세탁, 시장보기의 경우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대체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5% 미만으로 매우 낮고 '주로 부인이' (전적으로+대체로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집수리나 세차 등 집관리는 '부인' (23.2%)보다 '주로 남편이' (44.4%)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섯 가지 활동 중 식사준비와 세탁, 설거지의 경우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비율이 80% 내외여서 각각 87.6%, 82.3%, 79.7%로 높았으며, 시장보기와 집관리, 청소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비율이 각각 42.2%, 32.2%, 27.2%로 다른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45〉 가사분담 정도 - 집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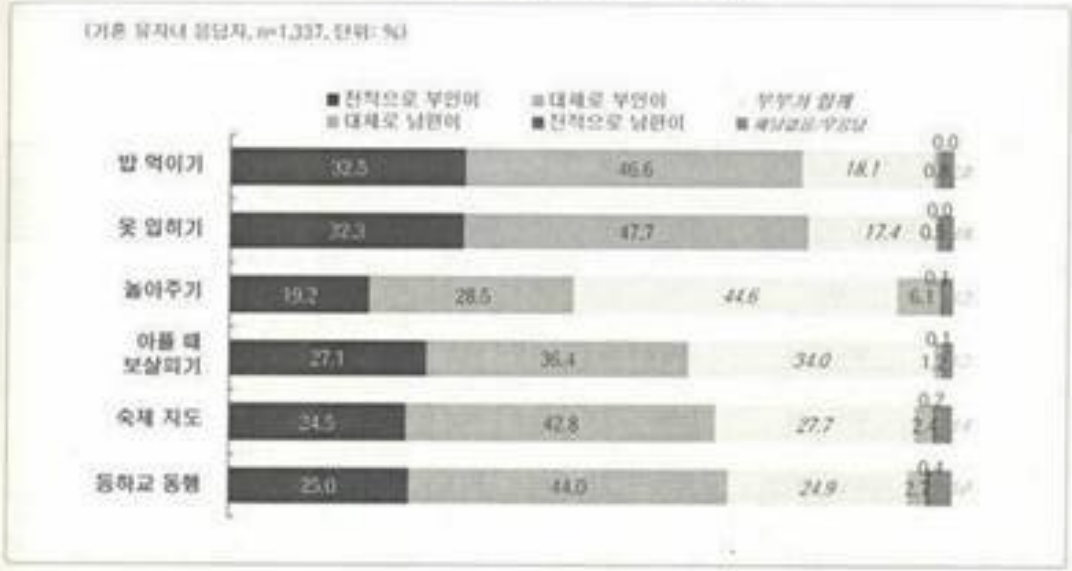


2) 자녀돌봄 분담 실태

기혼 유자녀 응답자들의 자녀돌봄 분담 정도는 밥 먹이기와 옷 입히기, 놀아주기, 아플 때 보살피기, 숙제지도, 등하교 동행 모두 '주로 남편이' (전적으로+대체로 남편이) 담당하기보다 '주로 부인이' (전적으로+대체로 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놀아주기를 제외하면

'주로 남편이'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3% 미만에 그친 반면 '주로 부인이' 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60% 이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4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히 옷 입히기(80.0%)와 밥 먹이기(79.12%)의 경우 상당수의 응답자가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고 답한 반면, 놀아주기(44.6%)와 아플 때 보살피기(34.0%)의 경우 다른 보살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6〉 가사분담 정도 – 자녀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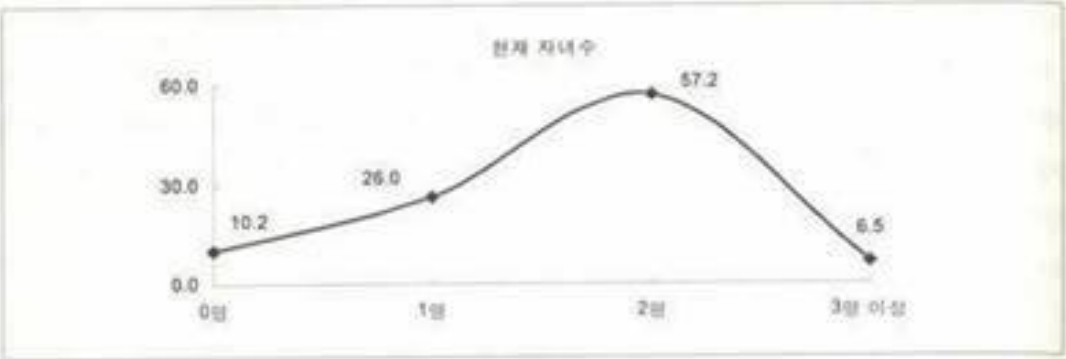
(1) 현재 자녀수 및 자녀양육 실태

기혼응답자(1,490명) 중 절반 이상은 2명의 자녀를 두었고, 4명중 1명은 1자녀를 두었으며 자녀가 없는 비율도 10% 정도이다. 3명 이상의 다자녀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혼남녀의 평균 자녀수는 1.60명으로서, 이들의 자녀수는 성과 연령, 취업상태, 학력, 직업 및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현재 자녀수가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 자녀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취업자보다는 비취업자의 자녀수가 많고, 기혼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자녀수가 적다. 남성은 비취업상태에서 자녀수가 적지만, 여성은 반대로 취업상태일 때 자녀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졸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에서 자녀수가 더 많고,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도 많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보다 자녀수가 더 많고,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자녀수가 가장 적었다.

〈그림 4-47〉 기혼 응답자의 현재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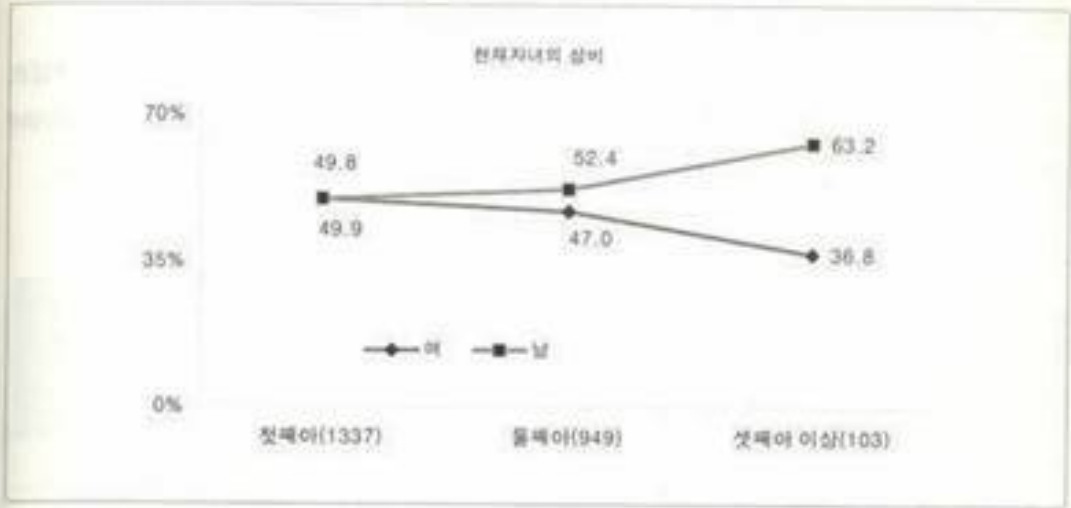


| 표 4-23 | 응답자 특성별 현재 자녀수

		빈도 (명)	0명	1명	2명	3명	4명	평균 자녀수	유의수준
전체		(1490)	10.2	26.0	57.2	6.2	0.3	1.60	
성	여성	(830)	8.6	25.8	57.9	7.5	0.2	1.65	x^2=9.88 df=4 p(0.05
	남성	(660)	12.3	26.4	56.3	4.6	0.5	1.55	
연령	25~29세	(92)	48.1	36.4	13.2	2.4	0.0	0.70	x^2=341.94 df=12 p(0.001
	30~34세	(341)	19.2	37.5	39.0	3.9	0.4	1.29	
	35~39세	(547)	5.5	28.8	59.4	6.3	0.0	1.67	
	40~44세	(509)	2.5	13.5	74.9	8.4	0.7	1.91	
취업상태	취업	(979)	11.6	27.0	55.4	5.5	0.5	1.56	x^2=12.52 df=4 p(0.05
	비취업/미취업	(511)	7.6	24.2	60.5	7.6	0.0	1.68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357)	11.2	27.4	53.8	7.0	0.5	1.58	x^2=22.65 df=12 p(0.05
	비취업 여성	(473)	6.7	24.6	60.9	7.8	0.0	1.70	
	취업 남성	(622)	11.8	26.8	56.3	4.6	0.5	1.55	
	비취업 남성	(38)	19.7	19.5	55.5	5.2	0.0	1.46	
학력	고졸 이하	(638)	6.3	24.3	59.9	9.3	0.3	1.73	x^2=48.09 df=12 p(0.001
	전문대	(247)	14.5	33.2	48.9	3.4	0.0	1.41	
	대학교	(565)	13.1	24.6	57.7	4.1	0.5	1.54	
	대학원 이상	(40)	6.4	30.2	57.2	6.1	0.0	1.63	
월소득	200만원 미만	(59)	11.6	32.2	50.3	5.9	0.0	1.50	N.S
	200만~ 300만원 미만	(338)	10.6	30.8	54.8	3.8	0.0	1.52	
	300만~ 400만원 미만	(472)	9.0	25.8	57.8	7.1	0.3	1.64	
	400만원 이상	(616)	10.9	23.3	58.5	6.8	0.6	1.63	
	모름/ 무응답	(4)	0.0	0.0	73.7	26.3	0.0	–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11.4	32.2	49.9	6.5	0.0	1.51	x^2=57.01 df=16 p(0.001
	화이트칼라	(387)	16.5	28.8	52.3	2.2	0.2	1.41	
	블루칼라	(485)	7.7	24.5	59.1	7.9	0.8	1.70	
	전업 주부	(455)	6.3	24.0	61.6	8.1	0.0	1.72	
	학생/실업/비취업	(56)	18.7	25.7	52.0	3.6	0.0	1.41	
취업자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330)	8.8	24.8	56.0	9.3	1.0	1.69	x^2=41.25 df=8 p(0.001
	상용근로자	(563)	14.4	29.2	53.3	3.1	0.0	1.45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3.8	20.9	66.9	6.6	1.8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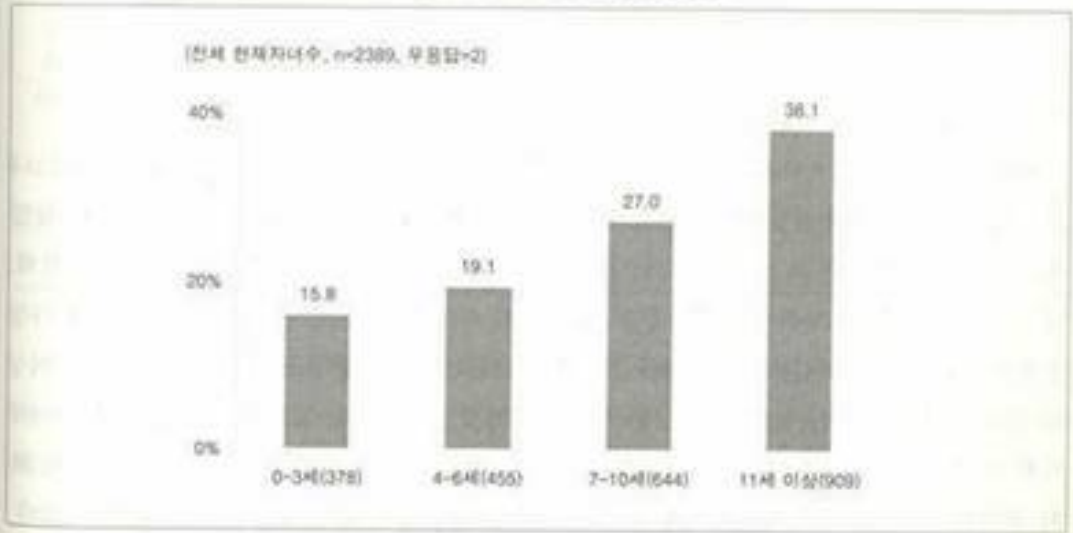
자녀의 성별로는 첫째아와 둘째아에서는 비교적 성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셋째아부터는 성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60~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남아선호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48〉 자녀 출생순위별 성비



현재 자녀의 연령분포를 보면, 0~3세 비율이 15.8%, 4~6세 비율이 19.1%로 학령기 이전 자녀가 34.9%에 해당하고, 7세 이후 자녀가 66.1%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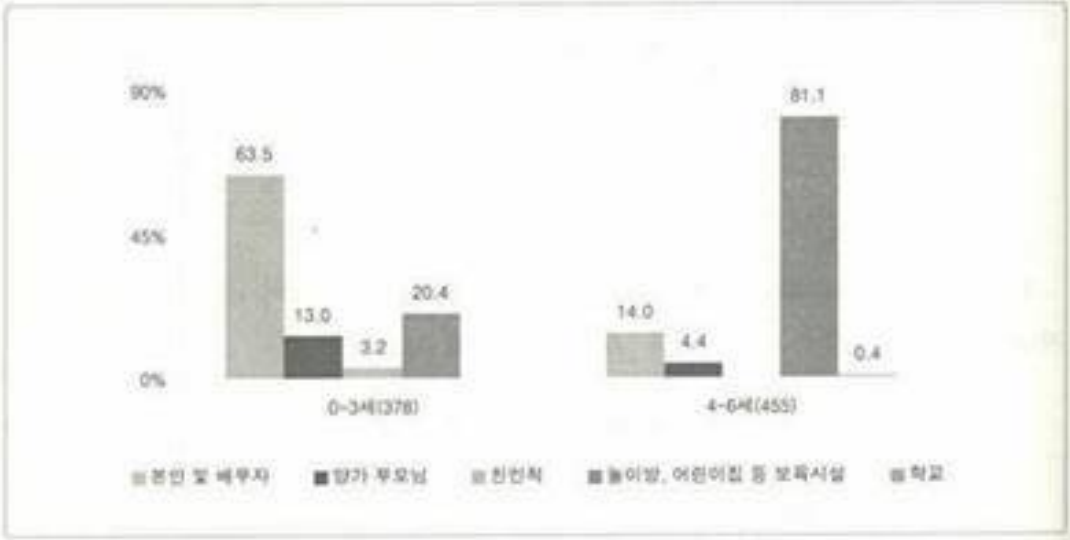
〈그림 4-49〉 자녀의 연령별 분포



자녀양육은 3세 이하의 경우 '가족이 보살핀다' 는 응답이 80%, 4세 이상 미취학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0-3세 영유아의 63.5%는 본인 및 배우자가 돌보고 있고, 그 다음이 보육시설(20.4%),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13.0%) 순으로 나타나서 영유아 자녀를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4-6세 아동의 경우 80%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이 대체로 부모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기혼여성의 책임으로 실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과 초기 양육기에 있는 가정의 일가족양립이 실현되지 않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은 지속될 것이다.

〈그림 4-50〉 자녀의 연령별 양육방법



다음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유자녀 기혼응답자와 미혼응답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을 29.6%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배우자 28.4%로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는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 월소득,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별에서 남성은 자신의 '배우자' 를 가장 높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이나 친인척' 37%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고 본인' 이 하는 것이 가장 절적하다는 응답이 11%로 남성 2.9%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를 성&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특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모두 성별에 따른 응답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비취업여성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22.8%에 달한 반면 취업남성은 '배우자' 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에 50.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육을 여성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관련 기관들 보다 '가족이나 친인척' 과 '배우자' 를 가장 자녀를 돌보기에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어 여전히 양육을 사적영역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시가 공적영역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려는 정책적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4-24 | 성별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후 자녀를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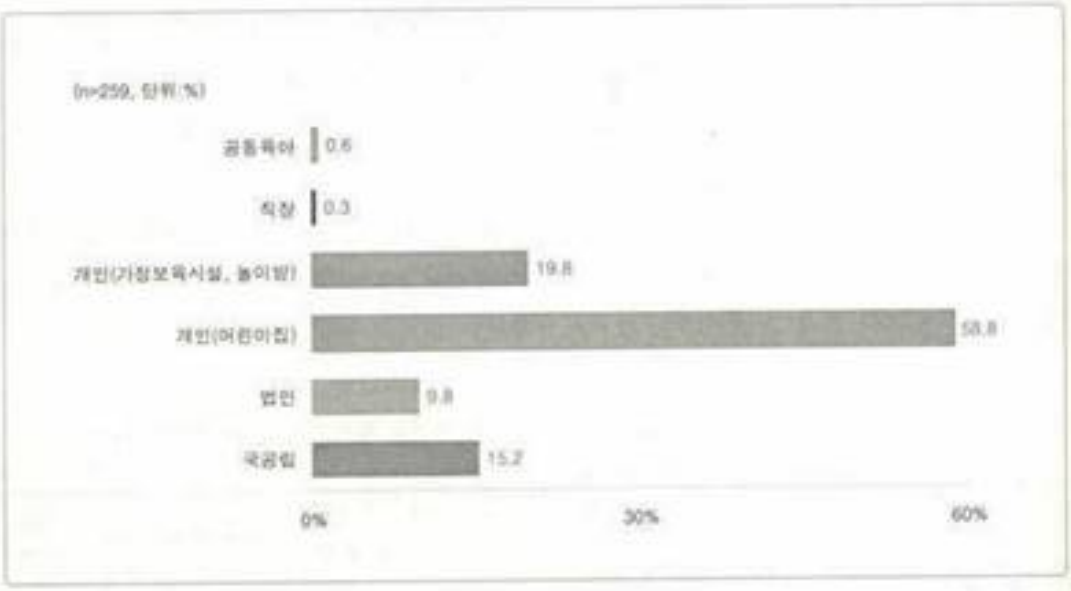
(단위 : %)

		빈도 (명)	가족이나 친인척	배우자	놀이방, 어린이집 등 지역 보육시설	직장을 그만 두고 본인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직장 보육 시설	베이비 시터, 파출부	동네 아주머니	직장을 다니면서 부부가 함께
전체		(1870)	29.6	28.4	9.9	9.6	8.7	7.1	5.1	1.2	0.2	0.1
성별	여성	(819)	37.0	3.9	12.0	18.2	9.1	11.0	6.9	1.5	0.3	0.0
	남성	(1051)	23.8	47.5	8.2	2.9	8.3	4.0	3.8	1.0	0.0	0.1
성 & 취업 상태별	취업 여성	(509)	39.0	2.8	12.5	15.5	8.4	12.8	7.4	1.3	0.3	0.0
	비취업 여성	(310)	33.6	5.6	11.2	22.8	10.3	8.1	6.1	1.9	0.3	0.0
	취업 남성	(811)	23.5	50.7	8.0	3.1	6.5	3.7	3.3	0.7	0.1	0.2
	비취업 남성	(240)	24.9	36.5	9.0	2.4	14.5	5.0	5.4	1.7	0.0	0.0

x^2=551.124 df=27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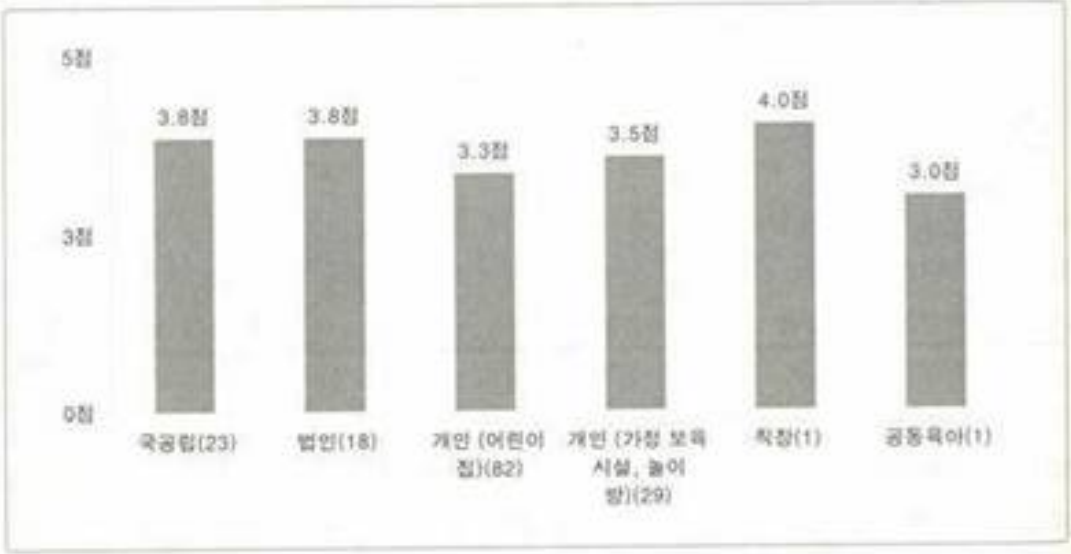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경우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5.2%에 불과하고 민간 어린이집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놀이방 등 가정보육시설은 약 20%를 차지하고 법인시설의 비율은 9.8%이며, 직장보육이나 공동육아는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그림 4-51〉 자녀보육시설 유형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에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의 만족도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에 비해 높고, 특히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52〉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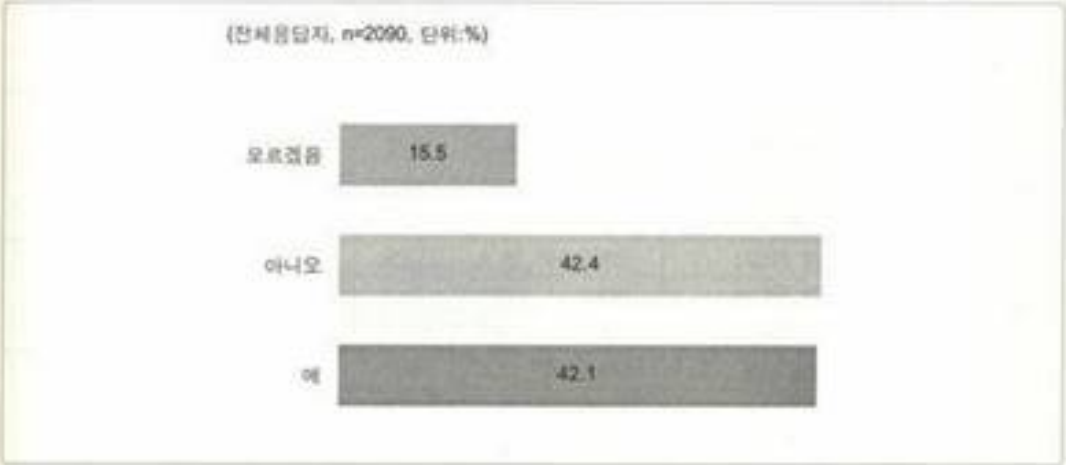
5.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실태

1)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용

(1) 출산휴가

현재 취업자 및 기혼 취업경력자(2,090명) 중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의 종사자는 42.1%이고,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의 종사자는 42.4%로 나타났다. 15.5%는 사용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종사자와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의 종사자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4-53〉 직장에서 출산휴가 사용가능 여부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혼취업자(39.1%)보다 미혼취업자(55.0%)가 다니는 직장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서, 실제로 출산휴가가 필요한 기혼집단에게 이 제도의 접근성이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혼취업자의 과반수인 50.6%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종사자라는 것은 출산행위가 억제될 수 있는 작업장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자(45.5%)보다 비/미취업자(29.3%)가 출산휴가 활용가능 직장에의 종사비율이 낮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휴가 활용가능 직장종사비율이 높고,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93명)중 60.1%가 출산휴가 활용가능 직장종사비율이 가장 높다. 고용상태별로 상용근로자(1082명)가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종사 비율(54.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5 | 응답자 특성별 출산휴가 사용가능 직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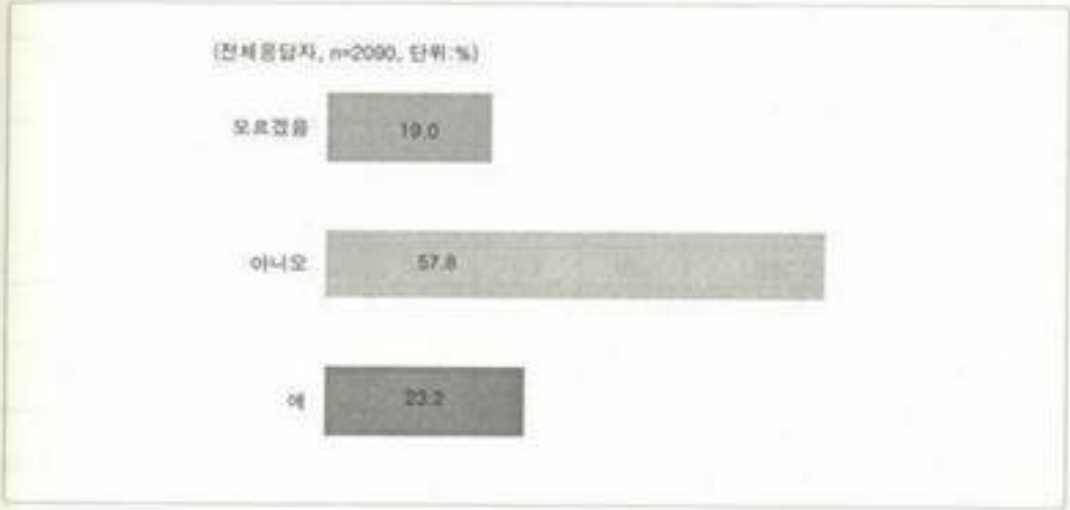
(단위 : %)

		빈도(명)	가능	불가능	모름	합계	유의수준
전 체		(2090)	42.1	42.4	15.5	100.0	
성	여성	(1045)	42.6	43.1	14.3	100.0	N.S.
	남성	(1045)	41.5	41.8	16.7	100.0	
연 령	25~29세	(436)	54.8	26.8	18.4	100.0	x^2=80.78 df=2 p(0.001
	30~34세	(528)	46.0	38.6	15.4	100.0	
	35~39세	(612)	37.3	48.2	14.5	100.0	
	40~44세	(514)	32.8	52.8	14.4	100.0	
혼인상태	미혼	(665)	55.0	24.9	20.1	100.0	x^2=122.99 df=2 p(0.001
	기혼	(1425)	36.0	50.6	13.4	100.0	
취업상태	취업	(1644)	45.5	38.9	15.6	100.0	x^2=44.62 df=2 p(0.001
	비취업/미취업	(446)	29.3	55.4	15.3	100.0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51.1	35.2	13.8	100.0	x^2=57.93 df=6 p(0.001
	비취업 여성	(411)	29.6	55.2	15.1	100.0	
	취업 남성	(1010)	42.0	41.2	16.7	100.0	
	비취업 남성	(35)	25.3	58.1	16.7	100.0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55.0	24.9	20.1	100.0	x^2=135.01 df=4 p(0.001
	기혼 취업자	(979)	39.1	48.4	12.5	100.0	
	기혼 비취업자	(446)	29.3	55.4	15.3	100.0	
학 력	고졸 이하	(776)	27.4	56.7	15.9	100.0	x^2=128.47 df=6 p(0.001
	전문대	(398)	46.7	37.9	15.4	100.0	
	대학교	(867)	52.2	32.8	15.0	100.0	
	대학원 이상	(49)	56.7	24.0	19.3	100.0	
월소득	200만원 미만	(324)	51.2	29.4	19.4	100.0	x^2=73.71 df=8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590)	39.6	43.2	17.2	100.0	
	300만~ 400만원 미만	(545)	31.0	53.9	15.1	100.0	
	400만원 이상	(623)	49.5	38.3	12.2	100.0	
	모름/ 무응답	(8)	23.6	50.4	25.9	100.0	
직 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38.7	41.9	19.4	100.0	x^2=156.24 df=8 p(0.001
	화이트칼라	(693)	60.1	26.6	13.3	100.0	
	블루칼라	(782)	34.0	49.1	16.8	100.0	
	전업 주부	(394)	29.5	55.9	14.7	100.0	
	학생/실업/비취업	(52)	28.0	52.2	19.9	100.0	
취업자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28.6	54.3	17.1	100.0	x^2=108.56 df=4 p(0.001
	상용근로자	(1082)	54.5	31.0	14.5	10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27.4	53.1	19.5	100.0	

(2) 육아휴직

현재 취업자 및 취업경력자(2,090명) 중 23.2%만이 '육아휴직' 이 가능한 직장종사자라고 응답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 종사자 비율은 57.9%에 이른다. 이는 출산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 종사자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육아휴직제도가 출산휴가제도보다 현실적으로 더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제도의 운용사실을 '모른다' 는 응답도 19.0%를 차지해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54〉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현재 비/미취업자(446명)의 70.2%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직장경험자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취업자의 5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현재의 비취업요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미혼취업자(31.5%)보다는 기혼취업자(21.9%)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의 종사비율이 낮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실제 육아휴직제도가 필요한 집단에 이 제도의 접근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 종사비율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아 25~29세 연령층이 31.2%로 가장 높고, 30~34세는 26.9%, 35~39세는 18.4%로 낮게 나타났다.

| 표 4-26 | 응답자 특성별 직장에서의 육아휴직 활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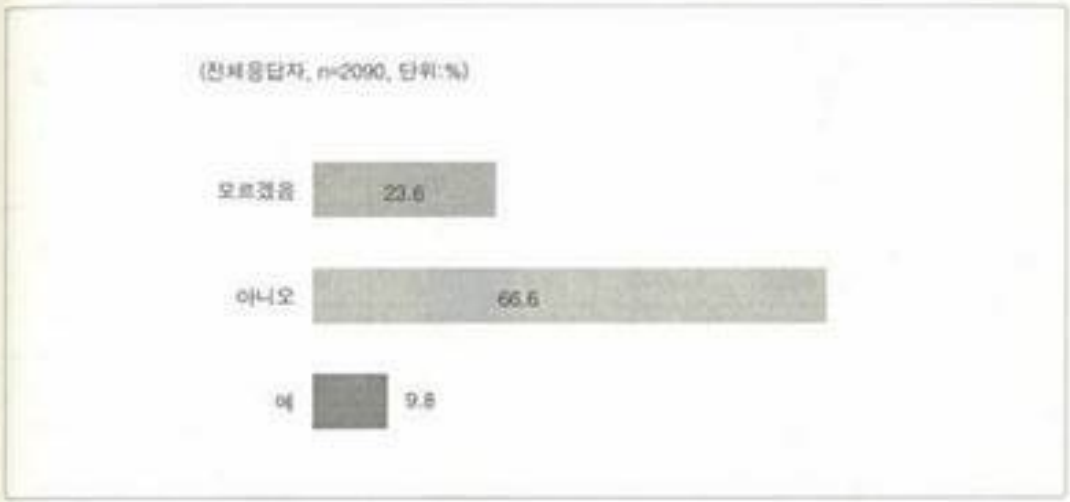
(단위 : %)

		빈도(명)	가능	불가능	모름	합계	유의수준
전 체		(2090)	23.2	57.8	19.0	100.0	
성	여성	(1045)	24.2	59.5	16.3	100.0	x^2=10.04 df=2 p<0.01
	남성	(1045)	22.1	56.2	21.7	100.0	
연령	25~29세	(436)	31.2	44.8	24.0	100.0	x^2=60.58 df=6 p<0.001
	30~34세	(528)	26.9	53.3	19.7	100.0	
	35~39세	(612)	18.4	64.5	17.1	100.0	
	40~44세	(514)	18.1	65.6	16.3	100.0	
혼인상태	미혼	(665)	31.5	41.9	26.6	100.0	x^2=101.85 df=2 p<0.001
	기혼	(1425)	19.3	65.3	15.4	100.0	
취업상태	취업	(1644)	25.8	54.5	19.8	100.0	x^2=40.03 df=2 p<0.001
	비취업/미취업	(446)	13.6	70.2	16.2	100.0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30.7	52.5	16.8	100.0	x^2=58.51 df=6 p<0.001
	비취업 여성	(411)	14.2	70.3	15.5	100.0	
	취업 남성	(1010)	22.7	55.7	21.6	100.0	
	비취업 남성	(35)	5.9	70.0	24.1	100.0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31.5	41.9	26.6	100.0	x^2=114.01 df=4 p<0.001
	기혼 취업자	(979)	21.9	63.0	15.1	100.0	
	기혼 비취업자	(446)	13.6	70.2	16.2	100.0	
학력	고졸 이하	(776)	14.4	68.4	17.3	100.0	x^2=74.32 df=6 p<0.001
	전문대	(398)	26.1	54.0	19.8	100.0	
	대학교	(867)	28.8	51.5	19.8	100.0	
	대학원 이상	(49)	39.1	34.2	26.7	100.0	
월소득	200만원 미만	(324)	27.2	47.2	25.6	100.0	x^2=58.27 df=8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590)	22.7	56.3	21.0	100.0	
	300만~ 400만원 미만	(545)	14.8	67.8	17.4	100.0	
	400만원 이상	(623)	28.8	56.2	15.0	100.0	
	모름/ 무응답	(8)	23.6	50.4	25.9	100.0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22.0	53.0	25.0	100.0	x^2=112.48 df=8 p<0.001
	화이트칼라	(693)	35.5	46.4	18.1	100.0	
	블루칼라	(782)	18.0	61.9	20.1	100.0	
	전업 주부	(394)	14.1	71.0	14.9	100.0	
	학생/실업/비취업	(52)	9.2	64.5	26.2	100.0	
취업자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16.0	63.4	20.6	100.0	x^2=37.41 df=4 p<0.001
	상용근로자	(1082)	30.4	50.5	19.1	10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19.7	58.3	22.1	100.0	

(3) 직장 내 수유

현재 취업자 및 취업경력자(2,090명) 중 9.8%만이 '직장내 수유' 가 가능한 직장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 수유가 어렵다는 응답자는 66.6%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5〉 직장 내 수유 가능 여부



연령이 젊을수록 직장수유가 가능한 직장종사비율이 높고, 기혼(7.3%)보다는 미혼(15.1%)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성(13.0%) 비율이 가장 높고, 미혼취업자(15.1%)가 기혼취업자(8.4%)보다 높았다.

▌표 4-27▐ 응답자 특성별 직장 내 수유 가능 여부

(단위 : %)

		빈도(명)	가능	불가능	모름	합계	유의수준
전 체		(2090)	9.8	66.6	23.6	100.0	
성	여성	(1045)	9.9	69.7	20.4	100.0	x^2=11.91 df=2 p(0.01
	남성	(1045)	9.6	63.6	26.8	100.0	
연령	25~29세	(436)	12.7	56.0	31.2	100.0	x^2=44.38 df=6 p(0.001
	30~34세	(528)	12.6	63.4	24.0	100.0	
	35~39세	(612)	7.3	72.7	20.0	100.0	
	40~44세	(514)	7.3	71.6	2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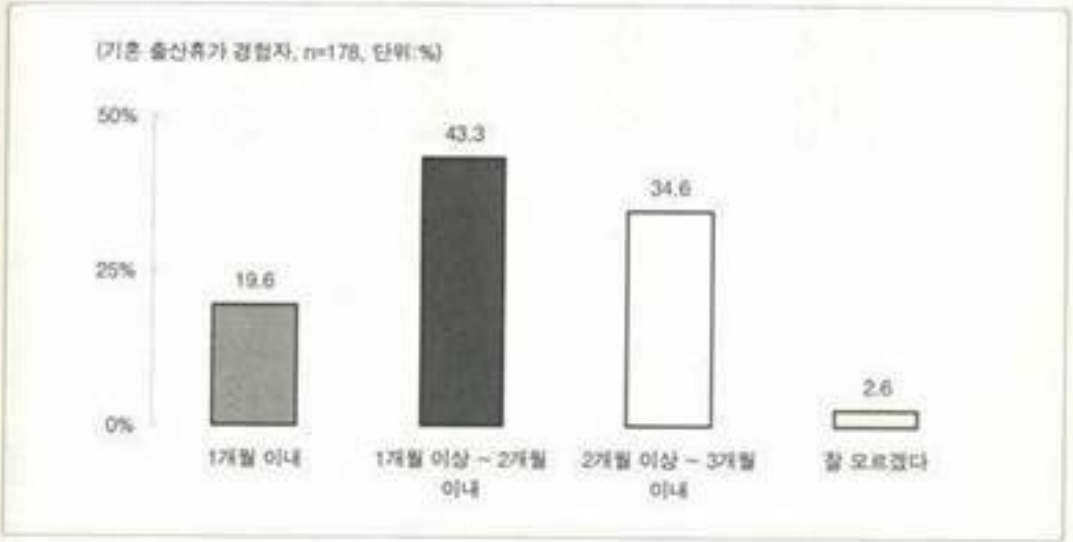
		빈도(명)	가능	불가능	모름	합계	유의수준
전 체		(2090)	9.8	66.6	23.6	100.0	
혼인상태	미혼	(665)	15.1	53.2	31.7	100.0	x^2=81.61 df=2 p<0.001
	기혼	(1425)	7.3	72.9	19.8	100.0	
취업상태	취업	(1644)	11.1	64.3	24.6	100.0	x^2=23.77 df=2 p<0.001
	비취업/미취업	(446)	4.7	75.1	20.1	100.0	
성 & 취업상태	취업 여성	(634)	13.0	65.6	21.4	100.0	x^2=36.49 df=6 p<0.001
	비취업 여성	(411)	5.1	75.9	19.0	100.0	
	취업 남성	(1010)	10.0	63.5	26.5	100.0	
	비취업 남성	(35)	0.0	65.8	34.2	100.0	
혼인 & 취업상태	미혼 취업자	(665)	15.1	53.2	31.7	100.0	x^2=86.40 df=4 p<0.001
	기혼 취업자	(979)	8.4	71.8	19.7	100.0	
	기혼 비취업자	(446)	4.7	75.1	20.1	100.0	
학력	고졸 이하	(776)	9.4	70.9	19.7	100.0	x^2=15.40 df=6 p<0.05
	전문대	(396)	9.0	63.1	28.0	100.0	
	대학교	(867)	10.5	65.0	24.5	100.0	
	대학원 이상	(49)	10.3	56.2	33.5	100.0	
월소득	200만원 미만	(324)	13.9	56.7	29.4	100.0	x^2=31.76 df=8 p<0.001
	200만~ 300만원 미만	(590)	10.5	64.0	25.4	100.0	
	300만~ 400만원 미만	(545)	6.2	72.7	21.0	100.0	
	400만원 이상	(623)	10.2	68.8	21.0	100.0	
	모름/ 무응답	(8)	0.0	66.7	33.3	100.0	
직업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9.4	62.2	28.5	100.0	x^2=36.01 df=8 p<0.001
	화이트칼라	(693)	11.9	62.3	25.8	100.0	
	블루칼라	(782)	10.8	66.6	22.6	100.0	
	전업 주부	(394)	5.4	76.4	18.3	100.0	
	학생/실업/비취업	(52)	0.0	65.7	34.3	100.0	
취업자 고용상태	자영업자/고용주	(427)	11.3	65.4	23.3	100.0	N.S
	상용근로자	(1082)	11.1	63.4	25.5	10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11.0	67.8	21.2	100.0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경험

(1) 출산휴가 사용경험

출산휴가 사용자의 경우 그 기간은 1~2개월 사이가 43.3%로 가장 높고, 2~3개월 사이가 34.6%를 차지하며, 1개월 미만도 19.6% 차지했다. 근로기준법 상의 90일간 출산휴가가 적용된 경우는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6〉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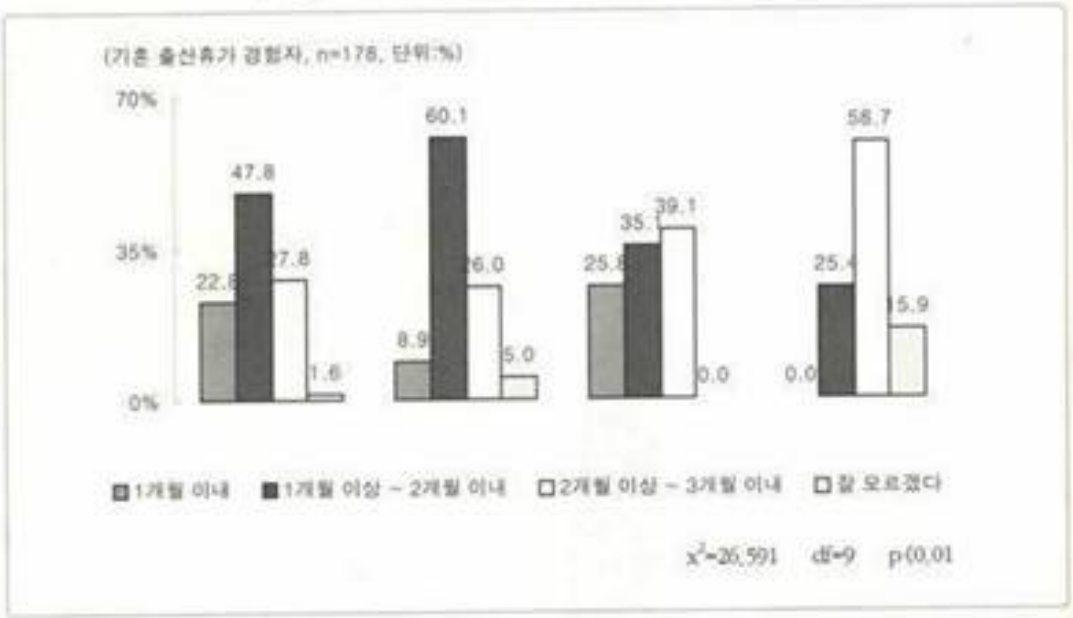
학력별로 출산휴가 사용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1개월 이내는 대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고졸이하로 나타났다. 1~2개월 사이는 전문대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2~3개월 사이는 전문대졸이 가장 낮고,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층은 60% 정도가 출산휴가기간이 2~3개월 이내였다.

고용상태별로도 출산휴가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용근로자의 47.0%가 1~2개월 이내였고, 2~3개월 이내는 34.6%를 차지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 1개월 이내가 40.7%로 가장 높고, 2~3개월 이내도 38.2%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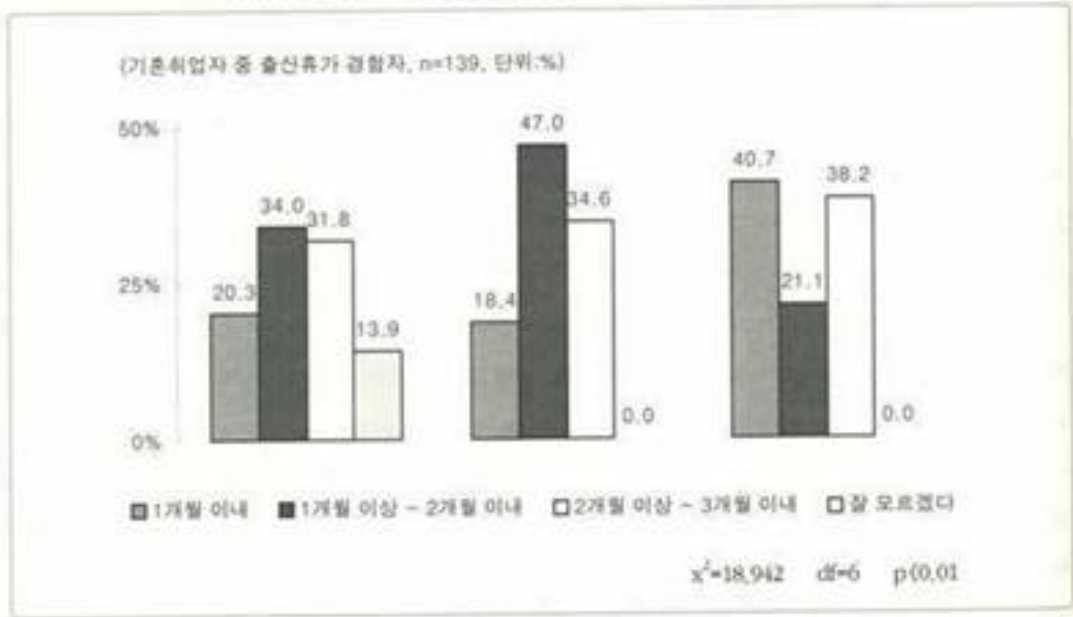
출산휴가 신청시 경험한 어려움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51.2%)는 비율을 제외하면, '동료의 업무량 가중으로 인한 부담감' 이 1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직장복귀의 불투명성' 이 12.7%, '업무가 중요해서 대체할 수 없는 점' (10.2%)이 지적되었다. 직장내 출산휴가 제도가 원활히 운용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자를 위한 대체인력 마련과 고용보장 등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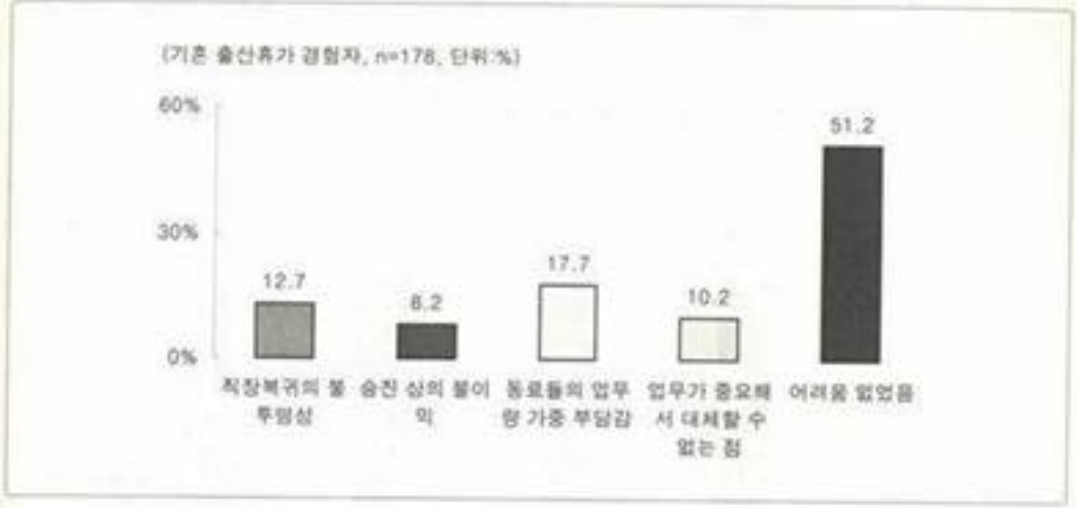
〈그림 4-57〉 학력별 본인/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그림 4-58〉 고용상태별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기간



〈그림 4-59〉 출산휴가 신청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



출산휴가 종료후 직무나 부서, 사업장의 변화가 없었다는 비율이 높지만, '회사명령에 따라' 부서변경이 이루어진 비율이 12.6%에 달해 직무나 사업장 변경보다 부서변경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4-28 | 출산휴가 종료 후 직장내 위치 변경 여부

(단위 : %)

전체(178명)	동일	회사명령에 따라 변경	본인희망에 따라 변경
직 무	91.5	7.2	1.3
부 서	85.9	12.6	1.5
사 업 장	95.3	3.1	1.6

(2) 육아휴직 사용경험

기혼유자녀 집단중 본인이나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8.4%로 나타났고, 여성응답자 비율이 남성응답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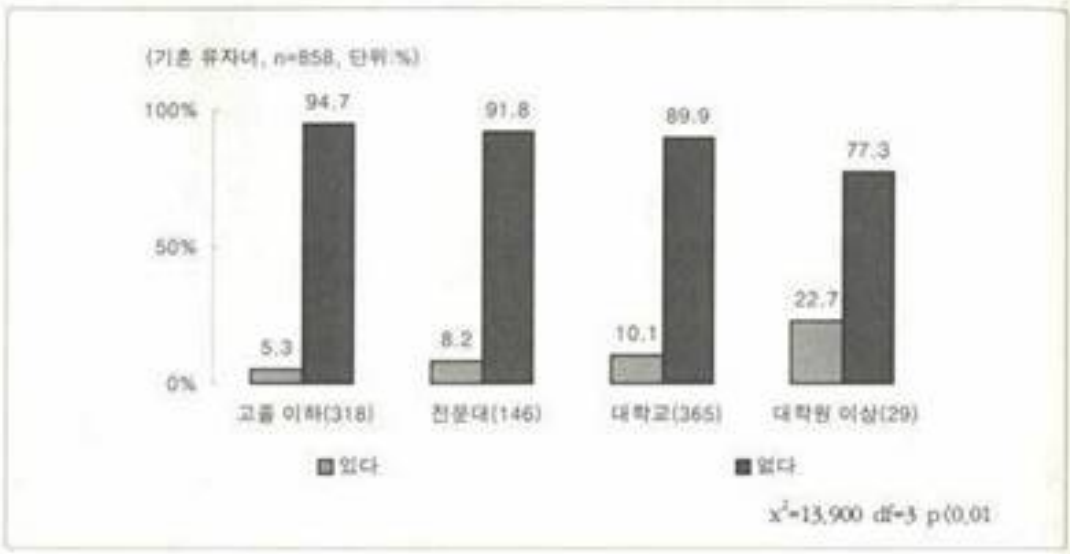
| 표 4-29 | 기혼 유자녀집단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단위 : %)

		빈도(명)	있다	없다
전체(명)		(859)	8.4	91.6
성별	여성(명)	(412)	10.1	89.9
	남성(명)	(448)	6.8	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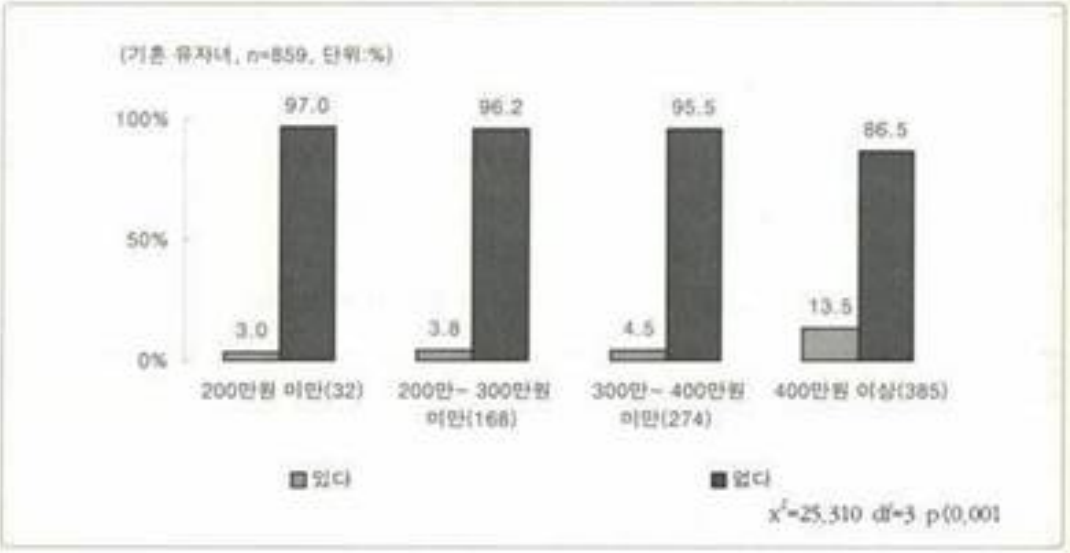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경험은 학력수준과 비례해서 증가한다. 고졸이하는 5.3%에 불과하지만 대학원 이상에서는 22.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4-60〉 기혼 유자녀들의 학력별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학력수준과 마찬가지로 월소득수준과 비례하여 육아휴직 사용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만원 미만에서는 3.0%에 불과하지만, 400만원 이상에서는 13.5%를 차지했다. 이는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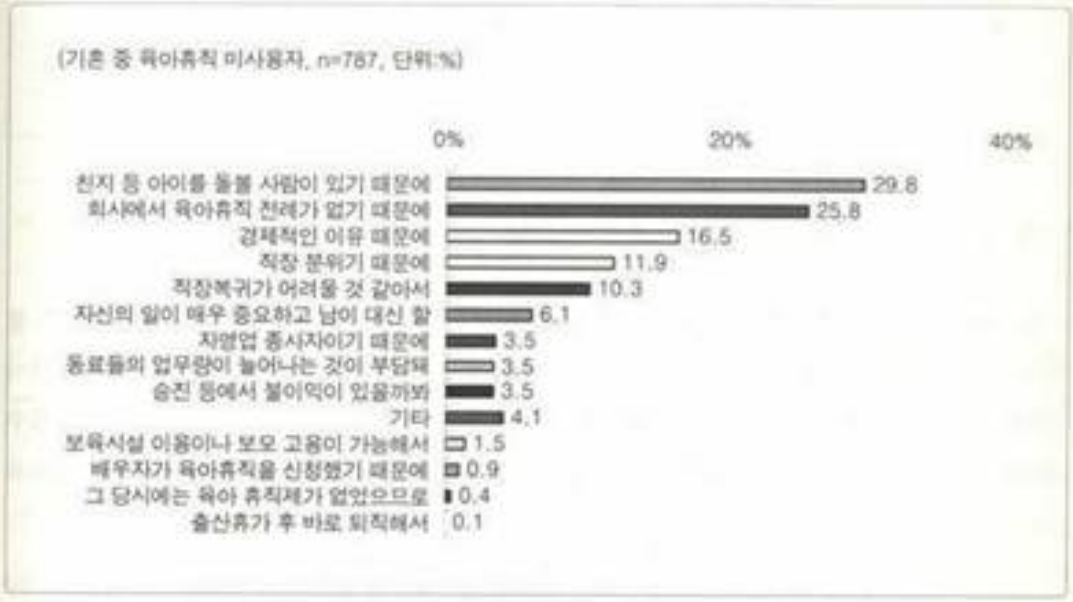
〈그림 4-61〉 월소득별 본인 및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적으로 고소득층에 고연령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육아휴직 신청기회 자체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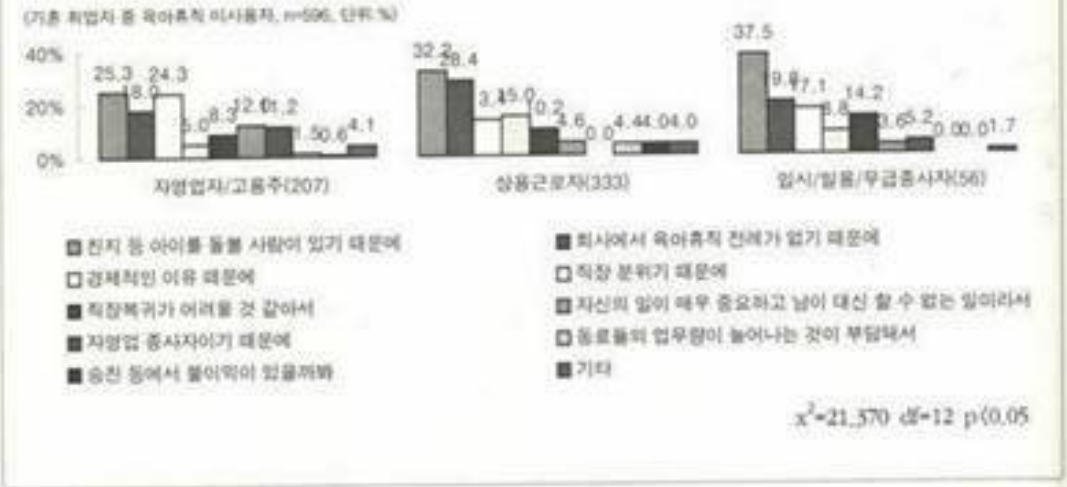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에'가 약 30%로 가장 높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25.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16.5%를 차지했고, '직장분위기'(11.9%), 직장복귀의 불투명성(10.3%) 등 직장내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부족한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4-62〉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못한) 이유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의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8.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분위기(10.2%)나 '경제적 이유'(13.4%)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20% 정도 차지하고, 경제적 이유가 17.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도 14.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3〉 고용형태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3)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임신한 근로자의 산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48.5%이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1%를 차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학력, 직업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성, 연령, 소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에 따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불만족에 응답한 경향이 많았다. 또한 대학원이상의 경우는 '만족'에 응답률이 37.5%로

| 표 4-30 |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빈도(명)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전체		(2500)	6.1	45.4	48.5	3.5점
학력별	고졸 이하(885)	(885)	3.7	41.2	55.0	3.6점
	전문대(459)	(459)	6.9	53.0	40.2	3.4점
	대학교(1086)	(1086)	7.7	44.9	47.4	3.5점
	대학원 이상(70)	(70)	7.0	55.5	37.5	3.3점
					F=11.215 df=3	p<0.00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170)	(170)	9.2	44.1	46.7	3.5점
	화이트칼라(693)	(693)	5.1	40.6	54.3	3.6점
	블루칼라(782)	(782)	5.2	50.5	44.3	3.5점
	전업 주부(455)	(455)	7.0	44.7	48.3	3.5점
	학생/실업/비취업(401)	(401)	7.4	45.1	47.5	3.5점
					F=2.620 df=4	p<0.05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만족' 한다는 응답률이 54.3%로 높았고 다른 직업집단 역시 5점 평균이 3.5로 동일하게 나타나 출산휴가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기간이 짧아서'(79%)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가 12.4%, '제도 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5.4% 등의 대답이 있었다.

| 표 4-31 |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전체 (153명)	%
기간이 짧아서	79.0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12.4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5.4
쉬는 동안 급여가 적어서	0.8
기간이 길어 직장의 자리보존이 불투명하므로	0.6
기간이 길어 직장 내 압력이 느껴져서	0.5
기간이 길어 업무 퇴보로 일의 능률이 저하되므로	0.5
비정규직은 사용할 수 없어서	0.4
제도 사용시 직장 동료의 업무부담이 늘어서	0.2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도에 대한 서울시 남녀의 만족도는 만족이 34.8%로 출산휴가제도보다 만족도가 낮고, 불만족은 14.8%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는 성, 연령, 성&취업상태,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5점 평균은 같지만 남성의 35.9% '만족' 한데 비해 여성은 33.7%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또한 여성은 17%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남성은 12.8%로 더 낮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 &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출산휴가제도에 다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원이상의 경우 유일하게 5점 평균이 3점이 되지 않는 2.9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한다고는 응답한 이유로는 출산휴가제도와 동일하게 '기간이 짧아서' 가 9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2.4%와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가 2.3%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간이 짧아서' 가 다른 제도의 불만족이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 표 4-32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빈도(명)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전체		(2500)	14.8	50.4	34.8	3.2점
성별	여성	(1237)	17.0	49.4	33.7	3.2점
	남성	(1263)	12.8	51.3	35.9	3.2점
				t=-2.434	df=2,498	p(0.05
연령별	25~29세	(664)	19.7	48.5	31.8	3.1점
	30~34세	(640)	15.5	50.3	34.2	3.2점
	35~39세	(648)	13.3	54.5	32.2	3.2점
	40~44세	(548)	10.1	47.7	42.1	3.3점
				F=7.885	df=3	p(0.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16.6	49.9	33.5	3.2점
	비취업 여성	(603)	17.4	48.8	33.8	3.2점
	취업 남성	(1010)	11.9	51.4	36.6	3.3점
	비취업 남성	(253)	16.2	51.3	32.4	3.2점
				F=3.468	df=3	p(0.05
학력별	고졸 이하	(885)	10.1	53.0	36.9	3.3점
	전문대	(459)	13.0	56.1	30.9	3.2점
	대학교	(1086)	18.6	46.0	35.4	3.2점
	대학원 이상	(70)	28.6	46.9	24.4	2.9점
				F=7.709	df=3	p(0.001

| 표 4-33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한 이유

전체 (371명)	%
기간이 짧아서	95.1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2.4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2.3
쉬는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0.3
비정규직은 사용할 수 없어서	0.2

제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평균 3.6점으로 다른 조사된 제도에 비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특성별로는 학력별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성, 연령, 취업상태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제도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만족' 한다는 응답 역시 대학원이상이 가장 낮은 42.7%, 고졸이하가 59.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표 4-34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빈도(명)	불만족	보통	만족	5점 평균
전체		(2500)	3.0	44.1	52.9	3.6점
학력별	고졸 이하(885)	(885)	2.0	38.5	59.5	3.7점
	전문대(459)	(459)	2.9	55.6	41.6	3.4점
	대학교(1086)	(1086)	3.4	43.6	53.0	3.5점
	대학원 이상(70)	(70)	9.2	48.2	42.7	3.4점
					F=14.468 df=3	p(0.001

육아휴직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기간이 짧아서' 가 역시 47.5%로 가장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사된 출산 및 양육관련 제도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어서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가 19.3%로 비교적 높게 나왔고, '제도 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가 12%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기간이 길어 직장의 자리보존이 불투명하므로' 6.4%, '기간이 길어 직장 내 압력이 느껴져서' 6.0%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제도들에서 나오지 않았던 응답으로써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라기보다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불만족한 이유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 표 4-35 |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전체(74명)	%
기간이 짧아서	47.5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19.3
제도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12.0
기간이 길어 직장의 자리보존이 불투명하므로	6.4
기간이 길어 직장 내 압력이 느껴져서	6.0
모름/ 무응답	4.6
기간이 길어 업무 퇴보로 일의 능률이 저하되므로	1.6
쉬는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아서	1.0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1.0
비정규직은 사용할 수 없어서	0.9
제도 사용시 직장 동료의 업무 분담이 늘어서	0.6

각 각의 출산 및 양육관련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불만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5점 평균 3.5점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배

우자 출산휴가제도는 3.2점으로 만족도가 '보통' 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각 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들이다. 각 출산 및 양육관련제도에서 가장 큰 불만족이유로 '기간이 짧아서' 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특히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서 '기간이 짧아서' 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또한 '실제 적용이 힘들어서' 역시 각 제도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되었고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제도' 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세 번째로는 '제도 시행 않는 사업장이 많아 혜택받기 어려워서' 가 응답되었다. 즉, 제도내용에 대한 불만족의 유일한 이유로 '기간' 이 제시되었고 그 외의 대부분은 제도를 이용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출산 및 양육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각 서울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제도의 시행과 이용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소결 및 정책함의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여성 응답자들이 일과 가족의 병행에 대한 어려움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혼 유자녀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일하는 기혼여성들 중에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데 이들이 이중부담을 가장 힘들어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민은 비단 기혼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미혼여성들도 앞으로 결혼 후 출산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 두겠다는 비율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미혼 남성들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겠다는 응답보다는 오히려 일을 늘려서 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아서 여성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은 자녀가 없을 때는 맞벌이 비율이 61.4%였으나 자녀가 1명일 때는 맞벌이 비율이 36.6%로 나타남으로써, 자녀가 생긴 후 일을 하는 비율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가 생김과 동시에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업주부의 87% 가량이 결혼 전 취업 경험이 있다는 점은 자녀로 인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저출산이 큰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지만 서울시 25~44세 남녀가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96명이고, 특히 기혼남녀는 2.01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자녀를

희망하는 서울시 남녀비율은 1.9%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젊은 미혼여성의 70% 이상은 결혼 후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바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과반수의 응답자들은 남편이 생계부양자이고 아내가 가정주부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기혼 유배우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식사준비나 청소, 설거지 등의 가사는 주로 아내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돌보기 숙제 돕기 등도 아내가 한다는 비율이 과반수는 되었다. 많은 기혼여성들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이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적영역에서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이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출산휴가가 가능하다는 비율은 42%이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곳이라는 비율은 23%이며, 직장 내 수유가 가능하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열악한 현실에서 여성들은 자녀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이 시작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 여성들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안정된 상황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

이상의 설문결과들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병행이 가능하게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수를 갖는 것이 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게끔 돕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기혼여성들이 첫 번째 자녀를 갖게 될 때에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때 여성들은 '보육시설 부족 및 서비스 질 불안' 이 커다란 고민거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보육시설의 수를 확대해서 자녀를 맡기고 싶은 여성들에게 실제적인 보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시설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에 관한 한 우리 사회에서는 보육시설이라는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질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의 예산이나 공간문제를 감안할 때, 새로운 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설립해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정, 종교시설, 동사무소 등의 시설을 유휴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시설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곳에서 보육의 서비스

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인력에 대한 트레이닝 및 인증제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의 범위와 운영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이나 직장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만약 응답자들이 자신에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는 기업에서의 홍보부족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기업들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 가하게 될 제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고 난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에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울시민의 가사분담이나 자녀돌봄 실태가 상당히 전통적인 유형을 따르고 있으므로, 일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 자신이 돕고 싶어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직장 단위로 '아버지 교실'을 운영해서 남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돌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기업이나 직장들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강사들을 파견하고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아울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적극 정책에 개입해서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일과 가정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을 때, 많은 가족들이 희망자녀수나 이상자녀수에 가까운 정도의 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출산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V

서울시민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수요

V 서울시민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수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전에 실시하였던 인구억제정책에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2002년에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공론화하고 2004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일부에서 정책으로 시작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06년에는 중앙정부의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매년 수립)"을 수립하였다. 중앙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둘째,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셋째,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출산과 양육관련 정책수요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서울시민의 의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정책을 실행하는데 많은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도움정도 그리고 정책수요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서울시민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의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2월)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2004~현재)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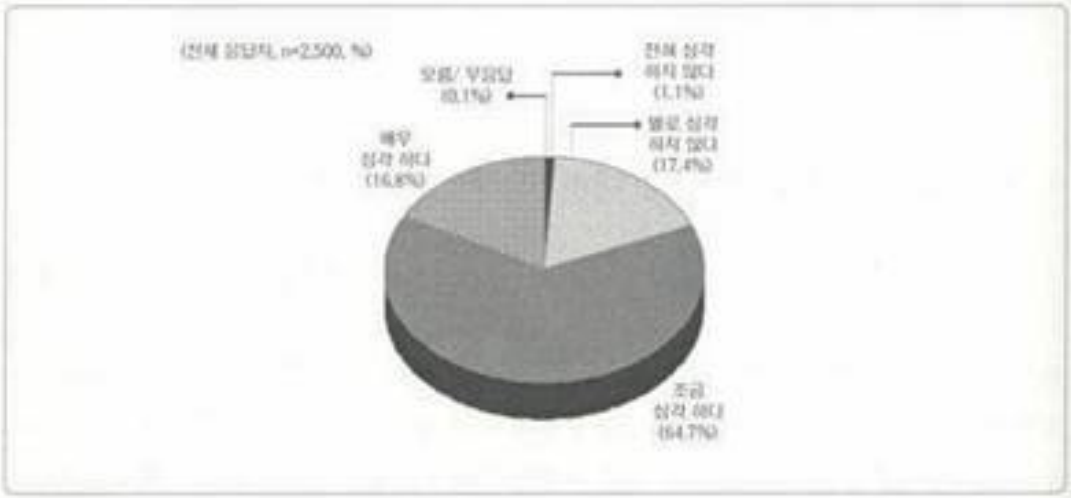
까지이다(이삼식 외, 2007a).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대응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주요한 정책들이 200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더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되면서도 지원정도도 낮아 일반가구에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나 정책 체감도가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정책들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정도와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인식여부, 수혜여부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1)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태도

서울시 만 25~44세 남녀가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면, 응답자 중 81.5%가 현재의 저출산현상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 고 응답해서 대체로 저출산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금 심각하다 64.7% + 매우 심각하다 16.8%).

〈그림 5-1〉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평가



〈표 5-1〉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 인식은 연령과 혼인상태,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성별로 여성(81.7%)이 남성(81.1%)보다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더 인식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심각하다는 비율이 증가한다. 즉,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이 현재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더 인식하고 있어 40~44세의 83.6%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25~29세 연령층은 79.2%에 그친다. 연령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른 태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혼(83.0%)이 미혼(79.1%)에 비해 저출산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기혼의 83.0%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은 79.1%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81.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취업여부는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비취업여성이 저출산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비취업남성이 가장 낮다.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이 가장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이 낮고, 대학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면에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이 더 강한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정도가 가장 높고, 블루칼라 혹은 학생/실업자층의 심각성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고용주가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정도가 임시/일용직 종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층, 블루칼라, 임시/일용직, 미혼, 25~29세의 저연령층 등에서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고,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저출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5~29세 연령대가 낮은 인식수준을 보인 점은 향후 출산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 표 5-1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 인식 (단위 : %)

		빈도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전체		(2500)	1.1	17.4	64.7	16.8	18.4	81.5
성별	여성	(1237)	0.8	17.3	65.5	16.2	18.1	81.7
	남성	(1263)	1.3	17.4	63.8	17.3	18.8	81.1
연령별*	25~29세	(664)	1.4	19.2	65.7	13.5	20.6	79.2
	30~34세	(640)	0.7	18.8	65.1	15.3	19.5	80.4
	35~39세	(648)	1.2	15.8	64.1	18.8	17.1	82.9
	40~44세	(548)	0.9	15.3	63.5	20.1	16.2	83.6

		빈도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
혼인상태별**	미혼	(1010)	1.5	19.2	64.2	14.9	20.7	79.1
	기혼	(1490)	0.8	16.1	65.0	18.1	16.9	83.0
취업상태별	취업	(1644)	1.2	17.2	64.8	16.7	18.4	81.4
	비취업/미취업	(856)	0.8	17.7	64.5	17.0	18.5	81.4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634)	0.9	18.4	65.2	15.3	19.3	80.6
	비취업 여성	(603)	0.7	16.2	65.9	17.1	16.8	83.0
	취업 남성	(1010)	1.4	16.5	64.5	17.5	17.9	82.0
	비취업 남성	(253)	1.2	21.2	61.1	16.5	22.4	77.6
혼인 & 취업상태별	미혼 취업자	(665)	1.5	18.2	65.0	15.1	19.7	80.1
	미혼 비취업자	(345)	1.4	21.2	62.7	14.5	22.6	77.2
	기혼 취업자	(979)	1.0	16.5	64.6	17.8	17.5	82.4
	기혼 비취업자	(511)	0.4	15.3	65.7	18.6	15.7	84.3
학력별	고졸 이하	(885)	1.2	16.2	66.8	15.8	17.3	82.6
	전문대	(459)	0.9	21.9	62.6	14.4	22.8	77.0
	대학교	(1086)	1.1	16.6	63.6	18.7	17.7	82.2
	대학원 이상	(70)	0.0	15.7	69.2	15.1	15.7	84.3
월소득별	200만원 미만	(651)	1.3	19.8	63.3	15.2	21.1	78.6
	200만~ 300만원 미만	(608)	0.9	16.1	66.7	16.2	17.1	82.9
	300만~ 400만원 미만	(566)	1.6	16.9	65.5	16.0	18.5	81.5
	400만원 이상	(649)	0.5	16.8	63.3	19.2	17.3	82.6
	모름/ 무응답	(26)	2.4	8.5	66.2	23.0	10.9	89.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70)	0.4	17.9	65.9	15.8	18.3	81.7
	화이트칼라	(693)	1.2	16.3	65.2	17.1	17.5	82.3
	블루칼라	(782)	1.4	17.9	64.2	16.5	19.2	80.6
	전업 주부	(455)	0.5	15.3	65.6	18.7	15.8	84.2
	학생/실업/비취업	(401)	1.2	20.3	63.2	15.0	21.6	78.3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27)	1.4	16.8	67.7	13.9	18.1	81.7
	상용근로자	(1082)	0.9	17.5	63.5	18.1	18.3	81.5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35)	3.4	16.8	65.6	14.2	20.2	79.8

모름/무응답 제외함

* χ^2=17.044, df=9,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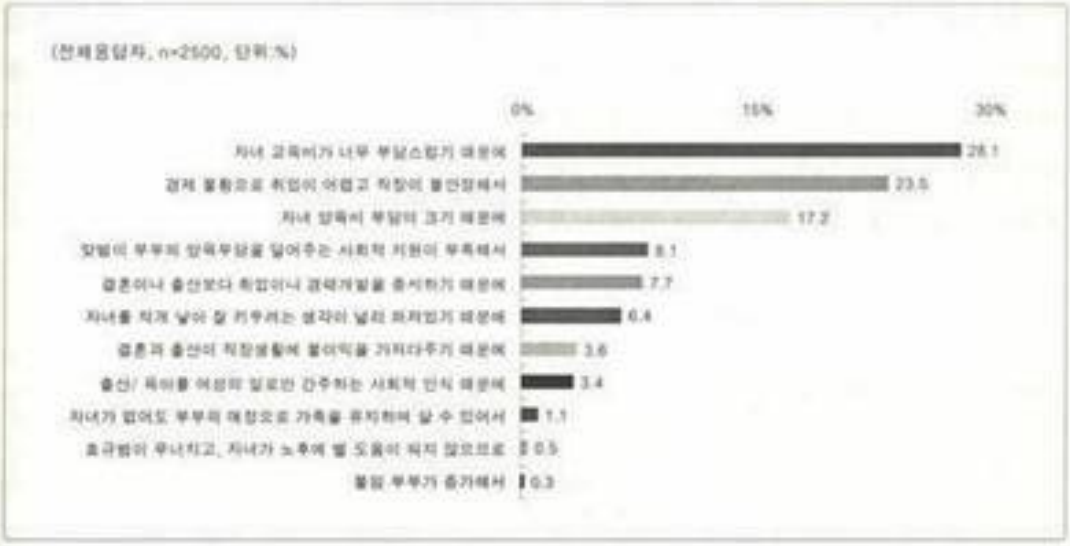
** χ^2=12.656, df=6, p<0.05

*** χ^2=9.640, df=3, p<0.05

2) 저출산의 발생요인 인식

저출산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럽기 때문' (28.1%)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23.5%), '자녀양육비 부담' (17.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출산 발생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 부족' (8.1%),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이 중시되기 때문' (7.7%),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 (6.4%), '출산/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3.4%),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3.6%)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저출산 현상의 발생요인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 68.8%로 가장 높고, 사회적 요인(맞벌이 부부 사회적 지원 부족, 직장생활 불이익, 여성의 일로만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은 15.1%, 가치관의 변화(경력개발이나 취업 중시, 소자녀관 등)는 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환경이다. 또한 소자녀관이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식개선의 노력도 함께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경력개발이나 경제활동이 기존의 가족생활과 충돌되지 않도록 역할규범이나 생애과정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을 성별로 교차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 이 30.3%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가 9.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데 반해, 남성은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 8.1%로 더 높게 나왔다.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교육비 부담과 자녀양육의 사회적 분담체계 미흡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남성은 직장불안정과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4.2%, '출산/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3.8%가 남성에 비해 높게 응답되었다. 이것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와 합쳐 보면 17.3%의 높은 응답률이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훨씬 더 크고 따라서 여성 스스로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여성과 취업여성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여성과 취업여성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에 1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취업과 양육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부담이 저출산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은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이 저출산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기혼은 '자녀 교육비 부담' 을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응답하였다.

| 표 5-2 | 응답자 특성별 저출산 발생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

빈도(명)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는 생각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출산/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부부의 계층으로 가족을 유지하여 살 수 있어서	효도받기 무서지고, 자녀가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임부부가 증가해서
전체(2500)	28.1	23.5	17.2	8.1	7.7	6.4	3.6	3.4	1.1	0.5	0.3
여성(1237)	30.3	19.3	16.8	9.3	7.3	6.9	4.2	3.8	1.0	0.6	0.3
남성(1263)	25.8	27.6	17.7	6.9	8.1	6.0	3.0	3.0	1.3	0.4	0.2
								χ^2=34.562	df=11		p<0.001
미혼(1010)	22.5	28.1	16.7	8.2	9.1	5.6	3.8	3.3	1.4	0.8	0.3
기혼(1490)	31.8	20.4	17.6	8.0	6.8	7.0	3.4	3.4	0.9	0.3	0.3
								χ^2=46.035	df=11		p<0.001
미혼 여성(407)	24.1	22.1	15.0	11.3	8.8	5.7	5.7	4.2	1.7	1.0	0.5
기혼 여성(830)	33.4	18.0	17.7	8.3	6.5	7.6	3.5	3.6	0.6	0.4	0.4
미혼 남성(603)	21.5	32.3	17.8	6.2	9.3	5.7	2.5	2.7	1.2	0.7	0.2
기혼 남성(660)	29.9	23.4	17.6	7.7	7.0	6.2	3.3	3.2	1.4	0.2	0.2
								χ^2=89.026	df=33		p<0.001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자녀 양육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는 생각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출산/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부부의 애정으로 가족을 유지해 살 수 있어서	혼구함이 두려지고, 자녀가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임 부부가 증가해서
취업 여성(634)	28.9	20.1	17.4	10.0	7.1	7.5	4.2	3.3	0.8	0.3	0.0
비취업 여성(603)	31.8	18.5	16.1	8.5	7.6	6.4	4.2	4.3	1.1	0.8	0.7
취업 남성(1010)	25.7	26.2	18.6	7.3	8.4	5.8	3.1	3.1	1.2	0.2	0.1
비취업 남성(253)	26.4	32.8	13.8	5.3	6.7	6.8	2.5	2.3	1.6	1.2	0.6
								χ^2=62.959	df=33	p(0.001	
고졸 이하(885)	31.9	23.7	15.1	8.0	6.4	5.9	3.9	3.2	0.9	0.5	0.2
전문대(459)	31.2	20.9	16.4	8.8	6.4	7.5	2.2	3.9	1.3	0.9	0.0
대학교(1086)	23.7	23.9	18.8	8.0	9.8	6.7	3.7	3.5	1.2	0.3	0.4
대학원 이상(70)	26.6	31.1	25.3	6.1	1.0	2.0	5.6	0.0	1.2	0.0	0.9
								χ^2=60.488	df=33	p(0.01	
200만원 미만(651)	24.6	28.4	13.9	8.3	7.1	5.8	3.9	4.8	1.5	1.0	0.5
200만~300만원미만(608)	27.1	23.4	21.0	8.0	8.8	4.2	2.7	3.4	0.9	0.3	0.1
300만~400만원미만(566)	33.5	18.8	16.0	8.7	7.5	6.2	4.9	2.9	0.8	0.4	0.2
400만원 이상(649)	27.9	22.3	18.1	7.6	7.4	9.4	3.0	2.4	1.3	0.2	0.3
모름/ 무응답(26)	23.0	33.7	18.2	5.6	10.6	5.7	0.0	3.2	0.0	0.0	0.0
								χ^2=67.972	df=33	p(0.001	
전문직/고위임직원(170)	22.7	27.0	23.1	6.5	8.0	5.3	3.8	1.4	1.4	0.0	0.8
화이트칼라(693)	27.4	21.5	18.6	9.2	8.2	7.8	3.3	2.4	1.2	0.3	0.0
블루칼라(782)	27.4	25.3	16.7	8.1	7.6	5.5	3.7	4.3	0.9	0.3	0.0
전업 주부(455)	34.1	18.0	16.3	7.9	7.2	7.0	3.6	4.3	0.8	0.5	0.4
학생/실업/비취업(401)	25.9	28.2	14.5	7.2	7.6	5.9	3.7	3.0	1.7	1.3	0.9
								χ^2=65.179	df=44	p(0.05	
자영업자/고용주(427)	26.6	26.9	17.8	7.7	7.0	5.0	4.9	3.3	0.0	0.4	0.3
상용근로자(1082)	26.7	22.3	18.2	9.0	8.4	7.2	3.2	3.2	1.4	0.2	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135)	29.9	27.5	19.3	5.4	6.5	4.5	1.5	2.9	1.4	0.5	0.0
								χ^2=37.068	df=22	p(0.05	

그러나 자녀교육비와 양육비를 합해 보면 남녀, 혼인상태, 취업상태의 특징에 따른 차이 없이 40%가 넘는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사회에서 특히 서울에서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출산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별과 혼인상태를 교차하여 보았을 때 기혼남녀의 경우 더 두드러지는데, 미혼남녀는 남녀 순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혼남녀는 동일하게 '자녀교육비 부담' 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자녀 양육 관련 비용 부담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미혼남녀의 경우에도 '자녀교육비' 와 '자녀양육비' 를 합하였을 경우 저출산현상 발생요인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즉,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녀양육에 지출되는 과다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구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교육비와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은 저출산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책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가 넘어 자녀에 대한 질적인 양육이 고려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구억제정책의 효과가 잔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억제정책의 효과가 반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전반의 인식변화를 통한 문제 인식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의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 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대학교와 대학원 이상의 경우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이 오히려 높게 나와 저학력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고학력층에서 오히려 취업난과 직장불안정이 저출산현상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력수준과 무관하게 경제적 불안감이 대부분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에도 '경제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전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에서만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전해서' 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200만원 이상에서는 '자녀교육비 부담' 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소득수준은 연령효과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에는 저연령층이 상당수 속해있어 자녀교육보다 취업과 직장안정이 가장 중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200만원 이상의 전체 소득층에서 '자녀교육비 부담' 을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교육비 부담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고용상태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와 임시/일용/무급종사자가 '경제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전해서' 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 부담' 과 큰 차이는 없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저출산 현상의 발생요인으로 '자녀교육비 부담'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망자녀수 및 현재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인식

(1) 희망자녀수와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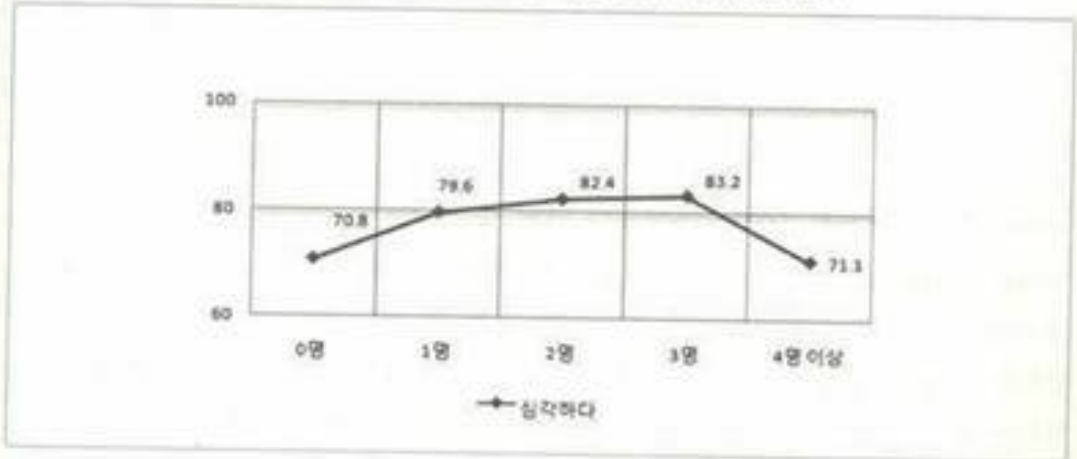
희망자녀수가 적을수록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표 5-3〉, 〈그림 5-3〉). 희망자녀수가 0명일 경우에 저출산이 심각하다(조금심각+매우심각)는 인식은 70.8%를 차지했지만, 희망자녀수가 1명일 경우에는 79.6%로 증가하고 희망자녀수가 2명인 경우에는 82.5%로 증가하며 3명일 경우에는 83.1%를 나타낸다. 그러나 4명 이상의 다자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71.1%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4명 이상의 다자녀 희망 비율은 전체적으로 1.8%에 불과해서 저출산현상의 인식과 희망자녀수의 관계는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5-3 | 희망자녀수별 저출산 심각성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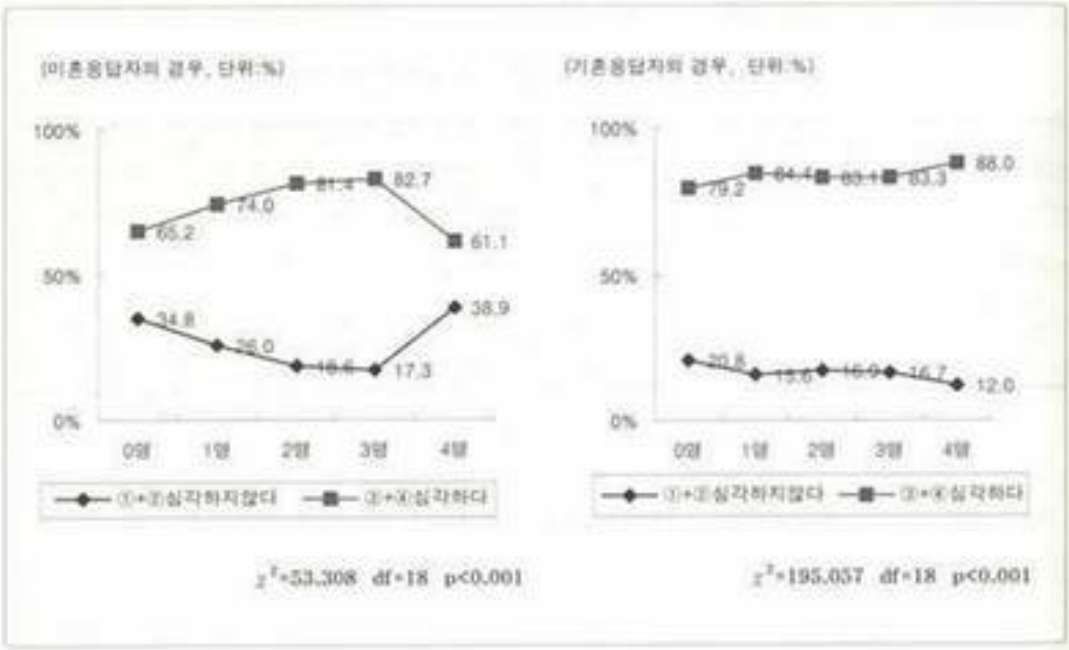
구 분	희망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단위(명)	46	451	1,640	303	45
저출산 심각성 인식	전혀심각하지않다	6.3	1.1	0.9	0.3	6.7
	별로심각하지않다	22.9	19.3	16.7	16.5	22.2
	조금심각하다	60.4	63.0	66.2	62.0	53.3
	매우심각하다	10.4	16.6	16.3	21.1	17.8

〈그림 5-3〉 희망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심각성의 인식



혼인상태별로 살피보면, 기혼은 희망자녀수가 많을수록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정도가 높아지는 비례관계가 나타나고, 미혼의 경우에도 4명 이상 다자녀 희망자를 제외하면 희망자녀수와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은 비례관계로 나타난다. 희망자녀수가 0명인 응답자들은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저출산에 대해 심각성 인식정도가 가장 낮다. 또한 미혼의 경우에는 희망자녀수별 저출산 인식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기혼의 경우에는 0명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한 편으로 나타난다. 다자녀관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저출산현상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고, 따라서 소자녀관을 가진 저연령층에서도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림 5-4〉 혼인상태별 희망자녀수와 저출산의 심각성 인식



(2) 현재 자녀수와 저출산 발생요인 인식

저출산현상이 발생하는 요인과 기혼 응답자의 현재 자녀수를 교차시켜 본 결과,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기혼응답자의 경우에 '자녀교육비 부담'을 저출산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자녀수가 많아질수록(4명 예외) '자녀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발생요인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무자녀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보다는 '취업난과 직장불안정'을 저출산의 가장 큰 발생요인으로 응답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 표 5-4 | 현재자녀수별 저출산 발생요인 인식

(기혼응답자, n=149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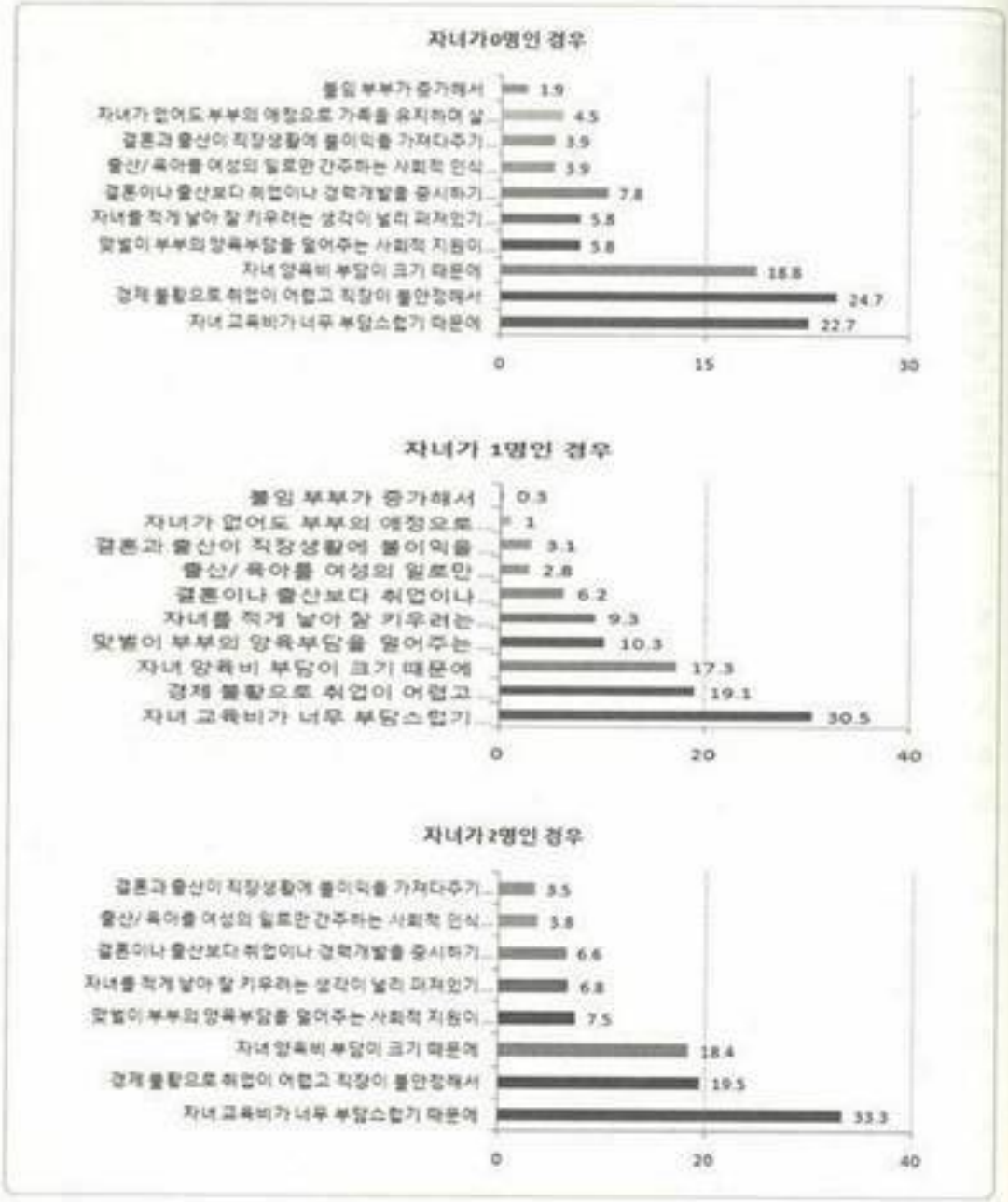
현재 자녀수	0명 (154)	1명 (387)	2명 (851)	3명 (92)	4명 (6)	평균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22.7	30.5	33.3	41.3	33.3	31.9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24.7	19.1	19.5	26.1	33.3	20.4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18.8	17.3	18.4	10.9	-	17.7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서	5.8	10.3	7.5	4.3	33.3	8.0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5.8	9.3	6.8	2.2	-	7.0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7.8	6.2	6.6	8.7	-	6.7
출산/ 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3.9	2.8	3.8	3.3	-	3.5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3.9	3.1	3.5	3.3	-	3.4
자녀가 없어도 부부의 애정으로 가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서	4.5	1.0	0.4	-	-	0.9
불임 부부가 증가해서	1.9	0.3	0.1	-	-	0.3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서	-		0.1	-	-	0.1

* χ^2=74.512 df=40 p<0.01

무자녀 기혼응답자들은 미혼집단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의 발생요인을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자녀교육비 부담' 과 '자녀양육비 부담' 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부담(30.5%)이 저출산의 발생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역시 자녀교육비 부담(33.3%)이 저출산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중 하나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비중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가 1~2명 있는 경우와 달리, 저출산의 발생요인으로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경력개발의 중요성을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녀 1~2명이 있을 경우에는 무자녀 기혼응답자와 달리, 자녀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발생요인을 생각하고 있어, 무자녀층과 유자녀층의 저출산 발생요인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는 현재 자녀수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 방식의 내용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현재 자녀수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에 직면한 문제가 다를 수 있고,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이행이 용이하거나,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이행이 용이한 각각의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자녀수가 0명일 때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요인이 41.5%로 나타났지만,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7.8%로 증가하며,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51.7%로 증가해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실제로 크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5-5〉 현재자녀수에 따른 저출산 발생요인 인식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분담의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이 저출산 발생의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10.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자녀가 0명일 경우와 1명일 경우에는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의 맞벌이와 홑벌이 비율이 정반대로 역전되어 3 : 6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가 일단 생기고 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의 일가족양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또한 한자녀 기혼집단에서는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자출산이 발생한다고 보는 비율①,③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자녀의 질적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따라서 자녀 1명에서 출산완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이 장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인지도 파악은 서울시민이 직면한 저출산의 문제 극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지원방향이 앞으로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인 분석작업이다.

1)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대상과 지원내용

먼저 조사된 결과를 통해 정책별 인지도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각 정책들의 정책대상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발급이나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자금 혜택,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현재 서울시의 주요 출산·양육 관련 지원정책과 그 내용은 다음 〈표 5-5〉와 같다.

| 표 5-5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

지원제도	정책대상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
1)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 2자녀 이상 세대 (단, 막내가 만 13세이하)	• 카드사용시 혜택 – 참여업체의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2)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주로서 3자녀 이상자녀 세대 주 등 8개 부류에 해당하는 자	•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5항)
3) 다자녀가구 주택자금혜택부여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4,200만원) 대출이율 : 2%
4)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 서대문구: 07.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 1인당 10만원 지원
	• 양천구 : 07. 1. 1. 이후 출생아 전원	• 1인당 5만원 지원
	• 성동구 : 07. 1. 1. 이후 출생아 전원	• 첫째·둘째아 출생시 1인당 5만원 지원, • 셋째이후 출생시 1인당 20만원 지원

	• 강북구 : 07. 1. 1. 이후 출생아 전원	• 1인당 20만원 지원
	• 중구: 07. 4. 10 이후 출생한 둘째아부터	• 둘째 이후 출생시 1인당 20만원 지원 • 열 번째 이상 출생시 1인당 3천만원 지원
	• 서초구: 07. 5. 31이후 출생아 전원	• 첫째아 1인당 10만원 • 둘째아 1인당 50만원 • 셋째이상 1인당 100만원
	• 강남구: 07. 7. 1. 이후 출생 둘째아부터	• 둘째아 1인당 50만원 • 셋째아 1인당 100만원 • 넷째아 1인당 300만원 • 다섯째이상 1인당 500만원
	• 종로구: 08. 1. 1. 이후 출생 둘째아부터	• 둘째아 1인당 50만원 • 셋째아 1인당 100만원
5) 자치구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 서대문구 : 출생아 전원	• 3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 용산구 : 07. 1. 1. 이후 출생아 전원	• 1인당 5만원 상당 출산육아용품 지급
6) 차등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 자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4인가족 기준 398만원)이하 가구의 자녀 보육비용 차등지원(부모소득에 따라 차등)
7)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수준 이하 자녀 중 취학전 만5세아	• 월 16.7천원
8)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 아동 [13]	• 정액지원(18.6~8.4천원, 연령별)
9)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 [14]	• 월 37.2천원 또는 수납한도액
10)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 보육료 전액면제 아동 중 1층이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지원	민간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주간보육+시간연장(또는 야간)보육까지 한 경우 민간보육 시설 보육료의 150%범위 내에서 지원
11)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 만6세 미만 영유아	•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시 보호자를 동반한 3명의 영유아 무료승차 ※ 단, 영유아 단독 승차시 초등학생요금 적용
12) 불임부부 지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원
13)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가정으로 지역보건소에 신청	• 산모 - 신생아관리(산모식사, 수유법 지도, 신생아 목욕 등) ※ 건강보험료 납부로 산정(5인가족)

		– 직장가입자 55,280원 납부 – 지역가입자 57,370원 납부 • 지원기간 : 2주(12일)
14)입양아 양육수당**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월 100,000원
15)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임신 16주의 임산부	• 매월 철분제 지급
	• 임산부	• 임신초기 건강진단(빈혈, 매독, B형간염 항체 검사, 복부초음파, 태아 선천성기형아 검사, 교육 등의 산전 · 후 관리
	• 직장인 임산부	• 매월 넷째주 토요일(09:00~13:00)에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방접종 실시 ※ 현재 23개 보건소에서 실시
	• 출생시 2.5kg 미만이거나 37주 이내 분만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로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출생아 전원	• 선천성대사 이상 6종 무료검사 실시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미만 가정의 환아로 판명시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홈페이지, 다자녀 가정지원-출산,양육지원 페이지 http://women.seoul.go.kr/new/dependent/dependent01/dependent0101_tab_02.html
출처(*): 여성가족부,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08.3.1이후 적용)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8년도 입양가정 지원)

2)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관한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아가 타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두자녀가 동시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정저소득층(1층) 및 2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관한 추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단, 취학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중)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2년을 연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이후에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2)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분석

(1) 출산 · 양육 지원정책별 인지도

위와 같은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해 기혼응답자(1,490명)를 대상으로 정책인지도 및 수혜여부, 도움정도를 질문하였다. 우선, 설문에 포함된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15가지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하여 각각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표 5-6〉).

| 표 5-6 | 서울시의 출산 · 양육지원 정책별 요인분석

현재 시행중인 정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5)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0.714	0.002	0.117	0.227
13)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0.668	0.005	0.191	0.269
12) 불임부부 지원	0.572	0.278	0.163	-0.050
14) 입양아 양육수당	0.560	0.250	0.364	-0.120
10)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0.407	0.372	-0.001	0.317
9)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0.245	0.677	-0.087	0.022
8)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0.063	0.672	0.208	0.047
7)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0.035	0.652	0.183	0.256
11)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0.227	0.235	0.017	0.040
2)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0.098	0.088	0.821	0.089
3) 다자녀가구 주택자금혜택부여	0.160	0.151	0.759	0.111
1)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0.230	0.001	0.463	0.165
5) 자치구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0.226	0.028	0.057	0.738
4)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0.038	0.097	0.298	0.683
6) 차등보육료 지원	0.172	0.384	0.044	0.561

인지도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정책 15가지는 요인분석 결과 4가지 범주의 정책들로 구분되었다. 우선,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의 범주에는 〈표 5-6〉의 15번, 13번, 12번, 14번 정책이 포함될 수 있고, 보육료 지원 정책에는 7번, 8번, 9번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범주에는 2번과 3번이 포함되었고, 자치구 출산지원정책의 범주에는 4번, 5번, 6번의 정책들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1번, 10번, 11번 정책은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은 임신 및 출산지원,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자치구 출산지원 제도 등 4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5-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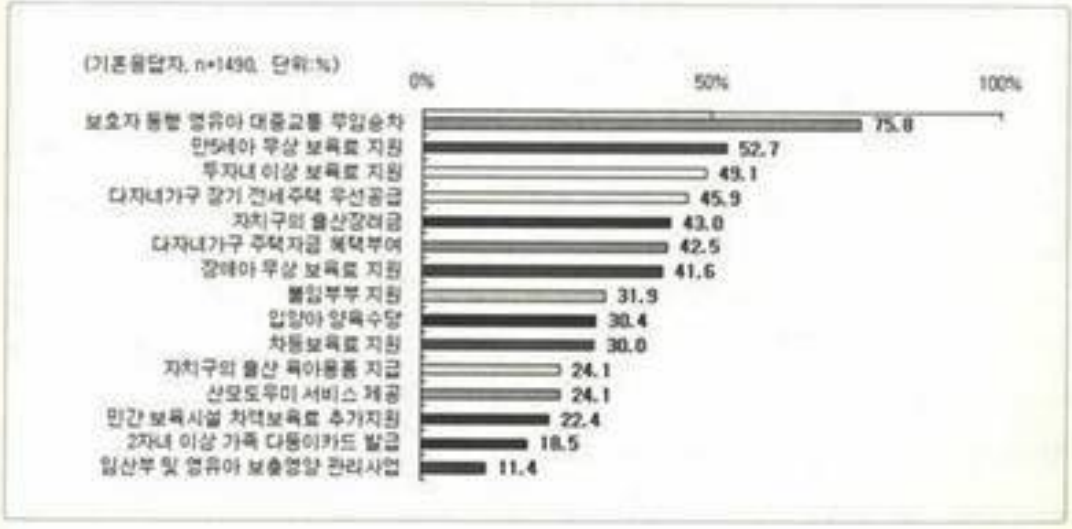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 한 경우에도 만 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취학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장애아는 지원이 불가하다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다

| 표 5-7 | 출산지원정책의 범주화

현재 시행중인 지원제도	범주화
15)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 임신 및 출산지원 제도
13)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2) 불임부부 지원	
14) 입양아 양육수당	
10)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9)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 제도
8)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7)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2)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다자녀가구 지원 제도
3) 다자녀가구 주택자금혜택부여	
1)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5) 자치구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 자치구 출산지원 제도
4)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6) 차등보육료 지원	

이러한 요인분석결과는 현재의 제도를 4가지 영역범주로 묶을 수 있고, 각 범주마다 2~4가지의 지원제도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이나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다둥이카드 등은 위의 4가지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제도 인지도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혼응답자에게 질문하여 '알고 있음' '모름'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지도 분석 결과, 기혼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정책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75.8%)였으며 그 다음이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52.7%),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49.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5가지 정책 중 인지도가 50%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정책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의 3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지원제도(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자금 혜택)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40% 이상의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차등 보육료 지원'이나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다둥이카드 발급' 등은 인지도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즉, 민간보육시설을 통한 공적 지원정책은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각 정책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인지도는 〈표5-8〉, 〈표5-9〉, 〈표5-10〉, 〈표5-11〉에 각각 제시되었다.

①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로 묶일 수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가 나타난 것은 '불임부부 지원'(31.9%)이고, 그 다음이 '입양아 양육수당'(30.4%),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24.1%),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11.4%)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 지원제도나 입양아 양육수당,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등은 기혼응답자 3명중 1명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로는 모든 제도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인지도가 높고, 연령에 따른 일정한 인지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취업자보다는 비취업/미취업자들이 4가지 제도에서 모두 인지도가 더 높다. 취업여성보다는 비취업여성의 인지도가 모두 높고, 남성은 반대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인다. 고졸이하보다는 대졸과 대학원 이상에서 모든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소득수준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의 인지도가 대체로 높아진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의 제도 인지도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4가지 제도 모두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는 전업주부가 직장인보다는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홍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제도의 지원을 직접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기혼여성, 비/미취업자, 고학력과 고소득층, 전업주부 집단이 제도의 인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8 |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의 인지도

(단위 : %)

		빈도 (명)	불임부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산모 도우미 서비스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사업
전체		(1490)	31.9	30.4	24.1	11.4
성별	여성	(830)	33.9	31.7	27.5	12.5
	남성	(660)	29.4	28.7	19.8	10.0
연령별	25~29세	(92)	31.7	35.7	27.7	12.5
	30~34세	(341)	28.4	23.8	26.2	13.6
	35~39세	(547)	33.8	31.7	23.4	11.3
	40~44세	(509)	32.3	32.4	22.7	9.8
취업상태별	취업	(979)	31.0	29.6	22.0	10.5
	비취업/미취업	(511)	33.7	31.7	28.1	13.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33.4	31.0	25.0	10.8
	비취업 여성	(473)	34.3	32.2	29.3	13.7
	취업 남성	(622)	29.7	28.8	20.2	10.3
	비취업 남성	(38)	25.9	26.5	12.1	5.2
학력별	고졸 이하	(638)	29.6	29.6	23.9	10.7
	전문대	(247)	33.8	34.6	22.4	11.3
	대학교	(565)	33.3	29.3	24.4	11.9
	대학원 이상	(40)	37.8	31.2	32.2	15.8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19.0	21.0	22.1	3.8
	200만~ 300만원 미만	(338)	26.4	25.4	24.6	12.0
	300만~ 400만원 미만	(472)	33.0	30.3	24.6	10.4
	400만원 이상	(616)	35.5	33.8	23.3	12.5
	모름/ 무응답	(4)	13.3	56.9	62.6	14.5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22.3	24.0	18.4	8.2
	화이트칼라	(387)	35.8	33.9	27.0	11.8
	블루칼라	(485)	29.2	27.4	18.8	10.0
	전업 주부	(455)	34.2	31.4	29.7	13.5
	학생/실업/비취업	(56)	28.8	34.5	14.7	9.7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24.3	25.2	15.3	8.8
	상용근로자	(563)	35.9	33.1	26.5	11.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25.3	24.0	18.2	13.5

② 보육지원정책

보육지원과 연관된 정책, 즉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등 4가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앞의 '임신 및 출산지원 제도' 보다 인지도가 높아 각각 52.7%, 49.1%, 41.6%이고,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22.4%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4가지 보육료 지원제도 모두에 대해 여성의 인지도가 남성보다 더 높고, 연령별로는 앞의 임신 및 출산지원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는 30~34세 기혼연령층이 일관되게 보육과 관련한 4가지 제도 모두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만혼화 추세로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30대 초반의 출산행위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30~34세 기혼남녀의 보육지원에 관한 정책인지도를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취업자보다는 비취업/미취업자의 인지도가 높았고, 취업여성보다는 비취업여성의 인지도가 대체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보육지원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적 정책사안 가운데 하나이고,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구축에 해당되므로 취업여성의 보육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학력별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문대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수준으로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보다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4가지 보육지원제도 모두에 대해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고소득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들의 정책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정책인지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기혼여성, 비취업/미취업자, 고소득층, 전업주부, 화이트칼라에서 서울시의 보육지원 관련제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관한 정책, 즉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45.9%, 42.5%, 18.5%, 75.8%로서, 2자녀 이상 다둥이 카드의 인지도가 가장 낮고,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다둥이 카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특성면에서 '전업주부' 들의 인지도(23.1%)가 가장 높다. 그러나 인지도가

| 표 5-9 |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빈도 (명)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전체		(1490)	52.7	49.1	41.6	22.4
성별	여성	(830)	56.2	51.3	45.4	24.2
	남성	(660)	48.2	46.3	36.9	20.1
연령별	25~29세	(92)	55.3	57.5	52.5	25.7
	30~34세	(341)	50.7	47.3	39.7	20.7
	35~39세	(547)	52.6	51.1	43.0	24.2
	40~44세	(509)	53.7	46.7	39.4	20.9
취업상태별	취업	(979)	49.4	46.9	40.2	20.2
	비취업/미취업	(511)	59.1	53.4	44.3	26.5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53.5	48.3	45.5	20.8
	비취업 여성	(473)	58.3	53.7	45.3	26.8
	취업 남성	(622)	47.0	46.1	37.2	19.9
	비취업 남성	(38)	68.3	50.1	32.3	23.4
학력별	고졸 이하	(638)	52.0	47.0	42.6	21.9
	전문대	(247)	55.2	53.8	47.8	22.3
	대학교	(565)	53.2	49.9	39.0	22.8
	대학원 이상	(40)	40.8	42.7	25.8	25.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51.9	31.8	36.0	21.4
	200만~ 300만원 미만	(338)	46.4	45.3	38.6	21.8
	300만~ 400만원 미만	(472)	55.3	51.4	43.8	22.2
	400만원 이상	(616)	54.0	50.8	42.1	22.6
	모름/ 무응답	(4)	75.9	83.2	42.4	69.9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47.5	41.0	31.7	18.0
	화이트칼라	(387)	53.0	50.8	45.4	21.6
	블루칼라	(485)	46.9	45.0	37.9	19.6
	전업주부	(455)	58.0	54.3	45.2	26.2
	학생/실업/비취업	(56)	67.7	45.7	37.3	28.9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49.6	40.6	34.4	20.0
	상용근로자	(563)	49.3	50.6	43.8	20.8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48.7	46.2	38.9	17.0

20% 미만으로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 5중 4명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인지도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제도를 제외하고 남성보다 모두 높다. 연령별로는 앞의 지원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경향은 없지만, 출산 및 초기 양육

기에 해당하는 30~34세 기혼연령층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제도 인지도가 더 높고,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관련 지원을 제외하고는 취업여성보다 비취업여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4가지 지원제도 모두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기혼층은 인지도가 25.2%에 불과했지만 400만원 이상 기혼집단에서는 그 2배가 넘는 51.5%의 인지도가 나타났다.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 200만원 미만에서는 34.1%에 그쳤지만 400만원 이상에서는 46.0%의 인지도가 나타났다. 이는 다자녀 비율이 고연령층에 많고, 연령과 소득수준은 비례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전업주부의 인지도가 모두 높지는 않았다. 주택지원과 관련된 제도, 즉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과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같은 지원제도는 화이트칼라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정책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다둥이 카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2007년 8월부터 2자녀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낮춰 확대지원하고 있고, 카드사의 협력가맹점 또한 409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5] 인지도가 가장 낮은 18.5%를 차지해서 시행정책의 홍보가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카드발급이나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자녀가구 지원제도나 다둥이 카드, 영유아 무임승차 제도에서 모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게 나온 것은 정작 이러한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집단에게 제도 운용이 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④ 자치구의 출산지원제도 등

다음으로, 자치구 출산지원제도와 차등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장려금제도의 인지도가 43.0%로 가장 높고, 차등보육료 지원이 30.0%, 출산육아용품 지급이 24.1%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인지도가 높고, 연령별로는 40대 기혼층을 제외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다. 즉, 출산장려금은 25~29세 저연령층은 40.9%의 인지도를 나타냈지만,

15) http://seouli.bccard.com/ '다둥이카드' 홈페이지 가맹점

| 표 5-10 | 다자녀가구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빈도 (명)	다자녀 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전체		(1490)	45.9	42.5	18.5	75.8
성별	여성	(830)	47.4	41.8	21.7	80.2
	남성	(660)	44.0	43.2	14.5	70.4
연령별	25~29세	(92)	51.2	42.2	18.9	70.7
	30~34세	(341)	41.6	40.4	18.1	70.1
	35~39세	(547)	44.8	43.8	20.7	78.4
	40~44세	(509)	49.0	42.5	16.4	77.9
취업상태별	취업	(979)	45.0	42.3	16.7	73.3
	비취업/미취업	(511)	47.5	42.7	22.0	80.7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46.5	41.9	20.0	79.6
	비취업 여성	(473)	48.1	41.8	23.0	80.6
	취업 남성	(622)	44.2	42.6	14.9	69.7
	비취업 남성	(38)	40.0	54.1	9.2	81.5
학력별	고졸 이하	(638)	43.6	39.1	16.6	76.4
	전문대	(247)	46.2	48.5	22.2	78.6
	대학교	(565)	48.3	43.9	18.2	73.8
	대학원 이상	(40)	46.5	37.9	31.1	78.1
월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25.2	34.1	14.1	71.1
	200만~ 300만원 미만	(338)	42.6	38.0	16.6	73.1
	300만~ 400만원 미만	(472)	43.2	42.1	19.5	77.2
	400만원 이상	(616)	51.5	46.0	19.1	76.9
	모름/ 무응답	(4)	70.9	35.1	38.6	46.9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42.7	32.8	18.3	67.5
	화이트칼라	(387)	48.5	47.4	18.6	73.8
	블루칼라	(485)	42.8	40.3	14.9	74.2
	전업 주부	(455)	47.6	40.9	23.1	81.1
	학생/실업/비취업	(56)	46.9	57.6	13.0	77.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47.5	40.2	12.0	68.3
	상용근로자	(563)	44.3	44.9	19.5	74.9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40.5	33.2	16.6	82.3

35~39세는 44.8%이고, 출산육아용품 지급제도에 대해서도 25~29세 기혼(21.0%)보다는 35~39세 기혼(24.5%)이 더 높으며, 차등보육료 지원도 25~29세 기혼보다는 35~39세 기혼집단의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제도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원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보다는 비/미취업자의 인지도가 더 높고, 학력별로는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취업여성보다는 비취업여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업주부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월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제도도 200만원 미만(34.0%)에 비해 400만원 이상(46.2%)의 인지도가 더 높고, 200만원 미만에서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14.3%에 불과했다. 반면, 400만원 이상에서는 그 2배 이상인 35.7%의 인지도가 나타났다. 블루칼라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인지도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인지도가 자영업자/고용주, 임시/일용직에 비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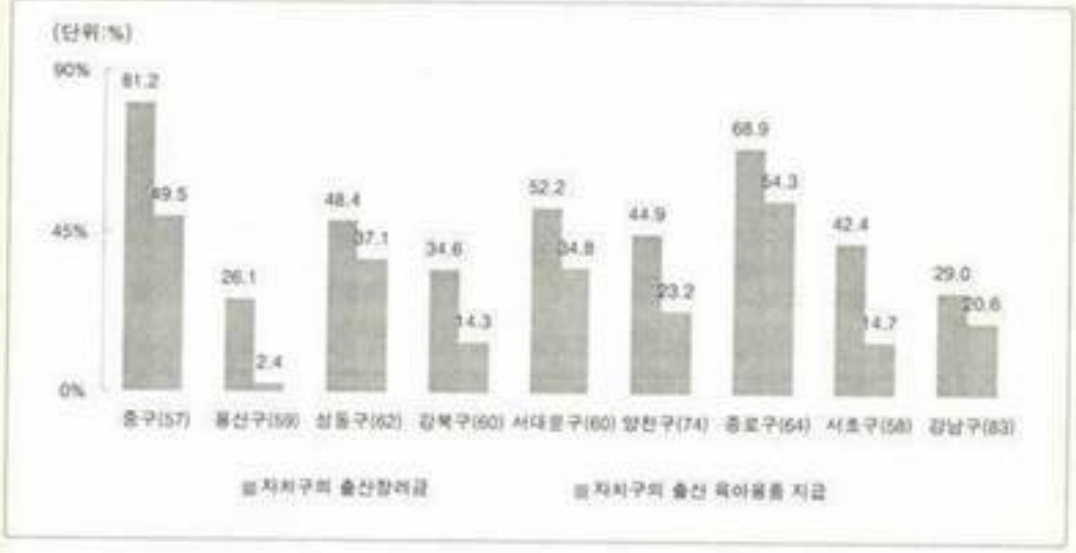
| 표 5-11 | 자치구 출산지원제도 등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빈도 (명)	자치구 출산장려금	자치구 출산 육아용품 지급	차등 보육료 지원
전체		(1490)	43.0	24.1	30.0
성별	여성	(830)	45.2	26.4	33.2
	남성	(660)	40.3	21.2	25.9
연령별	25~29세	(92)	40.9	21.0	28.9
	30~34세	(341)	43.4	22.7	29.8
	35~39세	(547)	44.8	24.5	31.7
	40~44세	(509)	41.2	25.1	28.3
취업상태별	취업	(979)	40.7	21.6	28.4
	비취업/미취업	(511)	47.3	28.8	32.9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42.0	21.4	31.4
	비취업 여성	(473)	47.5	30.1	34.4
	취업 남성	(622)	40.0	21.7	26.7
	비취업 남성	(38)	45.2	12.7	13.2
학력별	고졸 이하	(638)	37.5	21.5	25.4
	전문대	(247)	48.1	20.5	30.1
	대학교	(565)	46.8	28.7	35.2
	대학원 이상	(40)	46.4	22.3	28.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34.0	17.7	14.3
	200만~ 300만원 미만	(336)	38.2	23.4	25.3
	300만~ 400만원 미만	(472)	43.0	24.2	27.8
	400만원 이상	(616)	46.2	24.7	35.7
	모름/ 무응답	(4)	63.2	64.2	29.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43.1	21.9	26.3
	화이트칼라	(387)	45.1	24.4	34.0
	블루칼라	(485)	36.7	19.4	24.5
	전업주부	(455)	47.4	29.9	34.6
	학생/실업/비취업	(56)	46.7	20.2	18.7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33.2	18.1	24.0
	상용근로자	(563)	44.6	24.1	31.4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44.2	19.0	26.1

자치구별로 다양한 지원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제도의 인지도를 각 자치구별로 비교하여 보면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정책 인지도



지원대상 면에서 양천구, 성동구, 강북구, 서초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생아부터 전 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자치구들은 셋째 아에게 지급하는 서대문구나 둘째 아 이상에게 지급하는 중구, 종로구에 비해 지원대상이 더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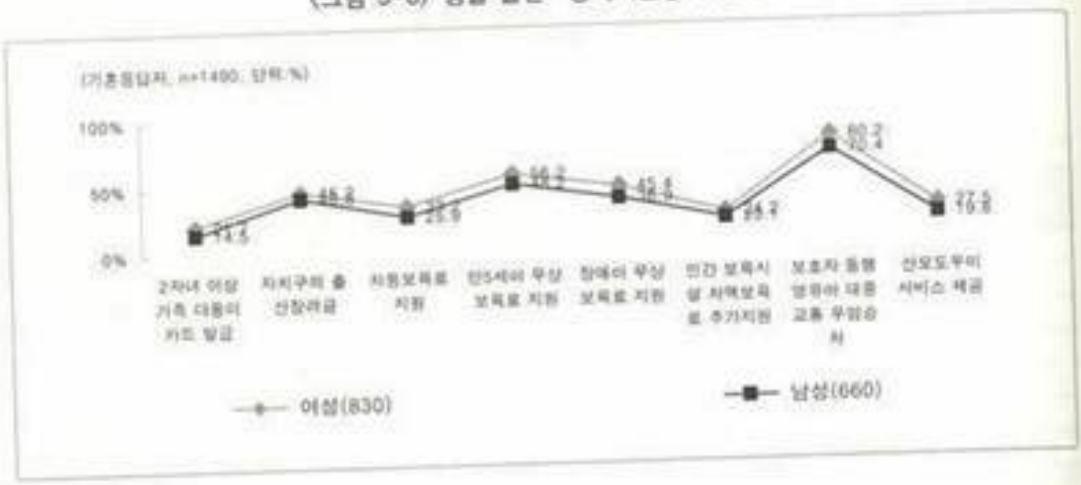
또한,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의 3개 자치구에서는 자녀를 한명씩 더 낳을 때마다 50~100만원씩 더 지급하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지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온 중구의 경우, '열 번째 자녀 이상 출생 시 1인당 3천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출산육아용품 지원' 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용산구와 서대문구에서 이 정책에 대한 구민의 인지도가 다른 구보다 더 높지 않아서, 구별로 시행하는 출산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 및 지원수준과 구민들의 정책인지도 간의 상관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 인지도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서울시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결과, 몇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의 모든 제도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별로 인지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8가지 정책(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자치구 출산장려금, 차등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산모도우미 서비스제공)에 대한 인지도 차이는 〈그림 5-8〉와 같다.

〈그림 5-8〉 성별 출산 · 양육지원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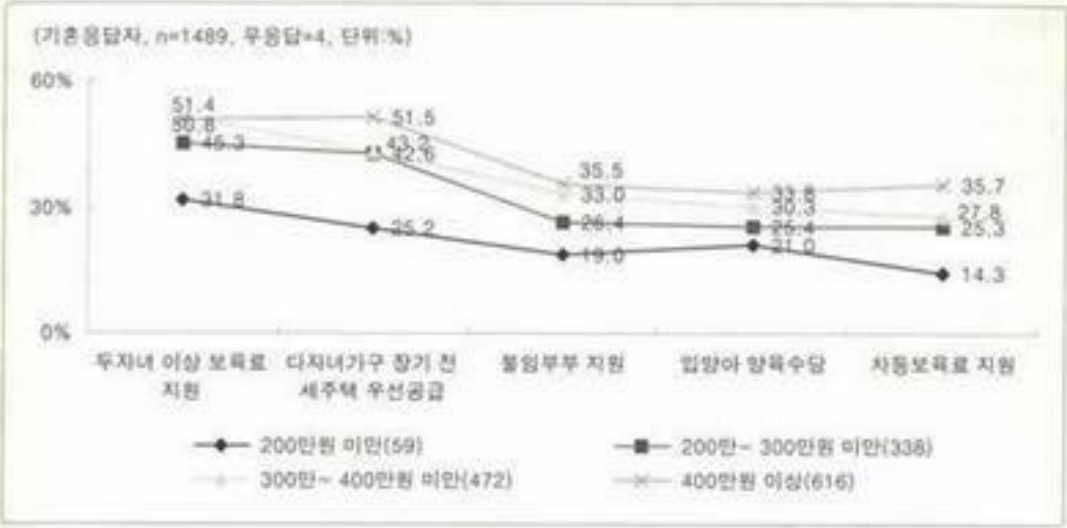


위의 8가지 정책 각각에 대해 인지도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은 인지도에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났다. 나머지 7가지 정책들 간에는 성별 인지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의 경우 여성 41.8%, 남성 43.2%로 남성이 더 높은데, 이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나머지 7가지 정책 모두에서 여성이 더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들이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에 관심이 더 많고 또 책임도 더 많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학력수준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면에서는 월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점이다. 월평균소득과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정책은 '두 자녀 이상보육료 지원' ,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결임부부 지원' , '입양아 양육수당' '차등보육료 지원' 의 5가지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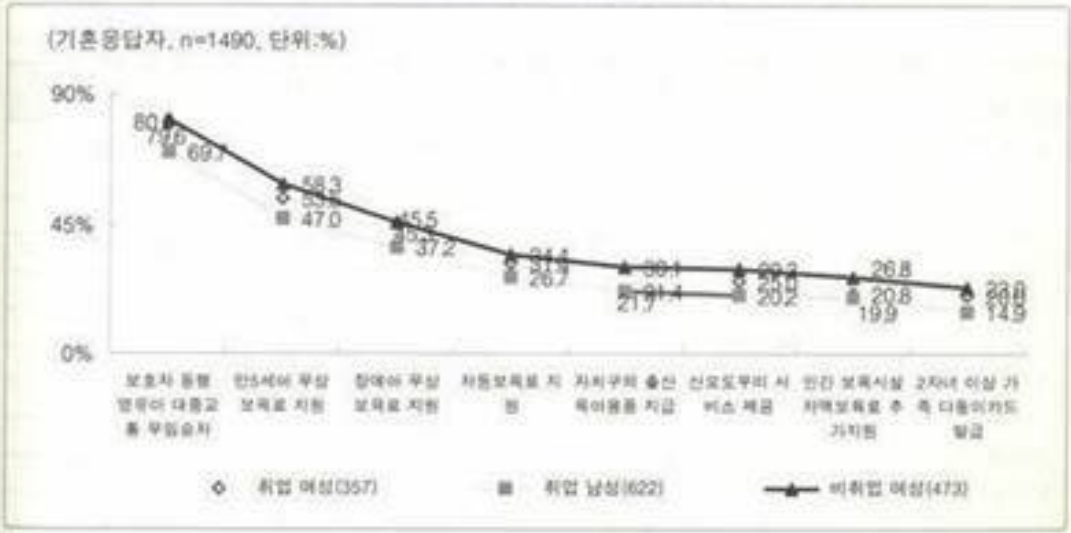
이는 저출산 대응방안들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선별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들 지원제도의 대상이 대부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이하인 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에게는 제도의 홍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림 5-9〉 월평균소득별 정책 인지도



셋째,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 취업여성보다는 전업주부의 인지도가 일관되게 더 높다는 것은 이들에게도 제도의 인지도를 더 높여야 하겠지만, 취업자,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을 위한 정책홍보나 지원 혜택의 기회를 증가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취업상태에 따른 정책의 인지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무임승차',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차등보육료 지원', '자치구의 출산 육아용품 지급',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2자녀이상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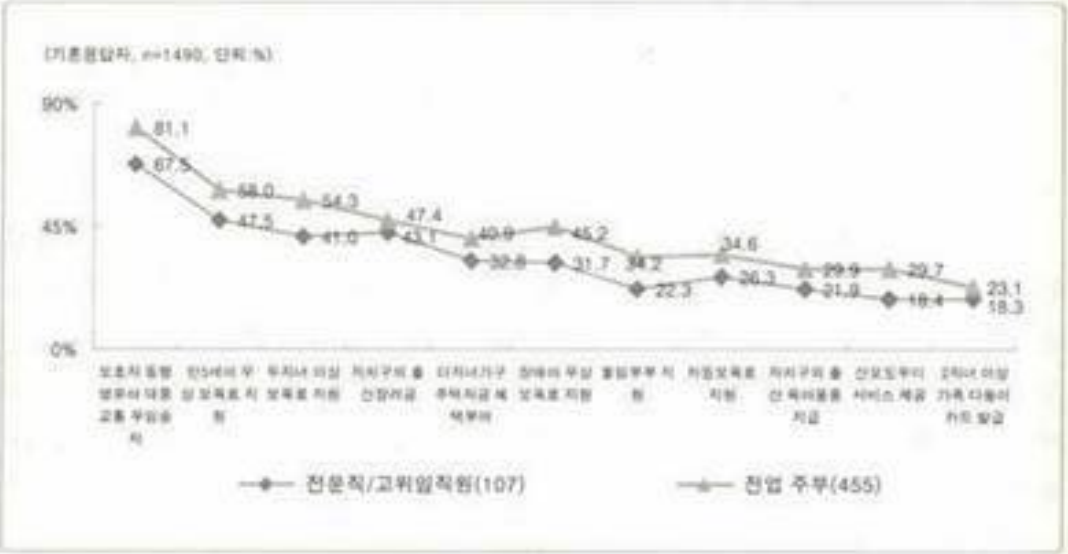
〈그림 5-10〉 성&취업상태별 출시/양육 지원 정책별 인지도



다둥이카드' 등 8가지 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여성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정책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그림 5-10〉).

〈그림 5-11〉와 같이, 전업주부는 정책 인지도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대체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정책 11가지에서 아래 7가지가 전업주부의 정책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었다. 이는 전업주부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11〉 직업별 출산 · 양육 지원정책의 인지도



| 표 5-12 | 직업별 정책 인지도

(단위 : %)

지원제도 \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전업주부	학생/실업/비취업
임신출산 지원	불임부부 지원	22.3	35.8	29.2	34.2	28.8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8.4	27.0	18.8	29.7	14.7
보육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47.5	53.0	46.9	58.0	67.7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1.0	50.8	45.0	54.3	45.7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31.7	45.4	37.9	45.2	37.3
다자녀 지원 등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32.8	47.4	40.3	40.9	57.6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18.3	18.6	14.9	23.1	13.0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67.5	73.8	74.2	81.1	77.1
자치구 지원제도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43.1	45.1	36.7	47.4	46.7
	자치구의 출산 육아용품 지급	21.9	24.4	19.4	29.9	20.2
	차등보육료 지원	26.3	34.0	24.5	34.6	18.7

또한 기혼응답자의 고용상태별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책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불임부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발급' 의 8가지 정책이다. 여기서는 상용근로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임시/일용/무급종사자였고,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고용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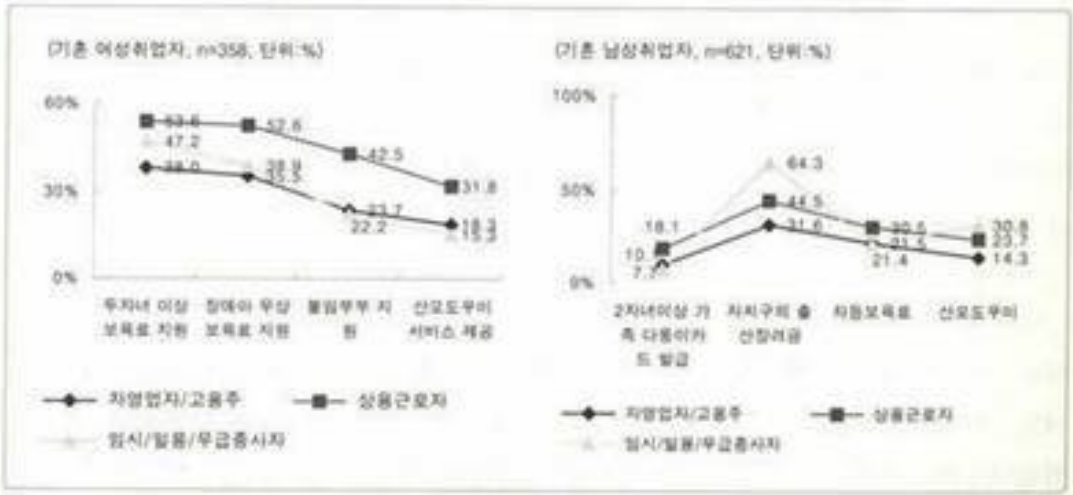
| 표 5-13 | 서울시의 출산/양육지원 정책별 인지도 *고용상태별

(기혼취업응답자, n=979, 단위:%)

		자영업자/고용주 (330)	상용근로자 (563)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임신 출산 지원	불임부부 지원	24.3	35.9	25.3
	입양아 양육수당	25.2	33.1	24.0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5.3	26.5	18.2
보육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0.6	50.6	46.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34.4	43.8	38.9
다자녀가구 지원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 발급	12.0	19.5	16.6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68.3	74.9	82.3
자치구지원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33.2	44.6	44.2

다른 한편 취업상태에서 남성취업자보다 여성취업자가 모든 정책별 인지도가 높았던 것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상태별 인지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 5-12〉 성별 고용상태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정책 인지도



기혼 여성취업자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에서 고용상태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용근로자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임시/일용/무급종사자가 자영업자/고용주보다 약간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 기혼 남성취업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차등보육료 지원' '산모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책들에서 자영업자/고용주에 비해 모두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 비율이 가장 낮은 상용근로자가 2명 이상 자녀비율이 높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임시/일용/무급종사자에 비해 정책인지도가 높다는 점이다(〈표 5-14〉 참조).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가 자영업자/고용주의에 비해 일정하게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 표 5-14 | 기혼남성의 고용상태별 현재자녀수

(기혼남성취업자 n=621, 단위(%))

현재자녀수	0명	1명	2명이상
자영업자/고용주(236)	10.2	23.7	66.1
상용근로자(371)	12.7	29.1	58.2
임시/일용/무급종사자(14)	14.3	14.3	71.4

넷째,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거의 모든 제도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의 희망자녀수가 1.87명이고 블루칼라의 희망자녀수가 2.00명이며, 현재 자녀수에서도 화이트칼라(1.41명)보다 블루칼라(1.70명)의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자녀수와 현재자녀수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희망자녀수가 2명에 달하는 블루칼라층을 위한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지도는 50% 이상이 15가지 정책 중 3가지 정도(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만3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불과하고, 다둥이카드, 차등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등은 인지도가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5가지 출산 양육지원제도 중 절반정도인 7개 제도가 지원대상의 자격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로 정하고 있고,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3자녀이상' 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주택자금혜택' 의 경우에도 '3자녀 이상' 등 한정된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바도 있다. 또한 현물이나 현금지원방식의 정책이 15가지 중 8가지에 해당하고, 그 지원수준이 높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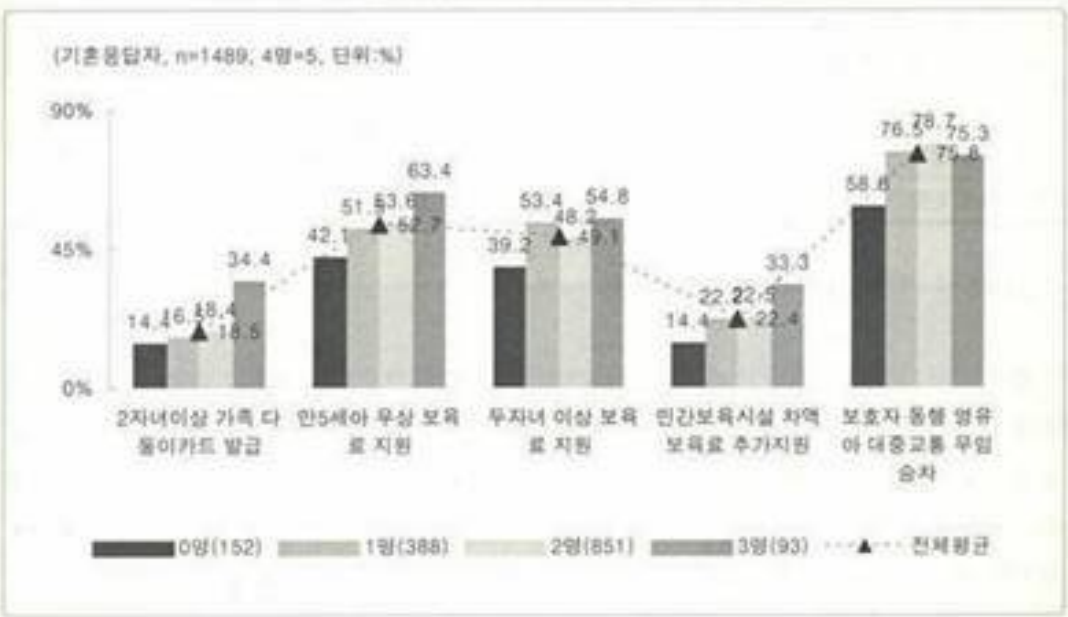
이 특징이다. 즉, 다자녀가구를 위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수준이 미미하다. 따라서 정책 지원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현물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더구나 정책 시행기간도 짧아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정책의 체감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3) 자녀수에 따른 정책인지도

다음은 서울시 출산/양육지원 정책들이 기혼응답자의 희망자녀수 및 현재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이 자녀수에 따라 다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자녀관을 가진 응답자와 다자녀관을 가진 응답자가 정책 인지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혼응답자의 현재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림 5-13〉에서 볼 수 있듯이, '2자녀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보호자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현재 자녀수별 정책 인지도



특히, 3명의 자녀를 가진 응답자의 경우, 정책별 인지도가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무자녀의 경우 정책별 인지도가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그리고 '2자녀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발급',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제도는 무자녀 혹은 자녀 1명을 둔 응답자보다 다자녀 응답자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별 인지도와 희망하는 자녀수를 교차시켜 보았다. (표 5-15)과 마찬가지로, 희망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책 인지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집단과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인지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 4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정책 인지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제도는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책별 인지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정책의 인지도가 높다고 하여도 그 정책의 적절성이나 효과성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 표 5-15 | 희망자녀수별 정책인지도

	0명(23)	1명(237)	2명(974)	3명(222)	4명(25)	5명이상(2)
입양아 양육수당	0.0	32.8	31.6	26.7	29.2	0.0
불임부부지원	4.2	28.2	33.1	35.1	28.0	0.0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6.7	48.5	53.5	58.6	48.0	33.3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3.0	50.4	49.0	51.8	48.0	100.0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8.3	17.2	23.6	23.4	24.0	100.0
보호자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52.2	70.0	76.9	78.4	88.0	100.0
차등보육료 지원	8.3	21.8	31.7	33.8	33.3	33.3

3)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수혜율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 정책들에 대한 기혼응답자(1,490명)의 수혜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가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이는 정책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원제도에 대한 수혜율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5.4%, 약80명)을 제외하면 5%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자치구 출산장려금이 3.5%(52명),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1%, 차등보육료 지원 2.4%,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1.8% 등으로 나타났고, 15가지 지원제도 모두에 대해 혜택받은 경험이 없다는 기혼응답자 비율은 41.4%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 60% 정도는 하나 이상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4〉 출산양육 지원정책별 수혜율



각 정책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수혜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만 25~44세 기혼남녀 가운데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수혜율을 보인 것은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1.2%)이다. 그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0.6%), 불임부부 지원(0.4%), 입양아 양육수당(0.1%)으로 나타났다(〈표 5-16〉).

| 표 5-16 |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 수혜율

(단위 : %)

		빈도 (명)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전체		(1490)	1.2	0.6	0.4	0.1
성별	여성	(830)	0.7	0.6	0.5	0.1
	남성	(660)	1.8	0.6	0.3	0.0
연령별	25~29세	(92)	0.9	1.7	0.8	0.0
	30~34세	(341)	2.7	1.2	0.4	0.2
	35~39세	(547)	1.2	0.2	0.8	0.0
	40~44세	(509)	0.2	0.4	0.0	0.0

		빈도 (명)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불임부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0.2	0.5	0.2	0.0
	비취업 여성	(473)	1.0	0.6	0.7	0.2
	취업 남성	(622)	1.9	0.6	0.3	0.0
	비취업 남성	(38)	0.0	0.0	0.0	0.0
취업상태별	기혼 취업자	(979)	1.3	0.6	0.3	0.0
	기혼 비취업자	(511)	0.9	0.6	0.7	0.2
학력별	고졸 이하	(638)	1.2	0.5	0.3	0.1
	전문대	(247)	0.8	1.2	1.0	0.0
	대학교	(565)	0.6	0.4	0.3	0.0
	대학원 이상	(40)	10.3	0.0	0.0	0.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7.6	0.0	1.2	0.0
	200만~ 300만원 미만	(338)	1.7	0.9	0.2	0.0
	300만~ 400만원 미만	(472)	0.7	0.5	0.5	0.2
	400만원 이상	(616)	0.6	0.5	0.4	0.0
	모름/ 무응답	(4)	0.0	0.0	0.0	0.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3.6	1.2	0.0	0.0
	화이트칼라	(387)	1.3	0.2	0.7	0.0
	블루칼라	(485)	0.8	0.7	0.0	0.0
	전업 주부	(455)	1.1	0.5	0.8	0.2
	학생/실업/비취업	(56)	0.0	1.2	0.0	0.0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1.4	0.6	0.0	0.0
	상용근로자	(563)	0.9	0.4	0.5	0.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3.7	1.5	0.0	0.0

기혼응답자 중 수혜비율이 미미해서 본격적인 비교분석은 어렵겠지만, 우선 정책인지도와 관련해서 몇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성이나 연령별로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취업여성에 비해 비취업여성의 수혜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인지도와 같은 결과이다. 학력별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나지 않지만, '산모도우미 서비스' 에서 대학원 이상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었던 전업주부의 경우에, 수혜율은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료 지원 등에 대한 수혜율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 5.4%로 가장 높고,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3.1%,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이 1.8%,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 0.5%로 나타났다.

| 표 5-17 | 보육지원제도의 수혜율

(단위 : %)

		빈도 (명)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민간 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전체		(1490)	5.4	3.1	1.8	0.5
성별	여성	(830)	5.8	3.2	1.2	0.2
	남성	(660)	4.9	3.0	2.5	0.7
연령별	25~29세	(92)	3.2	1.5	1.5	0.0
	30~34세	(341)	5.3	3.1	2.0	0.7
	35~39세	(547)	6.7	4.3	2.4	0.6
	40~44세	(509)	4.4	2.2	1.0	0.3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5.9	3.1	1.7	0.2
	비취업 여성	(473)	5.7	3.2	0.8	0.3
	취업 남성	(622)	4.9	3.2	2.6	0.8
	비취업 남성	(38)	4.9	0.0	0.0	0.0
취업상태별	기혼 취업자	(979)	5.3	3.2	2.3	0.6
	기혼 비취업자	(511)	5.6	3.0	0.8	0.3
학력별	고졸 이하	(638)	6.1	3.2	1.5	0.7
	전문대	(247)	4.9	4.0	2.0	0.0
	대학교	(565)	4.7	2.6	2.1	0.4
	대학원 이상	(40)	7.0	4.8	0.0	0.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7.1	0.0	4.4	3.2
	200만~ 300만원 미만	(338)	4.8	1.9	1.1	0.6
	300만~ 400만원 미만	(472)	6.3	4.2	1.4	0.1
	400만원 이상	(616)	4.9	3.3	2.1	0.4
	모름/ 무응답	(4)	0.0	0.0	0.0	0.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7.4	3.6	2.3	0.0
	화이트칼라	(387)	4.1	2.2	1.8	1.1
	블루칼라	(485)	5.8	3.9	2.7	0.3
	전업 주부	(455)	5.9	3.3	0.9	0.3
	학생/실업/비취업	(56)	3.3	0.0	0.0	0.0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6.2	3.9	3.2	0.0
	상용근로자	(563)	4.1	2.6	1.6	1.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9.7	4.1	3.2	0.0

(표 5-18)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 55.7%로 수혜율이 가장 높고,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 가 1.6%, '다자녀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이 1.5%,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가 1.0%로 나타났다.

| 표 5-18 | 다자녀 가구 등 지원제도 수혜율

(단위 : %)

		빈도 (명)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카드	다자녀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혜택부여
전체		(1490)	55.7	1.6	1.5	1.0
성별	여성	(830)	60.7	1.8	1.4	0.8
	남성	(660)	49.5	1.3	1.7	1.3
연령별	25~29세	(92)	35.9	0.7	2.2	0.8
	30~34세	(341)	47.0	1.6	1.6	1.4
	35~39세	(547)	61.1	2.2	1.0	0.6
	40~44세	(509)	59.4	1.1	2.0	1.2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60.0	1.6	1.7	1.4
	비취업 여성	(473)	61.2	2.0	1.2	0.3
	취업 남성	(622)	49.6	1.4	1.5	1.1
	비취업 남성	(38)	48.2	0.0	3.7	3.7
취업상태별	기혼 취업자	(979)	53.4	1.5	1.6	1.2
	기혼 비취업자	(511)	60.2	1.9	1.4	0.6
학력별	고졸 이하	(638)	59.2	1.6	1.6	0.8
	전문대	(247)	52.7	0.9	2.1	1.4
	대학교	(565)	53.1	1.6	1.3	1.1
	대학원 이상	(40)	56.1	6.3	0.0	0.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46.7	1.3	1.3	0.0
	200만~ 300만원 미만	(338)	57.2	1.1	1.2	0.7
	300만~ 400만원 미만	(472)	56.6	1.7	1.9	1.3
	400만원 이상	(616)	55.1	1.9	1.4	1.0
	모름/ 무응답	(4)	46.9	0.0	0.0	0.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49.5	2.4	1.2	1.2
	화이트칼라	(387)	51.4	1.0	1.6	1.3
	블루칼라	(485)	55.9	1.7	1.7	1.1
	전업 주부	(455)	62.6	2.1	1.3	0.3
	학생/실업/비취업	(56)	41.2	0.0	2.5	2.5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49.8	1.2	2.3	1.6
	상용근로자	(563)	52.8	1.6	1.2	1.0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71.2	1.7	1.9	1.0

자치구의 출산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3.5%의 수혜율을 나타냈고, '차등보육료 지원' 이 2.4%, '출산육아용품 지급' 이 1.0%로 나타났다. 상기 15가지 지원제도 모두에 대해 수혜경험이 없다는 기혼응답자가 41.4%로 나타났다.

| 표 5-19 | 자치구 출산지원 등에 대한 수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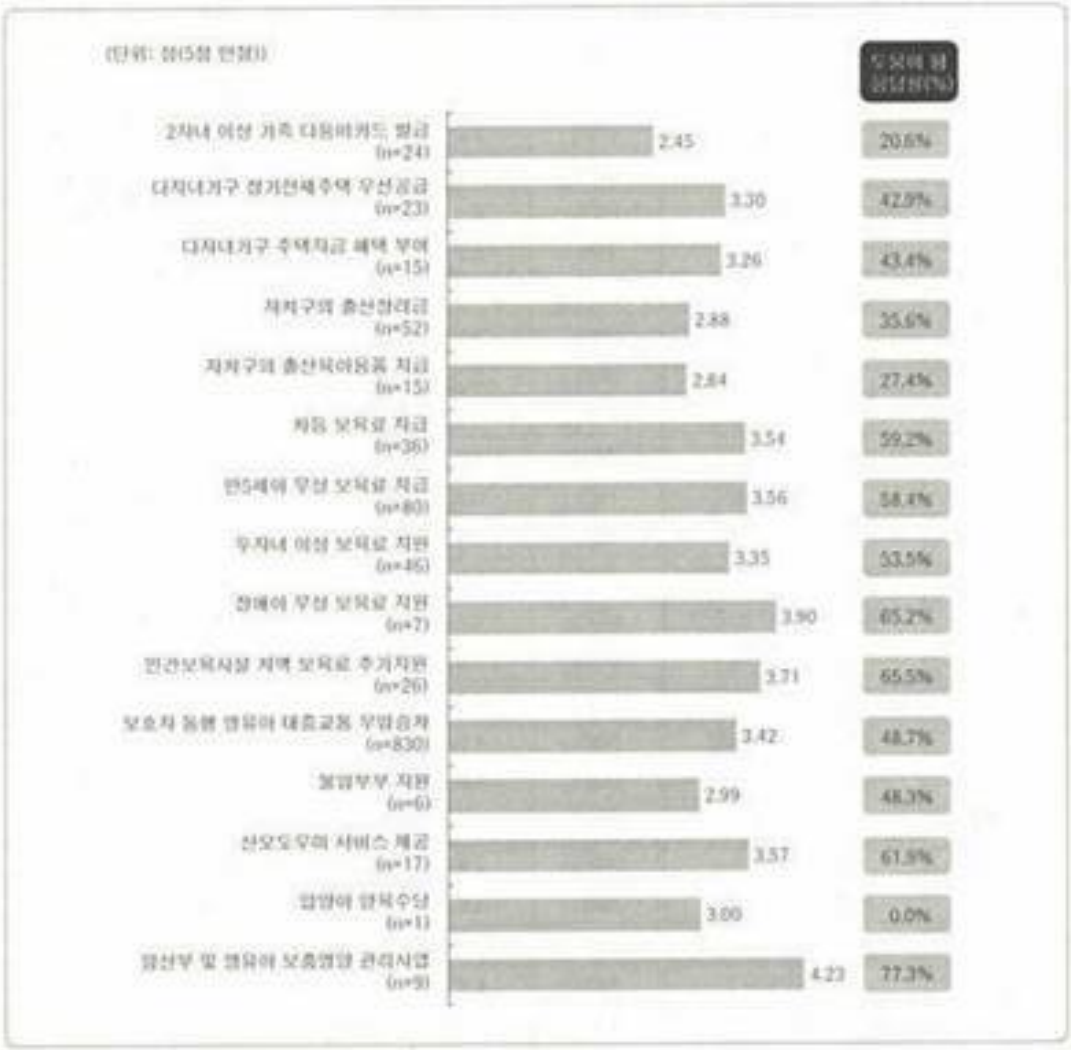
(단위 : %)

		빈도 (명)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차등보육료 지원	자치구의 출산 육아용품 지급	모두 받지 않음
전체		(1490)	3.5	2.4	1.0	41.4
성별	여성	(830)	2.3	2.1	0.8	37.2
	남성	(660)	4.9	2.7	1.3	46.8
연령별	25~29세	(92)	2.2	1.3	0.0	62.0
	30~34세	(341)	5.3	2.7	1.8	48.7
	35~39세	(547)	4.1	2.5	1.3	35.5
	40~44세	(509)	1.8	2.3	0.4	39.2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357)	2.2	2.0	0.5	38.6
	비취업 여성	(473)	2.4	2.2	1.1	36.1
	취업 남성	(622)	5.0	2.9	1.4	46.7
	비취업 남성	(38)	3.7	0.0	0.0	48.1
취업상태별	기혼 취업자	(979)	4.0	2.6	1.1	43.7
	기혼 비취업자	(511)	2.5	2.0	1.0	37.0
학력별	고졸 이하	(638)	2.1	2.7	0.6	38.5
	전문대	(247)	4.4	2.3	0.9	43.7
	대학교	(565)	4.0	1.9	1.3	44.4
	대학원 이상	(40)	11.6	5.7	4.7	31.8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9)	4.4	2.4	3.2	47.7
	200만~ 300만원 미만	(338)	2.9	1.6	0.8	40.5
	300만~ 400만원 미만	(472)	4.2	2.6	0.9	40.5
	400만원 이상	(616)	3.0	2.7	1.1	42.0
	모름/ 무응답	(4)	19.0	0.0	0.0	53.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107)	4.5	5.2	1.8	44.7
	화이트칼라	(387)	5.0	2.1	1.5	45.6
	블루칼라	(485)	3.0	2.4	0.5	42.0
	전업 주부	(455)	2.4	2.3	1.1	34.8
	학생/실업/비취업	(56)	3.6	0.0	0.0	55.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30)	3.4	2.7	0.9	46.9
	상용근로자	(563)	4.0	2.5	1.0	44.2
	임시/일용/무급종사자	(86)	5.7	2.5	2.2	28.1

4) 출산 · 양육 지원사업의 도움정도

현재 시행중인 지원사업이 실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중 정책 수혜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를 질문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사이이며 5점에 가까울수록 정책에 대한 도움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정책의 도움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이 3점이므로 평균 3.5점 이상일 경우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책별 수혜자의 빈도수가 너무 작아서 이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5-15〉 출산 · 양육 지원정책별 도움정도



서울시의 출산양육 지원사업 가운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약간 혹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77.3%(4.23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4점 이상의 도움정도가 나타난 지원제도는 없고, 3.5점 이상의 평균 수준을 상회한 정책은 5가지, 즉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3.90점), '민간 보육시설 차액 보육료 추가지원'(3.71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3.57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급'(3.56점), '차등 보육료 지급'(3.54점)으로서 대체로 보육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편에 속한다.

서울시 출산 양육 지원제도의 인지도와 도움정도의 결과를 함께 비교해보면, 정책별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이 도움정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도가 낮았던 '2자녀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 제도는 도움정도에서도 평균 2.45점으로 가장 낮은 도움정도로 나타났다. 즉, 인지도가 낮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인지도와 도움정도가 모두 낮은 제도가 있다. 따라서 정책 인지도와 그 정책의 실질적인 도움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한편, 도움정도가 평균 3.5점 이상이 되는 지원제도는 대체로 보육지원과 관련된 5가지로 나타났다. 즉,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급' 3.90점, '민간보육시설 차액 보육료 추가지원' 3.71점,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3.57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3.56점, '차등 보육료 지급' 3.54점이었다. 반면, 평균 3점 이하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정책은 자치구의 출산장려금제도나 불임 및 입양지원에 관련된 것이었다.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2.88점, '자치구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2.84점, '불임부부 지원' 2.99점, '입양아 양육수당' 3점으로 나타났다.

| 표 5-20 | 자치구 출산장려금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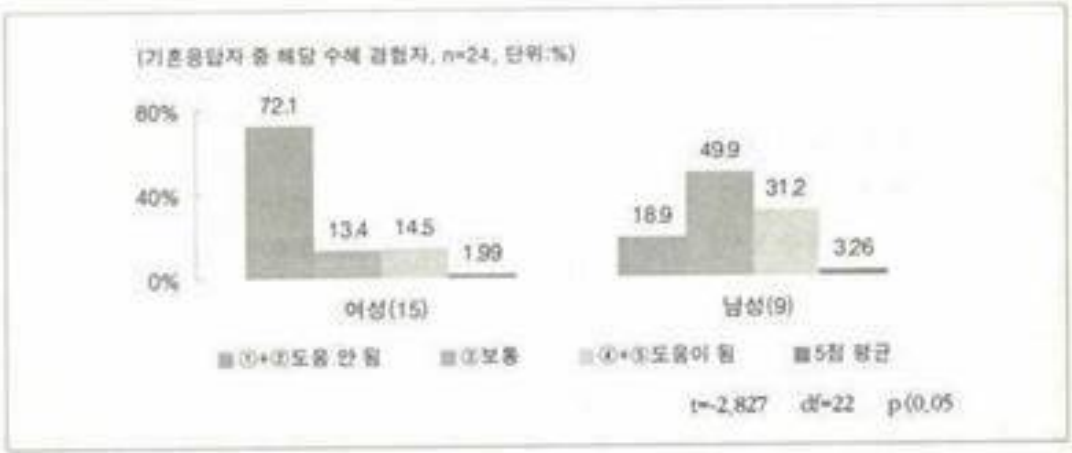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5점 평균
		%	%	%	점
성 동 구	(1)	0.0	100.0	0.0	3.00
동 대 문 구	(2)	0.0	67.0	33.0	3.33
성 북 구	(6)	0.0	17.9	82.1	3.82
강 북 구	(1)	0.0	0.0	100.0	4.00
노 원 구	(22)	63.6	26.8	9.5	2.38
서 대 문 구	(1)	0.0	0.0	100.0	4.00
마 포 구	(1)	0.0	100.0	0.0	3.00
양 천 구	(9)	59.7	17.8	22.5	2.55
강 서 구	(1)	0.0	0.0	100.0	4.00
구 로 구	(2)	100.0	0.0	0.0	1.38
금 천 구	(4)	0.0	0.0	100.0	4.21
관 악 구	(3)	19.2	0.0	80.8	3.42
강 동 구	(1)	0.0	0.0	100.0	4.50

〈표 5-20〉처럼, 자치구 출산장려금 제도는 기혼응답자 중 수혜율이 높지 않아 도움정도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각 자치구별로 도움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별 정책인지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도움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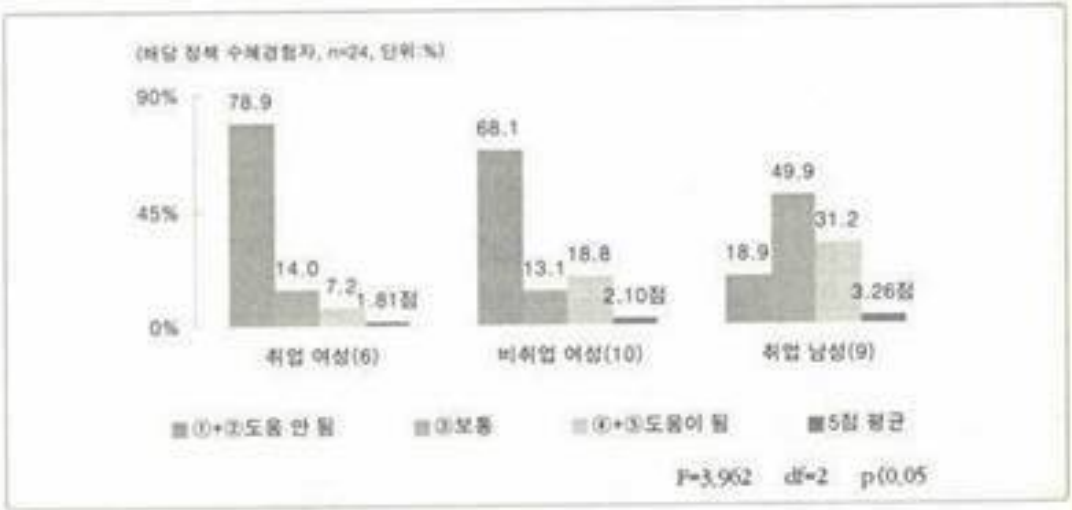
먼저 '2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 카드'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도움 안 됨에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림 5-16〉 성별 다둥이카드의 도움정도



성별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여성과 취업남성의 평균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 하지만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 간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이는 앞의 분

〈그림 5-17〉 성별 취업상태에 따른 다둥이카드 도움정도



석결과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별 영향은 있지만 취업상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표 5-21 | 다둥이카드의 도움정도

		빈도(명)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체		(24)	52.7	26.7	20.6	2.45점
성별	여성(15)	(15)	72.1	13.4	14.5	1.99점
	남성(9)	(9)	18.9	49.9	31.2	3.26점
연령별	25~29세	(1)	0.0	100.0	0.0	3.00점
	30~34세	(6)	100.0	0.0	0.0	1.47점
	35~39세	(12)	49.6	25.3	25.1	2.52점
	40~44세	(6)	18.9	47.8	33.3	3.22점
취업상태별	취업	(15)	42.5	35.7	21.8	2.69점
	비취업/미취업	(10)	68.1	13.1	18.8	2.10점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6)	(6)	78.9	14.0	7.2	1.81점
	비취업 여성(10)	(10)	68.1	13.1	18.8	2.10점
	취업 남성(9)	(9)	18.9	49.9	31.2	3.26점
학력별	고졸 이하	(10)	39.7	20.0	40.3	2.76점
	전문대	(2)	62.3	37.7	0.0	2.00점
	대학교	(9)	51.9	39.1	9.0	2.44점
	대학원 이상	(3)	100.0	0.0	0.0	1.66점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	100.0	0.0	0.0	1.00점
	200만~ 300만원 미만	(4)	35.3	16.1	48.6	3.09점
	300만~ 400만원 미만	(8)	57.8	28.1	14.1	2.16점
	400만원 이상	(12)	51.9	31.1	17.0	2.54점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3)	100.0	0.0	0.0	1.66점
	화이트칼라	(4)	12.1	77.2	10.7	2.86점
	블루칼라	(8)	39.1	27.2	33.7	2.92점
	전업 주부	(10)	68.1	13.1	18.8	2.10점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4)	62.8	37.2	0.0	2.18점
	상용근로자	(9)	33.8	32.1	34.1	2.99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	(1)	44.1	55.9	0.0	2.12점

자치구 출산장려금의 도움정도는 성별, 취업상태별, 월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움정도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고 있지 않다. 전반적인 응답이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도움안됨' 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취업상태에 따르면, 취업자가 비취업/미취업자에 비해

출산 장려금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비취업/미취업자는 3.47점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월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그룹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00만원 이상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 표 5-22 | 자치구 출산장려금 도움정도 (단위 : %)

		빈도(명)	5점 평균	도움 안 됨	보통	도움이 됨	유의수준
전체		(52)	2.88점	41.6	22.7	35.6	t=2.143 df=50 p<0.05
성별	여성	(19)	3.30점	20.0	27.2	52.7	
	남성	(32)	2.64점	54.4	20.1	25.6	
연령별	25~29세	(2)	2.94점	34.3	37.3	28.4	n.s
	30~34세	(18)	3.26점	29.3	19.5	51.2	
	35~39세	(23)	2.57점	56.8	14.1	29.1	
	40~44세	(9)	2.93점	29.5	47.8	22.7	
취업상태별	취업	(39)	2.69점	49.5	23.0	27.5	t=-2.247 df=50 p<0.05
	비취업/미취업	(13)	3.47점	17.5	22.0	60.5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8)	2.79점	38.6	30.8	30.6	n.s
	비취업 여성	(11)	3.65점	7.1	24.8	68.1	
	취업 남성	(31)	2.67점	52.3	21.0	26.7	
	비취업 남성	(1)	2.00점	100.0	0.0	0.0	
학력별	고졸 이하	(13)	3.17점	30.2	24.0	45.8	n.s
	전문대	(11)	2.32점	66.2	12.2	21.6	
	대학교	(23)	2.91점	37.9	31.6	30.5	
	대학원 이상	(5)	3.29점	35.6	0.0	64.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	3.46점	27.2	0.0	72.8	F=3.135 df=3 p<0.05
	200만~ 300만원 미만	(10)	3.67점	20.6	8.4	71.0	
	300만~ 400만원 미만	(20)	2.49점	46.3	35.8	17.8	
	400만원 이상	(18)	2.76점	51.7	20.4	27.9	
	모름/ 무응답	(1)	4.00점	0.0	0.0	100.0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5)	3.04점	34.4	27.0	38.7	n.s
	화이트칼라	(19)	2.69점	50.0	19.1	30.9	
	블루칼라	(15)	2.59점	53.9	26.8	19.4	
	전업 주부	(11)	3.63점	7.5	26.1	66.4	
	학생/실업/비취업	(2)	2.58점	71.0	0.0	29.0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11)	2.69점	47.2	36.3	16.5	n.s
	상용근로자	(23)	2.54점	58.6	14.2	27.2	
	임시/일용/무급종사자	(5)	3.42점	12.8	32.5	54.7	

자치구 출산용품 지급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하지만 이 정책을 경험한 사람의 빈도가 너무 낮아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의 도움정도에 대한 학력별 영향을 보면 F값이 3.389이고 유의확률(p)이 0.027로 유의수준 5%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이하 3.15점, 전문대 3.40점, 대학교 3.79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고용상태에 따른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무임승차' 의 도움정도를 보면 자영업자/고용주의 경우가 3.26점이고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3.53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는 3.18점으로 나타나 상용근로자의 경우가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제공' 에 대한 도움정도를 보면 직업은 도움정도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고위임직원(4)의 경우 2.32점, 화이트칼라(5) 4.38점, 블루칼라(4) 4.67점, 전업주부(5) 2.87점으로, 직업에 따라 도움 되었다는 정도에 차이가 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그룹으로 예상되는 '전업주부' 의 평가에서 도움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일차적 정책대상 집단인 3자녀 이상이 있는 기혼들(98명)에게 질문하였다. '약간 도움이 된다' 는 응답이 19.0%에 그치고 별로 도움이 안된다(26.4%), 전혀 도움이 안된다(8.1%)로 나타나 도움이 되

〈그림 5-18〉 세자녀 이상의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지 않는다는 응답(34.5%)이 도움이 된다(19.0%)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46.5%에 이르는 절반 정도는 '보통' 이라고 응답해서 양육수당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정도는 5점 만점에 2.76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는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기혼응답자의 성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5-23 |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을 위한 양육수당의 도움정도

(단위 : %)

		명, %	5점 평균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전체		(98)	2.76점	34.5	46.5	19.0
성별	여성	(64)	2.68점	38.5	45.4	15.9
	남성	(34)	2.93점	26.8	48.5	24.6
연령별	25~29세	(2)	3.00점	0	100	0
	30~34세	(15)	2.64점	37.5	48.6	13.8
	35~39세	(35)	2.63점	39.6	49.3	11.0
	40~44세	(46)	2.89점	31.2	41.2	27.5
취업상태별	취업	(59)	2.81점	30.9	47.2	21.7
	비취업/미취업	(39)	2.69점	39.7	45.3	14.8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	(27)	2.61점	41.2	42.2	16.4
	비취업 여성	(37)	2.73점	36.5	47.8	15.6
	취업 남성	(32)	2.98점	22.2	51.5	26.2
	비취업 남성	(2)	2.00점	100	0	0
학력별	고졸 이하	(61)	2.67점	37.0	49.8	13.0
	전문대	(8)	2.82점	34.3	41.0	24.5
	대학교	(26)	2.91점	31.7	38.4	29.7
	대학원 이상	(2)	3.32점	0	68.0	31.9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	2.36점	78.6	6.3	14.9
	200만~ 300만원 미만	(13)	2.98점	23.7	48.7	27.4
	300만~ 400만원 미만	(35)	2.70점	34.4	54.1	11.4
	400만원 이상	(45)	2.79점	33.2	44.2	22.5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	(7)	3.40점	8.9	41.9	49.0
	화이트칼라	(9)	2.82점	37.5	42.9	19.5
	블루칼라	(42)	2.71점	33.1	49.0	17.7
	전업 주부	(37)	2.73점	36.5	47.8	15.6
	학생/실업/비취업	(2)	2.00점	100	0	0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	(34)	2.85점	26.1	53.8	19.9
	상용근로자	(17)	2.82점	33.3	40.8	25.7
	임시/일용/무급종사자	(7)	2.62점	48.3	31.3	20.3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양육수당이 적다' 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고, '당시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가 16%, '제약이 많아서 현실적용이 힘들다' 7.7%, '지원기간이 짧다' 6.5%, '자녀 나이에 따라 혜택의 제한이 있다' 6.3% 등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10만원 이내의 지원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저런 제약조건으로 제도의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족도 제기되었다.

| 표 5-24 | 다자녀가구 양육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양육수당이 적다	61.5
그 당시 제도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16.0
제약이 많아서 현실 적용이 힘들다	7.7
지원기간이 짧다	6.5
자녀 나이에 따라 혜택의 제한이 있다	6.3
지역마다 혜택이 달라서 못 받을 경우가 있다	2.0
자가 소유자는 혜택이 적다	1.9
전 체 (34명)	100.0

이러한 응답결과는 '다자녀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의 정책대상과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또한 본격적인 정책 시행시기(조례제정시기인 2007.12.26)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16] 정책대상이 셋째아 이상 가족이라는 제한이 있고, 지원금액이 매월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정책효과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심층분석을 진행하기에 어렵고, 추후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6) 다자녀 가족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7.12.26 조례 제459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삼생아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보호자
제6조 (다자녀 가족 지원내용) ①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료 지원은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경우, 매월 서울특별시 기준보육료의 50%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2. 영유아 양육지원 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100,000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삼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족에 대해서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아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3. 서울시민의 출산·양육 지원정책 수요

이 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향후 시행을 검토 중인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들에 대한 수요결과를 분석한다. '임신지원' 에는 불임치료비 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있고, '출산지원' 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확대, 산모도우미 지원확대가 있다. '양육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에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돌빼아까지),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양육친화환경' 정책으로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지원이 있다.

응답자는 미혼남녀와 기혼남녀를 모두 포함한 2,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사이로 나타나며 5점에 가까울수록 정책에 대한 필요정도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정책의 필요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1)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그림 5-19〉에서와 같이, 총 14가지 지원제도 중 12가지에서 평균값 4점에서 4.3의 범위, 즉 중상 이상으로 나타나 정책수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점이 되지 않는 '불임치료비 지원' 도 평균값 3.96점, '보육정보제공' 평균값 3.88점으로 4점에 가까운 필요정도를 나타내 모든 정책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지원정책이나 복지관련 수요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특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책 지원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조사들에서 응답자들이 대부분 필요하다에 응답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정책의 필요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4.22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22점,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확대' 4.23점의 정책이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즉, 건강이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지원제도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2) 영역별 정책수요

다음으로 각 정책별 수요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보았다. 하지만 응답자의 인구학적인 특성만으로는 정책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는가를 명확하게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림 5-19〉 서울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따라서 정책별 필요도가 현재자녀수 혹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필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부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양육 및 출산의 상황도 매우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차이도 분석해 보았다.

(1) 임신 관련 지원

우선, 임신지원정책인 '불임치료비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확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의 필요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불임치료비 지원'은 성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는 성과 혼인상태,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필요도가 더 높고, 미혼보다는 기혼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로는 자영업자/고용주의 필요도가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가장 낮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성과 혼인상태, 월소득수준,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른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의 필요도가 더 높고, 미혼보다 기혼의 필요도가 더 높으며, 기혼여성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보다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가장 낮고, 자영업자/고용주의 필요도가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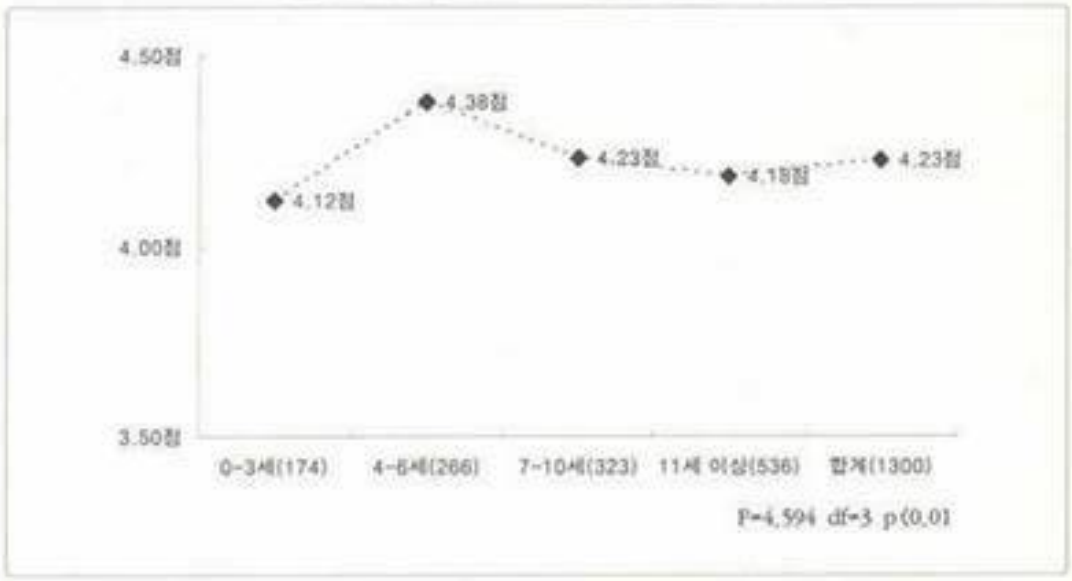
| 표 5-25 | 임신 관련 지원제도의 필요도

		불임치료비 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전체		3.96점	4.22점	4.22점
성별	여성(1237)	4.00점	4.26점	4.26점
	남성(1263)	3.91점	4.18점	4.18점
		t=2.572 df=2,497 p(0.01	t=2.441 df=2,498 p(0.05	t=2.422 df=2,498 p(0.05
혼인상태별	미혼(1010)	-	4.18점	4.18점
	기혼(1490)	-	4.25점	4.25점
			t=-2.219 df=2,498 p(0.05	t=-2.018 df=2,498 p(0.05
성 & 혼인상태별	미혼 여성(407)	-	4.23점	4.24점
	기혼 여성(830)	-	4.28점	4.27점
	미혼 남성(603)	-	4.14점	4.14점
	기혼 남성(660)	-	4.22점	4.22점
			df=3 F=3.203 p(0.05	df=3 F=3.133 p(0.0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651)	-	-	4.22점
	200만~ 300만원 미만(608)	-	-	4.10점
	300만~ 400만원 미만(566)	-	-	4.29점
	400만원 이상(649)	-	-	4.27점
	모름/ 무응답(26)	-	-	4.38점
				df=3 F=6.643 p(0.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427)	-	4.34점	4.29점
	상용근로자(1082)	-	4.15점	4.17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135)	-	4.27점	4.33점
			df=2 F=8.666 p(0.001	df=2 F=4.868 p(0.01

한편, 기혼응답자의 현재자녀수별 임신지원제도에 대한 필요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불임치료비 지원' 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제도의 필요도가 높아진다. 특히, 기혼응답자 중 무자녀 기혼남녀의 '불임치료비 지원' 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무자녀 커플 가운데 물리적으로 자녀갖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녀의 연령별 정책필요도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연령을 기준으로해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만이 필요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20)과 같이,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의 필요도는 자녀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첫째아 연령이 4-6세 사이에 있는 기혼응답자의 필요도가 가장 높다.

(그림 5-20)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 의 필요도



(2) 출산 관련 지원

출산지원제도의 필요도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확대' , '산모도우미 지원확대' 의 경우에, '영유아 건강검진' 은 월소득과 직업,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15)). 전체적인 필요도는 4.18점으로 높지만, 소득수준별로 300-400만원 미만의 필요도가 가장 높아 4.28점에 해당한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의 필요도가 4.25점으로 가장 높다. 반면, 화이트칼라의 경우 4.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업주부의 필요도는 4.21점에 해당한다.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

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4.11점으로 가장 낮다.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확대'는 월소득수준과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보다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4.40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4.17점으로 가장 낮다. '산모도우미 지원확대'는 성과 고용상태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도가 높고,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고용상태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였고, 임시/일용/무급종사자 같은 불안정 고용집단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5-26 | 출산지원제도의 필요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 확대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전체		4.18점	4.23점	4.18점
성별	여성(1237)	-	-	4.16점
	남성(1263)	-	-	4.08점
				t=2.586 df=2,498 p<0.0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651)	4.16점	4.21점	-
	200만~ 300만원 미만(608)	4.12점	4.16점	-
	300만~ 400만원 미만(566)	4.28점	4.29점	-
	400만원 이상(649)	4.18점	4.28점	-
	모름/ 무응답(26)	4.18점	4.06점	-
		df=3 F=4.398 p<0.01	df=3 F=3.514 p<0.05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170)	4.21점	-	-
	화이트칼라(693)	4.10점	-	-
	블루칼라(782)	4.25점	-	-
	전업 주부(455)	4.21점	-	-
	학생/실업/비취업(401)	4.16점	-	-
		df=4 F=3.547 p<0.01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427)	4.29점	4.35점	4.08점
	상용근로자(1082)	4.11점	4.17점	4.09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135)	4.38점	4.40점	4.35점
		df=2 F=12.271 p<0.001	df=2 F=2.294 p<0.001	df=2 F=6.102 p<0.01

(3) 양육비용 경감

양육비용경감과 관련된 정책들이 학력, 직업, 소득별 등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했다. '아동양육수당 지원확대(돌째아까지)' 는 직업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필요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직/고위임직원(4.28점)과 학생/실업/비취업(4.27점)의 필요도가 평균(4.19점)보다 높고, 블루칼라(4.12점)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보육시설' 의 경우에는 학력과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이상(4.45점)이 가장 높고 전체평균(4.18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학력집단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고, 나머지 학력집단은 유사한 필요도를 갖고 있다.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4.34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4.13점)가 가장 낮다. 영유아플라자 등 집에서 돌보는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확대는 직업과 고용상태

| 표 5-27 | 양육비용 경감 관련 지원제도의 필요도

		아동양육수당 지원확대	공공보육시설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전체		4.19점	4.18점	4.04점
학력별	고졸 이하(885)	-	4.17점	-
	전문대(459)	-	4.16점	-
	대학교(1086)	-	4.18점	-
	대학원 이상(70)	-	4.45점	-
			df=3 F=2.885 p<0.05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170)	4.28점	-	4.22점
	화이트칼라(693)	4.21점	-	4.02점
	블루칼라(782)	4.12점	-	4.01점
	전업 주부(455)	4.19점	-	4.02점
	학생/실업/비취업(401)	4.27점	-	4.11점
		df=4 F=2.885 p<0.05		df=4 F=2.958 p<0.05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427)	-	4.23점	4.04점
	상용근로자(1082)	-	4.13점	4.01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135)	-	4.34점	4.23점
			df=2 F=5.378 p<0.01	df=2 F=4.022 p<0.05

별로 유의미한 필요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의 필요도(4.22점)가 가장 높고, 전업주부의 필요도(4.02점)가 평균 이하로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아동양육 수당지원확대'와 '공공보육시설',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에서 대학원 이상 고학력층과 전문직/고위임직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용경감 정책 중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는 성과 취업여부, 혼인상태,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28)).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도가 높고,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필요도가 높다. 성별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여성, 미혼여성, 기혼남성, 미혼남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기혼이 미혼에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일관성 있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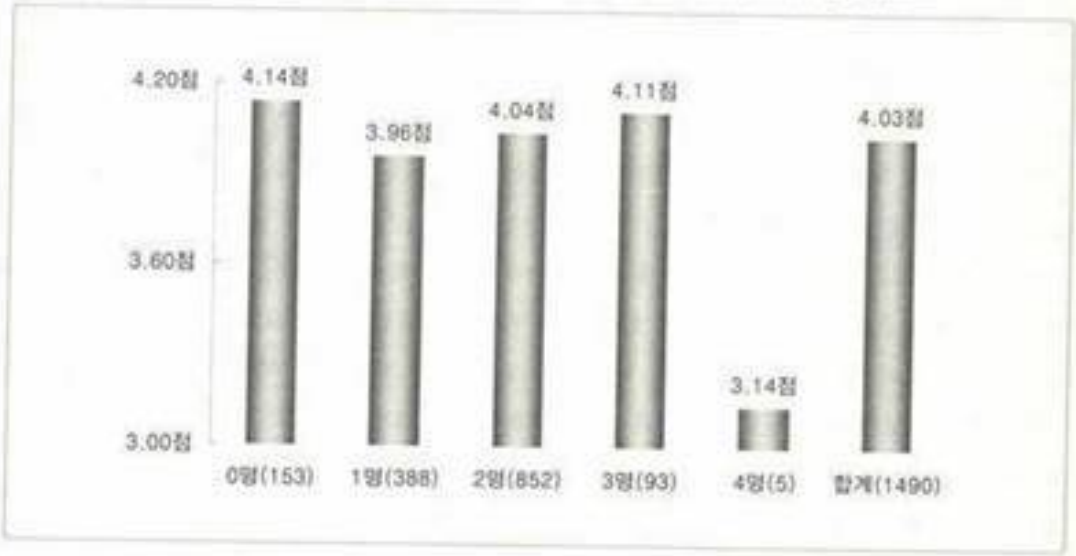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정책에서만 성별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는 앞의 분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의 효과가 양육관련 정책의 필요도에도 남여에게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영유아 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표 5-28 |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의 필요도

전 체	평 균	4.10점	유의수준
성 별	여성(1237)	4.16점	t=3.589 df=2,498 p(0.001
	남성(1263)	4.05점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634)	4.18점	F=4.589 df=3 p(0.01
	비취업 여성(603)	4.14점	
	취업 남성(1010)	4.04점	
	비취업 남성(253)	4.07점	
성 & 혼인상태별	미혼 여성(407)	4.10점	F=5.013 df=3 p(0.01
	기혼 여성(830)	4.11점	
	미혼 남성(603)	4.09점	
	기혼 남성(660)	4.13점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427)	4.03점	F=5.101 df=2 p(0.01
	상용근로자(1082)	4.09점	
	임시/일용/무급종사자(135)	4.28점	

현재 자녀수에 따라서는 기혼자 중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정책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임치료비 지원' 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확대' 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서, 이 집단의 정책적 요구를 잘 지원한다면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정책에서 주로 3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의 대상을 무자녀와 1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5-21〉 현재자녀수별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보육시설」 필요도



또한 현재자녀수에 따라 나타나는 정책의 필요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영유아 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서는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필요도가 증가하는 반면, '불임치료비 지원' 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확대' 에서는 현재자녀수가 많을수록 필요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자녀수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없지만, 각 정책에 따라서 다른 필요도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 정책들에서는 자녀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4) 양육친화환경

마지막으로, 양육친화환경과 관련된 각 정책을 응답자의 성, 연령, 취업, 고용상태별에 따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시간연장형 보육활성화는 성과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필요도가 남성보다 높고,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

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적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고용상태별로만 필요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4.27점으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4.06점으로 가장 낮다.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은 성과 연령, 취업상태 및 혼인상태, 고용상태별로 필요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필요도가 높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화에 대한 세대간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인터넷이나 온라인 환경에 접근성과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정책홍보 및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필요도가 높고,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여성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기혼여성, 미혼남성, 기혼남성의 순서로 나타난다.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친화적 기업환경조성 지원은 연령별로 25~34세의 젊은 연령층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별로는 다른 지원제도의 수요와 달리, 미혼집단의 필요도가 기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은 혼인상태별로 필요도에 차이가 있고, 기혼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데, 양육친화적 기업환경조성은 유일하게 미혼이 기혼보다 필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여성과 미혼남성의 필요도가 기혼여성 및 기혼남성의 필요도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양육친화적인 기업환경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젊은 연령층, 취업자가 크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의 수요가 가장 높고, 고용상태별로는 상용근로자의 필요도가 가장 낮고,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가장 높다.

| 표 5-29 | 양육친화적 환경의 필요도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지원
전체		4.07점	4.11점	3.88점	4.00점
성별	여성(1237)	4.11점	-	3.93점	-
	남성(1263)	4.03점	-	3.83점	-
		t=2.164 f=2.498 p<0.05	-	t=2.957 df=2.498 p<0.01	-
연령별	25~29세(664)			3.91점	4.06점
	30~34세(640)			3.93점	4.04점
	35~39세(648)			3.88점	3.96점
	40~44세(548)			3.79점	3.94점
		-	-	df=3 F=2.876 p<0.05	df=3 F=3.392 p<0.05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지원
혼인상태별	미혼(1010)	-	-	-	4.05점
	기혼(1490)	-	-		3.97점
		-	-	-	t=2.627 df=2,498 p(0.01
성 & 취업상태별	취업 여성(634)	-	-	3.93점	-
	비취업 여성(603)	-	-	3.93점	-
	취업 남성(1010)	-	-	3.83점	-
	비취업 남성(253)	-	-	3.84점	-
		-	-	df=3 F=2.938 p(0.05	-
성 & 혼인상태별	미혼 여성(407)	-	-	3.98점	4.10점
	기혼 여성(830)	-	-	3.91점	4.00점
	미혼 남성(603)	-	-	3.85점	4.03점
	기혼 남성(660)	-	-	3.81점	3.92점
		-	-	df=3 F=3.685 p(0.05	df=3 F=3.964 p(0.01
직업별	전문직/고위임직원(170)	-	-	-	4.12점
	화이트칼라(693)	-	-	-	3.96점
	블루칼라(782)	-	-	-	3.98점
	전업 주부(455)	-	-	-	3.99점
	학생/실업/비취업(401)	-	-		4.09점
		-	-	-	df=4 F=2.628 p(0.05
취업자 고용상태별	자영업자/고용주(427)	4.09점	4.17점	3.90점	4.02점
	상용근로자(1082)	4.03점	4.06점	3.83점	3.95점
	시/일용/무급종사자(135)	4.21점	4.27점	4.08점	4.13점
		df=2 t=3.249 p(0.05	df=2 t=6.208 p(0.01	df=2 F=5.584 p(0.01	df=2 F=3.539 p(0.05

혼인상태별로는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지원'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기혼보다 미혼의 필요도가 더 높은데, 이는 시행검토 중인 정책들에서 나타난 혼인상태별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미혼의 정책수요가 기혼보다 높은 유일한 정책으로 주목된다. 성별 혼인상태에 따라 필요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미혼여성, 미혼남성, 기혼여성, 기혼남성의 순으로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나타나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지원' 정책에서는 성별 영향보다는 혼인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직/고위임직원이 가장 필요도가 높고, 이는 앞서 '아동양육 수당지원 확대' 와 '영유아플라자 등 제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즉, 다른 정책들에서는 직업별로 차이가 의미가 없었던 반면, 이 3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의 필요도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고용상태별로는 평균값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4가지 지원제도 모두에서 동일하게 임시/일용/무급종사자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현재자녀수에 따라서는 '친환경 보육시설 제공' ,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 '양육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지원' 정책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정책들에서도 무자녀 기혼집단에서 정책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각 정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이 정책별로 다소 차이가 난다.

| 표 5-30 | 양육친화환경의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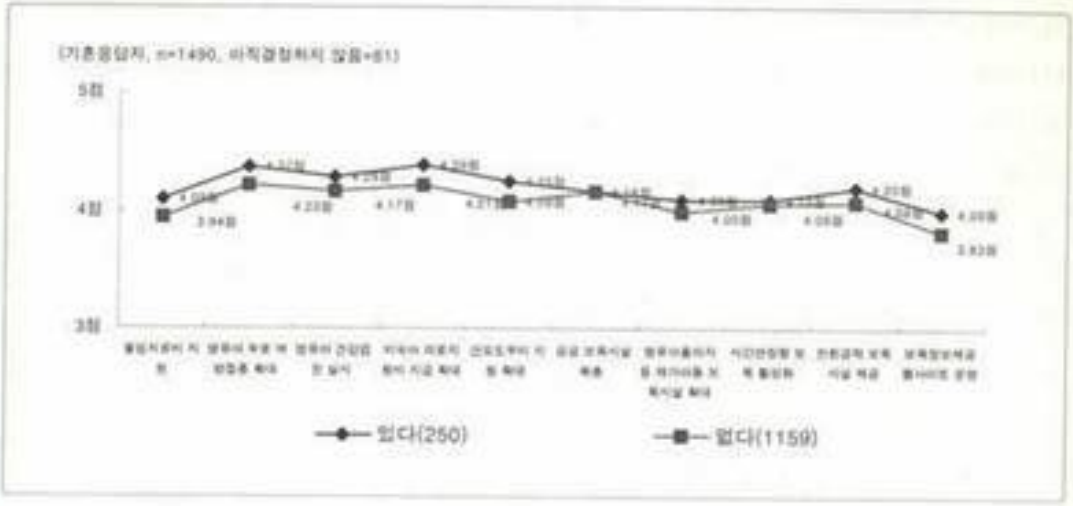
현재 자녀수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지원
0명(153)	4.37점	4.07점	4.12점
1명(388)	4.02점	3.80점	3.86점
2명(852)	4.09점	3.87점	3.96점
3명(93)	4.26점	3.86점	4.02점
4명(5)	4.01점	2.82점	3.86점
전체(1490)	4.11점	3.87점	3.97점

무자녀 기혼집단의 경우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값 4.11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는 혼인상태별로 미혼이 기혼집단보다 정책에 대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던 결과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연령대가 젊고 아직 자녀가 없는 출산예비 집단을 위해서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겨난 정책욕구로 해석된다.

3) 추가출산의향에 따른 정책수요

다음은 실제로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정책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혼자 중 추가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정책의 필요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림 5-22〉 추가출산의향에 따른 정책 필요도



분석결과, 예상대로 추가출산의 의향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보다 정책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확대',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산모도우미 지원확대',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에 대해 추가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자가 4.2점 이상의 높은 정책 필요도를 보였다. 그리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정책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정책 필요도를 보였다.

한편, '공공보육시설 확충' 은 추가출산 의향에 상관없이 동일한 필요정도를 나타냈고, 출산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4점이 넘는 높은 필요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녀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 표 5-31 | 추가출산의향별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있다 (250)	없다 (1159)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81)	전체 (1490)	유의수준
불임치료비 지원	4.09점	3.94점	3.98점	3.97점	df=2 F=3.283 p(0.05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	4.37점	4.22점	4.40점	4.25점	df=2 F=4.879 p(0.01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4.28점	4.17점	4.46점	4.20점	df=2 F=6.886 p(0.01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 확대	4.39점	4.21점	4.37점	4.25점	df=2 F=5.977 p(0.01
산모도우미 지원 확대	4.25점	4.08점	4.21점	4.12점	df=2 F=4.704 p(0.01
공공 보육시설 확충	4.16점	4.17점	4.52점	4.19점	df=2 F=7.658 p(0.001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4.09점	4.00점	4.23점	4.03점	df=2 F=3.698 p(0.05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4.10점	4.06점	4.30점	4.08점	df=2 F=3.449 p(0.05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4.20점	4.08점	4.37점	4.11점	df=2 F=6.703 p(0.01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4.00점	3.83점	4.02점	3.87점	df=2 F=5.444 p(0.01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출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의 태도이다. 이들은 아직 출산을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출산을 결정한 집단보다 정책수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아직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출산 및 양육정책에 대한 이 집단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들의 시행여부가 향후 이들의 출산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의 빈도수가 다른 응답자 집단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출산을 하겠다는 응답자의 1/3에 해당하는 빈도수이므로, 이들의 태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출산에 유보적인 이 집단이 출산을 결정한다면 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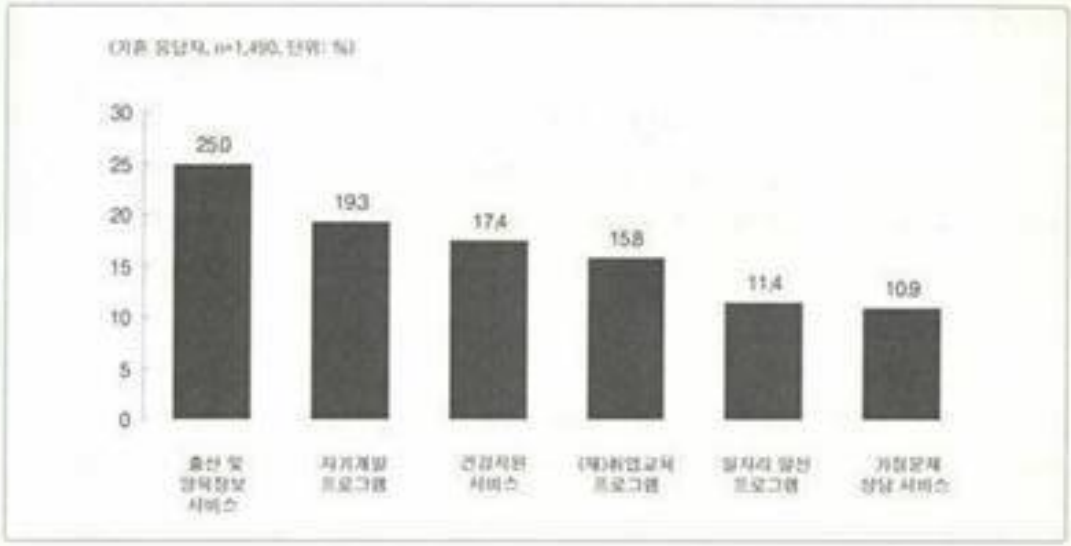
4) 가사 및 양육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체인력으로서의 여성노동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높게 나타난다(이재경, 2005). 따라서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저출산 관련 여성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성별분업의 해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평균 61.6%)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은 51.6%(2007년 기준)로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나타내는 M자형 그래프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의 부족과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사 및 양육전담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개별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대체로 여성(주부)들인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 (25.0%)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원에게 출산 및 양육관련 정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개발 프로그램' (19.3%), '건강지원 서비스' (17.4%),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15.8%),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11.4%), '가정문제 상담서비스' (1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취업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욕구를 합하면 '출산 및 양육 정보서비스' 보다 높은 27.2%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시민 만 25~44세 남녀 4명중 1명 이상은 현재 가사 및 양육전담자에게도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5-23〉 가사 및 양육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이러한 가사양육 전담자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학력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32)과 같이,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 의 정책수요는 전 학력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고졸이하 응답자의 경우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과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을 합한 비율(30.6%)이 '출산 및 양육 정보서비스' 보다 높다. 반면, 대학원 이상 고학력층 응답자의 경우 취업 관련사업보다는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 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지원이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 표 5-32 | 학력별 가사 및 양육전담자의 정책수요

(단위 : %)

	고졸이하 (638)	전문대 (247)	대학교 (565)	대학원이상 (40)	유의확률
출산 및 양육정보서비스	22.4	25.2	26.8	40.0	x^2=32.314 df=18 p(0.05
가정문제상담서비스	10.2	13.4	11.2	5.0	
건강지원서비스	19.2	15.0	16.1	22.5	
자기개발프로그램	17.8	22.4	19.7	17.5	
(재)취업교육프로그램	15.3	13.8	17.9	5.0	
일자리알선프로그램	14.9	10.2	8.2	10.0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기혼여성의 경우에 학력에 따라 '가사 및 양육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표 5-33)). 대체로 모든 학력의 기혼여성들이 가사양육

전담자(주부)에게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고졸이하의 기혼여성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인식해서, '(재)취업교육 프로그램'(15.2%)과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15.4%)을 합하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고졸이하 기혼여성들은 주부들의 취업관련 정책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졸 기혼여성도 취업 관련 욕구가 25.2%를 차지하지만, 단일 항목으로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 고학력 기혼여성은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4.3%로 가장 높고, '건강지원 서비스'(21.4%)에 대한 욕구가 다른 학력의 기혼여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 5-33 | 가사양육 전담자를 위한 지원사업 (기혼여성*학력)

(단위 : %)

	고졸 이하(442)	전문대(131)	대학교(242)	대학원 이상(14)	유의수준
출산및양육정보서비스	22.2	26.7	25.6	64.3	χ^2=31.262 df=18 p<0.05
가정문제상담서비스	10.0	13.7	9.5	7.1	
건강지원서비스	18.6	13.0	17.8	21.4	
자기개발프로그램	18.6	21.4	21.5	7.1	
(재)취업교육프로그램	15.2	14.5	18.2	0.0	
일자리알선프로그램	15.4	10.7	7.0	0.0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사전담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남성생계부양자 가구형태가 자녀출산과 양육에 가장 적합하다는 기능주의적 전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혼여성에게도 경제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일과 가족책임이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방안은 가족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규범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성별분업적 노동시장과 가족관계를 약화시키고, 출산과 양육을 가족과 사회, 남녀가 분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수요

서울시 25~44세 남녀에게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필요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5점사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정

책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탄력적 근무제도

일가족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도는 '시간제 근무' 가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택근무가 4.03점, 시차 출퇴근제가 3.9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모든 제도에 대해 여성들의 요구가 남성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차출퇴근제의 경우에 저연령층의 수요가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재택근무와 시간제근무는 연령별로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혼인상태별로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미혼들의 욕구가 더 높고, 시간제근무는 기혼들의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3가지 지원제도 모두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취업자들의 현재 상황과 유연하지 못한 근무제도가 어느정도 연관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 표 5-34 | 탄력적 근무제도의 필요도 (단위 : 점)

구 분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도	재택 근무	시간제 근무
전체		3.91	4.03	4.06
성별	여성	3.97	4.10	4.14
	남성	3.86	3.95	3.99
연령별	25~29세	3.99	4.06	4.10
	30~34세	3.93	4.01	4.04
	35~39세	3.87	4.00	4.04
	40~44세	3.86	4.02	4.06
혼인 상태별	미혼	3.94	4.03	4.05
	기혼	3.89	4.02	4.07
취업 상태별	취업	3.90	3.98	4.03
	비/미취업	3.94	4.11	4.13

2) 출산지원제도

출산 지원제도 가운데 '출산휴가' 의 필요도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산모도우미(4.08점), 배우자 출산휴가(4.07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는 여성의 필요도가 더 높고, 25~34세의 젊은 층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약간 높지만 미혼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비/미취업자의 정책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는 남성보다 여성의 필요도가 높고,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기혼보다는 미혼의 수요도가 더 높고,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자보다는 비/

미취업자의 필요도가 더 높다. '산모도우미' 의 경우에는 응답자 특성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연령별로 35~39세 연령층이 가장 필요도가 높다. 미혼보다는 기혼의 필요도가 높고, 비/미취업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 표 5-35 | 출산지원제도의 필요도

(단위 : 점)

구 분		출산 지원제도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산모도우미
전 체		4.32	4.07	4.08
성별	여성	4.38	4.09	4.18
	남성	4.26	4.06	3.98
연령별	25~29세	4.33	4.16	4.07
	30~34세	4.37	4.07	4.08
	35~39세	4.29	4.05	4.11
	40~44세	4.27	4.01	4.06
혼인상태별	미혼	4.31	4.13	4.05
	기혼	4.32	4.04	4.10
취업상태별	취업	4.31	4.06	4.06
	비/미취업	4.33	4.10	4.13

3)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자녀양육 지원제도는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도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보육시설이 4.16점,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도는 4.04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필요도가 더 높고, 연령이 젊을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아지며, 미혼과 기혼의 요구는 거의 비슷하며,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연령별로는 25~29세의 20대 후반에서 필요도가 가장 높다. 기혼보다 미혼의 필요도가 더 높으며,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필요도가 더 높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도가 미혼집단이 더 높다는 것은 미혼층의 일가족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단축은 연령에 비례해서 저연령층일수록 필요성을 더 느끼고 고연령층일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감소한다.

자녀교육관련 정책수요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필요도가 4.06점이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가 4.19점을 나타냈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필요도는 여성이 더 높고, 연령별로는 25~34세 연령층이 35~44세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의 정책 필요도는 동일

하며,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5-36 |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의 필요도

(단위 : 점)

구 분		자녀양육 지원제도			자녀교육 지원제도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전 체		4.23	4.16	4.04	4.06	4.19
성별	여성	4.30	4.21	4.10	4.09	4.23
	남성	4.16	4.11	3.99	4.03	4.16
연령별	25~29세	4.27	4.21	4.11	4.08	4.19
	30~34세	4.26	4.14	4.05	4.08	4.20
	35~39세	4.19	4.13	4.03	4.04	4.20
	40~44세	4.21	4.16	3.98	4.05	4.20
혼인 상태별	미혼	4.24	4.17	4.07	4.06	4.17
	기혼	4.23	4.15	4.03	4.06	4.21
취업 상태별	취업	4.22	4.14	4.02	4.05	4.19
	비/미취업	4.26	4.19	4.09	4.08	4.20

4)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가족간호휴가의 필요도가 3.89점으로 나타났고, 부모돌봄서비스 지원의 필요도는 3.92점으로 나타났다. 가족간호휴가도 여성의 필요도가 남성보다 높고, 25-34세의 저연령층이 35-44세의 고연령층에 비해 필요도가 높으며, 기혼보다 미혼의 필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보다는 비/미취업자의 필요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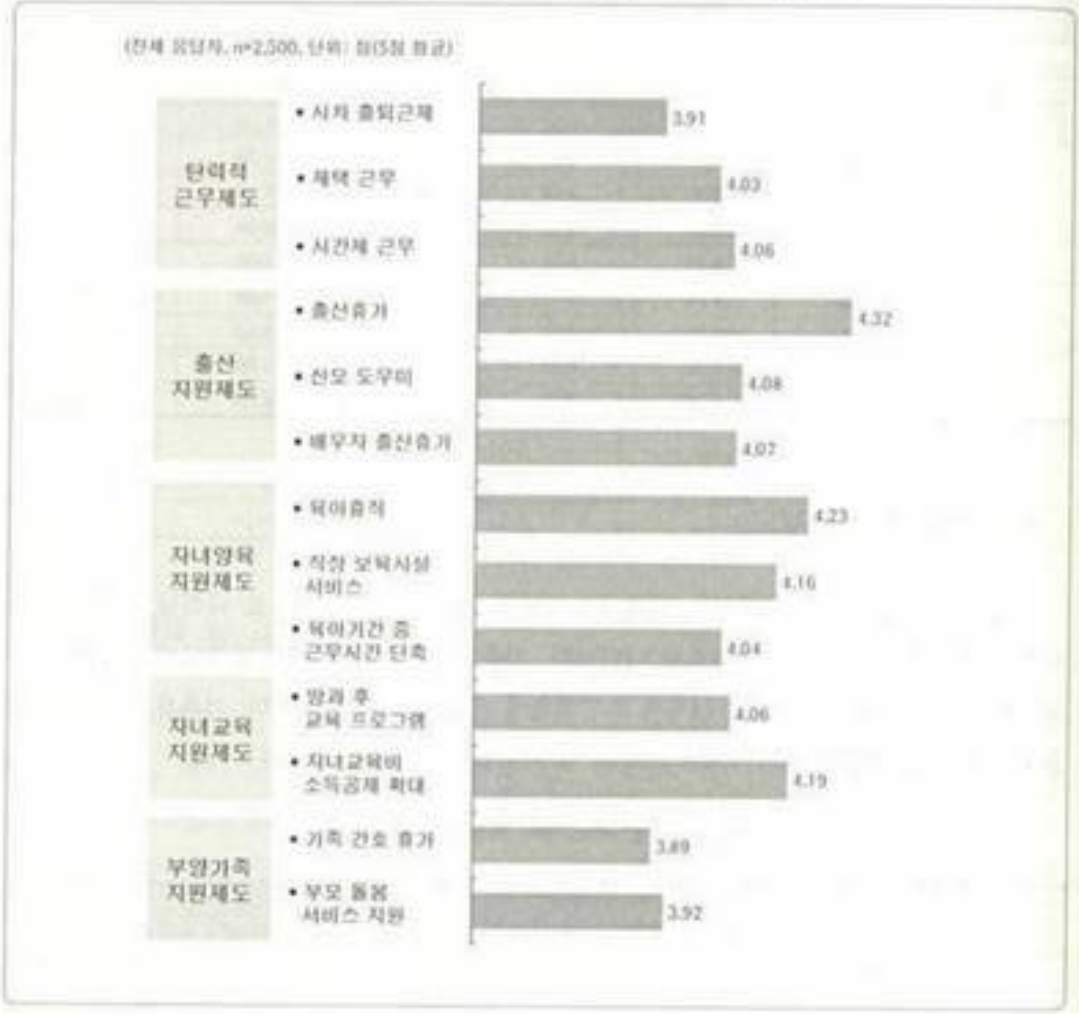
| 표 5-37 | 부양가족 지원제도의 필요도

(단위 : 점)

구 분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간호휴가	부모 돌봄서비스 지원
전 체		3.89	3.92
성별	여성	3.94	3.96
	남성	3.84	3.88
연령별	25~29세	3.91	3.94
	30~34세	3.93	3.93
	35~39세	3.86	3.88
	40~44세	3.86	3.93
혼인상태별	미혼	3.92	3.94
	기혼	3.88	3.91
취업상태별	취업	3.87	3.89
	비/미취업	3.94	3.98

서울시 25~44세 남녀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 즉 탄력적 근무제도와 출산 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부양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도는 (그림 5-24)와 같다.

〈그림 5-24 〉 일과 가정생활 조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도



5. 소결 및 정책함의

서울시민 25~44세 성인남녀는 대체로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4명은 저출산이 매우 혹은 약간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연령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미혼, 20대

후반의 젊은 연령층, 블루칼라, 임시/일용직/무급종사자 등은 상대적으로 저출산의 심각성에 덜 동의하고 있다. 경제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출산보다는 취업과 소득안정을 일차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저출산의 발생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드러났듯이, 저출산의 가장 큰 발생요인은 취업난과 직장 불안정,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가족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흡, 출산 및 양육이 경력개발의 장애가 되는 사회적 조건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출산희망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소자녀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저출산의 심각성을 덜 인식하는 편이고, 고소득층에서도 소자녀를 지향하는 태도가 나타나 저출산이 경제적 요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가치 혹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 가치변화도 관찰된다. 1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녀 둘' 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희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세계최고의 저출산사회라는 지위는 벗어날 것이다. 자녀수에 따라 저출산에 대한 인식과 발생요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자녀에서 한자녀로, 한자녀에서 두자녀로 이행하기 쉽도록 개입하는 대상 단계별 정책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무임승차' 를 제외하면, 2명중 1명 이상은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따라서 수혜자 대상의 정책평가점수도 높지 않다. 이는 서울시 출산지원사업이 대체로 저소득층 지원중심의 복지사업성격이 강하고, 지원규모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며, 사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데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올바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만혼현상이 두드러지고, 개인의 경력추구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서울시민에게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포상' 하는 방식의 저출산대책은 제한적 효과밖에 갖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일가족양립의 사회적 인프라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녀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서울여성의 인적자본이나 사회참여욕구를 그만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불안정으로 표출되고 개인의 삶의 질도 그만큼 저하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맞벌이 여성은 비취업여성에 비해 수혜율이 대체로 낮다. 물론 이번 조사에서 수혜율이 전반적으로 낮고,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혜율과 정책인지도에서 일관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취업여성보다는 비취업여성에게 더 정책이 지향되어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일가족양립이 가능한 조건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정책의 방향이 경제활동을 하는 기·미혼 취업여성들의 일가족양립에 좀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자치구의 재정과 출산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과 기준이 다양하다. 첫째나 둘째아부터 지급하는가하면 세째아부터 지급하기도 하고, 지원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지역편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정책평가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보편적인 보육지원이나 출산휴가제도의 올바른 시행, 양육휴가의 기간이나 임금보상부분이 증가되는 형태의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녀를 원하는 만큼 낳아서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장기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정책제언

VI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OECD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동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실업과 질병, 고령이라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더해서 가족 내 돌봄노동(care work)과 사회적 돌봄의 위기를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의 재생산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가족(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전통적 복지책임을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가족양립(work-family balance) 정책으로 수렴된다. 여기에는 출산지원 및 아동보육지원, 부모휴가, 유연노동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목록들이 포함된다. 일가족양립 정책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 모델의 가족을 전제로 한 복지체계가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증가로 인한 돌봄의 공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정책적 대응이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진출과 이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 가족내 재생산기능의 약화를 보완하고 예방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대응이다. 이러한 일가족양립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출산을 연기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빈곤과 불평등의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OECD, 2007).

이번 서울시민 대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가구를 지향하고 있고, 특히 20~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욕구가 두드러진다. 한편으로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의 가족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존재하지만, 젊은 연령으로 내려올수록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의 지속적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동시에 결혼과 출산, 일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병행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강하게 나타나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선호에 근거한 사회제도의 뒷받침이 없다면 결혼과 자녀출산을 미루고 줄이는 방식의 개인적 대응들은 계속될 것이다.

1. 저출산 대응방안의 국제적 추세

본 연구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서울시 차원의 정책 함의를 제안하기 전에, 저출산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의 추세와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 특히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방안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 일본

일본은 1994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엔젤플랜'을 수립하고 육아를 가정과 사회, 기업, 지역사회가 분담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확충, 영아보육 및 연장보육 같은 다양한 보육서비스 보급이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는 '신엔젤플랜'으로 재정비되어 양성평등과 근로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는 저출산사회대책추진회의를 결성하였다. 2006년 결정된 새로운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사회전체의 의식개혁과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연령별 육아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다(김두섭 외, 2007).

가족의 날을 제정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임신과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마크' 보급도 병행하고 있다. 재택육아와 방과후 대책 강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 남성의 육아참여 장려, 육아비용 경감 등이 소자화대책의 내용에 포함된다.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육아형태와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임신과 출산, 수유기까지, 미취학아동기, 초등학교 및 중고대학생 시기로 단계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아동기와 수유기에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검진비 등 제공,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고립화를 막고 사회전체에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일본내각부, 2008, 소자화사회백서).

일하는 방식을 재고하는 것도 중요한 소자화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기업의 근로방식 개선을 위해 친가족기업 표창, 각종 조성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 금지,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나 심야근무 제한, 통원휴가 보장 등을 비롯하여 산후 8주간 휴가의 의무화, 산전 6주간 휴가 확보, 아버지 출산휴가 확보 등을 주요한 정책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육지원책으로는 보육소 대기아동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기아동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0~2세 영아들의 보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소자화대책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와 일가정양립의 실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통적 성역할 의식이 비교적 강한 일본사회에서 가족의 가치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 않게 가사 및 양육에 대한 공평한 분담의식과 실천이 소자화대책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싱가포르

도시국가로서 노동력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최근 초저출산을 경험하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1966년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1980년대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이후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1986년 출산관련 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다(김두섭 외, 2007).

만혼과 독신증가 등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미혼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홍보를 실시하고, 조세, 주택, 출산, 양육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상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양육 지원책이 전통적 성역할을 전제하고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야기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가족시간, 자녀양육의 다양한 자원(아버지, 조부모), 일가정양립, 경제적 지원제공 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역할의 강조에 따라 출산 이후 3일간 부성휴가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양육의 다양한 자원으로 외국인 가정부 고용과 조부모 도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가족정책은 서구의 가족정책에서 그 모형을 가져오면서도 가족가치관의 증진과 자녀양육에서의 다양한 양육보조자 활용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김두섭 외, 2007).

■ 프랑스

프랑스는 다양한 아동양육형태를 모두 지원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중상층은 개별적으로 보모를 고용하거나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중하층은 공적보육시설을 이용하며, 하층은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대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한다. 중상층은 부분적인 국가지원과 개별가족의 자원을 이용해서, 중산층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일과 아동양육을 양립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의 상당부분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중단하는 대가로 아동양육수당(APE :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을 지급받으며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한다. 실제로 1994년 아동양육수당의 수급자격을 3자녀가 있는 부모에서 2

자녀가 있는 부모까지 확대한 결과, 3세 미만 영아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격감했다(1994년, 69% -> 1997년, 53%). 2004년부터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양육수당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형태의 계층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켰다. 아동양육수당은 프랑스의 고용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실업율 낮추기 위함) 저소득층,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어린자녀가 있는 상당수의 저소득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수당을 받게 되었다.

아동양육수당이 저소득층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한 것이라면, 1990년 7월 도입된 보모고용지원 프로그램(AFEAMA : Aide á la fami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과 1986년 12월 도입된 가정아동보육수당(AGED : Allocation de garde d'enfant á domicile)은 중상층 가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가정아동보육수당은 보모를 고용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사회보장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모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수준에 따라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4년에는 3-6세 아동을 둔 부모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1996년 지원규모가 축소되었다.

등록보육사 고용지원프로그램(AFEAMA)은 아동이 등록된 보육교사를 고용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록보육교사의 사회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가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보육시설 대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등록보육사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격 있는 보모를 고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육지원을 이용하는 대상은 실제로 중산층 부모에 제한된다.

중하층 혹은 중산층 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양육형태는 공적아동보육시설(Creches)이 대표적이다. Creshes는 프랑스 가족정책이 일하는 어머니 모델에 상당부분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의무교육연령이 6세인 프랑스에서 2000년 현재 0-2세 보육비율은 39%, 3-5세 보육비율은 100%인 것으로 보고된다. 문제는 0-2세 아동보육은 주로 반일제로 운영되고, 3-6세 아동은 전액 지원하는데 비해, 3세 미만은 정부가 50%만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지원도 받고 자신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저소득층 여성계층에는 전통적 성역할로 복귀가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전통적인 양육부담을 탈젠더화하지 못하고 계층적 차이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된다(이삼식 외, 2007b). 아동양육수당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수급조건으로 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가 전통적

인 성별분업을 완화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국민 모두의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공화주의 전통에 반하는 계층간 차이를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모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아동양육에서 가족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고, 가족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부모의 권리를 지원하기 보다는, 잘 갖춰진 공보육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양육권리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이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들은 제도화된 유급휴가(부모휴가)와 공적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원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

스웨덴은 1974년 모성휴가를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다. 1988년에는 부모휴가를 40주(모성휴가 7주 포함)에서 59주로 확대하였고, 소득대체율은 1980년과 같이 90%를 유지하였다. 유급휴가의 재원은 부모보험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질병보험에 기반하고 있고, 부담의 주체는 고용주와 정부이다. 또한 스웨덴의 아동양육 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5년에 4주간의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2년에는 부모휴가를 4주 연장하여 아버지 할당제를 4주에서 8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들의 양육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를 강화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웨덴에서도 자녀양육휴가는 대체로 여성들이 더 활용한다는 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에서는 실업자와 학생 등에게도 부모휴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자녀양육시간뿐 아니라 부모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조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다(이삼식 외, 2007b). 스웨덴의 0-2세 영아에 대한 공적보육비율은 1980년대에 이미 24%에 이르렀고, 2002년에는 65%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3-6세 보육비율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스웨덴에서 공적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의 주요한 역할 덕분인데, 스웨덴에서 지방정부는 공적 서비스 전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서구복지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동보육을 젠더평등 관점에 근거해서 자녀돌봄을 사회화하고, 이를 통해 부모, 특히 여성들의 노동력 상품화의 조건을 갖추게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교해도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아동의 공보육 확대가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런 점이 아동양육수당을 도입해서 일가족양립을 지원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의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공보육시스템은 최근에는 여성의 노동권 보호차원보다 미래인력의 개발이라는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스웨덴에서도 아동보육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1990년 5%에서 1999년 15%로 증가했다(Bergqvist and Nyberg, 2002; 이삼식 외, 2007:57에서 재인용). 자유주의국가에서와 같은 민영화와는 다르지만,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보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등 공보육과 민간보육 간의 선택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체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잔여적인 불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양육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두고 있다. 미국은 아동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유급휴가가 없고, 정규직과 임시직중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12주의 무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12주 무급휴가 안에는 모성, 부성, 부모, 가족간호휴가가 모두 포괄된 것으로서, 부모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육비용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윤홍식, 2006). GDP 대비 아동보육지원 지출규모도 0.2%로 한국의 0.1%를 제외하면 OECD 국가중 가장 낮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시장에서 보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10% 정도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자녀양육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은 비공식적 연계망을 활용하여 자녀를 맡기거나 아이를 두고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시장구매력에 따라 아동양육형태가 결정되는 미국의 경우, 좋은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기업으로부터 아동보육과 방과후 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할 아동양육지원서비스가 개별부모의 시장구매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0-2세가 16%, 3-5세는 54%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육서비스를 구매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구매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은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취약계층 아동보육을 위한 공적 지원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은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나오지만 실제 운영은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0-5세 아동을 주대상자로 하고 있다. 대상자의 90% 이상이 저소득층이며 나머지는 장애아동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기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다.

부모휴가가 1993년 무급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가족 및 의료휴가제도는 모성 및 부성휴가,

부모휴가, 가족간호휴가를 모두 포괄하고 있고, 부모 각각에게 12주간의 무급휴가가 주어진다. 시간제 근로와 병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휴가의 분할사용은 가능하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그러나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급 휴가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의 개별 가족에 대한 일가족양립지원은 보육에 관한한 공적영역의 책임이 약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낮지는 않다. 그렇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미흡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되고 있다.

2. 서울시 저출산 대응방안

최근 2년간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다시 출산율이 하락할 전망에 있다. 지난 7~8년간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출산지원정책은 가시적인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또한 쉽지 않다. 출산율의 변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건의 변화 외에도 가족이나 결혼, 자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의식변화와 가치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 연령, 소득수준이나 직업 등에 따라 정책접근이 달라져야 하는 배경도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 출산의식, 일가족양립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중심의 가치관은 강하지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태도는 많이 약화된 것 같다. 특히, 미혼여성의 3명중 1명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혼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5명중 1명 정도는 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가 주는 인생의 만족감과 정서적 가치는 높이 평가하고, 이상적인 자녀수도 2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혼을 해서 실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러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만큼 생활비가 유지될 지 등 당장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결혼과 일, 일과 출산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한,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와 기혼들의 출산연기는 지속될 것

이다.

저출산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아내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가족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일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OECD 국가들은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경험했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남성들의 양육참여와 인식변화도 중요함을 환기시킨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은 시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 만큼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출산·양육환경의 정비를 말한다. 따라서 서울시 저출산정책은 서울시민의 희망자녀수 2명(기혼은 2.01명, 미혼은 1.87명)과 현재 합계출산율 1.06명(2007년) 간의 간격을 줄여서 희망자녀수가 실제자녀수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혼화 현상과 그에 따른 만산은 저출산의 주요인으로서, 결혼 및 출산이 개인의 선택에 관한 영역이므로 사회가 강제할 문제는 아니지만, 출산 및 육아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조사결과로부터 서울시민의 일가족양립과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이 제안될 수 있다.

1) 서울시 25~44세 기혼남녀는 가사 및 양육분담이 가정 내에서 공평하게 분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일가족양립 환경 조성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건강 및 보육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직장의 친가족적 제도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육정책과 기업내 가족친화제도의 운용에 대한 점검과 홍보,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시민 25~44세 남녀 80% 정도는 현재 저출산이 조금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취업난과 직장불안정,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지원 부족, 직장생활 불이익, 여성의 이중부담 등 사회적 요인이 15%, 개인의 커리어 개발과 취업중시, 소자녀관 등 문화적 요인이 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들은 첫아이 출산의 조건으로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와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라고 응답하였다.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사회적으로 절감될 때 일차적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서울시의 복지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주로 첫째아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자녀가 하나일 때와 둘 일 때, 맞벌이와 남성 홑벌이의 비율은 변하지 않지만, 자녀가 없을 때와 하나 있을 때는 맞벌이와 남성 홑벌이의 비율이 정확히 역전되어 대략 3 : 6의 관계가 나타난다. 즉,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유무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임신과 출산, 양육에 상관없이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첫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진행되는 30대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유지 방안이 필요하다.

4) 0~2세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 및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물론,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영아들의 공보육 비율은 19.6%에 불과하여 최소 3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세 미만 아동의 공보육 비율은 출산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주로 첫아이가 생기는 시점이라는 사실로도 입증되듯이, 초기 양육기의 공보육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0~2세 영아들의 보육이 대체로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도쿄도에서도 심각한 저출산 타개책으로 보육소 대기아동 수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기아동이 50명 이상 있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대기아동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아동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0~2세 영아들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기아동 제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

5) 과도한 일중심적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2005)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390시간으로 가장 긴 사회에 속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서울시 기혼은 평균 주당 51.6시간, 하루 평균 10.32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으로 하루 평균 10.28시간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의 평균 결혼연령이 28세(여), 31세(남)인데, 이 연령대에서 '일'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일가족 및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혼들의 경우,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로 인해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나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대 남성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양육기에 있는 기혼남성의 장시간노동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남성들이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은 많지만, 이러한 일하는 방식, 직장의 관행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6)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책홍보와 제도이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남녀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내 수유 등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답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42.4%, 육아휴직은 57.8%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해서 이러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서울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에 대한 적극적 시행과 확산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버지들의 양육휴가제도가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이용률이 2% 미만에 이르는 미미한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남성들의 양육참여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육아휴직제 이용확대도 필요하지만, 아버지들의 양육과정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의 추세를 개선하고 복지체계의 패러다임을 좀더 젠더평등적인 형태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제도도입으로만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스웨덴의 경우 2002년 육아휴직 할당제를 4주에서 8주로 확대했는데, 이는 제도적 노력 없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자녀양육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성별분업의식이 독일에서도 스웨덴 방식을 따라 2007년부터 아버지 할당제(2개월)을 도입한 바 있다.

8) 남성들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미혼남녀의 부부간 성역할 인식에서 남녀간 일관되게 10%p 정도의 격차가 나타난다. 즉, 여성의 돌봄노동 책임이나 전업주부 역할에 대한 동의, 가사 및 양육분담에 대한 인식에서 미혼남성은 여성에 비해 10%p. 정도 전통적인 방향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부경제활동은 남녀 모두 전일제 형태의 맞벌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 또한 결혼 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어 맞벌이 희망비율은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욕구 뿐 아니라 생활비와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 도시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육아로 고정시켜 온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의 병행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9)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거나 과거보다 결혼이 늦는 이유는 결혼비용이나 직장불안정 등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남성은 고용불안정과 결혼비용 부담이 결혼을 미루게 하는 주요 인이었다. 여성들도 결혼비용과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혼 젊은이들이 결혼비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젊은이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커다란 짐을 지우고 있다. 결혼식의 형식적 절차를 지양하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의 의미를 가지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결혼문화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30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과 30세 미만에 결혼한 여성은 평균 1.32명과 1.81명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 결혼연령이 이를수록 출생아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만혼은 만산과 저출산으로 귀결되므로 결혼의 경제적, 심리적 비용을 덜어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0) 소자녀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이유는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자녀교육비 부담은 전계층에게 모두 해당되는 심각한 요인이지만, 특히 소득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양극화는 취약계층 자녀의 잠재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성적 위주의 기존의 경쟁적 교육제도를 지양하고 다원화된 학습 및 교육환경을 제도화하는 필요하다. 자녀들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는 인성교육, 전인교육, 종합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풍토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부모역할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부모자녀 관계와 상호협력에 대한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기혼부부 및 대학생,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11) 서울시 정책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존중하는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매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녀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걸기대회, 자녀와 아버지 요리대회, 자녀와 부모 토론대회 등 서울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자녀로서, 부로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12) 정상가족의 규범을 벗어나서 서울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혼모들은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떳떳하게 키울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자녀를 키우기 원하는 미혼모들을 돕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위탁모의 연계를 통해 일정기간 공동으로 양육한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미혼모가 키우는 식의 양육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3) 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던 기혼여성들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재취업 교육지원도 출산 양육환경조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경력단절 여성, 특히 서울여성의 고학력 인적자본의 방치를 막기 위해 커리어 카운슬링 등 여성들의 재취업욕구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4) 서울시의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고소득층과 저학력 저소득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현물지원이 좀더 필요한 계층에게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의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젊은층이나 고학력층의 경우에 인터넷 등을 통한 웹홍보 방식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경제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접근 활용이 매우 힘들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찾아가는 정보서비스' 와 같은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출산율의 상승이 지원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한 사회의 합계출산율의 변화에는 정책시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가족 및 결혼, 자녀의식과 일가족양립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위의 제언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고선주·이완정 외(2007), 『수요에 기반한 서울시 맞춤보육 공급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김선자(2007),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지원정책 발전방안」, 서울정책포커스, 2007.8.20, 제39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34

김승권(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6),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춘, 최정원 (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6(1) 312-345

김혜원(2007), 「한국의 가족 친화적 고용정책」, 『제7차 한-일 노동포럼: 일과 가정의 양립: 한-일 양국의 주요 이슈와 정책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김혜원 외(2007),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도미향(2006),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1(1), 93-112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17(2), 285-316

손승영(2007),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10(1), 207-243

신윤정(2008),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욕구 사례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6호(2008.2), 81-90

유계숙 외(2007), 『가족친화 기업경영의 성과에 관한 연구-근로자와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윤홍식(2006), 「부모 · 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58(2), 한국사회복지학회, 223-249

(2006),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 본 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들의 가족정책 :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345-349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은기수(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국제대학원

이삼식(2006), 「2006년 출산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34, 70-86

이삼식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2007a), 「출산 및 양육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방안(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1

이삼식 외(2007b), 「출산·양육 분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6

이재경 외(2005), 「저출산의 젠더분석과 정책대안 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2005),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외(2004),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장혜경 외(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조윤영·김정호(2008),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은?", KDI 정책포럼 제195호(2008-07), 한국개발연구원

황정미(2006), 「저출산과 모성의 사회적 지위」, 『제5차평등정책콜로키움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문헌▐

Bernhardt, Eva M(1993), "Fertility and Employmen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9 No. 1, May 1993, Oxford University Press

Castles, Francis G.(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209-227

Chesnais, Jean-Claude(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2, 729-739

D'Addio, Anna Cristina and Marco Mira d'Ercole(2005), "Policies, institutions and fertility rates : A panel date analysis fo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Studies* 41:7-43

Lewis, Jane(2001), *The end of marriage? Individualism and intimate relations*, Edward Elgar

Lewis, Jane, Trudie Knijin, Claude Martin, and Ilona Ostner(2008), "Patterns of development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for parents in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in the 2000s", *Social Politics* 15(3):261-286

Nemoto, Kumiko(2008), "Postponed marriage : Exploring women's views of matrimony and work in Japan", *Gender & Society* 22(2), 219-237

Neyer, Gerda(2003),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2003-021

Sleebos, J.(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5, OECD Publishing.

OECD(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부 록

〈부록 I〉 질문지

〈부록 II〉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미혼용)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실태 및 가족가치, 성역할 등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정책 수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08. 7.

조사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책임자 공 선 희 TEL: 02) 810-5013, 5019

조사 대행기관 : (주)리서치 플러스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조사책임자 조 미 진 TEL : 02) 312-0301 FAX : 02) 312-0748~9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만( )세 ☞ **25~44세만 조사 진행**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취업유무	① 취업 중 ② 실업(구직 중) ③ 비취업(비구직 활동)
거주지역 (자치구)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면접원 기록 사항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연 락 처	
응 답 자 주 소	( )구 ( )동		
응 답 자 구 분	① 미혼 취업자 ③ 기혼 취업자	② 미혼 미취업자 ④ 기혼 미취업자	

면 접 원		에디팅/ 코 딩	

※ 다음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A1. 귀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① 자녀
② 배우자/이성
③ 사회적 성공
④ 가정의 행복
⑤ 경제적 안정
⑥ 지식/학식
⑦ 능력개발
⑧ 정신적 성숙
⑨ 취미생활/여가
⑩ 건강
⑪ 좋은 인간관계
⑫ 기타(_____)

A2. 귀하의 인생에서 가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A3. 귀하는 현재의 가족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A4.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②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③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
④ 반드시 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A6. 그렇다면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 A6-1번으로
② 아니오 ☛ A7번으로
③ 아직 모르겠다 ☛ A7번으로

A6-1. 귀하가 배우자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① 신뢰와 사랑
② 직업
③ 학력/학벌
④ 성격
⑤ 경제력
⑥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⑦ 건강
⑧ 연령
⑨ 종교
⑩ 형제순위
⑪ 가정환경
⑫ 출신지역
⑬ 조건 없음
⑭ 기타 ( )

A7. 귀하는 남녀가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적인 결혼 연령
여 성	만 세
남 성	만 세

A8. 귀하가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대 분 류	소 분 류
경제적 이유	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실업 등) ② 소득이 적어서 ③ 결혼 비용이 준비되지 않아서 ④ 가족생계부양의 부담이 클 것 같아서
사회적 이유	⑤ 결혼으로 인한 직장내 불이익(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⑥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⑦ 결혼생활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⑧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대 분 류	소 분 류
가치관	⑨ 결혼할 시기가 아니어서 ⑩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⑪ 결혼보다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⑫ 인생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⑬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가 족	⑭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므로 ⑮ 결혼할 사람은 있으나 집안이 반대해서 ⑯ 가사와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⑰ 배우자 가족을 중심으로 결혼생활이 유지될 것 같아서
기 타	⑱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⑲ 경제력을 갖춘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⑳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㉑ 건강이나 장애 때문에 ㉒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㉓ 기타( )

A9.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첫 번째 _____ 2) 두 번째 _____

① 실업이나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② 전세나 아파트 가격 등 주택비용이 상승해서
③ 혼수 등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④ 결혼보다는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⑤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압력이 약해져서
⑦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어져서
⑧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
⑨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⑩ 외모나 가치관 등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⑪ 늦게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 추세여서
⑫ 기타 ( )

A10. 귀하는 미혼남녀를 위해 서울시에서 결혼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 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B1번으로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 A10-1번으로

A10-1.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팅이벤트,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

(_____)

※ 다음은 성역할 의식 및 자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B1.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아래의 견해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남편은 아내와 육아 및 가사를 분담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 각 상황에 따른 가사분담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야한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해야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남편만 취업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부인만 취업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성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리하다
② 불리하다 ☞ B3-1번으로
③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 B4번으로
④ 유리하다
⑤ 매우 유리하다 ☞ B3-2번으로

B3-1.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_____)

B3-2.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_____)

B4. 귀하가 결혼 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경제활동유형					
				부인			남편		
무자녀	1명	2명	3명 이상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①	②	⑤	④	①	②	③	①	②	③

B5. 귀하가 결혼 후 자녀를 갖는다면 첫아이는 언제쯤 갖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①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②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③ 집을 장만한 후에
④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에
⑤ 나이 들기 전에
⑥ 배우자가 원할 때
⑦ 부모님께서 원할 때
⑧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할 때
⑨ 기타(_____)

B6.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⓪ 0명 ☞ B7-1번으로 ① 1명 ☞ B7-2번으로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⑥ 모르겠음

☞ B8번으로

B7. 귀하가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만 갖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B7-1. [무자녀 희망] 자녀를 갖기 원하지 않는 이유

1순위: _____ 2순위: _____

B7-2. [1자녀 희망] 자녀를 하나만 갖기 원하는 이유

1순위: _____ 2순위: _____

구 분	항 목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⑥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⑩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가치관	⑪ 자기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⑫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⑬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⑭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⑮ 아이를 꼭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⑯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족	⑰ 자녀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⑱ 가족 중 아픈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해서 ⑲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기타	⑳ 장애나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㉒ 나이가 많아서 ㉓ 기타( )

B8. 귀하가 (결혼 후) 자녀를 갖는다면,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딸·아들 구별 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딸 ___명, 아들 ___명)

③ 기타( ) ④ 잘 모르겠다

B9. 귀하는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둘 이상은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B10. 귀하는 결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후에 자녀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겠습니까?

① 평소대로 일 하겠다

② 근무시간을 줄여 일 하겠다

③ 수입을 위해 근무시간을 늘여 일 하겠다

④ 직장을 그만 두겠다 ☞ B10-1로

⑤ 기타(_____)

B10-1.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②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③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⑤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⑥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⑦ 자녀양육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⑧ 기타( )

B8. 귀하가 (결혼 후) 자녀를 갖는다면,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 딸·아들 구별 없이　② 딸·아들 구별해서(딸 ___명, 아들 ___명)

③ 기타( )　④ 잘 모르겠다

B9. 귀하는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둘 이상은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B10. 귀하는 결혼 후,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했거나 출산한 후에 자녀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시겠습니까?

① 평소대로 일 하겠다

② 근무시간을 줄여 일 하겠다

③ 수입을 위해 근무시간을 늘여 일 하겠다

④ 직장을 그만 두겠다　☞ B10-1로

⑤ 기타(_____)

B10-1.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② 아이를 맡길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③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시설에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⑤ 직장에서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⑥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⑦ 자녀양육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⑧ 기타( )

※ 다음은 임신 · 출산과 직장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취업자 질문] ☞ 현재 비취업자는 C5번으로

C1. 귀하의 직장은 여직원이 결혼한 후에도 다닐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C2. 귀하는 직장동료가 임신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3번으로

C2-1. 귀하가 본 불이익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① 휴직 권유 ② 퇴직 권유 ③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④ 은근한 압력 ⑤ 기타(_____)

C3. 귀하의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아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1) 출산휴가	①	②	③
2) 육아휴직	①	②	③
3) 직장 내 수유	①	②	③

C4. 귀하의 직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① 1개월 이하 ② 1개월 이상 ~ 2개월 이하

③ 2개월 이상 ~ 3개월 ④ 잘 모르겠다

[♠ 공통질문]

C5.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규정된 [임신한 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한다 ☞ C5-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 C6번으로
⑤ 매우 만족한다

C5-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C6.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한다 ☞ C6-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 C7번으로
⑤ 매우 만족한다

C6-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C7.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규정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한다 ☞ C6-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 C7번으로
⑤ 매우 만족한다

C7-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C8. 귀하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①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② 직장을 두만 두고 본인이
③ 배우자
④ 가족이나 친인척
⑤ 놀이방, 어린이집 등 지역 보육시설
⑥ 직장 보육시설
⑦ 동네 아주머니
⑧ 베이비시터, 파출부
⑨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⑩ 기타(_____)

C9. 귀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서 아래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각각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구 분	항 목	필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탄력적 근무제도	1) 시차출퇴근제	①·····②·····③·····④·····⑤				
	2) 재택근무	①·····②·····③·····④·····⑤				
	3) 시간제 근무	①·····②·····③·····④·····⑤				
출산 지원제도	4) 출산휴가	①·····②·····③·····④·····⑤				
	5) 산모도우미	①·····②·····③·····④·····⑤				
	6) 배우자 출산휴가	①·····②·····③·····④·····⑤				
자녀양육 지원제도	7) 육아휴직	①·····②·····③·····④·····⑤				
	8)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①·····②·····③·····④·····⑤				
	9)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①·····②·····③·····④·····⑤				
자녀교육 지원제도	10)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①·····②·····③·····④·····⑤				
	11)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①·····②·····③·····④·····⑤				
부양가족 지원제도	12) 가족 간호 휴가	①·····②·····③·····④·····⑤				
	13) 부모 돌봄 서비스 지원	①·····②·····③·····④·····⑤				

※ 다음은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D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③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D2. 귀하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1) 첫 번째 _____ 2) 두 번째 _____

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②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③ 자녀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④ 자녀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⑦ 출산 및 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⑧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⑨ 효 규범이 무너지고 있고 자녀가 있어도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⑩ 자녀가 없어도 부부의 애정만으로 가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⑪ 기타 (　　)

D3. 다음은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들입니다. 귀하는 이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각각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구분	내 용	필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임신 지원	1)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비(非)보험 의료비 지원	①·····›②·····›③·····›④·····›⑤				
	2) 불임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3)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12종 -› 15종)	①·····›②·····›③·····›④·····›⑤				
출산 지원	4)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①·····›②·····›③·····›④·····›⑤				
	5)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6) 산모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양육 비용 경감	7) 양육수당 지원 확대(첫째아부터 지급)	①·····›②·····›③·····›④·····›⑤				
	8) 공공 보육시설 확충	①·····›②·····›③·····›④·····›⑤				
	9) 영유아플라자 등 제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①·····›②·····›③·····›④·····›⑤				
양육 친화 환경	10)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①·····›②·····›③·····›④·····›⑤				
	11)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①·····›②·····›③·····›④·····›⑤				
	12)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지원	①·····›②·····›③·····›④·····›⑤				

D4. 귀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일과 생활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D5. 귀하는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D6. 귀하의 삶에서 현재 다음 4가지 영역 중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4)_____

① 일 ② 가정 ③ 여가 ④ 학습

D7. 자녀양육 환경을 포함해서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자치구)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집값, 전세값 등 주거비용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비 등 물가수준	①	②	③	④	⑤
3) 아동 보육시설 및 서비스(놀이방, 유치원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편의성(지역주민센터, 민원서비스 처리 등)	①	②	③	④	⑤
6) 공원, 숲, 산책로 등 녹지 및 휴식 공간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8) 체육시설(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장, 할인점 등 쇼핑시설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10) 진료기관 접근성 (약국,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	①	②	③	④	⑤
12) 이웃간 상호부조, 친목 및 정서적 유대	①	②	③	④	⑤
13) 자원활동과 환경보전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⑤
14) 도로나 골목의 보행 편의성(유아, 장애인, 노인 등 배려)	①	②	③	④	⑤
15) 사고와 범죄 등에 대한 생활안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DQ1. 귀하의 학력수준은?

학 력			수학여부
⓪ 무학	① 초등학교	②중학교	① 졸업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2년·3년제 대학 포함)		② 재학
⑤ 대학교(4년제대학)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박사)	③ 중퇴
			④ 휴학

DQ2. 귀하와 동거하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응답자 포함) 총 _____ 명

☞ 1명일 경우, DQ4번으로

DQ3. 귀하와 동거하는 가구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
⑤ 애인
⑥ 선후배
⑦ 직장동료
⑧ 기타(_____)

DQ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⑥ 오피스텔
⑦ 기타(_____)

DQ5.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월세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⑥ 기타 (_____)

DQ6.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십니까?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수련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군인
⑫ 학생
⑬ 실업(구직중)
⑭ 비취업(비구직활동) ☞ C5-1번으로
⑮ 기타(_____)

[♠ 취업자 질문]

DQ7.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잘 모르겠다

DQ8.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형태와 평소 1주당 근로(일)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주당 근로시간
① 시간제	_____시간
② 전일제	_____시간

DQ9.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회사(회사/개인사업체)
② 정부투자·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포함)
⑤ 기타(_____)
⑥ 잘 모르겠다

DQ10.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 - 4인　② 5 - 9인　③ 10 - 29인　④ 30 - 99인　⑤ 100 - 299인　⑥ 300 - 499인　⑦ 500인 이상　⑧ 잘 모르겠다

[♠ 공통질문]

DQ11.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 포함)

월 평균 [ ][ ][ ][ ] 만원

※ 면접원
소득은 세금공제 전의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DQ12. 귀하 가구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하층　② 하층　③ 중간층　④ 상층　⑤ 최상층

(기혼용)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 저출산 관련 요인 및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가족 양립 실태 및 가족가치, 성역할 등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정책 수립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2008. 7.

조사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책임자 공 선 희 TEL: 02) 810-5013, 5019

조사 대행기관 : (주)리서치 플러스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조사책임자 조 미 진 TEL : 02) 312-0301 FAX : 02) 312-0748~9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만( )세 ☞ 25~44세만 조사 진행
혼인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이혼 ④ 사별	취업유무	① 취업 중 ② 실업(구직 중) ③ 비취업(비구직 활동)
거주지역 (자치구)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면접원 기록 사항

응 답 자 성 명		응 답 자 연 락 처	
응 답 자 주 소	( )구 ( )동		
응 답 자 구 분	① 미혼 취업자 ② 미혼 미취업자 ③ 기혼 취업자 ④ 기혼 미취업자		

면 접 원		에디팅/ 코 딩	

※ 다음은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A1. 귀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① 자녀
② 배우자/이성
③ 사회적 성공
④ 가정의 행복
⑤ 경제적 안정
⑥ 지식/학식
⑦ 능력개발
⑧ 정신적 성숙
⑨ 취미생활/여가
⑩ 건강
⑪ 좋은 인간관계
⑫ 기타(_____)

A2. 귀하의 인생에서 가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A3. 귀하는 현재의 가족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A4. 귀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음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이웃보다는 가족이 더 큰 의지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보다 내 가족의 안녕이 우선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는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직접 낳는 대신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한부모 가족도 양부모 가족만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도 해결책이다	①	②	③	④	⑤

A5. 귀하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②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③ 가급적 하는 편이 좋다

④ 반드시 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A6.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첫 번째 _____ 2) 두 번째 _____

① 실업이나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어
② 전세나 아파트 가격 등 주택비용이 상승해서
③ 혼수 등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④ 결혼보다는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⑤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⑥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압력이 약해져서
⑦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어져서
⑧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어
⑨ 외모나 가치관 등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⑩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⑪ 늦게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여서
⑫ 기타 (_____)

A7. 귀하는 남녀가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귀하의 결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상적인 결혼 연령
여성	만_____세
남성	만_____세

	실제 결혼 연령
부인	만_____세
남편	만_____세

A8. 귀하는 미혼남녀를 위해 서울시에서 결혼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 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 B1번으로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 A8-1번으로

A8-1.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팅이벤트,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

(_____)

※ 다음은 성역할 의식과 가사분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B1.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아래의 견해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에서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내는 취업을 하더라도 자녀양육 및 가사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남편은 아내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B2. 귀하가 결혼 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와 부부의 경제활동유형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경제활동유형					
				부인			남편		
무자녀	1명	2명	3명 이상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전일제	시간제	가사전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③

B3. 귀하는 평소 배우자와 다음의 일을 어떻게 분담하십니까?

구 분		전적으로 부인이	대체로 부인이	부부가 함께	대체로 남편이	전적으로 남편이	해당없음
집안일	식사준비	①	②	③	④	⑤	⑧
	청 소	①	②	③	④	⑤	⑧
	설거지	①	②	③	④	⑤	⑧
	세 탁	①	②	③	④	⑤	⑧
	시장보기	①	②	③	④	⑤	⑧
	집관리(집손질, 세차 등)	①	②	③	④	⑤	⑧
자녀돌봄	밥 먹이기	①	②	③	④	⑤	⑧
	옷 입히기	①	②	③	④	⑤	⑧
	놀아주기	①	②	③	④	⑤	⑧
	아플 때 보살피기	①	②	③	④	⑤	⑧
	숙제 지도	①	②	③	④	⑤	⑧
	등하교 동행	①	②	③	④	⑤	⑧

B4. 귀하와 배우자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수면시간 제외)은 얼마나 되십니까?
또한 그러한 시간 양에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함께 보내는 시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평일	□□ 시간 □□ 분	①	②	③	④	⑤
2) 토요일	□□ 시간 □□ 분	①	②	③	④	⑤
3) 일요일	□□ 시간 □□ 분	①	②	③	④	⑤

B5. 다음 각 상황에 따른 가사분담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야한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해야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남편만 취업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부인만 취업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B6.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남성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리하다
② 불리하다 ☛ B6-1번으로

③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다 ☛ C1번으로

④ 유리하다
⑤ 매우 유리하다 ☛ B6-2번으로

B6-1.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_____)

B6-2.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_____)

※ 다음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C1. 현재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⓪ 0명 ☛ C2-1번으로　　① 1명 ☛ C2-2번으로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⑥ 모르겠음

☛ C3번으로

C2. 귀하가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만 갖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C2-1. [무자녀 희망]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1순위: _____ 2순위: _____

C2-2. [1자녀 희망] 자녀를 하나만 갖기 원하는 이유

1순위: _____ 2순위: _____

구 분	항 목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실업상태여서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⑤ 자녀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⑥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때문에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구 분	항 목
가치관	⑪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⑫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⑬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⑭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⑮ 아이를 꼭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⑯ 아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족	⑰ 자녀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⑱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⑲ 가족 중 아픈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해서 ⑳ 아들을 낳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기타	㉑ 장애나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㉒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㉓ 나이가 많아서 ㉔ 기타( )

C3. 귀하는 현재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까?

① 0명 ☛ C4번으로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C3-1. 귀하 자녀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또한 귀하의 자녀는 누가 주로 양육하고, 만일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보육시설 유형과 보육시설 서비스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구 분	성 별	연 령	양육방법 (보기1)	보육시설 유형 (보기2)	보육시설 서비스만족도 (보기3)
1) 첫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2) 둘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3) 셋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4) 넷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5) 다섯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6) 여섯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7) 일곱째	① 여 ② 남	만 ____ 세			

[보 기]

(보기1) 양육방법	(보기2) 보육시설 유형	(보기3) 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부함께 ④ 본인의 부모님 ⑤ 배우자 부모님 ⑥ 친인척 ⑦ 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⑧ 유치원 ⑨ 학교 ⑩ 기타( )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개인(어린이집) ④ 개인(가정보육시설 : 놀이방) ⑤ 직장 ⑥ 공동육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C3-2. [보육시설 서비스 만족도에 ①, ②번 응답자 해당] 귀하가 현재의 보육시설 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C3-3. 귀하의 경우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본인의 부모님
④ 배우자의 부모님 ⑤ 부부가 함께 ⑥ 기타(____)

C4. 귀하는 앞으로 (추가)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임신 중인 경우라면 출산 후 추가자녀 희망 여부)

① 있다(_____명)
② 없다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C6번으로

C4-1. 향후 (추가) 자녀를 가질 계획인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① 주위의 권유로
② 아들을 낳기 위해
③ 딸을 낳기 위해
④ 아이가 외로워할 것 같아서
⑤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⑥ 노년에 의지하려고
⑦ 결혼 후 출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⑧ 고용안정 및 소득증가로 여유가 생겨서
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⑩ 국가 및 지자체, 기업 등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⑪ 기타(_____)

C5. 귀하가 (추가로) 자녀를 갖는다면, 아이를 언제쯤 갖고 싶습니까? 중요한 조건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_____

① 안정된 직장을 가진 후에
② 가정살림을 꾸려갈 만큼의 소득이 유지될 때
③ 집을 장만한 후에
④ 자신과 배우자만의 생활을 충분히 누린 후에
⑤ 나이 들기 전에
⑥ 배우자가 원할 때
⑦ 본인의 부모님께서 원할 때
⑧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원할 때
⑨ 건강이 좋을 때
⑩ 덜 바빠질 때
⑪ 자녀가 좀 커서 손이 덜 갈 때
⑫ 기타(_____)
⑬ 잘 모르겠다

C6. 귀하는 배우자와 양육을 동등하게 분담한다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C7. 귀하는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면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C8.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가 둘 이상 있어야 (자녀가) 외롭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귀하는 현재 직장(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D2번으로 ② 아니오 ☛ D1-1번으로

D1-1. 귀하는 결혼 전에 직업(일)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D3번으로 ② 아니오 ☛ D9번으로

D2. 귀하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지기 위해
②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③ 자녀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④ 자녀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싶어서
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참여를 위해
⑦ 여가를 활용하고 싶어서
⑧ 기타(_____)

D3. 귀하(의 배우자)는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직장동료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4번으로

D3-1. 귀하(의 배우자)가 받거나 보았던 불이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① 휴직 권유 ② 퇴직 권유 ③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④ 은근한 압력 ⑤ 기타(_____)

D4. 귀하의 직장에서는 아래의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모르겠음
1) 출산휴가	①	②	⑤
2) 육아휴직	①	②	⑤
3) 직장 내 수유	①	②	⑤

D5. 귀하(혹은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D6번으로

⑤ 해당없음(자녀 없음,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둠 등) ☛ D9번으로

D5-1. 귀하(혹은 배우자)는 출산휴가를 얼마나 사용하였습니까?

① 1개월 이하

② 1개월 이상 - 2개월 이하

③ 2개월 이상 - 3개월

④ 잘 모르겠다

D5-2. 귀하(혹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① 직장복귀의 불투명성

② 승진 상의 불이익

③ 동료들의 업무량 가중 부담감

④ 회사 내 출산휴가 전례가 없는 점

⑤ 업무가 중요해서 대체할 수 없는 점

⑥ 어려움 없었음

⑦ 기타(_____)

D5-3. 귀하(혹은 배우자)가 출산휴가 종료 후, 직무와 근무부서는 휴직 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였습니까?

	동일	회사명령에 따라 변경	본인희망에 따라 변경
1) 직무	①	②	③
2) 부서	①	②	③
3) 사업장	①	②	③

D6. 귀하(혹은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D6-2로 ② 없다 ☞ D6-1로

D6-1. 귀하(혹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에
②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③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④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⑤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⑥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
⑦ 자신의 일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남이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라서
⑧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⑨ 보육시설 이용이나 보모 고용이 가능해서
⑩ 직장 분위기 때문에
⑪ 기타(_____)

D6-2. 귀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①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② 직장을 두만 두고 본인이
③ 배우자
④ 가족이나 친인척
⑤ 놀이방, 어린이집 등 지역 보육시설
⑥ 직장 보육시설
⑦ 동네 아주머니
⑧ 베이비시터, 파출부
⑨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⑩ 기타(_____)

D7. 귀하는 직장일과 가정 일을 하면서 겪는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② 부부간에 대화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③ 일을 하면서 가사도 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④ 직장 일에 전념하기 어렵다
⑤ 직장에서의 차별(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다
⑥ 문제가 없다
⑦ 기타(_____)

D8. 귀하는 현재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D9.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규정된 [임신한 근로자에게 산전·후 90일간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
② 불만족한다 ┘ ☛ D10-1번으로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 D11번으로
⑤ 매우 만족한다 ┘

D9-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D10.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한다 → D10-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D11번으로

D10-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D11. 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규정된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한다
② 불만족한다 → D11-1번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D12번으로

D11-1.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D12. 귀하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각각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구 분	항 목	필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탄력적 근무제도	1) 시차출퇴근제	①·····②·····③·····④·····⑤				
	2) 재택근무	①·····②·····③·····④·····⑤				
	3) 시간제 근무	①·····②·····③·····④·····⑤				
출산 지원제도	4) 출산휴가	①·····②·····③·····④·····⑤				
	5) 산모도우미	①·····②·····③·····④·····⑤				
	6) 배우자 출산휴가	①·····②·····③·····④·····⑤				
자녀양육 지원제도	7) 육아휴직	①·····②·····③·····④·····⑤				
	8)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①·····②·····③·····④·····⑤				
	9) 육아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	①·····②·····③·····④·····⑤				
자녀교육 지원제도	10)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①·····②·····③·····④·····⑤				
	11)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①·····②·····③·····④·····⑤				
부양가족 지원제도	12) 가족 간호 휴가	①·····②·····③·····④·····⑤				
	13) 부모 돌봄 서비스 지원	①·····②·····③·····④·····⑤				

※ 다음은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E1. 귀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조금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E2. 귀하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 첫 번째 _____ 2) 두 번째 _____

①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② 결혼이나 출산보다 취업이나 경력개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③ 자녀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④ 자녀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⑥ 결혼과 출산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⑦ 출산 및 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⑧ 자녀를 적게 낳아 잘 키우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⑨ 효 규범이 무너지고 있으며 자녀가 있어도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⑩ 자녀가 없어도 부부의 애정만으로 가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⑪ 기타 (_____)

E3. 다음은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들입니다. 귀하는 이 정책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각각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필요성이 높은 것입니다)

구분	내 용	필요 정도				
		1점	2점	3점	4점	5점
임신 지원	1)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비(非)보험 의료비 지원	①·····②·····③·····④·····⑤				
	2) 불임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3)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확대(12종 -> 15종)	①·····②·····③·····④·····⑤				
출산 지원	4) 아이돌보미 등 찾아가는 양육지원서비스 확대	①·····②·····③·····④·····⑤				
	5) 미숙아 의료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6) 산모도우미 지원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가구로 대상 확대)	①·····②·····③·····④·····⑤				
양육 비용 경감	7) 양육수당 지원 확대(첫째아부터 지급)	①·····②·····③·····④·····⑤				
	8) 공공 보육시설 확충	①·····②·····③·····④·····⑤				
	9) 영유아플라자 등 재가아동 보육시설 확대	①·····②·····③·····④·····⑤				
양육 친화 환경	10) 친환경적 보육시설 제공	①·····②·····③·····④·····⑤				
	11) 보육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①·····②·····③·····④·····⑤				
	12) 양육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지원	①·····②·····③·····④·····⑤				

E4. 귀하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출산 및 양육정보 서비스
② 가정문제 상담 서비스
③ 건강지원 서비스
④ 자기개발 프로그램
⑤ (재)취업교육 프로그램
⑥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
⑦ 기타 (_____)

E5. 귀하는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일과 생활의 균형: 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③ 잘 알고 있다 ④ 매우 잘 알고 있다

E6. 귀하의 삶에서 현재 다음 4가지 영역 중 어느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3)_____ 4)_____

① 일 ② 가정
③ 여가 ④ 학습

E7. 자녀양육 환경을 포함해서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자치구)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집값, 전세값 등 주거비용	①	②	③	④	⑤
2) 생활비 등 물가수준	①	②	③	④	⑤
3) 아동 보육시설 및 서비스(놀이방, 유치원 등)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편의성(지역주민센터, 민원서비스 처리 등)	①	②	③	④	⑤
6) 공원, 숲, 산책로 등 녹지 및 휴식 공간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8) 체육시설(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등)	①	②	③	④	⑤
9) 시장, 할인점 등 쇼핑시설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10) 진료기관 접근성 (약국,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복지관 서비스 이용	①	②	③	④	⑤
12) 이웃간 상호부조, 친목 및 정서적 유대	①	②	③	④	⑤
13) 자원활동과 환경보전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⑤
14) 도로나 골목의 보행 편의성(유아, 장애인, 노인 등 배려)	①	②	③	④	⑤
15) 사고와 범죄 등에 대한 생활안전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EQ1. 귀하의 학력수준은?

학 력			수학여부
① 무학	① 초등학교	②중학교	① 졸업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2년·3년제 대학 포함)		② 재학 ③ 중퇴
⑤ 대학교(4년제대학)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박사)	④ 휴학

EQ2. 귀하와 동거하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응답자 포함) 총 _____ 명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 ☞ EQ4번으로

EQ3. 귀하와 동거하는 가구원은 다음 중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본인의 부모
④ 배우자의 부모
⑤ 형제자매
⑥ 친척
⑦ 친구, 동료 등 비친척
⑧ 입주 가사도우미
⑨ 기타(_____)

EQ4. 귀하가 거주하는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⑥ 오피스텔
⑦ 기타((_____)

EQ5.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월세 없음)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⑥ 기타 (_____)

EQ6. 귀하와 배우자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본인 ( ) ■ 배우자 ( )

①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④ 사무종사자
⑤ 서비스종사자
⑥ 판매종사자
⑦ 농업, 임업 및 어업수련종사자
⑧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⑨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⑩ 단순노무종사자
⑪ 군인
⑫ 학생
⑬ 전업주부
⑭ 실업(구직중)
⑮ 비취업(비구직활동)
⑯ 배우자 없음
⑰ 기타( )

[♠ 취업자 질문]

EQ7.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와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본인 ( ) ■ 배우자 ( )

① 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⑦ 잘 모르겠다

EQ8. 귀하와 배우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형태와 평소 1주당 근로(일)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주당 근로시간	
	본 인	배우자
① 시간제	_____시간	_____시간
② 전일제	_____시간	_____시간

EQ9. 귀하와 배우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본인 ( ) ■ 배우자 ( )

① 일반회사(회사/개인사업체)
② 정부투자·출연기관·정부재투자기관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
④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포함)
⑤ 기타(_____)
⑥ 잘 모르겠다

EQ10. 귀하와 배우자가 현재 근무하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본인 ( ) ■ 배우자 ( )

① 1 - 4인
② 5 - 9인
③ 10 - 29인
④ 30 - 99인
⑤ 100 - 299인
⑥ 300 - 499인
⑦ 500인 이상
⑧ 잘 모르겠다

[♠ 공통질문]

EQ11.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 포함)

월 평균 [ ][ ][ ][ ] 만원

※면접원
1) 소득은 세금공제 전의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퇴직금, 개인연금, 이자수입 등 가구에서 받았던 모든 수입을 포함함.
2) 응답자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질문하여 기입함.

EQ12. 귀하 가구의 현재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하층
② 하층
③ 중간층
④ 상층
⑤ 최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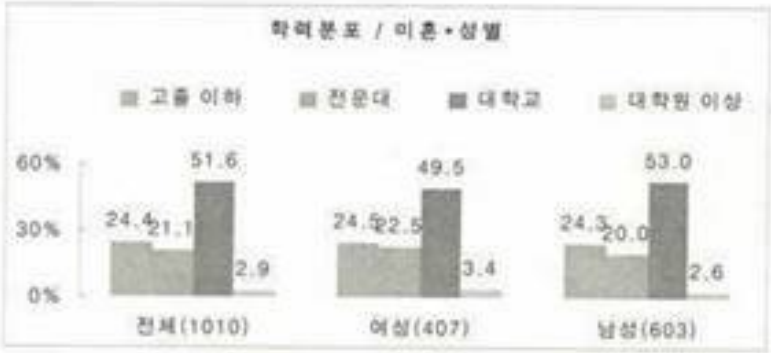
〈부록 II〉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서울시 만 25~44세 미혼남녀 1,010명의 인구사회적 특성

○ 미혼응답자 1,010명(여성 407명 40.3%, 남성 603명,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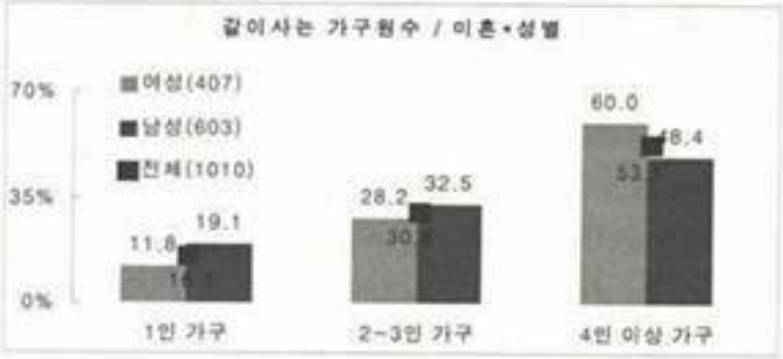
1. 교육수준

- 전문대졸 이상이 75.6%(대졸이상은 54.5%)이고 고졸이하가 24.4%임
- 여성과 남성의 학력수준이 매우 유사함. 고졸이하 여성이 24.5%(남성은 24.3%)
- 대졸여성이 49.5%, 대졸남성이 53.0%로 대졸남성 비율이 약간 더 높지만,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서는 거의 유사함(미혼여성이 75.4%, 미혼남성이 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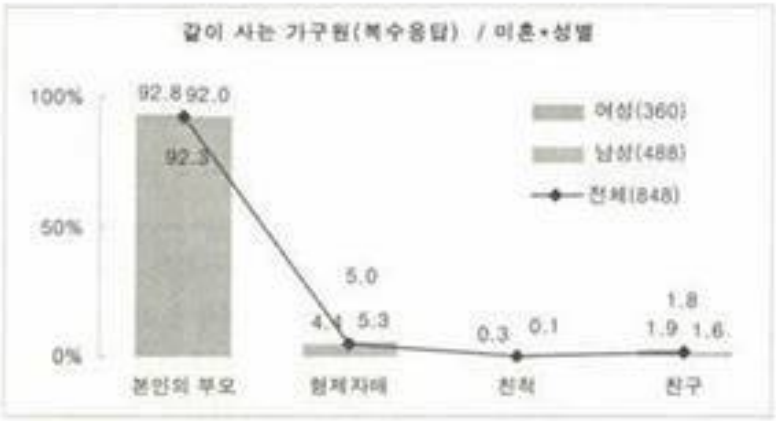


2. 가구원수

- 전체적으로 4인이상 가구비율이 가장 높고, 1인 가구비율은 16.1%에 해당함
- 미혼여성 1인가구는 11.8%인데 반해, 미혼남성 1인 가구는 19.1%로 미혼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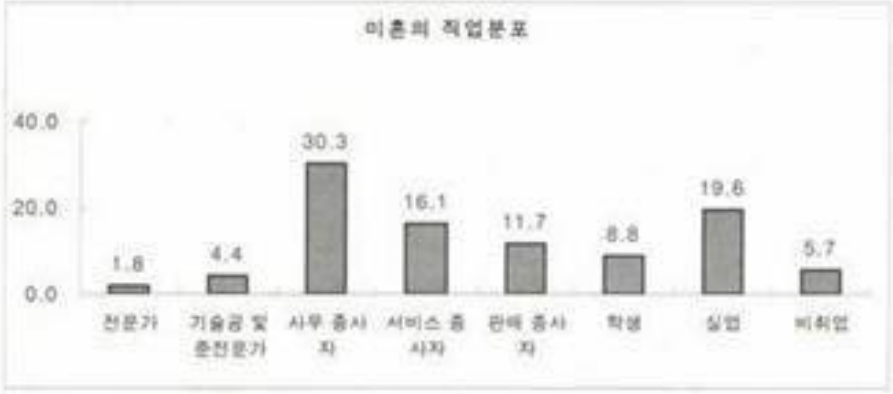
• 혼자 사는 미혼남녀를 제외한 92.3%의 미혼남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성별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3. 직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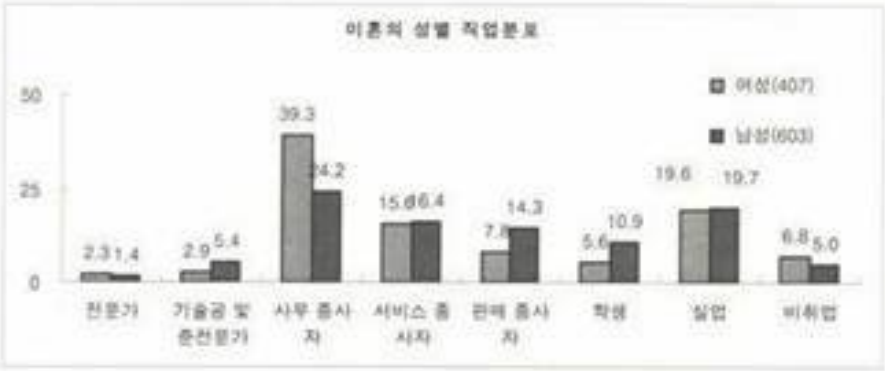
• 사무종사자가 30.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서비스 종사자(16.1%), 판매종사자(11.7%) 등의 순서로 나타남. 미혼 실업자 비율이 19.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미혼의 34.1%(344명)는 '학생, 실업, 비취업' 상태로서 설문조사에 응한 미혼남녀의 약 1/3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성별로는 미혼여성의 사무종사자 비율이 40%에 달하고(39.3%, 남 24.2%), 실업과 비취업 비율은 미혼 남녀간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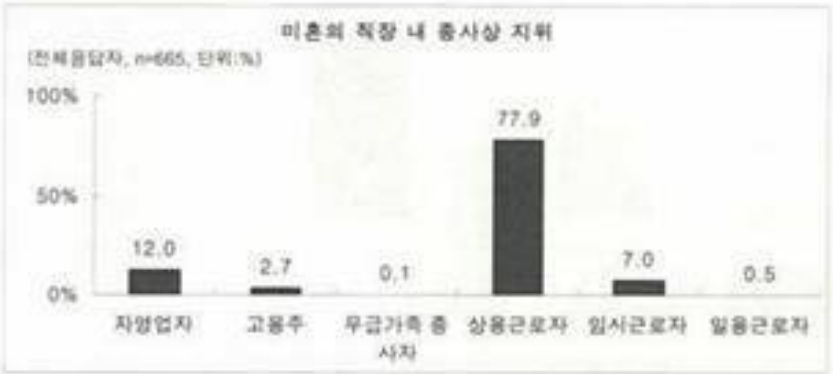
• 학생의 비율은 미혼남성이 10.9%로 미혼여성 5.6%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군복무 등으로 인한 학업기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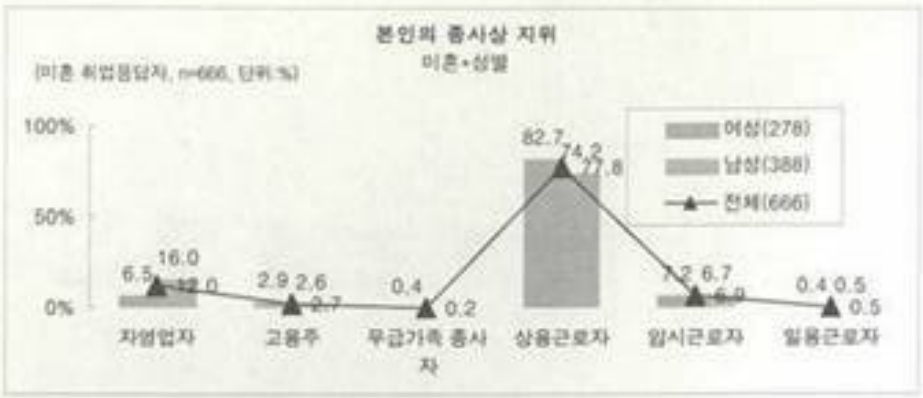
- 학생, 실업, 비취업 등 경제활동과 매우 약한 연결고리를 갖는 미혼남녀의 분포는, 미혼여성이 32.0%, 미혼남성이 35.6%를 차지함. 미혼여성은 사무종사자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순서이지만, 미혼남성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가장 큰 비율 차지하지만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종사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임

4. 종사상 지위

- 취업중인 미혼남녀(666명)의 77.9%가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자영업 12.0%, 임시근로자 7.0%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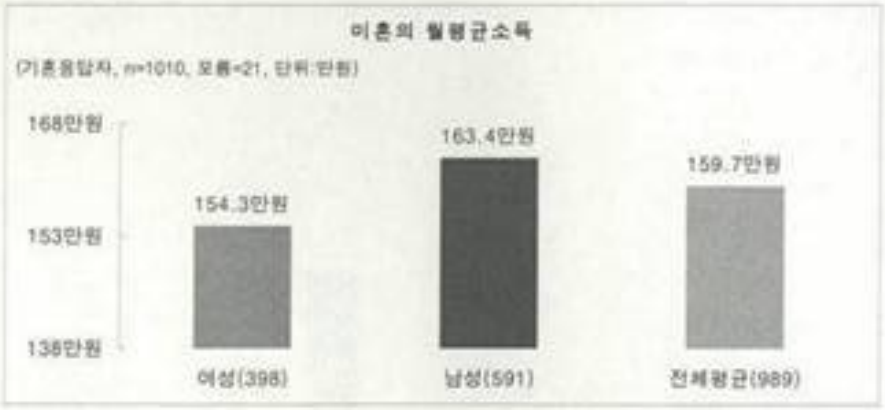


- 미혼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83.0%, 미혼남성의 경우 74.2%로 미혼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의 경우 미혼남성 15.9%, 미혼여성 6.4%로 미혼남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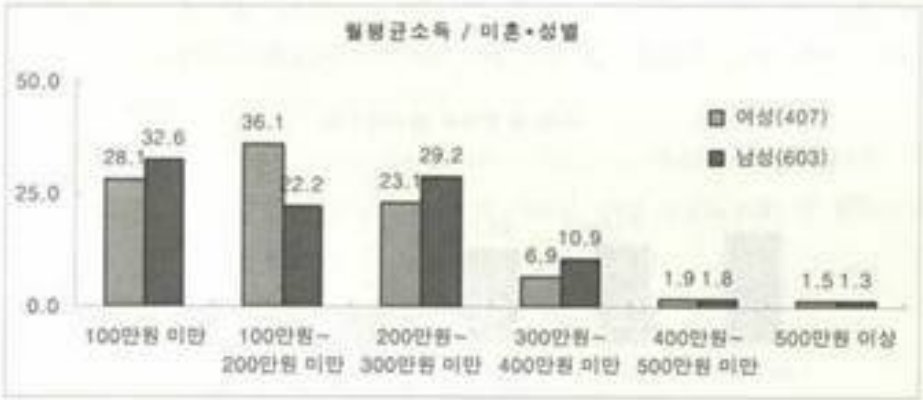


5. 월평균소득

- 미혼의 월평균소득은 약 160만원(159만7천원)임. 미혼여성은 154만3천원, 미혼남성은 163만4천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비취업자군(학생 및 실업자 포함)을 제외한 미혼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을 넘는 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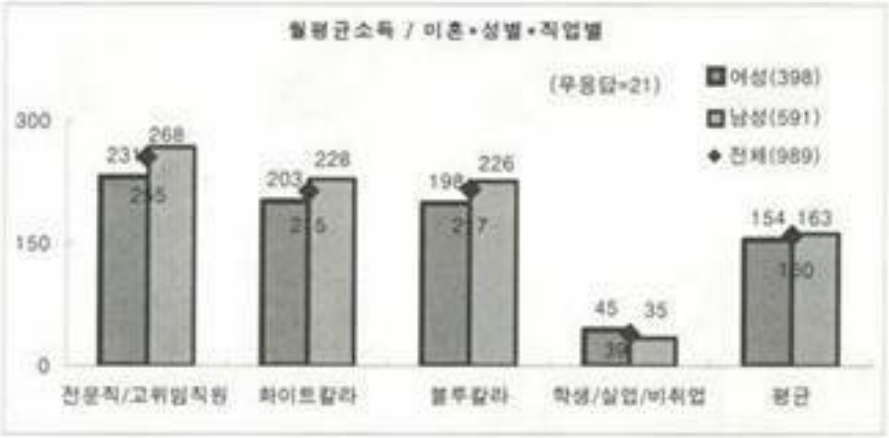


- 미혼여성은 100~200만원 미만이 3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100만원 미만은 28.1%, 200~300만원 미만은 23.1%임. 미혼남성은 100만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고, 200~300만원 미만이 29.2%, 100~200만원 미만이 22.2%로 나타남. 미혼여성은 100~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미혼남성은 1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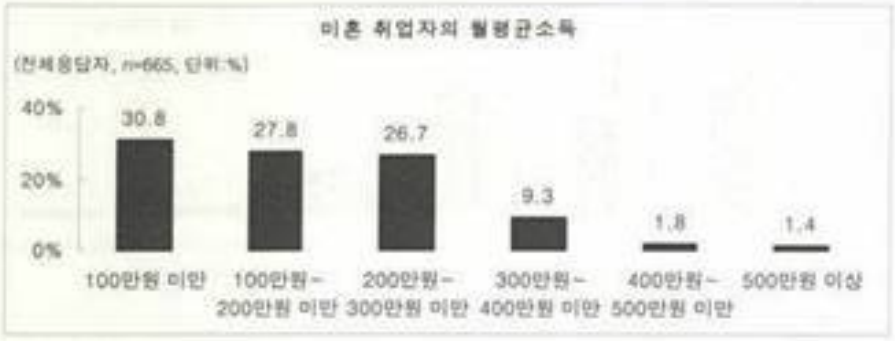
- 미혼 화이트칼라의 경우 215만원, 블루칼라의 경우 217만원, 학생/실업/비취업의 경우 39만원으로 가장 적음. 전문직/고위임직원의 경우 255만원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블루칼라의 월평균소득이 2만원 더 많게 나타남

- 전문직/고위임직원, 화이트칼라 및 블루칼라 모두에서 남성의 월평균소득이 여성의 월평균소득보다 높고, 학생/실업/비취업군에서만 여성의 월평균소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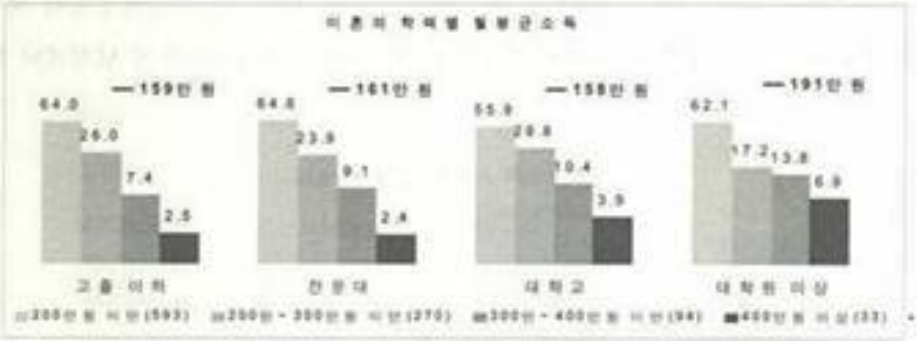


- 미혼 취업자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30.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며, 100~200만원 미만이 27.8%, 200~300만원 미만이 26.7%를 차지함.300~400만원 미만이 9.3%, 400~500만원 미만이 1.8%, 500만원 이상이 1.4%에 해당함. 300만원 이상 고소득집단은 12.5%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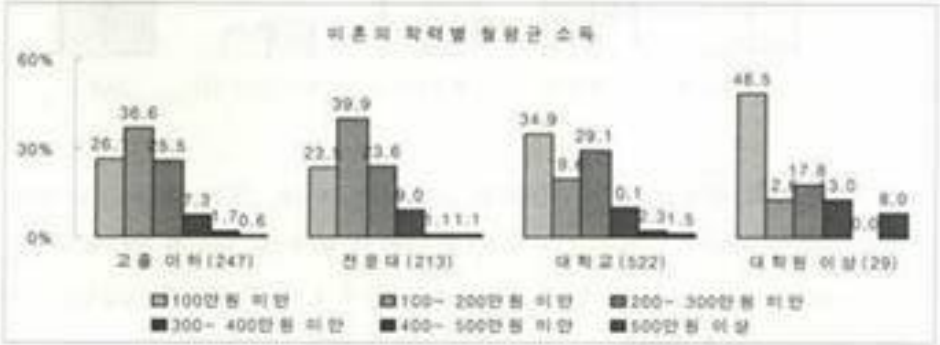
- 200만원 미만이 미혼취업자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200만원 이상이 39.2%를 차지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하 약 6 : 4 분포를 나타냄



- 미혼들의 학력별 소득수준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집단으로 월평균 191만원이고,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대졸집단은 유사한 소득수준으로 나타냄. 특이한 점은 대졸자보다 고졸이하의 월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것임. 또한 대졸보다는 전문대졸이 대학원 이상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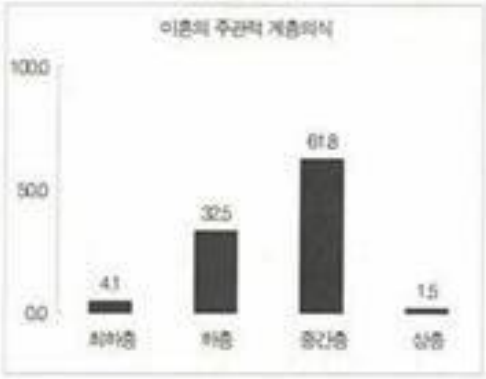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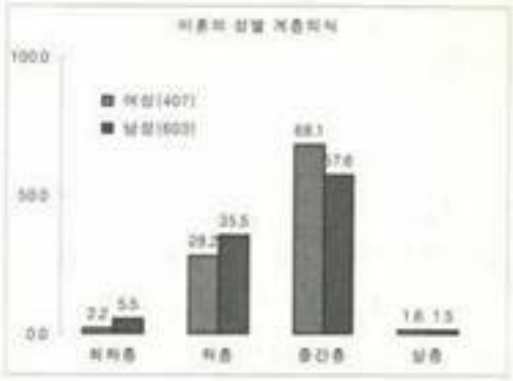
- 미혼들의 학력별 월평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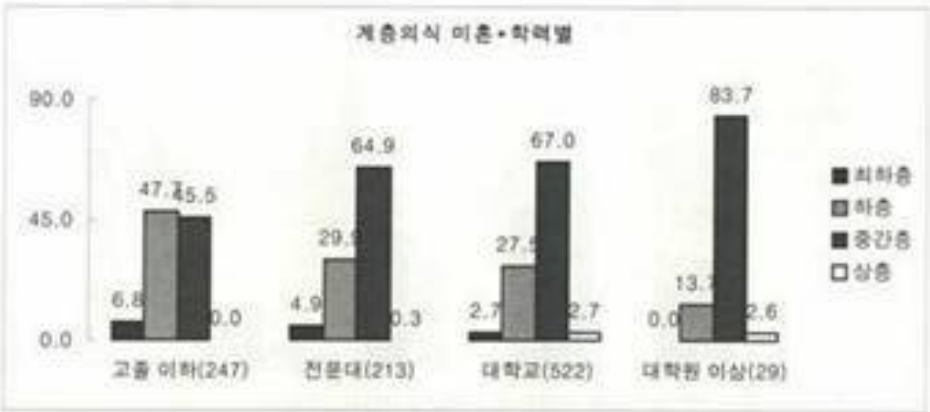
6. 계층의식

- 미혼의 경우 중간층 귀속의식이 61.8%로 가장 높고, 하층도 32.5%에 해당함. 최하층(4.1%)과 상층(1.5%)은 매우 낮은 비율임
- 성별로는 여성의 중간계층 의식이 남성보다 더 높은 68.1%를 차지하고, 하층 귀속의식은 여성(28.2%)보다 남성(35.5%)이 더 높게 나타남. 미혼여성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남성보다 양호하지만, 월평균소득은 남성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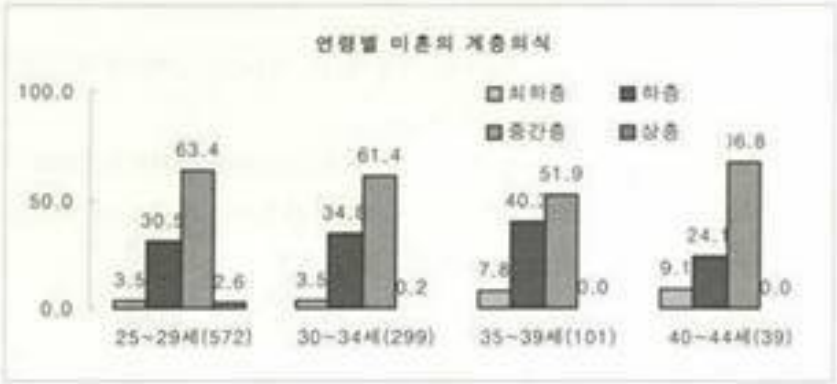




- 학력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비례관계를 나타냄. 고졸이하의 경우 하층의식이 가장 높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중간층 의식이 83.7%로 가장 높음. 학력별 소득수준과 비교해 보면, 대학원이상의 절반정도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수준이지만, 중간층 귀속의식은 가장 높아 계층의식이 현재 소득보다 학력에 의해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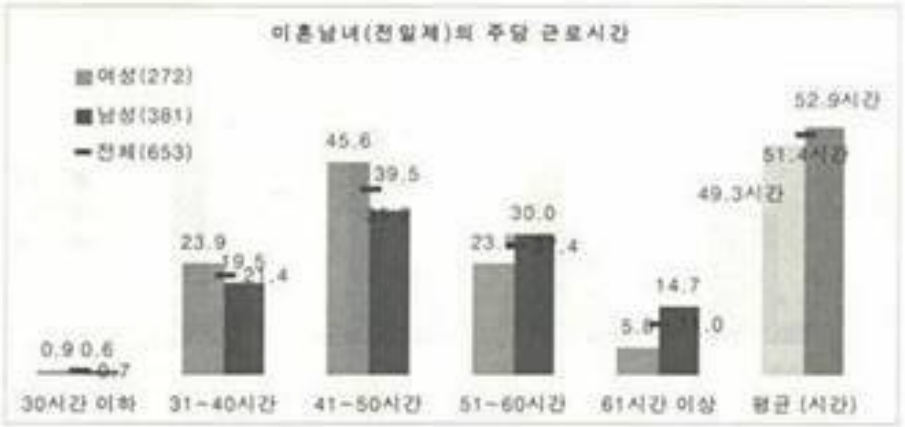


- 연령별로 40대 초반의 중간층 귀속의식이 가장 크고, 하층은 30대 후반이 가장 큼. 대체로 각 연령계급의 절반이상은 중간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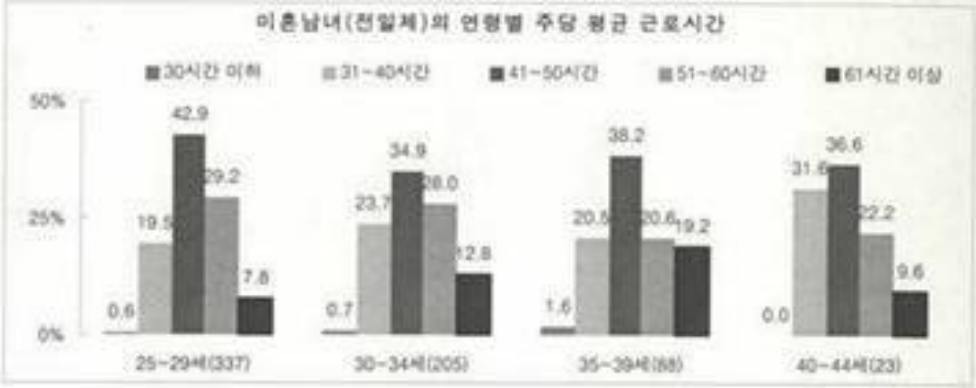
7. 주당 근로시간

- 미혼남녀(전일제, 653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으로, 하루 평균 10.28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두드러짐
- 성별로는 미혼여성이 평균 49.3시간(9.86시간), 미혼남성이 평균 52.9시간(10.58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주당 평균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은 여성이 24.8%, 남성이 20.1%에 불과함. 41~50시간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 45.6%, 남 35.2%임
- 미혼남성의 경우 51~60시간 이하의 비율도 30.0%나 차지하고, 61시간 이상도 14.7%나 차지함. 미혼남성은 50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 비중이 44.7%로 매우 높음(여성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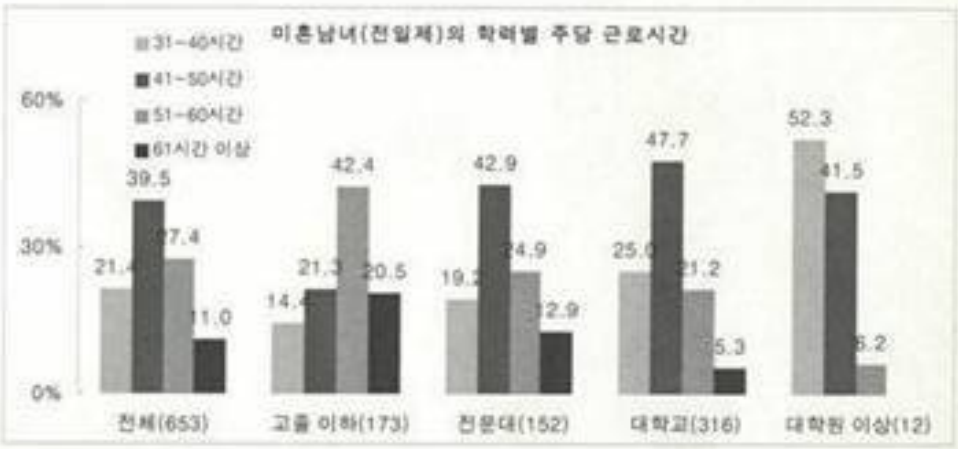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30대 후반이 주당 6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가장 높음. 20~30대 초반의 경우 50시간 이상 비율이 30% 정도에 해당하여 미혼들의 근로시간이 대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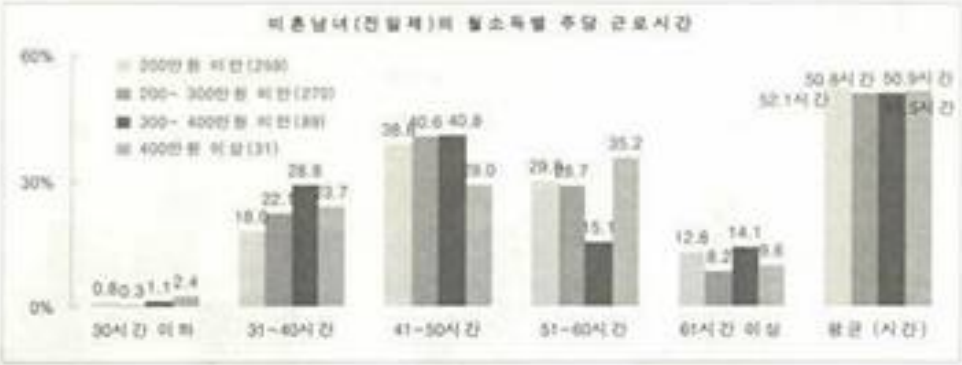
장시간 노동임을 알 수 있음



- 학력간 근로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학력과 근로시간은 정확히 반비례함. 고졸이하가 55.6시간으로 가장 길고 대졸은 49.0시간, 대학원졸은 43.6시간임. 고졸의 경우 51~60시간이 42.4%, 61시간 이상도 20.5%나 차지하는 반면, 대졸의 경우 41~50시간이 절반가량인 47.7%를 차지하고 대학원 이상의 경우 52.3%가 40시간 이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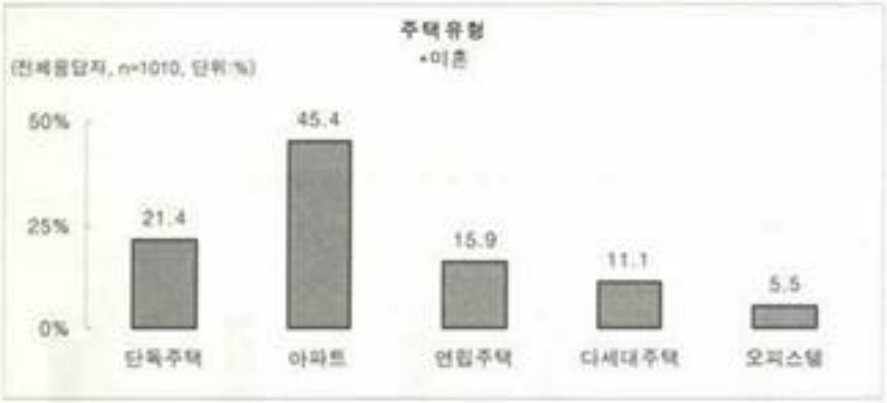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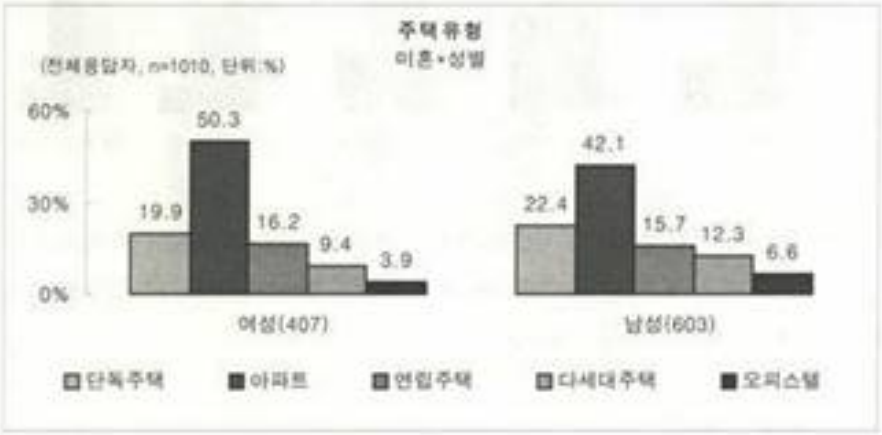
- 월소득과 전일제 미혼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상관관계가 없을 정도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은 평균 50시간 내외로 유사함. 그러나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2.1시간으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냄



8. 주거형태

- 아파트 거주 비율이 45.4%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21.4%), 연립주택(15.9%)의 순서임.
- 미혼여성은 아파트 거주비율(50.3%)이 미혼남성(42.1%)보다 높고, 미혼남성은 단독주택(22.4%)의 거주비율이 미혼여성(19.9%)보다 높음





• 자기집이 68.6%로 가장 높고, 전세(21.4%), 월세(8.2%)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의 자기집 비율(75.4%)이 미혼남성(64.0%)보다 높고, 전세 비율은 미혼남성(24.6%)이 미혼여성(16.7%)보다 높게 나타남. 월세의 경우 미혼여성은 6.8%, 미혼남성은 9.2%로 나타남



▣ 서울시 만 25~44세 기혼남녀 1,490명의 인구사회적 특성

○ 기혼응답자 1,490명 (여성 830명 55.7%, 남성 660명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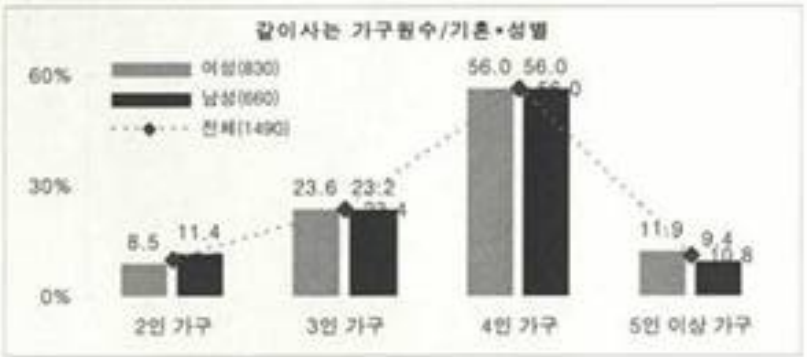
1. 교육수준

- 전문대졸 이상이 57.2%(대졸이상은 40.6%)이고 고졸이하가 42.8%임
- 성별 학력격차가 있음. 기혼여성의 고졸 이하 학력 비율이 50% 이상으로 기혼남성의 고졸이하가 30%미만인 것과 차이가 큼. 고졸이하 여성이 53.3%(남성은 29.7%)로 남성에 비해 낮은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음
- 대졸여성이 29.2%, 대졸남성이 49%로 대졸남성 비율이 매우 높지만, 전문대졸은 거의 유사함(기혼여성이 15.9%, 기혼남성이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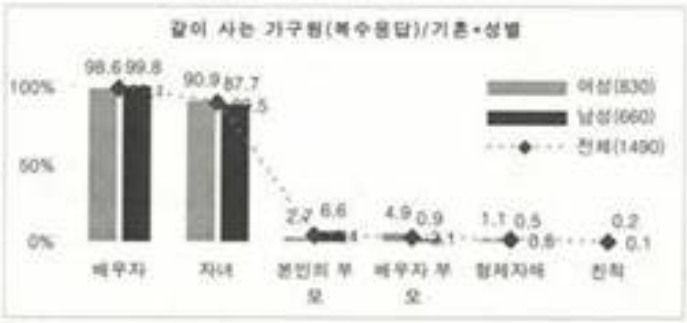


2. 가구원수

- 기혼남녀는 4인 가구비율이 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인 가구(23.4%)이며, 2인 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9.8%임. 5인 이상 가구는 10.8%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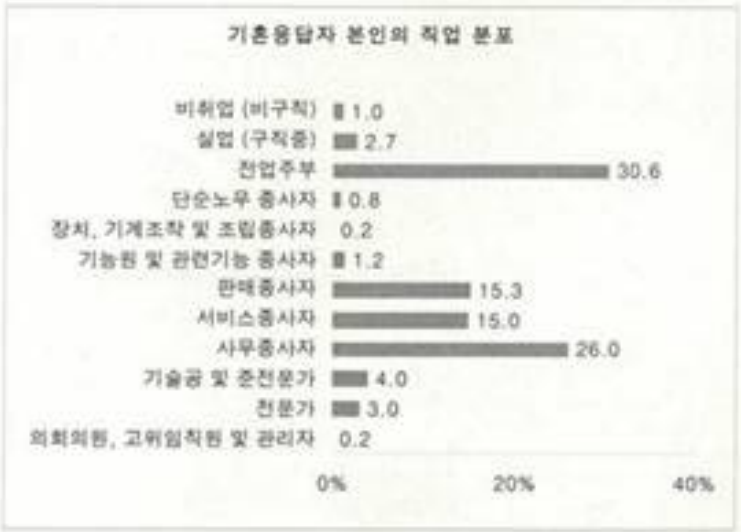


- 전체 기혼남녀의 99.1%가 배우자 및 자녀 87.7%와 함께 살고 있음
- 남성은 본인의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는 비율이 6.6%인데, 여성은 2.7%로 기혼남성이 본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
- 대부분의 기혼남녀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성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3. 직업분포

- 기혼남녀의 직업분포에서 전업주부가 30.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사무종사자 26%, 판매종사자 15.3%, 서비스종사자 15.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실업자 비율은 2.7%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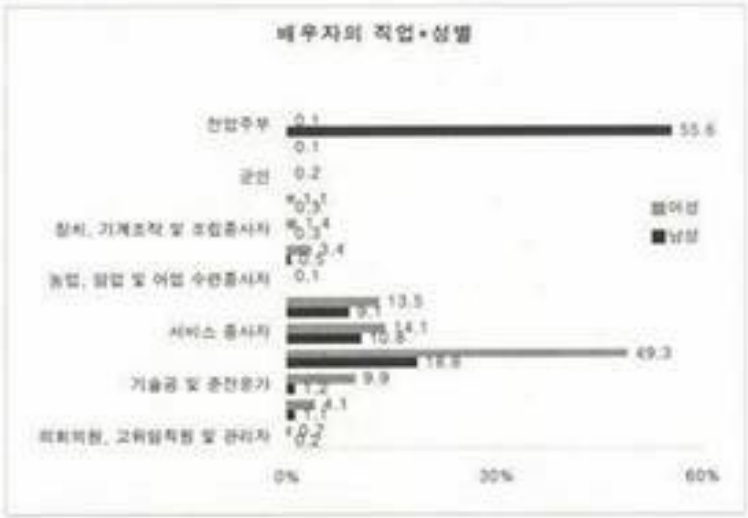
- 기혼여성 응답자의 55% 정도가 전업주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사무종사자(15.5%), 서비스종사자(12.6%), 판매종사자(10.9%)의 순서임. 기혼여성의 실업자

비율은 1.9%로 나타남

- 기혼남성은 사무종사자 비율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판매종사자 20.9%, 서비스 종사자 18% 순서임. 반면 기혼여성은 판매 종사자(10.9%)보다 서비스 종사자(12.6%)가 더 높게 나타남
- 기혼남성이 다양한 직업에 분포해 있는 것에 비해, 기혼여성은 직업의 종류가 적고 분포도도 낮음. 특히, 기술자 및 전문직에서 여성의 분포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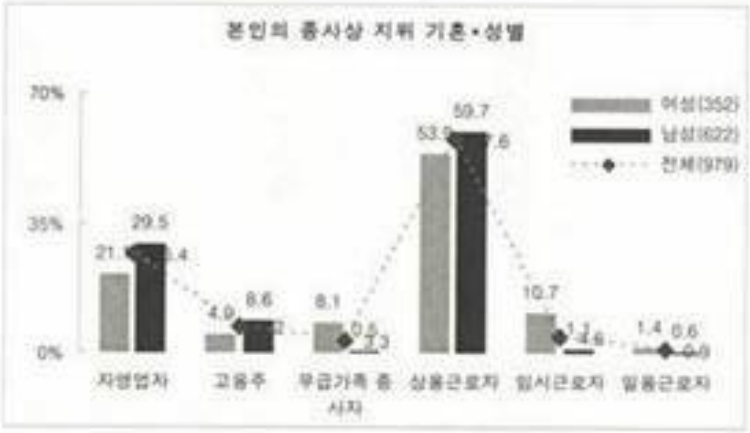


- 남성의 배우자 직업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업주부 55.6%, 여성의 배우자는 사무종사자 49.3%가 가장 많이 나왔음.



4. 종사상 지위

- 취업중인 기혼남녀(979명)의 57.6%가 상용근로자 지위에 있고, 자영업 26.4%, 임시근로자 4.6%에 해당함
- 성별로는 남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59.7%로 여성 53.9%에 비해 더 높음.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여성이 8.1%인 반면 남성은 0.5%임.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이 29.5%, 여성은 21.1%로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부부가 자영업을 할 경우 남성은 자신을 자영업자로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차이로 해석됨
- 임시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10.7%로 남성의 0.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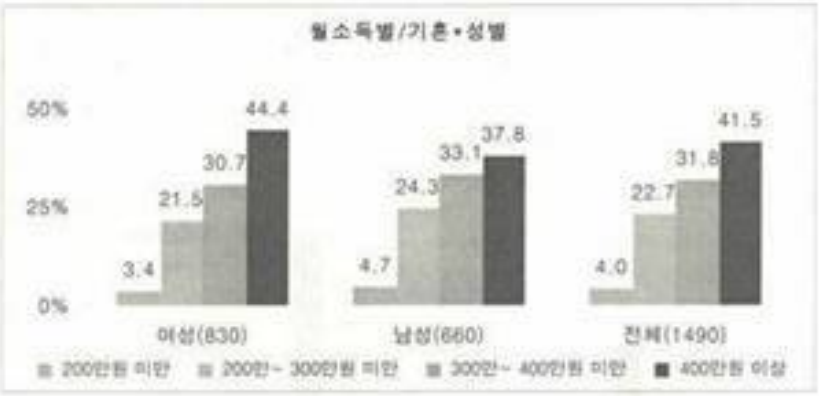
5. 월평균소득수준

- 기혼응답자의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368만원이고, 기혼여성은 373만원, 기혼남성은 362만원으로 응답함. 이는 기혼남녀의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구소득이므로 응답자의 성별과 무관한 수치임. 여기서 소득은 '세금공제 전의 금액으로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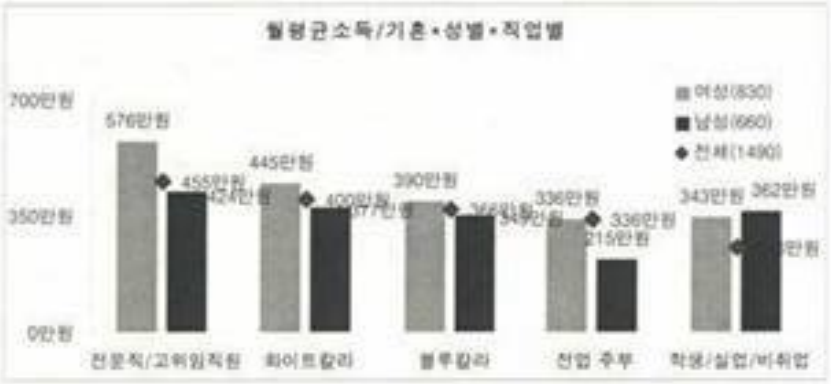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연금,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가구원 전체 수입의 총액을 의미함

- 기혼남녀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0%, 200-300만원 미만이 22.7%, 300-400만원 미만이 31.8%, 400만원 이상은 41.5%이고,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소득수준 분포가 약간 높음



- 직업별로는 전문직/고위임직원이 455만원으로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 400만원, 블루칼라 366만원, 전업주부 336만원, 학생/실업/비취업의 경우 256만원으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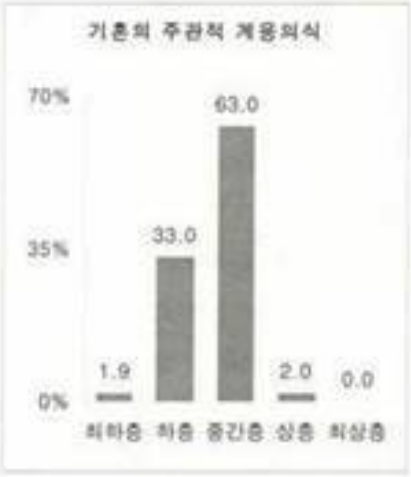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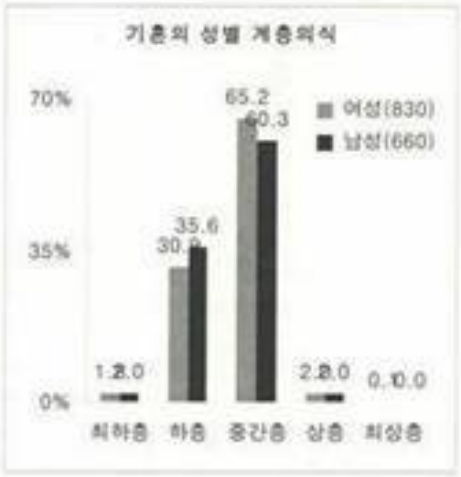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기혼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도 증가함. 고졸이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3만원인 반면, 대학원이상은 512만원으로 179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 한편,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가운데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자 비율도 7.5%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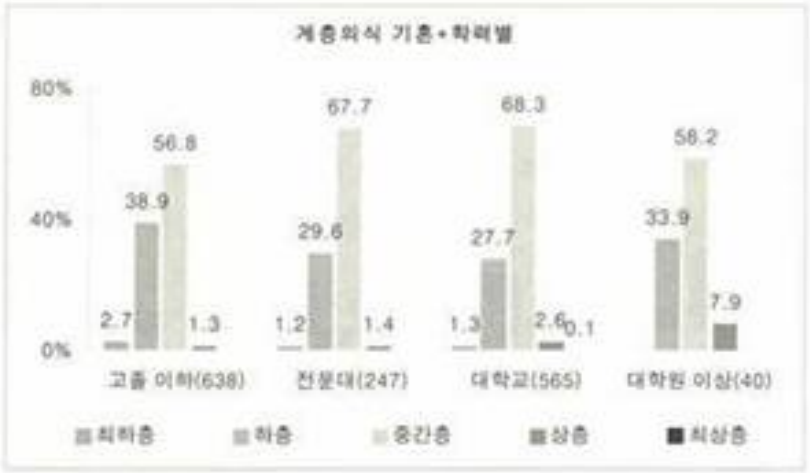
6. 계층의식

- 기혼응답자 3명중 2명은 중간층 귀속의식을 갖고 있고, 3명중 1명은 자신을 하층으로 생각함. 최하층의 귀속의식을 가진 비율은 1.9%로 매우 낮고, 최상층은 없음
- 성별로는 기혼여성의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남성보다 높은 65.2%를 차지함. 하층 귀속의식은 여성 30.9% 보다 남성이 35.6%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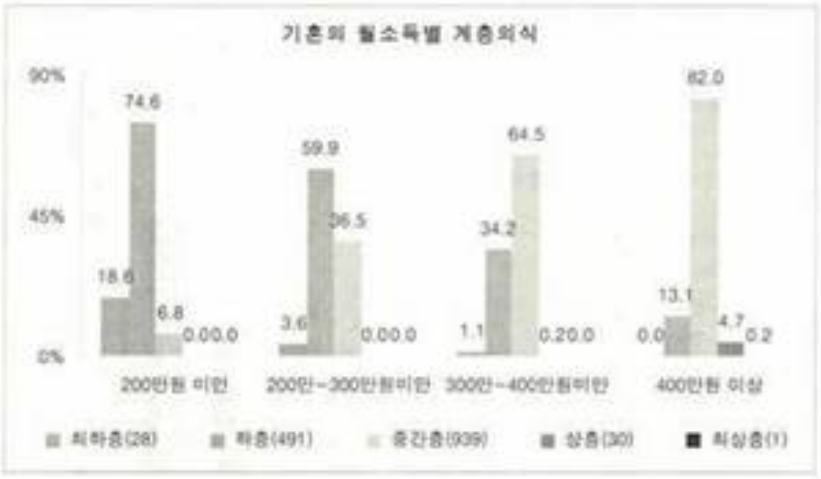




- 모든 학력에서 중간층 귀속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높아짐. 반면, 하층으로 응답한 비율은 고졸이하(38.9%)가 가장 높지만, 대학원 이상도 33.9%로 높게 나타남. 이는 학력별 소득분포에서 대학원이상에서 200만원미만의 소득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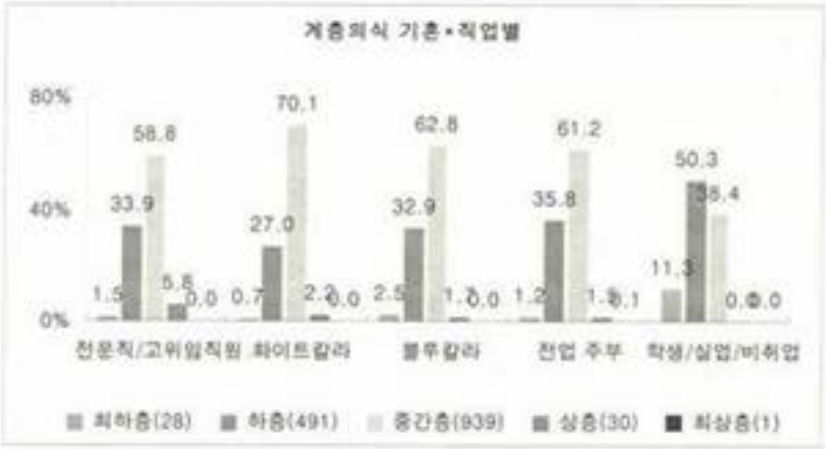
- 소득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정비례 관계를 나타냄. 200만원 미만의 경우 하층의식이 가장 높고, 400만원 이상의 경우 중간층 의식과 상층 의식이 가장 높음. 학력별 소득수준과 비교해보면, 기혼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학력보다 현재소득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상태에 따라서는 자영업자/고용주와 상용근로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매우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 그러나 임시/일용/무급종사자는 최하층 7.1%, 하층 38.8%로 나타나 다른 고용상태에 있는 기혼보다 낮은 계층에 귀속의식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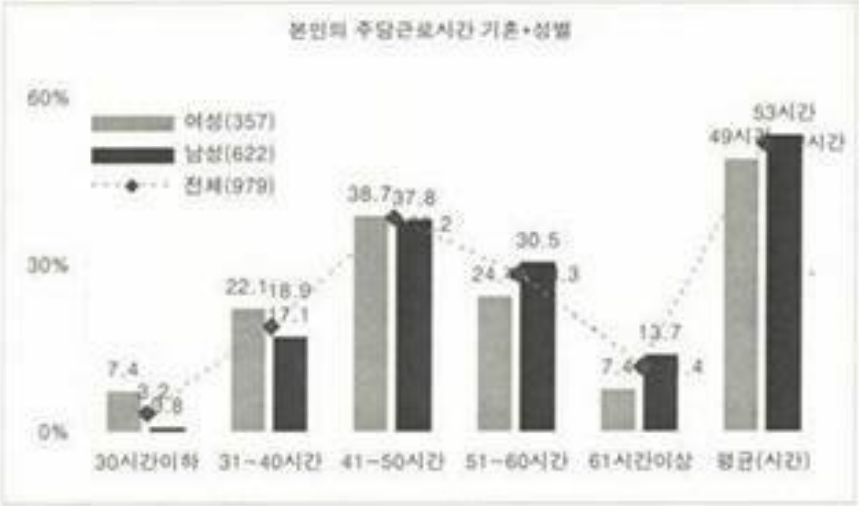


- 직업별에 따라서는 학생/실업/비취업이 최하층 11.3%, 하층 50.3%로 가장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게 나타남. 화이트칼라는 중간층 70.1%에 가장 높은 귀속의식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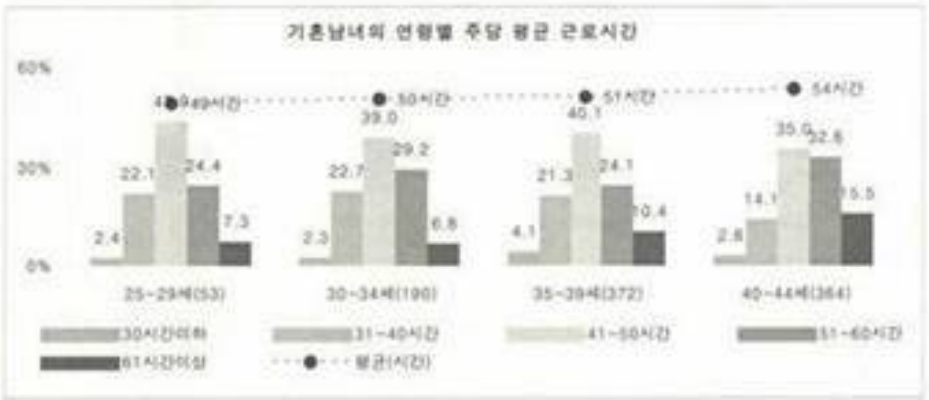


7. 주당 근로시간

- 기혼남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하루평균 10.4시간의 장시간 근로가 두드러짐
- 성별로는 기혼여성이 평균 49시간(9.8시간), 기혼남성이 평균 53시간(10.6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남. 주당 평균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은 여성이 29.5% 남성이 17.9%에 불과함. 41~50시간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여성 38.7%, 남성 37.8% 임
- 특히, 51시간 이상 장시간근로 비중이 기혼남성의 경우 44.2%로 매우 높음(여성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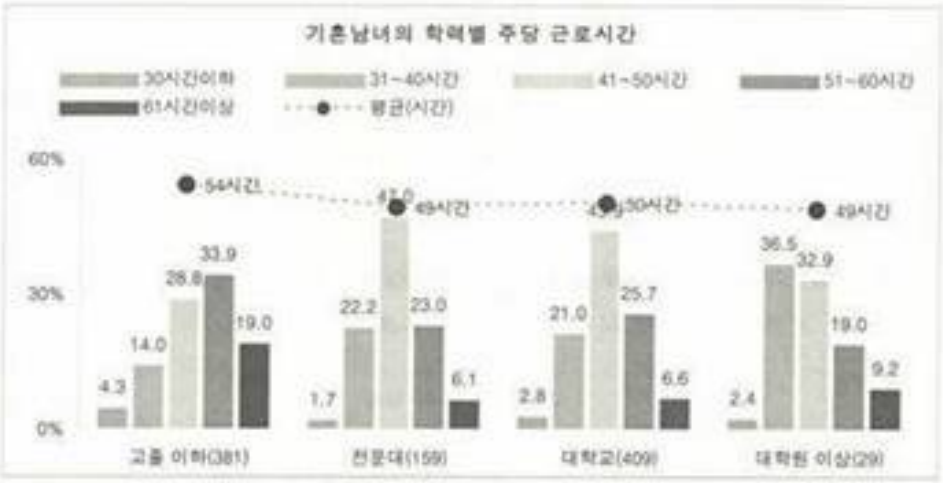
- 기혼남녀의 연령과 비례하여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증가함. 특히, 35~39세의 10% 이상, 40~44세의 15% 이상이 주당 평균 6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당 4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비율은 40~44세가 83.1%로 가장 높고, 40세 미만의 연령은 약 75% 이내임. 즉 대다수의 기혼남녀가 대체로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
- 특히 40~44세 이상의 기혼들이 매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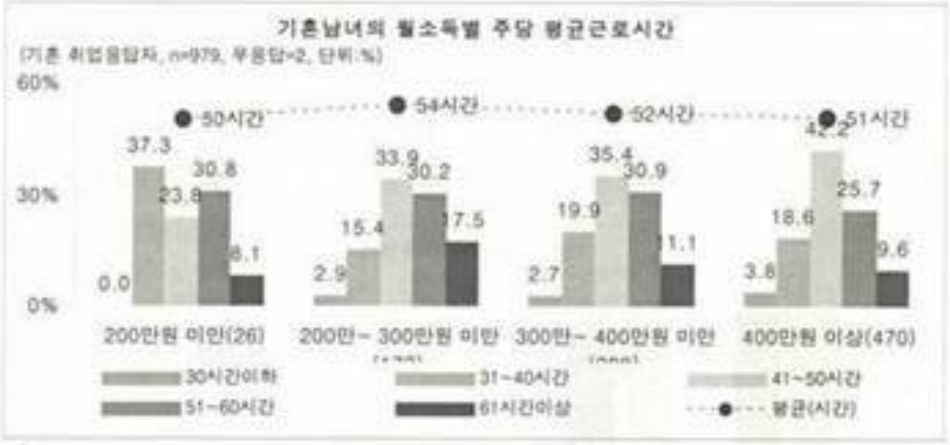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가장 길고, 전문대, 대졸, 대학원졸 이상은 평균근로시간이 비슷함.
- 41시간 이상은 고졸이하가 81.7%로 가장 많고, 전문대 76.1%와 대학교 76.2%는 비슷한 반면 대학원 이상이 61.6%로 다른 학력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임. 또한 31~40시간

근로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학원 이상(36.5%)임.

- 40시간 이하의 근로비율은 대학원 이상 38.9%로 가장 높고, 대학교 23.8%, 전문대 23.9%, 고졸이하 18.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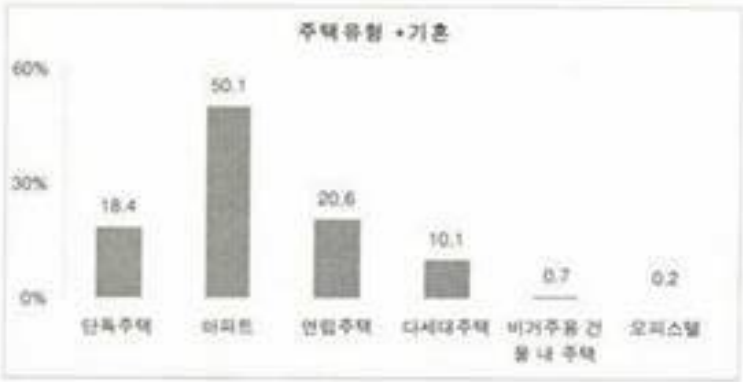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는 월 평균소득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음. 그러나 31~40시간 근로 비율은 20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41~50시간 근로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8. 주거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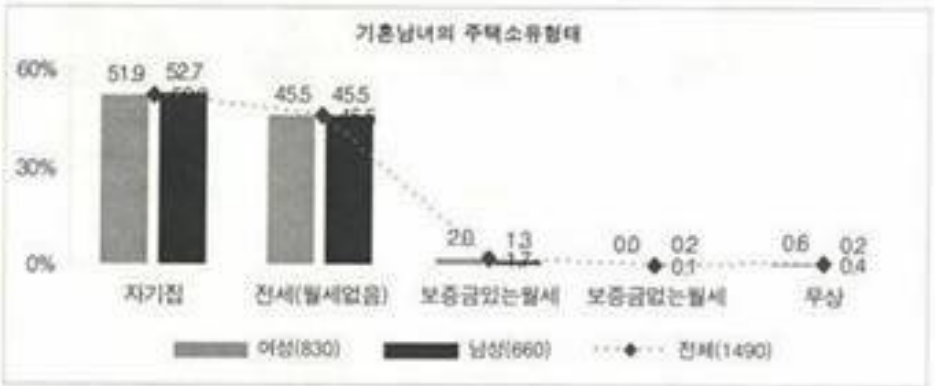
-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1%로 가장 높고 연립주택 20.6%, 단독주택 18.4%의 순서임



- 기혼여성은 아파트 거주비율 51.8%로 기혼남성 47.9% 보다 높고, 기혼남성은 단독주택 19.5%의 거주비율이 기혼여성 17.5%보다 높음



- 자기집이 52.3%로 가장 높고, 전세 45.5%, 월세 1.7%로 나타남. 성별로는 남성의 자기집 비율이 52.7%로 여성의 51.9%보다 높고, 전세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남.



- 월평균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집 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비율이 증가함



-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현재 자녀가 3명인 기혼으로 68.8%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자가 비율은 26.1%로 가장 낮음.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기집 비율도 증가함
- 전세는 무자녀 응답자가 71.2%로 가장 높고, 3명 자녀가 있는 경우가 29%로 가장 낮아 자녀수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 전세 비율이 증가함



2008-정책개발-020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공선희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슬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Design_MK커뮤니케이션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56-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술길 22번지 Tel. 02-810-5000 Fax. 02-810-5300 www.seoulwomen.or.kr